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4076-01

2021. 12.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마상진 | 선임연구위원 | 연구 총괄

김정섭 | 선임연구위원 | 제 3, 4장 집필

김용렬 | 선임연구위원 | 제 4장 집필

이순미 | 부연구위원 | 부록 2 집필

최재현 | 연구원 | 연구 총괄 지원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책임자: 마 상 진 (선임연구위원)
연구 참여자: 김 정 섭 (선임연구위원)
김 용 렬 (선임연구위원)
이 순 미 (부 연구위원)
최 재 현 (연구 원)

이 연구는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최근 귀농·귀촌 현황과 향후 전망, 코로나 및 디지털 전환 등 변화된 시대 상황에서 새로운 귀농·귀촌 수요 분석을 토대로,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22~2026)' 수립의 기본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 관련 인구·경제·사회 관련 메가트렌드를 분석하고, 최근 귀농·귀촌의 특징을 분석하고, 귀농·귀촌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귀농·귀촌 관련 범부처 정책과 국내외 우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 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최근의 인구·경제·사회적 메가트렌드 분석 결과, 저출산·고령화로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 특히 농촌 출신의 베이비부머들의 감소는 귀농·귀촌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저성장시대, 고용없는 성장시대로 대변되는 경제 상황과 주택가격 상승은 도시, 비농업분야 인력의 농업·농촌으로의 유입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사회적으로 팽배한 워라벨 추구 성향, 언택트 문화의 확산 등은 귀농·귀촌 인구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귀농·귀촌 관련 국가 통계와 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귀농·귀촌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도시민의 농촌 순유입으로 농촌의 인구 감소가 멈추었지만, 읍지역의 3/4, 면지역의 9/10 정도가 지난 5년(2016~2020)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점차 증가추세이고, 코로나 19로 인해 더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농촌 거주 경험이 있거나,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많았다. 귀농은 농촌 출신 고향 귀농이 귀촌의 경우 도시출신 비연고지 귀촌이 증가하고, 귀농·귀촌 동기로 휴식 관련이 증가추세였다. 도시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직종과 산업분야의 귀농·귀촌이 많았다. 귀농인의 절반은 농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농관련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였고, 귀촌인은 거의 절반 정도가 일반 직장, 1/5 정도는 자영업, 1/10 정도가 농관련 분야에 종사(무직은 10.2%)하고 있었다. 귀농·귀촌 가구의 소득은 정착기간, 현재 종사분야에 관련이 있었다. 농촌 생활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귀농·귀촌인들은 만족하고 있었는데, 분야별로는 자연환경, 주거, 건강 측면의 만족에 비해 소득, 지역생활

인프라와 관련한 만족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귀농인들에 비해 귀촌인들의 교육이수 및 정부 정책 수혜률을 낮았다. 귀농·귀촌 지역 결정에 있어 도시와의 근접성, 일자리, 주거여건, 경관 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귀농인들은 상대적으로 인근 대도시와의 교통, 농업 여건을 중시하고, 귀촌인들은 자연경관, 주택·토지가격 저렴, 취·창업 여건이 좋은 곳에 정착하고 있었다.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은 청년 귀농가구의 양적 확보, 귀농가구 중심으로 적정 농가소득 달성, 귀농·귀촌인의 지역주민과 상생협력 등을 핵심 성과 목표로 하여 주요 전략으로 청년층의 농업 창업 증점 지원,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일자리·주거 등 정착지원 강화, 귀농·귀촌 저변 확대, 융화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등이 추진되었고, 귀농을 중심으로 양적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 청년 농업인과 고용인력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국민들의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표준 교안 개발)가 진행되고, 단계별, 연령별, 직능별 맞춤형 교육이 강화되고,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고 있었음. 다만 귀촌자 대상 교육 및 관련 정책의 보강이 필요하고, 좀 더 다양한 일자리 정책 및 보편적인 주거 정책의 추진, 지자체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이 꾸준히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

도시민의 농촌 유입과 관련한 일자리, 주거, 공동체 활성화 등 관련 하여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농림축산식품부 외에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은 지역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인 만큼 범부처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였다. 국내외 귀농·귀촌 관련 사례를 조사 결과, 도시와 농촌의 교류, 연계를 통한 농촌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노력,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귀농·귀촌 관련 사업들을 전문성있는 중간지원조직을 매개로 일자리, 주거,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통합·추진, 농촌에 열정이 있고 역량있는 청년들을 농촌지역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농업 기술 외에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농촌생활관련 기술교육 강조,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융화 및 농촌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귀농·귀촌 유입 노력, 도시민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을 반영한 농촌 주거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교육, 문화, 의료 등 도시에 비해 취약한 삶의 질 분야의 전문인력의 농촌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비전과 정책 목표, 기본 추진 전략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 비전으로는 귀농을 통해 새로운 농업 인력을 수급받고, 귀촌을 통해 다양한 재능을 가진 도시민이 유입된다는 의미에서 “**농업이 밝아지는 귀농, 농촌이 젊어지는 귀촌**”으로 설정하였다. 정책 목표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정착 지원을 강화를 통해 귀농인의 소득, 귀촌인의 농촌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귀농 분야는 귀농 5년차 평균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까지 향상 (2021년 88% 수준 → 2026년 95%), 귀촌 분야는 귀촌가구의 농촌 생활 만족도 수준 향상(농촌생활 만족자 비중: 2021년 76.2% → 2026년 85%)을 설정하였다.

추진 전략은 제1차 계획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변화된 여건 및 도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2차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설정하였다.

전략 1: 늘어나는 도시민의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민 편의를 고려하여 귀농·귀촌 수요를 발굴·관리하고, 내실있게 귀농·귀촌을 준비시킴 →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 귀농·귀촌 준비 체계 마련**

전략 2: 귀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귀촌 정책을 강화함 → **귀촌인의 취창업 및 다양한 농촌 활동 기회 제공**

전략 3: 귀농에 대해서는 지역 중심 밀착 지원으로 내실화하고, 지속적 보완이 필요한 소득 분야 정책을 적극 추진함 →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

전략 4: 귀농·귀촌인들이 정착과정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주거 및 생활 인프라 분야 지원을 강화함 →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도시민 거주 수요에 맞는 농촌 공간 조성**

전략 5: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관련 정보 접근성을 개선함 ⇒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정보 제공**

이러한 다섯 가지 전략에 따라 세부 추진 과제로 도시민의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 준비 체계 마련(전략 1) 관련 ‘도시 내 농협 인프라를 활용한 귀농귀촌 준비 지원’, ‘농촌 장기체류형 체험·교육 강화’, ‘함께 준비하는 귀농귀촌,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귀촌인의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전략 2) 관련, ‘농촌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귀촌인의 취창업 지원 확대’, ‘귀촌인에게 지역 내 일자리 정보 제공 확대’, ‘재능나눔, 사회적경제 등 농촌에서 가능한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지역 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자체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전략 3) 관련, ‘지역 내 농업생산 현장 안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 ‘청년 귀농인의 생활 안정 및 영농 기반 마련 지원’, ‘귀농인의 영농 외 소득 다각화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농촌 다음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전략 4) 관련, ‘농촌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공간 계획 제도화’, ‘중앙정부·지자체 협약을 통해 농촌 활성화 집중 지원’, ‘농촌 공간 정비를 통한 매력적인 삶터 조성’, ‘임대주택, 귀농인의 집 등 다양한 주거 선택지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 정보 제공(전략 5) 관련, ‘귀농귀촌 단계별 필요 정보·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운영’, ‘관계 부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플랫폼 운영 효율화’ 등을 제안하였다.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추진 전략과 과제〉

추진 전략	추진 과제
도시민의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 준비 체계 마련	도시 내 농협 인프라를 활용한 귀농귀촌 준비 지원
	농촌 장기체류형 체험·교육 강화
	함께 준비하는 귀농귀촌,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지원
귀촌인의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농촌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귀촌인의 취창업 지원 확대
	귀촌인에게 지역 내 일자리 정보 제공 확대
	재능나눔, 사회적경제 등 농촌에서 가능한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	지역 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자체 특화 프로그램 지원
	지역 내 농업생산 현장 안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
	청년 귀농인의 생활 안정 및 영농 기반 마련 지원
	귀농인의 영농 외 소득 다각화 지원

추진 전략	추진 과제
농촌 다음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	농촌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공간 계획 제도화
	중앙정부·지자체 협약을 통해 농촌 활성화 집중 지원
	농촌 공간 정비를 통한 매력적인 삶터 조성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 정보 제공	임대주택, 귀농인의 집 등 다양한 주거 선택지 제공
	귀농귀촌 단계별 필요 정보·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운영 관계 부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플랫폼 운영 효율화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주요 연구 동향	4
3. 연구 내용 및 방법	25

제2장 귀농·귀촌 관련 메가트렌드

1. 인구 변화	29
2. 경제 변화	34
3. 사회·문화 변화	42
4. 메가트렌드에 따른 도농 간 인구이동 변화	55
5. 요약 및 시사점	57

제3장 귀농·귀촌 실태

1. 농촌 인구 및 귀농·귀촌 현황과 추세	61
2. 귀농·귀촌인 특성	71
3. 귀농·귀촌지 특성	97
4. 소결	109

제4장 귀농·귀촌 정책 평가

1. 귀농·귀촌 정책 역사	113
2. 귀농·귀촌 정책 현황	119
3.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140
4. 소결	160

제5장 귀농·귀촌 관련 유관 부처 정책

1. 일자리(취·창업) 정책	163
2. 주거·생활인프라 정책	175
3. 문화·공동체 활성화 정책	181
4. 소결	189

제6장 국내외 귀농·귀촌 정책 우수 사례

1. 국내 지역 사례	191
2. 외국 사례	226
3. 시사점	245

제7장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안)

1. 기본 고려 사항	247
2. 제2차 계획의 비전과 목표	249
3. 주요 추진 전략별 과제	251

부록

1: 귀농·귀촌 포럼 결과	269
2: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 경험과 정책 욕구	297
3: 기타 고려할 만한 추진 과제	347

참고문헌	359
------------	-----

제1장

〈표 1-1〉 귀농 정착단계별 어려움 13
 〈표 1-2〉 귀농·귀촌 정책 포럼 및 자문회의 26

제2장

〈표 2-1〉 OECD 농촌 정책의 변화 39
 〈표 2-2〉 메가트렌드와 도시민 농촌 이동의 관계 분석 57
 〈표 2-3〉 시기별 우리나라 인구·경제·사회 주요 지표 변화 58

제3장

〈표 3-1〉 도시·농촌의 인구 변화(1995~2020) 61
 〈표 3-2〉 인구이동, 귀농·귀촌인구 추이 64
 〈표 3-3〉 읍면의 인구 증가, 감소 상황에 따른 인구·연령, 인구이동 현황 66
 〈표 3-4〉 도시민의 귀농·귀촌하려는 이유 69
 〈표 3-5〉 귀농·귀촌 의향자 귀농·귀촌 예정시기 70
 〈표 3-6〉 귀농·귀촌 의향 관련 요인 70
 〈표 3-7〉 연령대별 귀농·귀촌 준비자금 마련 경로 80
 〈표 3-8〉 연령대별 귀농·귀촌 자금 사용처(1+2순위) 81
 〈표 3-9〉 귀농인 농외 종사분야(중복 응답) 82
 〈표 3-10〉 귀촌인 경제활동 분야 83
 〈표 3-11〉 귀농 가구소득 현황 및 변화 84
 〈표 3-12〉 연령·귀농연차에 따른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4
 〈표 3-13〉 귀촌 가구소득 현황 및 변화 85
 〈표 3-14〉 귀촌인 연령·종사분야별 가구소득 86
 〈표 3-15〉 귀농·귀촌 가구소득 관련 변인 87

〈표 3-16〉 연령 및 귀농·귀촌 연차에 따른 지역사회 모임 참여율	89
〈표 3-17〉 연령 및 귀농·귀촌 연차에 따른 지역사회 모임 참여율	89
〈표 3-18〉 귀농·귀촌인의 농촌 생활만족도 관련 변인	91
〈표 3-19〉 국가균형발전법의 지역구분	99
〈표 3-20〉 성장촉진지역 지정 기준	100
〈표 3-21〉 읍·면 인구규모에 따른 귀농·귀촌 현황	103
〈표 3-22〉 읍·면 인구규모에 따른 귀농·귀촌지 특성 비교	104
〈표 3-23〉 귀농·귀촌인 비율에 따른 귀농·귀촌지 특성 비교	106

제4장

〈표 4-1〉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의 추진과제	117
〈표 4-2〉 2012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의 추진과제	118
〈표 4-3〉 농림축산식품부 및 유관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	123
〈표 4-4〉 청년 귀농 가구 현황 및 비율(2015~2020)	140
〈표 4-5〉 최근 5년 청년 귀촌 가구 중 농업종사자 추정	140
〈표 4-6〉 조사 시기별 귀농 5년차 소득	142
〈표 4-7〉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자 현황	144
〈표 4-8〉 분야별, 단계별, 연령대별 맞춤형 귀농교육 현황	147
〈표 4-9〉 귀농·귀촌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가구소득 변화 비교	149
〈표 4-10〉 귀농·귀촌 가구소득 변화 관련 변인	149
〈표 4-11〉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수행 지자체 현황	157

제5장

〈표 5-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유형별 지원내용	164
〈표 5-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와 예산	165
〈표 5-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례	165

〈표 5-4〉 2021년 신규 청년 마을 사업 주요내용	166
〈표 5-5〉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170
〈표 5-6〉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173
〈표 5-7〉 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시범사업(2019년 균형위 의결)	181
〈표 5-8〉 2021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대상	182
〈표 5-9〉 문화이모작 사업 추진체계	188

제6장

〈표 6-1〉 도시-농촌 상생공동체 구축사업 내용	195
〈표 6-2〉 충남도 광역, 시·군 중간지원조직 연차별 투자실적(2015~19)	203
〈표 6-3〉 전북의 농업의 실용기술교육 현황	207
〈표 6-4〉 의성 이웃사촌시범마을 추진사업 내용	219
〈표 6-5〉 의성군 귀농·귀촌 인구 변화	223
〈표 6-6〉 EMRA 프로그램 내용	228

제7장

〈표 7-1〉 제1차 계획 수립 당시와 현재의 인구·경제·사회문화 상황 비교	248
〈표 7-2〉 연령대별 귀촌 사유 1순위	255
〈표 7-3〉 귀촌 증가 상위 10개 군지역 및 전체 군 지역 특성 비교('16~'20)	255
〈표 7-4〉 귀농인 농업현장 밀착 지원을 위한 농협중앙회·지역농협 역할 강화	260
〈표 7-5〉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이후 농촌 개발 사업	263
〈표 7-6〉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 시 기대효과	266
〈표 7-7〉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발전 방안	267

제1장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27

제2장

<그림 2-1> 우리나라 연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29

<그림 2-2>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비교, 2008, 2018 30

<그림 2-3>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 31

<그림 2-4> 주요국 고령화 진행 속도 및 단계별 소요연도 31

<그림 2-5> 총 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67년 32

<그림 2-6> 각 연도 5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수 33

<그림 2-7> OECD와 한국의 GDP 증가율 34

<그림 2-8>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변화 35

<그림 2-9>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 36

<그림 2-10> 우리나라 지역·연령별 실업률 변화(1994~2020) 37

<그림 2-11> 2008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가계소비 변화 40

<그림 2-12> 농림어업 취업자 변화(전년대비 변화율): 1990~2020 41

<그림 2-13> 이스털린의 역설 43

<그림 2-14>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43

<그림 2-15>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44

<그림 2-16> 유럽 주요 국가의 농촌 인구 증가율 49

<그림 2-17> 미국의 농촌 인구 변화 추세: 전년대비 증가율(%) 51

<그림 2-18> 일본의 도시, 농촌 연평균 인구성장률 변화 52

<그림 2-19>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순유입 규모 53

<그림 2-20> 이동 사유별 농촌 순유입 규모 변화 53

<그림 2-21> 메카트렌드 변화와 향후 귀농·귀촌 전망 59

제3장

〈그림 3-1〉 읍·면 인구 및 농촌인구 비율 변화	63
〈그림 3-2〉 연령대별 전체인구 대비 농촌인구 비율	63
〈그림 3-3〉 도시·농촌간 인구이동	64
〈그림 3-4〉 읍면별 인구 순유입 및 자연증감	66
〈그림 3-5〉 인구 유지·증가 읍면의 전국 분포	67
〈그림 3-6〉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변화와 연령대별 의향 차이	68
〈그림 3-7〉 귀농·귀촌 예정 시기	69
〈그림 3-8〉 귀농 경로	71
〈그림 3-9〉 귀촌 경로	72
〈그림 3-10〉 귀농·귀촌 동기(1순위)	73
〈그림 3-11〉 시기·연령대별 귀농 동기(1순위)	73
〈그림 3-12〉 시기·연령대별 귀촌 동기(1순위)	74
〈그림 3-13〉 귀농·귀촌 전 종사 직업·산업분야	75
〈그림 3-14〉 연령대별 귀농·귀촌 전 직업	76
〈그림 3-15〉 귀농·귀촌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	77
〈그림 3-16〉 귀농·귀촌 가구의 가족 합류 시기 및 가족이 합류하지 않는 이유	77
〈그림 3-17〉 귀농·귀촌 독신가구 비율	78
〈그림 3-18〉 귀농·귀촌 준비 기간	78
〈그림 3-19〉 귀농·귀촌 준비내용(1+2순위)	79
〈그림 3-20〉 귀농·귀촌 정착준비 자금	80
〈그림 3-21〉 귀농·귀촌 준비 관련 정보 수집 경로(1+2순위)	81
〈그림 3-22〉 농외활동 종류에 따른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 비중	85
〈그림 3-23〉 현재 귀농·귀촌인이 거주하는 주택종류와 점유형태	88
〈그림 3-24〉 귀농·귀촌 초기와 현재의 주택종류 변화 및 희망 주택종류	88
〈그림 3-25〉 귀농·귀촌인의 농촌 생활만족 및 계속 거주 의향	90

〈그림 3-26〉 농촌정착 어려움 및 도시 재이주하려는 이유	92
〈그림 3-27〉 경제 및 지역사회 활동 어려움 이유	92
〈그림 3-28〉 주택확보 어려움을 겪은 비율 및 이유	93
〈그림 3-29〉 귀농·귀촌인 정책 수혜 실태	94
〈그림 3-30〉 귀농·귀촌인의 정책수혜 실태(세부)	94
〈그림 3-31〉 귀농·귀촌인 교육이수	95
〈그림 3-32〉 귀농·귀촌 교육 미이수 이유 및 개선 요구	95
〈그림 3-33〉 귀농·귀촌 정책의 문제점	96
〈그림 3-34〉 귀농·귀촌 필요 정책(1+2순위)	96
〈그림 3-35〉 귀농·귀촌지 결정요인(1+2순위)	101
〈그림 3-36〉 비연고지 귀농·귀촌 결정요인(1+2순위)	102
〈그림 3-37〉 귀농·귀촌지 분포	112

제4장

〈그림 4-1〉 2016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139
〈그림 4-2〉 조사시기별 귀농연차에 따른 가구소득 변화	141
〈그림 4-3〉 조사시기별 귀농·귀촌인의 지역주민관계 및 마을회의 참여비율	143
〈그림 4-4〉 연령대별 농림어업 종사자 변화	145
〈그림 4-5〉 조사시기별 귀농·귀촌교육 이수율·도움비율	148
〈그림 4-6〉 귀농·귀촌인 일자리 연계도	151
〈그림 4-7〉 농림어업 취업자 종사상지위별 전년대비 변화: 2010~2020(3년 이동평균)	152
〈그림 4-8〉 귀농·귀촌 초기 주택 마련 어려움을 겪는 비율	154
〈그림 4-9〉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155
〈그림 4-10〉 주민 관계 형성 지원 정책 수혜율 및 도움 비율	156
〈그림 4-11〉 귀농·귀촌시기별 귀농·귀촌 지원조직 이용 현황 및 도움 비율	159

〈그림 4-12〉 제1차 귀농·귀촌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및 실적·성과 평가 159

제5장

〈그림 5-1〉 2021년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지역 175
〈그림 5-2〉 귀농·귀촌 리츠 사업 추진체계 178
〈그림 5-3〉 귀농·귀촌리츠 사례(경남 하동) 179
〈그림 5-4〉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 180
〈그림 5-5〉 읍·면·동 기본 조직·인력 모델 184

제6장

〈그림 6-1〉 충남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현황 202
〈그림 6-2〉 완주 청년 JUMP 프로젝트 추진절차 210
〈그림 6-3〉 순창 청년활동가 사업 추진체계 212
〈그림 6-4〉 의성 이웃사촌시범마을 추진 사업배치도 218
〈그림 6-5〉 미국 농업문해(Agricultural Literacy) 내용구조 234

제7장

〈그림 7-1〉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비전·목표·전략·과제 251
〈그림 7-2〉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안) 254
〈그림 7-3〉 농산어촌 주거 플랫폼 구성(안) 264
〈그림 7-4〉 귀농귀촌 플랫폼 개념도 265

1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후기 산업사회에서 도시민의 농촌 이주는 주요 국가들의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등장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음.

- 서구에서는 1960~70년부터 새로운 삶을 택하는 도시민들이 나타나면서 탈 도시화 현상이 나타남. 산업발전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렸던 도시 중산층들은 대도시 인구집중에 의한 도시문제의 발생을 경험한 후,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운동에 동참하면서 탈도시화가 진행되었음.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인구 3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중소도시 지역 카운티(county)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프랑스는 1970년대 중반 인구 2천 명 미만 농촌 코뮌의 인구가 매년 1%씩 증가하고, 영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농촌 인구 증가가 나타남(김경진 외 2021).
- 일본에서도 1990년대 들어 헤이세이(平成) 대 불황에 의한 비농업 부문의 기업 도산·인력 구조 조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신규취농촉진사업의 강화, 농업·농촌의 가치 재조명 등을 통해 전원회귀(田園回歸) 인구가 증가함(마상진 2019).
-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IMF 위기 시 늘어났던 귀농·귀촌은 이후 감소하다

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증가하여, 2010년대 중반 이후 매년 50만 명 규모로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임.

-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도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귀농·귀촌 가구는 357,694호, 귀농·귀촌 인구는 494,569명으로, 2018년을 정점으로 유지하는 상황임. 귀농보다는 귀촌이 두드러지며, 지역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도시민의 농촌 유입은 농촌의 인구학적 영향,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등을 줌.

- 인구학적 영향(Demographic Impact): 농촌의 인구 규모, 연령 구조, 교육 수준 및 기술 수준 등을 바꿈. 고령화된 기존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학력 수준이 높은 귀농·귀촌자들이(청장년 층은 자녀와 동반) 유입되면서 지역사회의 인구 잠재력(population potential)을 높임(인재 획득(Brain Gain) ↔ 인재 유출(Brain Drain)).
- 경제적 영향(Economic Impact):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농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집을 사거나 임대하는 등 경제활동이 발생하고, 지역사회 각종 서비스(소매점, 자동차수리점 등)를 이용하는 빈도가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됨. 반면에 각종 공공서비스(경찰, 소방, 행정 등)의 서비스의 1인당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들 서비스의 유지 근거가 마련이 됨. 도시의 교사, 의사, 약사, 회계사, 법률가, 은행원, 기업인 등이 유입되면서 관련 서비스 분야의 인력이 충원될 확률이 높아지고,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운영으로 효율성이 높일 수 있음. 자영업의 경우 소규모, 가족 중심의 경영을 전문화되고, 다각화된 경영으로 바꾸는 경우가 생겨남. 지역의 유희시설이 새로운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도 함.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경우, 기존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생활비용이 있을 수 있음.
-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귀농·귀촌인들은 사무공간 소유, 자선 활동, 각종 사회·여가·경제단체 활동에 참여를 통해 농촌 사회에 다양한 이익을 줌. 학교운영위원회, 상공회의소, 지역개발위원회 등에 이들의 참여가 활성화됨으로써 각종 지역사회 개발 및 공유자원(토지이용, 수자원보호 등) 보호·활용 현안 프로젝트가 다양한 아이디어로 진행되도록 하여 지역사회 잠재력을 높이고, 한정된 자원 하에서 지역사회 기능을 유지하면서 발전해나갈 수 있게 해줌.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도 내재되어

있으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거처야 할 단계이고, 끊임없이 해결 방안을 고민하여야 함.

○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귀농·귀촌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차원의 체계적 정책 사업 추진이 이루어짐.

-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악화되는 고용 상황의 탈출구를 제시하는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 등의 농촌 정착 의향 증가라는 사회 트렌드에 부응하고자 조기 퇴직, 은퇴 등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에게 일자리 제공, 타 산업 경험 인력 유입이 농식품 산업 부문 경쟁력 강화 기여, 농촌 지역 주민 확보 및 문화, 관광, 서비스 분야 활력 증진 등을 목표로 2009년 최초의 종합적인 귀농·귀촌 정책 방안으로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추진됨.

- 2012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귀농어업인의 육성 규정이 삽입(제29조의 2)되고, 귀농·귀촌 양적 확대를 정책 목표(귀농 2만 호 달성)로 설정하며, 6개 분야 정책 과제를 제시함.

- 2015년 농촌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울러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귀농·귀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6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함.

○ 뉴노멀시대 도시 경제사정의 악화되고, 도시민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우리사회의 탈도시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고, 코로나 시대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지난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최근 귀농·귀촌 현황과 향후 전망, 코로나 및 디지털 전환 등 변화된 시대 상황에서 새로운 귀농·귀촌 수요 분석을 토대로,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22~2026)’ 수립의 기본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았음.

- 귀농·귀촌 관련 인구·경제·사회 관련 메가트렌드를 분석함.
- 최근 귀농·귀촌의 특징을 분석함.
- 귀농·귀촌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
- 귀농·귀촌 관련 범부처 정책을 분석함.
- 귀농·귀촌 관련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
- 제 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함.

2. 주요 연구 동향

2.1. 외국 연구 동향

○ 인간의 거주지 이전 행위와 관련해서는 19세기 Ravenstein(1885)의 이주 이론(Law of Migration)이 시초임. 그는 인구 이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제시함.

- ① 인구이동은 근거리 이동이 많다. ② 대부분의 인구이동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다. ③ 인구이동에 의해 도시가 성장하고 이후에 자연 증가가 이루어진다. ④ 인구이동은 산업, 상업, 유통을 촉진한다. ⑤ 한쪽으로의 인구이동은 반대쪽으로의 인구이동을 동반한다. ⑥ 여자가 남자보다 이동성이 낮다. ⑦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은 경제이다(박시현&최용욱 2014).

○ Lee(1966)는 Ravenstein이 제기한 이주 이론을 수정하여 인구이동은 도착지의 요인(pulling factors)과 출발지의 요인(pushing factors), 거리, 제도 등과 같은 두 지점 사이의 장애요인(intervening obstacles), 그것들에 반응하는 개인적인 요인(personal factors)에 의해 결정된다고 함. 이는 이후 “push-pull” 모형으로 발전됨(Passaris 1989).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시 압출요인으로는 농촌의 과잉노동력, 자원의 고갈, 홍수 등과 같은 자연적 기상조건, 농업의 기계화 등이 작용하고, 반면 도시의 흡입요인은 고

용기회, 교육기회, 다양한 경제활동기회, 전통적 규범으로부터의 자유, 풍부한 정보, 권력에의 접근성 양호 등이 있음(박시현&최용욱 2014).

○ 한편, 1960년대 이후 후기 산업사회 들어선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함. 산업발전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렸던 도시 중산층들은 대도시 인구집중에 의한 도시문제의 발생을 경험한 후,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운동에 동참하면서 탈도시화가 진행.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인구 3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비대도시 지역 카운티(county)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함. 프랑스는 1970년대 중반 인구 2천 명 미만 농촌 코뮌의 인구가 매년 1%씩 증가하고, 영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농촌 인구 증가가 나타남(김경진 외 2021). 일본에서도 1990년대 들어 헤이세이(平成) 대 불황에 의한 비농업 부문의 기업 도산·인력 구조 조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신규 취농 촉진사업의 강화, 농업·농촌의 가치 재조명 등을 통해 전원회귀(田園回歸) 인구가 증가함(마상진 2019).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사람들의 이주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경제적 요인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기 시작함. 개별 사례에 관해서는, push-pull 요인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최근에는 이민자의 인식과 경험이 이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더 미시적 수준에서 경험적 연구 중요성이 대두됨.

○ Gkartzios(2013)는 이주의 동기는 그 나라와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인 상황이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개인적인 배경을 포함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또한 Truly(2002)는 이주 전후의 거주지에서의 생활 만족도 비교하여 이주 동기와 이주 대상 지역과의 관계를 4개의 매트릭스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함. 국가나 지역의 문화·경제적 배경을 포함하여 개인이 특정 위치에 찾아 의의와 그 전제가 되는 가치관 이동을 통한 자아실현 등 당사자에 따라 크게 다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push-pull 요인 등 외부 요소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인식에 근거한 질적 접근이 중요해짐.

○ 농촌 사회학자 또는 지리학자들은 농촌의 수입 수준 증가, 직업적 기회, 중요한 공공 서비스 여건 등(Bosworth 2009; Moseley & Owen 2008; Stockdale, Findlay & Short 2000)이 사람들의 농촌 이주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이라 보았음(Feinerman et

al. 2011). 특히 거주지의 이전과 관련한 개인의 결정은 경제적 요인 외에 다양한 동기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Hosszu 2009),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대안적 삶(alternative life) 또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맥락 요인에 대한 관심임(Arnon & Sharnai 2010). 경제적이지 않은, 즉 비경제적 이주 동기는 소음, 대기오염, 인구밀집, 격리된 인간관계 등의 도시 환경의 부정적 측면을 대체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임. 즉 농촌은 목가적인(idyllic), 전통문화적 가치, 덜 밀집된 주거환경,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좀 더 행복하고 의미있는 사회적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 등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이주를 함(Chipeniuk 2006; Halfacree & Boyle 1998).

○ Mitchell(2004)은 역도시화를 이동 세대의 동기에 의해 세 가지로 분류함. 첫 번째는 ex-urbanization으로 유복한 도시 거주자가 시골풍의 생활을 동경해 대도시 교외로 주거를 옮기는 것이지만, 대도시로 통근하는 형태는 변하지 않는 형태, 두 번째는 displaced-urbanization으로 새로운 고용기회나 생활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동으로, 동일한 조건이라면 대도시로 되돌아간다는 점이 exurbanization과 다름. 세 번째는 anti-urbanization이며, 도시의 편의를 누리기보다 농촌이나 인구가 집중하지 않는 장소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지향을 나타냄.

○ Benson and O'Reilly(2009)는 라이프스타일 이주와 역도시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서, 모두 보다 질 높은 삶을 추구하려고 이동이지만, 역도시화 연구에서는 인구의 출입 동향에 초점이 있고, 이주 행동이 당사자의 삶과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McIntyre(2009)은 역도시화와의 차이점은 라이프 스타일 이주는 반드시 도시에서 농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하는 환경이 도시에 있으면, 거기가 이주 대상으로 선택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O'Reilly and Benson(2009)는 라이프 스타일 이주의 세부 형태로 은퇴 이주, 여가 이주, 역도시화, 별장 소유, 편의 시설 탐험, 계절적 이동 등을 꼽았음. 은퇴 이주는 기후와 주거 환경의 쾌적함이 이주한 결정 주요 요소이며, 어메니티 이주라고도 불림.

○ 한편 최근에는 은퇴한 시니어세대의 이주 뿐 아니라 현역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이주가 주목받는데, 현역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이주는 경제적인 요인이 직접적인 동기가 없더라도 이주한에서 생계를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고 함(McIntyre 2009). 현역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이민자의 일과 관련하여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주 전에 소득원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주 전에 다니던 회사에 이주한에서 통근하거나(Swaffield and Fairweather 1998) 가장 새로운 유형으로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인터넷에서 도시와 교신하여 이주 전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것임(Fountain and Hall 2002). 두 번째는 이민자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주하여 이주 대상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향하는(Benson and O'Reilly 2009) 것으로, 예술가 또는 컨설턴트(Fountain and Hall 2002) 등이 이에 해당함. 세 번째는 일을 이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주자에 의한 기업(Snepenger et al. 1995; Hoey 2005), 현지 기업의 고용(Stimon and Minnery 1998; Walmsley et al. 1998) 등을 들 수 있음. 세 번째 유형에 관계하는 개념으로, downshifting을 들 수 있음. 이것은 고수입이지만 열이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을 그만두고 수입이 줄어도 시간의 사용이나 업무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같은 일하는 방식에 변화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주의 노스코스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Walmsley and Duncan (1998)는 온화한 기후와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중시되는 반면, 월급 수준이 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이주를 제한하는 요소는 되지 않고 고용과 경제적인 측면은 극복할 수 있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함.

○ 라이프 스타일 이주의 계기로는 농촌이 가지는 평온하고 깨끗한 이미지에 대한 갈망이고 또 하나는 관광임(石川菜央 2018). Benson and O'Reilly(2009)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눈 라이프스타일 이주자 중 하나는 rural idyll을 원하는 사람들로, 그들은 농촌에는 오래된 좋은 공동체 정신이 남아 있어 대지와 함께 단순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하고, Hoey(2009)는 rural idyll과 downshifting을 관련시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음. McIntyre(2009)는 농촌에 대한 동경은 antiurbanization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주자는 도시에서 벗어나 농촌에 거주함으로써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고 자기 자신을 재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지적함. 한편, 라이프 스타일 이주자가 도시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Swaffield and Fairweather(1998)는 그들이 농촌의 고요함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높이 평가하면서 도시에 대해서도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서 도농을 오간다고 하였음. 또 Fountain and Hall(2002)은 은퇴 이주자가 이주처에 요구하는 것으로서 병원이나 리조트, 시니어 세대를 위한 시설 등을 들었음. 도시에서 떨어진 생활에 충실감을 느끼면서 도시적인 편리성도 부정하지 않는 것이 라이프스타일 이주자의 지향이며, 그들의 존재는 도시-농촌관계나 질 높은 생활이라는 개념에 대해 재검토를 촉진함(McIntyre 2009). 라이프 스타일 이주의 계기와로 지적되는 두 번째 요소는 관광임.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라이프스타일 이주를 결단함에 있어 과거에 관광으로 방문한 경험은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함(Benson and O'Reilly 2009). Stimon and Minnery(1998)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골드코스트 이주자 중 78%는 이전에 왔던 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Rodriguez(2010)나 Wiseman and Roseman(1979)은 현역시절에 경험한 관광이나, 휴가의 별장 체재 등이 이주처를 선택하는 요인이라고 하였음. 한편, Benson and O'Reilly(2009)는 라이프스타일 이주가 관광으로 촉발되는 경우는 있어도 양자는 동일하지 않으며, 일부 사람이 왜 관광으로 방문한 장소를 생활의 장으로 전환해 나가는지 그 배경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이 점에서 McHugh and Mings(1996)는 이주와 관광 양쪽 측면을 가진 겨울철에만 온난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니어 세대의 계절적 이주에 주목함. 이들이 최종적으로 이주할 것인지 아닌지는 고향 친구나 가족 등 사회적인 네트워크 변화와 이주한 곳에서의 경험에 달려 있다고 함. 이주지와 이주 전 거주지와의 관계는 다양하며 라이프스타일 이주자가 이주 전 지역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생활을 계속하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음(Rodriguez 2010; Stimon and Minnery 1998).

2.2. 국내 연구 동향

□ 귀농·귀촌 선호 지역

- 정일홍·이성우(2010)는 '농촌이주 도시민의 특성과 공간적 선호' 수도권 거주 도시민과 비수도권 거주 도시민의 농촌이주 행태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수도권 도시민

의 농촌이주는 공간적 분포가 다양하고 이동거리가 긴 반면에 비수도권 도시민은 권역 내 이동이 주를 이루었으며, 생애주기상 직업적 요인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음. 은퇴로 인한 농촌이주의 형태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도시민에게 존재하고, 농촌은 그들에게 대안적 거주지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고, 거리는 농촌이주를 설명하는데 유의한 변수로 판단된다고 하였음.

- 배승중 외(2019)는 귀농·귀촌인이 선호하는 이주 지역으로는 중소도시에 가까운 지역과 광역시의 근지역, 대도시에 가까운 농촌지역을 꼽았으며, 귀농·귀촌 시 예상되는 불편 요인으로는 보건의료 부문과 문화요인이 가장 크다고 하였음.
- 조성걸 외(2021)는 '농촌체험이 농촌인식의 변화와 이주정착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에서 농촌체험이 이주 정착 행동 의도와 농촌 인식변화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농촌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농촌의 물리적 정주 환경에 대해 부정적, 반대로 농촌의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농촌의 물리적 환경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농촌체험의 만족도가 높으면, 미래 삶의 정착지로 농촌을 선택하는 행동으로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음.

□ 귀농·귀촌 동기와 유형

- 박영일(1998)은 귀농인(귀농자)을 농촌 출신으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으로 돌아와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U-Turn자, 도시 출신 또는 재촌(在村) 비농업인으로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에서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취농자(取農者)로 분류함.
- 서규선·변재면(2000)은 귀농인의 유형을 도시와 농촌, 고향과 타향이라는 공간으로 구분하여, 고향(농촌)에서 거주하다가 도시로 이동한 후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 온 U턴 귀농자, U턴 귀농자와 달리 고향인 농촌이 아닌 연고가 없는 타 지역 농촌으로 귀농한 J턴 귀농자, 애초에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살아오다가 농촌으로 이주한 I턴 귀농자로 분류함.

- 박공주 외(2007)는 서규선, 변재면(2000)의 귀농자 유형 분류 방식(U턴, J턴, I턴 방식)을 채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 결과, ① 귀농유형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차이를 보이고, ② 귀농유형별로 농촌이주 준비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성이 있고, ③ 사회적 지원관계는 귀농유형별로 차이가 있고, ④ 귀농유형별로 U턴형 귀농자에 비해 J턴형과 I턴형 귀농자들이 각 영역에서 농촌생활만족도 수준이 높다고 함.
- 김철규 외(2011)는 귀농 개념과 관련한 기존 논의에 대하여 ① ‘귀농’의 의미를 ‘직업’ 중심으로 정의하는 접근, ② 공간을 중심으로 귀농인을 정의한 경우 ③ 직업으로 농사짓는 것을 전제 한 이후 이 공간을 세분화(U턴 귀농자, J턴 귀농자, I턴 귀농자)로 유형화하는 방식, ④ 귀농을 생태적 가치의 측면에서 다루는 논의로 정리하고, 귀농·귀촌 동기와 행태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인의 유형을 경제생계형, 대안가치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으로 구분함.
- 박문호 외(2012)는 귀농·귀촌의 지역에 따라 이주 요인을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는데, 원격지 귀농의 요인으로 원격지의 저렴한 농지가격과 유휴 농지 등이 많이 농지 확보가 용이한 점 등을, 대도시 근접 지역 귀농의 요인으로는 생활의 편의성, 일자리 확보 가능성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함.
- 이민수, 박덕병(2012)은 귀농·귀촌 동기를 ‘경제적 성공 추구’, ‘전원적 삶 추구’, ‘가족 생활 추구’, ‘도시생활회피 추구’, ‘영농승계 추구’ 등 다섯 가지로 유형화한 후 조사결과 가장 설명력이 높은 귀농·귀촌 동기 차원은 ‘경제적 성공 추구’와 ‘전원적 삶 추구’였다고 하였음. 귀농·귀촌의 각 유형에 따라 학력, 귀농 전 직업, 귀농 패턴, 귀농 전 거주지, 동거 자녀 등에 차이가 있었음.
- 구지영·안영진(2014)은 귀농·귀촌의 유형을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귀촌한 후 농림어업 등 1차 산업 또는 관련 산업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발적 전업 귀촌형’, 귀촌 전 경제활동을 행하던 중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실패나 실직, 전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귀촌한 ‘고식(姑息)적 전업 귀촌형’, 귀촌 목적이 경제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

시생활에 염증을 느끼거나 농촌 혹은 전원의 생활을 위해 자발적으로 귀촌을 결정한 ‘농촌 삶 지향 귀촌형’, 은퇴, 요양, 휴양 등 귀촌의 목적이 경제활동은 아니지만 자발적 가치추구보다는 노후의 휴식 또는 레저의 개념으로 귀촌한 ‘노후·휴양 귀촌형’ 등으로 나누었음.

- 우성호·이성근(2015)은 귀농·귀촌의 의사결정요인과 관련하여 경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도시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농촌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목적으로 귀농·귀촌을 결정한 가구가 많고, 다음으로 교육과 인간관계 또는 연고지로의 회귀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의사결정이 많다고 하였음. 귀농·귀촌자들은 일반적으로 환경적 요인을 기대하고 귀농·귀촌을 하지만 의사결정에는 경제·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였음.
- 마상진(2018)은 요인분석을 통해 귀농·귀촌 동기를 유형화하고,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확인된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귀농·귀촌 동기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음. 분석결과 귀농·귀촌 동기는 은퇴·전원형, 대안가치형, 생계형, 경제형 등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음. 은퇴·전원형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에서 성공한 은퇴자 계층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여가 생활을 위해서, 조용한 전원생활을 위해서 귀농·귀촌한 유형으로 귀농·귀촌 준비기간이 오래고 도시 출신이거나 농촌 출신이지만 비연고지로 귀농·귀촌한 경우가 많았음. 대안가치형은 경제적 목적과 개인적인 효용을 넘어서 농촌사회의 공익적 기능과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귀농·귀촌한 유형으로 미혼의 청·장년층이 많고, 직장근로자(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출신이 아니고, 은퇴·전원형과 마찬가지로 준비기간이 오래고 도시 출신이거나 비연고지로 귀농·귀촌한 경우가 많았음. 생계형은 도시의 높은 생활비 때문 또는 실업이나 실직 때문에 귀농·귀촌한 유형으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연령대가 높고 준비기간이 짧았으며, 농촌 출신이지만 비연고지 귀농·귀촌한 경우가 많았음. 경제형은 부모의 영농기반 승계 또는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귀농·귀촌 유형으로, 가족동반으로 고향으로 귀농·귀촌한 경우가 많았고 주로 전 거주지로부터 귀농·귀촌한 장소가 멀지 않았음.

- 김정섭·신소희·구본경(2018)은 청년들이 지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도시의 삶에 대한 피로와 문제의식을 느낀 경우, 지방이주를 통해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사를 연결하고 펼칠 기회를 찾으려는 경우, 지역공동체, 생태공동체에 소속되거나 마음 맞는 사람들과 직접 공동체를 꾸리고 싶어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음.

□ 귀농·귀촌 장애요인

- 서규선, 변재면(2000)은 귀농자들이 귀농시 겪는 어려움을 ① 자금부족 및 영농기반조성 곤란, ② 영농기술 부족, ③ 농산물 판매 곤란, ④ 주위사람들의 시선 및 일손부족 등으로 유형화하였음.
- 김정호 등(2005)은 신규 취농자들의 장애요인으로 ① 경영기반, ② 영농지식과 기술, ③ 판로 확보, ④ 지역주민과의 관계, ⑤ 확고한 신념, ⑥ 영농정보, ⑦ 가족/주변 사람 지지, ⑧ 제반환경변화를 지적하였음.
- 강대구 외(2006)는 귀농자들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① 재배(사육)기술, ② 경영기술, ③ 판매기술, ④ 운영자금, ⑤ 토지구입자금, ⑥ 농기계(시설) 자금, ⑦ 노동력 확보, ⑧ 생산물 판로, ⑨ 기술 조언자 확보, ⑩ 마을 사람들과 관계 형성, ⑪ 작목선택, ⑫ 자녀교육, ⑬ 여가나 문화 활동, ⑭ 의료·복지 시설, ⑮ 확고한 신념 등으로 정리하였음.
- 마상진·정기환(2008)은 신규 취농자가 준비 및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첫째, 결혼, 개인의 신념이나 가정적 지지와 같은 개인적·인성적·가정적인 요인, 둘째, 토지·자본·노동력 같은 생산 요소와 기술·시장·사회조직과 같은 경영 요인, 셋째, 자녀교육, 의료복지, 문화여가와 같은 생활 인프라나 환경 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음. 그는 또 개인적인 요인 또는 농업인이면 모두가 겪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제외한 전업농이나 신지식농업인과 같이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한 농업인들은 가지고 있지만, 취농을 준비하거나 새롭게 취농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여 이들로 하여금 정착 실패 또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제도적 요인을 진입장애요인으로 정의하며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를 자본 요인, 전문성 요인, 시장 요인, 사회 네트워크 요인 등으로 구분하

였음. 자본 요인에는 고정자본(토지, 영농 시설, 농기구), 운영자금(고정자본 구입 및 관리 자금, 노동력 동원, 각종 투입재 구입)이 포함됨. 둘째, 전문성 요인에는 생산 기술, 경영 역량이 포함됨. 셋째, 시장 요인에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정보 취득, 판매 시장 접근 등이 포함됨. 넷째, 사회 네트워크 요인에는 자본(고정, 경영) 마련, 전문성 개발, 시장 접근 관련 인간관계 및 조직 활동 등이 포함.

○ 유정규 외(2011)는 도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귀촌자에 초점을 두어 실태를 조사하였음. 귀촌자들이 기존 귀농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고학력으로, 귀농자들이 농지에 관심을 갖는 반면에 귀촌자들은 주택에 관심이 높아, 귀촌지 결정의 제 1요인으로 ‘양호한 자연환경’을 꼽았음. 귀촌의 성공요인으로 ‘농촌의 삶에 대한 자신과 자기 신념’을 들고 있고, 스스로 농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농촌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텃세 등으로 다수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아직까지 지역 활성화 기여는 생각만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김정섭(2012)은 귀농인들이 거주지를 농촌으로 옮기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하면서 귀농 단계(탐색, 준비, 이주 후 정착)별로 어려움을 정리함. 귀농자가 농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의 상당부분은 농촌 지역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에 확실하게 편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겪는다고 봄.

〈표 1-1〉 귀농 정착단계별 어려움

구분	어려움
탐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관련 정보 획득의 어려움 • 가족의 반대 • 귀농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부족 • 귀농 희망자의 동기, 여건 등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 • 귀농지 선정
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관련 상담 및 안내 미흡 • 귀농인의 영농계획에 대한 컨설팅 부족 • 영농실습 기회 미흡 • 주거지 관련 정보 제공의 미흡 • 농지 구입 정보 제공의 미흡 • 정책자금 지원 기회에 대한 정보(또는 수혜 가능성) 부족
이주 후 정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상담 기회 부족 •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생계 유지 • 정착 단계에서의 멘토링 등 조력 부족 • 농지 원부 마련 • 문화적 생활의 어려움 • 의료, 복지 등 생활환경 문제

구분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계획(또는 귀농 후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미흡 • 농사시설 및 영농자금 확보의 어려움 • 농사 및 농업경영 기술 습득의 어려움 •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 • 교통 문제 • 주택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교육 • 농지 확보(전용, 임차, 매입 등) • 노동력 확보 •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 형성 • 소득원 확보 문제(또는 농업소득 문제) • 자금 부족으로 인한 농지 확보(매입 또는 임차)의 어려움

자료: 김정섭(2012).

○ 마상진 외(2018)는 청년들의 영농 관련 초기 정착에서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경영자금, 농지, 기본생활비 확보, 영농기술 습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승계 여부에 따라 승계자의 경우 부모님과의 갈등, 신규 창업농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창농 지원조직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음.

○ 김정섭·신소희·구본경(2018)은 청년의 지방이주와 정착과정에서 주거, 일자리, 지역활동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리하였음. 주거와 관련해서는 임시 체류 공간이든 장기 거주지이든 지방에서 집을 구할 때는 비용 부담보다 정보 부족이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일자리와 관련하여 농촌이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같은 일이라도 도시보다 소득(임금)이 작고, 농업 외 다른 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직종의 다양성이 적고 만들어진 일자리 숫자 자체도 적은 문제, 지역활동 참여 과정에서는 청년에게 주거, 일자리, 생활서비스,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등 필요한 지역 자원의 정보를 안내하고 연결하는 안내자 부족의 문제를 들었음.

□ 여성의 귀농·귀촌

○ 이경아(2005)는 1990년대 농민운동, 농촌 지역운동 지향을 가진 대졸 여성이 토착민 농민운동가와 결혼하여 정착하는 과정을 다룸. 이들은 사회변화 가치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귀농하였으나 낮은 소득, 봉건적 가족생활, 과중한 노동부담으로 부적응 기간이 길었음. 여성들은 여성농업인센터, 공공보육 운동, 여성 커뮤니티 활동 등 농촌 지역사회의 여성문제를 풀어나가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농촌에서의 삶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보고함.

- 정다래(2009), 최은주(2012)는 탈물질주의적 가치 추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귀농한 비혼여성들이 농업노동과 지역사회 관계에서 대안적 가치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다루며, 가치 실현이 귀농 여성의 적응에 중요 요소임을 지적함.
- 성지혜(2011)는 연고지 무연고지에 따라 여성의 농촌 적응 양상이 다르다고 하고 있음. 특히 가족단위로 귀농하였으나 농업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귀농하지 않은 여성으로 위치지움. 귀농 여성들의 농촌 적응은 연고지 여부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귀농의 동기 가족 구성 및 특성 이주 이전과 현재의 직업 세계, 개인의 성향, 마을의 특징 등 다른 요인도 여성의 농촌 정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음.
- 진명숙·박성정(2012)은 가족이 귀농귀촌한 경우 자녀와 가족이 여성의 중요 이주 동기를 제공하므로 농촌 교육환경과 가족의 거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함. 여성들은 ‘농촌에 이주한 도시여성’이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만, 농업 외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로 농촌 주민 정체성을 획득해 간다고 보고하면서 귀농귀촌 여성의 재능 개발과 활용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박성정 외(2012)는 여성들의 귀농·귀촌이 다양한 이유로 결정되지만 과거에 비해 남편, 가족 때문이 아닌 자신에게서 동기를 찾는 경향이 늘고 있어 농촌 정착 과정이 주체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귀농귀촌 전에 여성을 염두에 둔 교육을 설치하고 통합교육과 별도교육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또한 귀농귀촌 후에는 기존 여성조직과의 교류 및 여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과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박신규 외(2013)는 전북 지역으로 귀농귀촌한 여성들의 정책 체감도가 매우 낮은 현실을 지적하고 농촌살이를 지원해 주는 ‘작은’ 지원정책 필요성을 강조함. 이를 위해 귀농귀촌 인구 구성원별 정착 현황과 정책 욕구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성별 통계 생산 및 귀농·귀촌 관련 기구 내 여성 전담인력 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시함.

- 성지혜(2014)는 여성의 귀농과 관련하여 남편연고지로 귀농하는 여성들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음. 귀농상황은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지 않으며 귀농교육 경험과 귀농지 적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 수집 통로, 자녀교육 및 문화생활 등에서 남성의 귀농적응과는 또 다른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귀농의 성공이 안정적 정착에 있다면 여성의 적응은 가족의 적응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귀농과 관련된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여성의 귀농경험과 문제의식에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 형성과정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함.
- 진양명숙(2014)은 여성 귀농자에게 농촌 사회에의 진입을 결정하는 데 자녀 양육의 담지자이자 모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중요한 동기가 되고, 보수적인 가부장제, 젠더 질서는 농촌 사회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된다고 하면서, 젠더 감수성에 바탕한 여성적 일자리를 찾고 여성간의 연대를 형성하며 농촌 정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음.
- 진명숙(2020)은 여성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돌봄과 교육의 공동체적 실천, 반성폭력 교육과 실천, 이윤창출보다 상호돌봄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경제 실천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귀농·귀촌 여성들의 농촌 지역사회 활동이 여성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함.
- 이순미·위라겸(2020)은 후계농업인을 포함한 청년층 귀농 여성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정착에서의 어려움은 영농 기반 확보, 자원과 기술, 부모 및 지역사회, 생산자 조직과의 관계 등 다층적 차원에 걸치지만 남성 귀농인들과 달리 여성 비하와 성적 대상화, 여성을 농업생산 보조자로 보는 통념 등이 정책 지원, 공동·공유 시설 사용, 정보 접근 등 자원과 기회에서의 실질적 배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제적 정착 지원뿐만 아니라 인권, 안전, 복지 정책이 같은 정도의 비중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귀농·귀촌 만족과 성취

- 이철우(2015)는 U턴은 영농과 농촌공동체생활의 경험을 가진 이촌향도 1세대가 주류로, 상대적으로 경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고, J턴과 I턴은 귀농 초기 영농기술과 농촌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고 전원생활의 향유가 주된 동기로서 작용한다고 하고, U턴보다는 I턴과 J턴이 정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였음.
- 이지흠·하규수(2017)는 농촌흡인 요인 중 경제적 요인이 높을수록 귀농 만족도가 높아지고, 귀농준비와 관련하여 작목준비 정도, 귀농지 주거환경에서는 안전성, 귀농지원정책에서는 창농지원이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지지가 귀농만족에 조절 효과를 가진다고 하였음.
- 박대식 외(2018)는 귀농·귀촌 성공요인을 관심, 실행, 정착별로 도출하였는데 관심단계에서는 ① 철저하고 계획적인 귀농·귀촌 준비, ② 가족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역할 분담, ③ 창의력과 도전 정신, 실행단계에서는 ① 지역사회 참여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노력, ②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화합 노력, ③ 도시생활에서의 경험이나 재능의 활용, 정착단계에서는 ①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상생협력, ②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③ 귀농·귀촌 관련 정책의 적극적 활용 등이라 하였음.
- 정성지·마상진(2021)은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사회 적응과 관련하여 귀농·귀촌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음. 경제적 동기(생계형, 경제형)보다는 비경제적 동기(은퇴전원형, 대안가치형)로 귀농·귀촌할 경우 농촌 사회에 더 적응하고, 비경제적 동기의 경우, 귀농·귀촌의 농촌사회 적응에 대한 직업만족(일 내용 만족, 일 수입 만족)의 정적 매개 효과가 있었으나 경제적 동기의 농촌사회 적응에 대한 직업 만족의 매개 효과는 없거나 부적으로 작용하였음. 즉, 귀농·귀촌 동기에 따라서 직업만족을 매개하여 농촌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음.

□ 역 귀농·귀촌

- 당초 정착한 농촌을 떠나는 귀농·귀촌인들에 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음. 김철규 외(2011)는 귀농·귀촌 정착 중인 이들의 도시 재이주 의향 조사 결과 9.6%라 하였고, 전북 귀촌귀촌지원센터(2016)의 도시로 돌아간 귀농·귀촌 가구 조사에 의하면 8.3%였음. 마상진 외(2016)의 귀농·귀촌인의 역귀농·귀촌 의향 조사 결과는 8.6%였음. 윤순덕 외(2017)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의 귀농·귀촌패널을 대상으로 역귀농·귀촌비율을 분석(미응답자에 대한 추적조사)한 결과 도시로의 회귀(6.9%), 다른 농촌으로의 2차 귀농자(4.3%) 등 원래 귀농·귀촌한 지역을 떠난 비율은 11.2%라고 보고하였음.
- 마상진 외(2018)는 기존의 역 귀농·귀촌 관련 연구를 종합하면서 농촌 적응에 실패하여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역 귀농·귀촌 비율은 약 10% 내외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청년층은 귀농·귀촌했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도시로 회귀하기보다는 좀 더 나은 영농여건을 찾아 적극적으로 다른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중·노년층은 다른 농촌으로 이주하기보다는 계속 거주하거나 아니면 농촌생활을 접거나 영농을 포기하고 도시로의 이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음. 그리고 청년농의 성공 정착을 농가 소득과 삶의 질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과는 영농규모 외에 특히 창농 전 법인 경험, 경영장부기록 여부와의 관련성이 높았고, 삶의 질 만족은 창농 과정에서의 멘토링 경험, 그리고 지역으로부터 기대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음.
- 최원실·허태호·이상현(2020)의 귀농·귀촌인들의 역 귀농·귀촌 의향과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도시민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결심할 때 비경제적 동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우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할 의향이 높은 반면, 경제적 동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우에는 실제 도시로 역 귀농 귀촌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함.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시간과 귀농 귀촌 연차가 높아질수록 귀농 귀촌인이 도시로 역 귀농 귀촌하고자 하는 의향과 실제 결정 확률 모두 낮아지고, 마을 주민과의 갈등을 겪으면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할 의향은 갖게 된다고 하였음. 또한 학령기 자녀를 둔 귀농 귀촌인은 도시로 역 귀농 귀촌할 확률이 높고, 귀농 귀촌 초기부터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경우보다 가구주가 먼저 이주 후 가족이 합류하거나 지인과 이주한 경우에 실제 역 귀농

귀촌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음. 그리고 마을 주민의 우호적인 태도와 귀농 귀촌을 통한 개인적인 만족감이 높을수록 귀농 귀촌인들의 역 귀농 귀촌 의향과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할 의향이 낮아진다고 하였음.

□ 귀농·귀촌의 농촌 사회 영향

- 김철규 외(2011)는 귀농·귀촌을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음. ① 귀농·귀촌을 도시민의 실업 대책을 위한 도구적 측면, ② 귀농·귀촌을 사회문제 해결(‘도시의 과밀화’와 ‘농촌의 과소화’)이라는 관점, ③ 귀농·귀촌을 대안적 관점으로 조망하며 자립 가능한 농촌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에 종사할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얻고, ‘농’의 가치를 현재의 생태·경제·문화위기를 돌파하는 하나의 대안적 동력으로 보는 관점
- 김정섭(2012)은 귀농·귀촌이 농촌 지역사회에 끼칠 영향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농촌의 인구사회학적으로 지역사회의 지속성 위기에 처해 있기에 인구 유입 자체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귀농·귀촌 인구 증가 현상이 자동적으로 농촌 지역 활력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함. 그는 귀농·귀촌이 농촌 지역사회에 끼칠 영향과 관련하여 귀농·귀촌으로 인한 민간 및 공공부문의 자금유입 측면, 기존 농촌 인적자원에게는 다소 부족한 농업 외 영역에서의 활동 특히 지역사회 외부의 사람들을 소비자층으로 삼는 경제활동 부문에서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귀농·귀촌자들로부터 공급받는다는 혁신적 인적 자본 유입의 측면, 지역 외부와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농업 외 부문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 인적 자원이 농촌에 유입되면 그만큼 지역사회의 사회적 학습 역량이 증대되고, 사회적 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지역혁신의 가능성 또한 커진다는 사회적 자본 형성의 측면이 있다고 정리함.
- 김철규 외(2012)는 농촌으로 이주한 신규 주민들과 기존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농촌 지역사회는 여전히 한국사회에 강하게 남아있는 문화적·사회적 규범, 연고주의적 사회관계의 특성 등을 지니고 있어 개방성,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에 걸림돌로 작동할 수 있는 요소들을 안고 있다고 함.

- 김경덕 외(2012)는 귀농·귀촌에 따른 일인당 사회적 순편익을 산정함. 유입인구 1인당 약 169만 원의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함. 특히 40~50대 연령층 및 2년제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고인적자본 소유자의 귀촌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함. 김경덕 외(마상진 외 2019)는 이후 분석자료를 업데이트하여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인구 1인 이동 시 얻을 수 있는 순사회적 편익은 2015년 기준으로 재계산한 결과 연평균 488.13~500.28만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함. 이는 농촌지역 2015년도 평균 일인당 GRDP(실질)인 29.4백만 원의 16.6~17.0%에 해당하고, 2인 가족 중심으로 환산하면 귀농귀촌에 따른 사회적 순편익은 2015년 기준으로 976.26~1,000.56만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함.
- 황정임·최윤지(2013)는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 유입 증가 현상을 농촌 주민에 초점을 맞추어 외지인의 이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농업인이 비농업인에 비해 외지인의 농촌으로의 유입에 대해 부정적이고, 농촌 주민들의 지역사회 생활 만족도는 외지인의 농촌 이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정의 관계를 가지고,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은 농촌 주민일수록 외지인의 농촌 이주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하였음.
- 성주인 외(2013)는 귀농·귀촌이 인적자원의 외부유입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 지원의 명분을 놓고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엇갈린 시각이 존재함을 지적함. 지역 농업을 책임질 인력으로서 역할을 기대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기존 농업인과 경합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귀농·귀촌인이 전문적인 농어업 인력이나 2·3차 산업 인력, 젊은 경영인 등의 역할보다는 문화예술이나 교육·의료·복지 등의 분야에서 활동 기대가 더 많다고 보고함. 이는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비농업 분야 소득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현실 때문으로, 총론적인 수준에서는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인의 역할 기대가 높지만, 귀농인 유입에 따라 기존 주민과 이해 상충이 나타나리라는 우려도 농어촌 지역에 존재함을 지적함.
- 구지영·안영진(2014)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귀촌인은 농촌의 경제적 가능성을 확인하여 이를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농촌의 젊은 노동력이 되었으며, 농업

생산성의 증가와 새로운 작물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를 추구하고, 반면 비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귀촌인의 경우 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농촌을 바라보지 않고, 대신 변해가는 농촌의 자연환경과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농업방식에 대해 고민하며,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귀촌인에 비해 개인의 특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농촌의 또 다른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함. 귀촌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변화와 관련하여 농지가 저렴하여 토지구입이 용이한 지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귀촌인을 유지하고 이는 '농업생산'이라는 농촌의 기존 특성을 유지할 것이지만, 생산방식과 생산작물 그리고 판매형태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공동체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농촌지역의 경우 다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귀촌인이 유입되고, 이들은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귀촌인들보다 출신지역, 추구가치, 사회적 경험 등이 다양한 사람들로 농촌지역의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함. 농업활동에서도 경제적 이윤의 추구보다는 다양한 농촌의 가치(소농, 친환경 먹거리, 땅의 가치 등)를 추구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

○ 임설아·정성호(2017)는 귀농귀촌인의 사회자본이 농촌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귀농귀촌인의 통합성과 연계성은 농촌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귀농귀촌만족도 역시 농촌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통합성과 연계성은 귀농귀촌만족도를 통해 농촌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음.

○ 마상진 외(2018)는 귀농·귀촌 사례 마을 분석 결과, 귀농·귀촌이 많이 이뤄지는 마을들은 교통이 편리하거나, 경관이 빼어나거나, 농사짓기 편리한 곳이었음. 귀농·귀촌인이 많아질수록 경관 요인과 교통 요인이 중요해지는 경향성이 있다고 하였음. 귀농·귀촌이 활성화되면서 농촌 마을은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구성 비율이 달라지고, 원주민과 귀농·귀촌인간 갈등 양상이 달라지고, 귀농·귀촌인의 마을 행사의 참여 정도가 달라지고, 마을의 외부 개방성이 달라지는데, 귀농·귀촌인이 늘수록 마을 주민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줄고, 귀농·귀촌인의 마을 행사 참여는 확대된다고 함. 귀농·귀촌에 따라 교육받은 도시 중산층 유입이 이뤄지면서 비농업 종사자 증가하고, 도시문화 유입되고, 마을 인구구성 및 의사결정구조의 변화가 발생함. 귀농·귀촌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로는

인구 증가, 혁신 인력(영농 후계인력, 농촌 개발 인력) 확보, 삶의 질(사회복지, 교육환경) 개선, 도농 교류 활성화 등이 있지만, 마을 내부 갈등 증가, 사회적 위화감 조성(주거, 소득, 교육, 문화 양극화), 집값 땅값 상승(주택 부족, 영농 규모화 제한), 지역 공동체의 식 약화 등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함.

□ 귀농·귀촌 지원 방안

- 강대구(2005)는 ① 귀농에 대한 인식, ② 귀농 탐색 및 결심, ③ 귀농 준비, ④ 귀농 실행의 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인 귀농 준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귀농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 영역으로 ① 생산 영역(농지 구입과 임대, 농기계와 시설확보 등), ② 기술적 능력 영역(생산기술, 경영기술 등), ③ 사회적응 영역(주거, 자녀교육, 의료, 지역주민과의 융화 등)의 큰 세 분류를 제시하였음. 이와 같은 귀농의 각 단계에 따른 문제 영역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 마상진·정기환(2008)은 신규 취농과정에서 직면하는 장애 해소방안을 제시함. 1) 영농 관련 조직과의 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 지원과, 2)단계적 취농 준비 지원이라는 두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해 놓고, 이를 두 축으로 하여 ① 영농 도제 프로그램 지원, ② 농장(법인체) 취업 활성화, ③ 신규 취농자 네트워크 활성화, ④ 신규 취농자의 경제적 자본형성 지원, ⑤ 신규 취농자를 위한 종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⑥ 능력중심 패키지형 정책자금 지원, ⑦ 농업계 학교 영농관련 교육에 대한 지원, ⑧ 생산자 조직에 대한 교육 및 인센티브 지원, ⑨ 신규 취농자 관련 통계 개선, ⑩ 대국민 농업교양 교육 강화, ⑪ 신규 취농 지원 체제 구축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함.
- 김정섭 외(2012)는 최근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도시민의 귀농 초기에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과 교육, 보육, 문화, 의료, 평생학습 등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 분야 관련하여 늘어가는 노동 수요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함. 아울러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함께 농촌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구성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사회 통합의 관점, 그리

고 사회자본 축적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농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함.

○ 박문호 외(2012)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정책 추진 방안으로 크게 1) 정책추진체계 확립과, 2)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사업의 개선이라는 두 축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① 중앙·지역의 추진체계 정비, ② 민간지원조직의 육성, ③ 귀농·귀촌 관련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확립, ④ 지방자치단체 사업 평가제도의 개선, 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자에 대한 정보공급체계 구축, ⑥ 맞춤형 교육·컨설팅체계 강화농지, 주택 등 영농·생활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⑦ 6차 산업형 마을법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⑧ 민간주도형 공공서비스 사업 개발, ⑨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세부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함.

○ 성주인 외(2013)는 귀농·귀촌 정책을 인구 유치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단계에서 벗어나,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도시민들이 불필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① 농어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귀농·귀촌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② 관 중심보다는 민간기구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토록 유도하고, 이들이 행정과 수평적인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③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의 유지와 주민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영역의 다양한 활동 분야 발굴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 김정섭 외(2018)는 청년의 지방이주와 정착 지원은 정책이 다양한 측면의 여러 정책 수단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패키지 방식이어야 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 형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능동적 개입이 있어야 하고, 지역 주민이나 단체들의 집합적인 활동을 매개로 이주 청년들과 어울려 활동하고 도움을 주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2.3. 연구동향 시사점

- 1960~70년대부터 도시민의 농촌이주가 나타난 서구 주요 국가들에서는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 탈도시화(desurbanization 혹은 disurbanization), 도농이주(urban-rural migration), 인구 선회(population turnaround), 농촌 재인구화(rural repopulation), 땅으로 돌아가기(Back to the land)(Halfacree 2007)' 등 다양한 용어로 귀농·귀촌 현상을 탐색함. 이주의 동기, 유형, 양상, 원인 등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농촌 이주를 활발히 탐구하고 있음.
- 국내 연구로서 귀농·귀촌 선호지역과 관련하여 귀농과 귀촌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개인의 농촌 체험이 농촌 이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었음. 귀농귀촌의 동기는 다양하게 유형화되며 최근 서구에서처럼 은퇴전원형, 대안가치형 등 자발적 귀농귀촌이 늘어난다고 하였음. 귀농귀촌의 장애요인으로 귀농의 경우 개인, 농업생산, 경영, 생활적 요인들이 있고, 귀촌의 경우 주거, 일자리, 지역활동 등이 있었는데, 정착 단계별 차별화 접근이 필요하고, 여성의 귀농·귀촌과 관련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귀농·귀촌 만족과 성취 그리고 역귀농·귀촌 등과 관련하여 품목, 경로, 동기 등과 더불어 준비정도, 가족의지지, 지역사회 활동, 정책 등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음. 귀농·귀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도시와 농촌의 사회문제 해결, 농촌 인재 및 대안적 동력의 확보, 자본의 유입, 지역사회 학습역량 증대, 농촌의 개방성 확대 등과 더불어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적 순편익이 증대된다고 하였음. 한편 도시민의 농촌 유입은 지역사회 갈등 증가, 농지 가격 상승, 지역 공동체 의식 약화 등의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지적함. 귀농귀촌의 지원과 관련하여 정착 단계별 지원, 사회적 자본형성 지원 등이 중요하고 다양한 도시민의 정착 수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의 패키지 지원, 기존 농촌 주민의 참여, 민관 협력,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 강화 등이 강조되었음.

3.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주요 연구 내용

- 이 연구의 제2장에서는 귀농·귀촌 관련 메가트렌드를 분석하였음. 귀농·귀촌 현상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변화,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적 변화, 사회·문화적 변화를 관련 문헌과 통계를 기반으로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제3장에서는 최근 귀농·귀촌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였음. 농촌 인구 및 귀농·귀촌 현황과 추세, 귀농·귀촌인의 특성, 귀농·귀촌지 특성 등에 대해 관련 통계와 조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리하였음.
- 제4장에서는 귀농·귀촌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음. 귀농·귀촌 정책의 역사, 현재 추진되는 귀농·귀촌 현황을 살펴보고,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관련 행정자료 및 통계와 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음.
- 제5장에서는 귀농·귀촌 관련 범부처 정책을 분석하였음. 행정안전부, 국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문화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도시민의 농촌 유입 및 정착과 관련한 주거, 일자리, 문화·공동체 활동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음.
- 제6장에서는 귀농·귀촌 관련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음. 국내외 지자체와 외국 주요 국가에서 도시민의 농촌 유입 및 정착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과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제7장에서는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앞선 장에서 살펴본 변화하는 시대 상황,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 범부처 정책 및 관련 사례 등의 시사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2차 계획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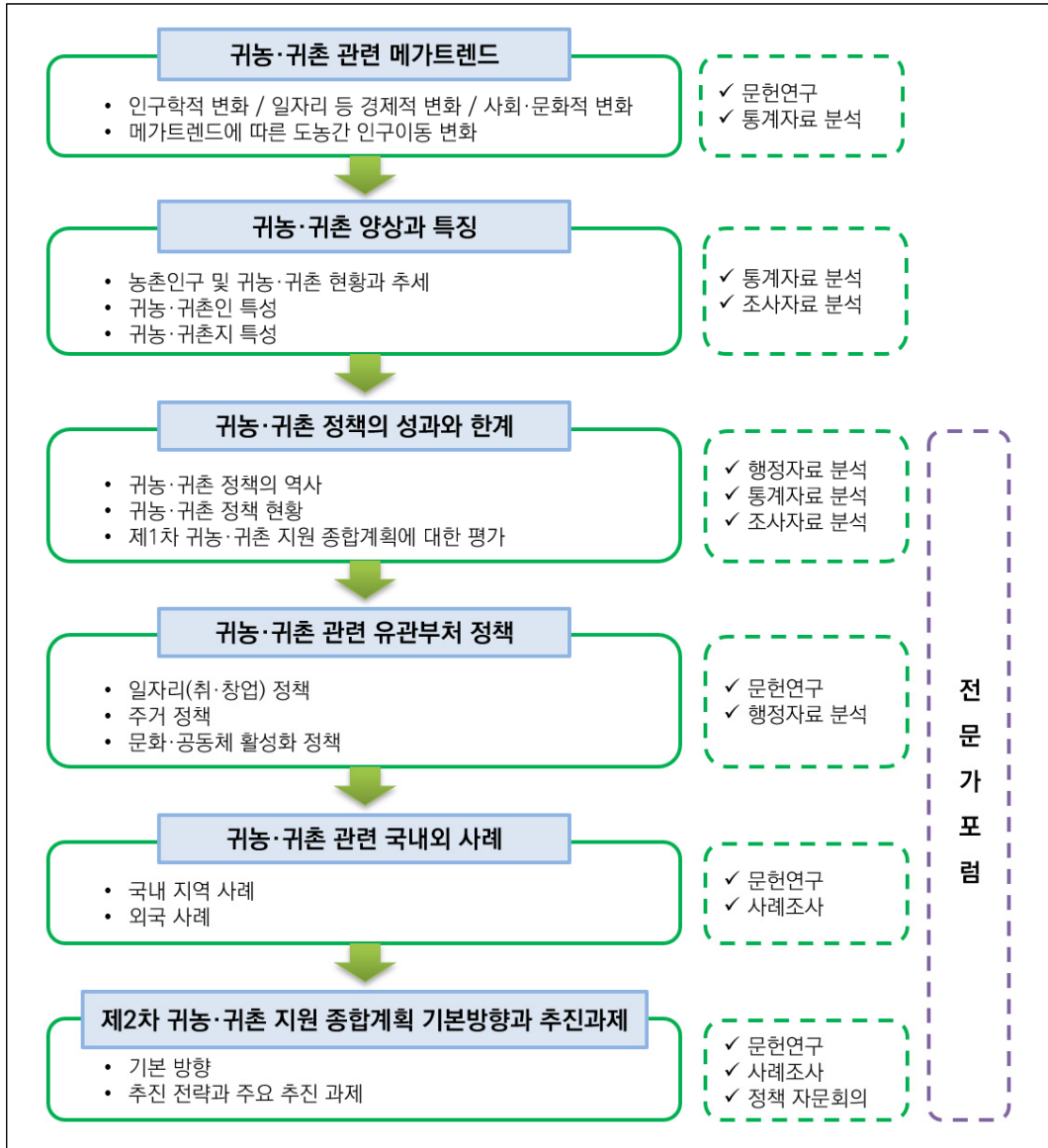
2.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귀농·귀촌 관련 이론 및 국내외 선행 연구, 귀농·귀촌 관련 메가트렌드, 귀농·귀촌 관련 범부처 정책 등을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음.
- 통계 및 조사자료 분석: 귀농·귀촌 관련 통계청 및 유관 기관 조사 통계 및 조사의 원자료(통계청: 농업(총)조사, 귀농·귀촌통계, 주민등록인구, 인구이동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실태조사 및 주요 관련 행정통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귀농·귀촌인 및 도시민 대상 각종 설문조사)를 분석하였음.
- 사례 조사: 일자리, 주거, 공동체 활성화 등 귀농·귀촌인의 유입 및 정착과 관련한 국내외 우수 사례를 조사함.
-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과 자문회의: 귀농·귀촌 동향 및 전망 분석, 신규 정책 수요 도출, 정책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포럼과 정책 관련자 자문회의를 개최함(전문가 포럼 결과는 부록 1 참조).

〈표 1-2〉 귀농·귀촌 정책 포럼 및 자문회의

포럼 및 회의	주제
1차 전문가 포럼 (06.02)	• 귀농·귀촌 메가트렌드와 향후 전망
2차 전문가 포럼 (06.30)	•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지 특성
3차 전문가 포럼 (07.26)	• 귀농·귀촌 정책의 성과와 과제
4차 전문가 포럼 (08.23)	• 범부처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 국내외 우수사례
정책 자문회의 (09.27~1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귀농·귀촌 정책 개발 - 정책 자문회의('09. 27) - 정책 자문회의('10. 12) - 정책 자문회의('10. 22) - 정책 자문회의('11. 05) - 정책 자문회의('11. 15) - 정책 자문회의('11. 16)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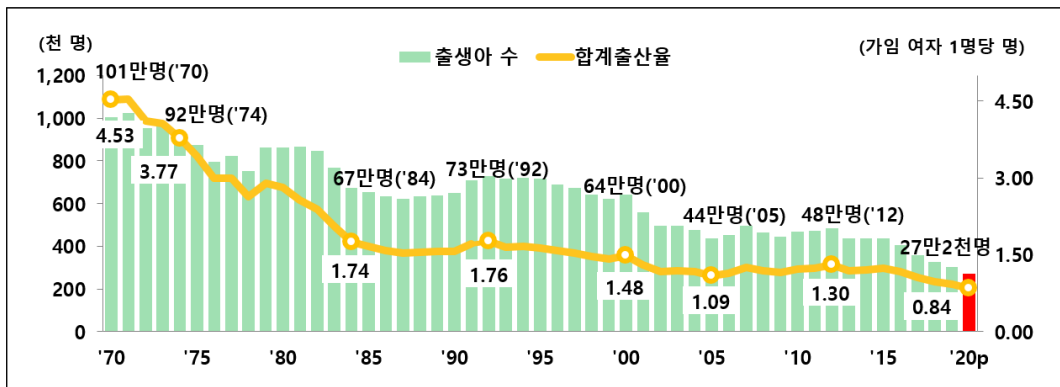
귀농·귀촌 관련 메가트렌드

1. 인구 변화

1.1. 저출산

○ 우리나라는 1984년 합계 출산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이후, '18년 0.98로 1 이하로 떨어지고 '20년 0.84명에 이르러, 출생아 수도 '20년 27.2만 명으로 급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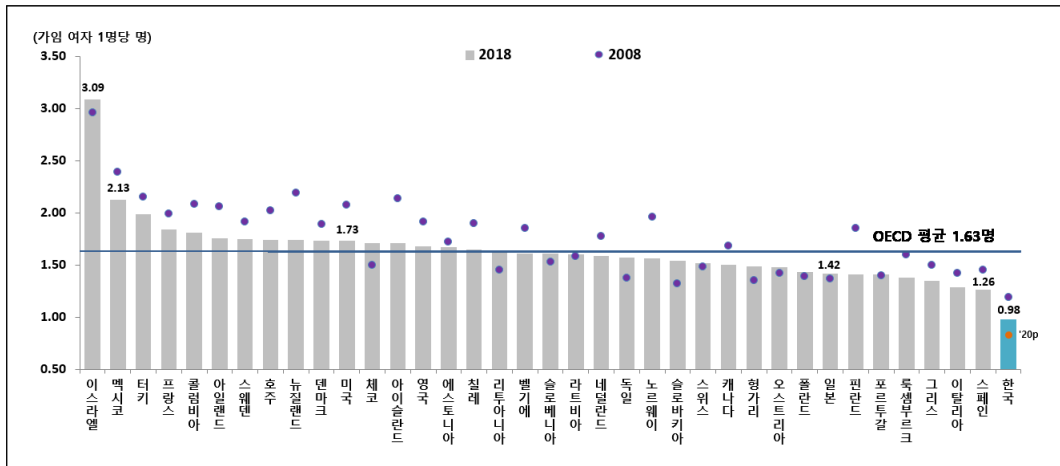
〈그림 2-1〉 우리나라 연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자료: 통계청(2021).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 OECD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7년 기준 1.6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1 이하임.

〈그림 2-2〉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비교, 2008, 2018



출처: OECD. Family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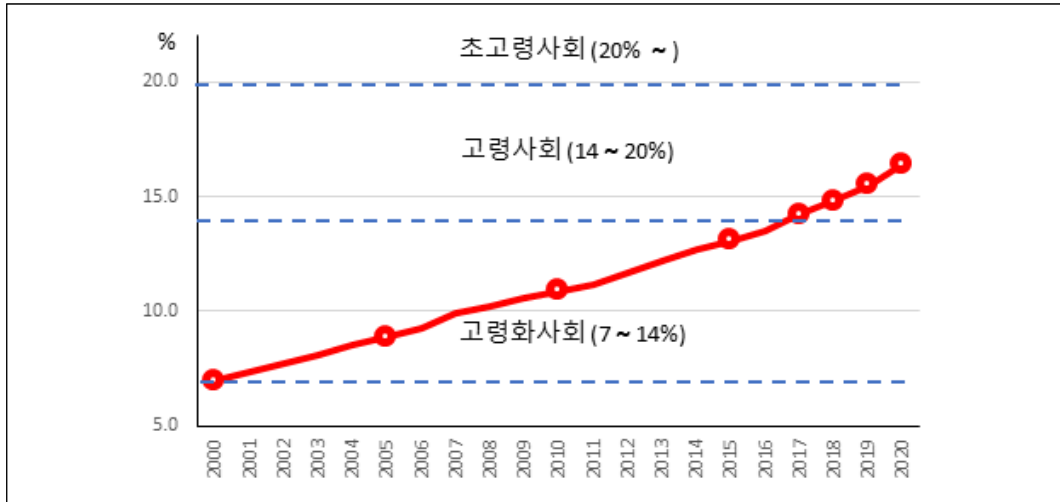
1.2. 고령화

○ 우리나라의 고령화 단계별 도달 소요연도는 주요국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진행되어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진행 중임.

-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16.4%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 이후, 2017년(14.2%) 이후 고령사회¹⁾에 접어들었음. 2020년부터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노인인구로 편입되고, '25년 고령자 1천만 명, 고령화율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

1)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그리고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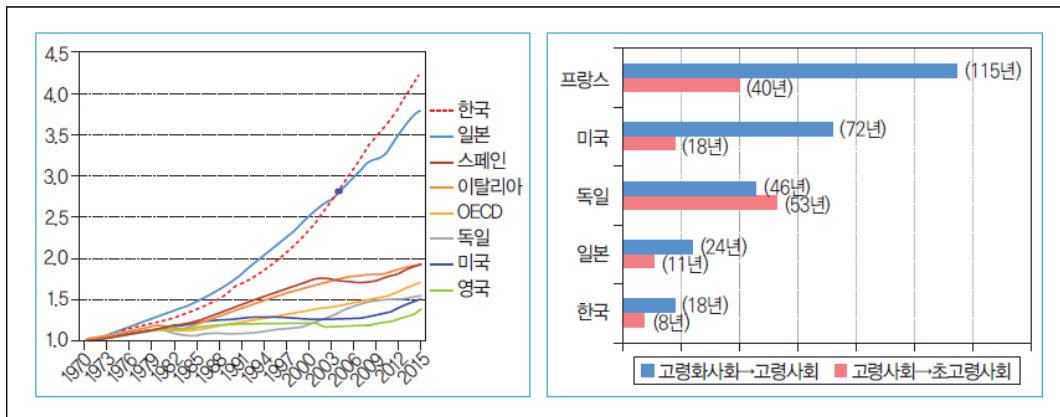
〈그림 2-3〉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



자료: 통계청(각 년도). 고령인구비율.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프랑스 및 미국은 각각 115년과 72년, 일본은 24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17년 만에 도달함.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은 주요국들이 길게는 53년(독일), 짧게는 11년(일본)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단지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4〉 주요국 고령화 진행 속도 및 단계별 소요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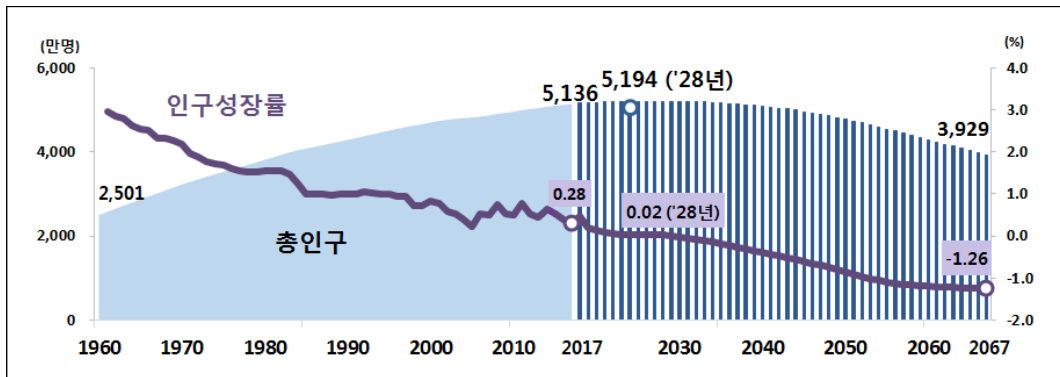
자료: 허문구 외(2017). 재인용.

1.3. 인구 오너스와 지방 소멸

○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부터 2010년 무렵까지의 50년에 걸친 인구 보너스 시기를 마감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령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 오너스²⁾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83만 명으로, 2019년 정점 대비 2만 명 감소하는 사상 첫 인구 감소를 경험
-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980-1990년 1.3%에서 2000-2010년 0.53, 2010-2015년 0.38%, 2015-2020에는 0.12%로 급격히 낮아짐.
- 2021년 1/4분기에도 연속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20년말 대비 69,479명 감소(△0.27%)(행정안전부 2021)).

〈그림 2-5〉 총 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67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9. 3).

○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년부양비 또한 증대될 것으로 보임.

2)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이 증가해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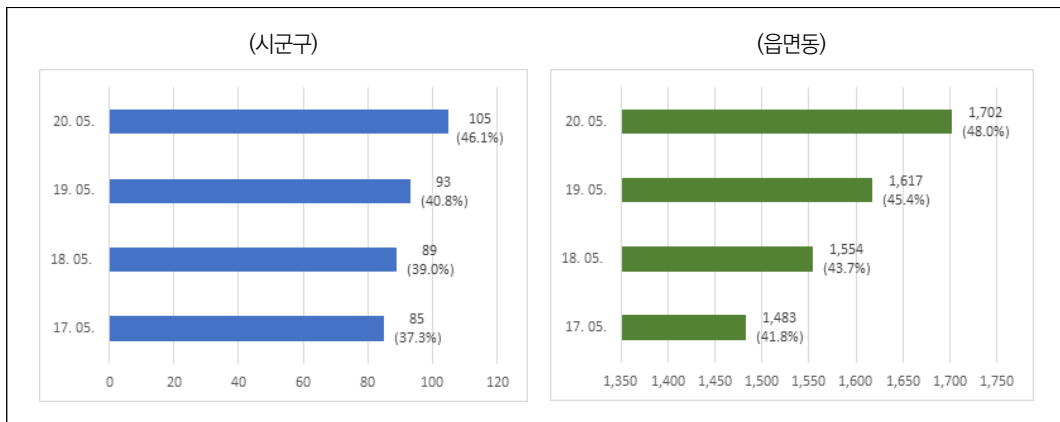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생산 가능인구의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것(한국능률협회 컨설팅, 2020).

- 2020년 3분기까지 인구 자연증감은 △14,241명이며, 생산연령인구는 '17년 3,68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18년 3,680 → '19년 3,679 → '20년 3,664)
- 인구의 고령화 증대로 생산가능인구비중은 2030년 63.1%, 2040년 56.5%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 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년에 70명을 넘고,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마상진 외 2019).

○ 최근 발표된 지방소멸³⁾ 위험지수(한국고용정보원 2020),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개가 소멸위험지역(20~39세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상대비가 0.5 미만인 지역)으로 분류되었음.

- 시군 기준 소멸위험지역: 2013년 75개 → 2018년 89개 → 2019년 97개 → 2020년 105개
- 읍면동 기준: '17년 1,483곳(전체 3,549곳) → '18년 1,554곳(전체 3,555곳) → '19년 1,617곳(전체 3,564곳) → '20년 4월 1,702곳(전체 3,545곳)

〈그림 2-6〉 각 연도 5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수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0).

3) '지방소멸'이란 일본의 마사다 히로야(増田寛也)가 자신의 저서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 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2014)이라는 책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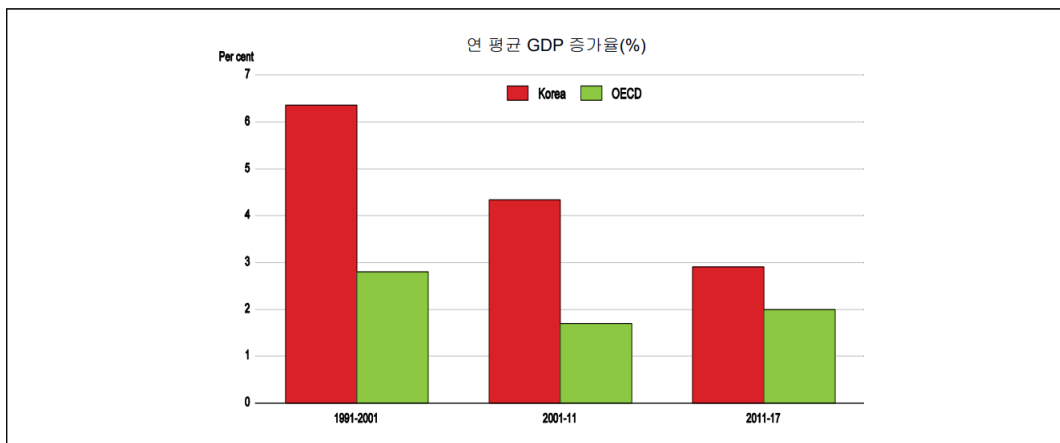
2. 경제 변화

2.1. 저성장

○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제조업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세계교역 및 산업생산은 여전히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2011년 이후 OECD는 평균 2%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2020년 세계경제는 2019년 대비 7.9%p 감소한 -5.1%의 성장률(PPP 환율 기준)을 기록. 주요 선진국 모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이후 최근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그림 2-7〉 OECD와 한국의 GDP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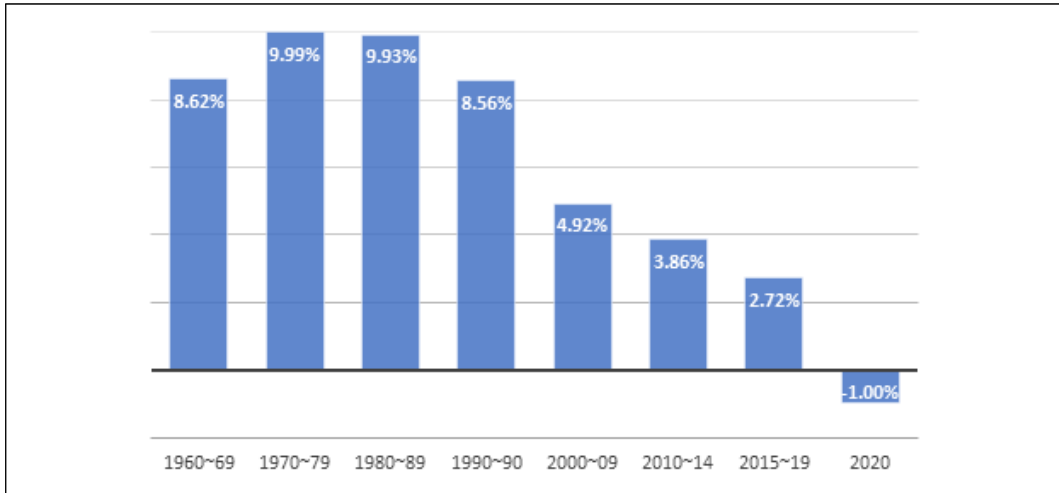


자료: OECD(2018).

○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고성장시대를 지나, 2000년 이후 성장률이 저하되기 시작, 2015년 이후 연성장을 3% 이하 저성장시대로 진입함.

- 경제상황은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졌고, '10~'14년 3.86%, '15~'19년 2.72%를 기록하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주요국 중에서 가장 잘 막아냈지만, -1.0%의 경제성장을 기록(기획재정부 2021). 2035년 이후에는 1%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될 전망이다(OECD 2018).

〈그림 2-8〉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변화



자료: 한국은행(각 년도), 국민계정.

〈글상자 1〉 루이스 변곡점(Lewisian Turning Point)

개발도상국에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행된 이후에는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서 생산비용이 높아지면서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루이스 변곡점은 197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서 루이스(William Arthur Lewis)가 제시한 것으로, 임금 상승 욕구가 분출하는 시점과 루이스변곡점은 대체로 일치하며, 산업화에 성공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겪은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루이스 변곡점을 겪으면서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이 점차 하락한다.

2.2. 고용없는 성장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과 고용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990년대 이후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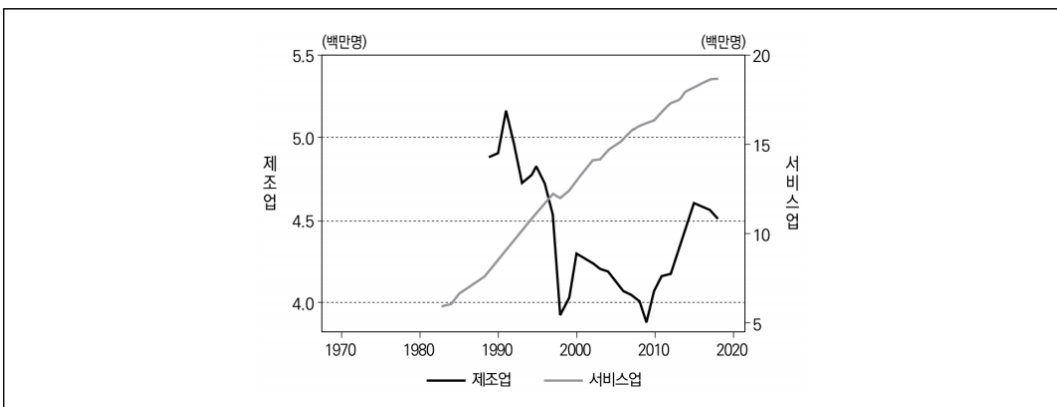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업이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함에 따라 고용이 늘어나고, 반대로 경기침체기에는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 기업에서 더 이상 인력을 새로 채용하지 않거나 인력 감축을 시도함에 따라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이 줄어듦. 즉 실업률은 경제성장률과 반대로, 반면 고용률은 경제성장률과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었음.

-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처음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관찰됨. 1980년대 실업률 5% 초반대였던, 미국은 1990년대 초 경기침체기를 겪으면서 1992년 7.5%까지 치솟지만 이후 경기 회복기를 맞이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이 돼서야 다시 5% 초반대를 회복함. 경제학자 Nick Perna는 이 현상을 ‘고용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으로 지칭하면서 경기회복기에도 실업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현상이 미국 경제에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함. 이후 2001년에 있었던 경기침체로 인해 2000년 4%에서 2002년 6%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다시 4%로 돌아온 시기는 6년이 지난 2006~2007년이었음.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 2007년의 실업률로 돌아간 것은 2017년으로 무려 9년이나 걸렸음.

○ 고용없는 성장은 산업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농림어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업의 경우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고용 없는 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자동화이기 때문임.

- 기계에 의해서 대부분의 공정이 진행되는 자동화는 궁극적으로 무인화 혹은 극소수의 인력만이 배치된 생산현장으로 귀결되기 때문임(방형준 2018).
- 2000년과 2019년을 비교할 경우, 미국 제조업에서 고용 하락의 규모는 444만 명으로 산업 내 고용규모가 26% 감소함.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면 제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일할 곳이 완전히 사라진다고보다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함(길은선 외 2019).

〈그림 2-9〉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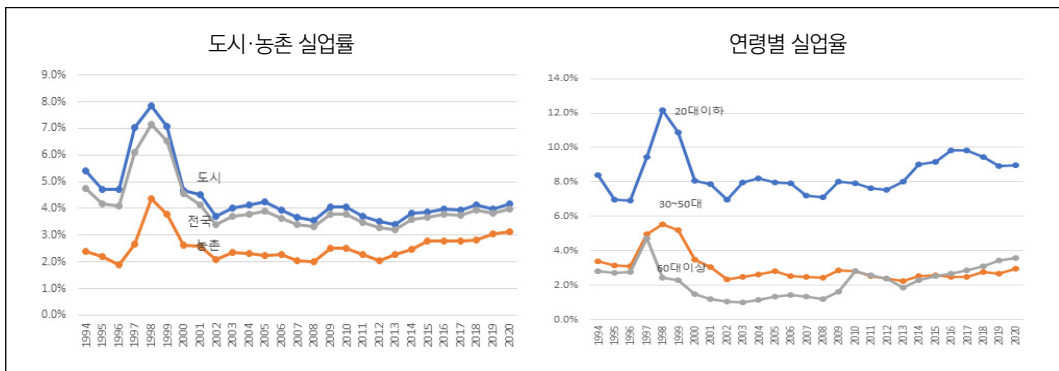


자료: 길은선 외(2019).

○ 1990년대 말 이후 3%대의 유지하던 실업률은 2020년 4%를 넘어서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악화되고 있음.

- 농촌 보다 도시 고용은 항상 안 좋았는데, 2000년대 이후 3%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농촌과 달리 2016년 이후 도시 실업률은 4%를 넘고 있음.
- 30대 이상 세대에 비해 20대 이하 청년 실업률은 2배 정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4년 이후 3배를 넘어섬.

〈그림 2-10〉 우리나라 지역·연령별 실업률 변화(1994~20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3. 저밀도 경제

○ 최근 농촌 내에서도 지리적 요인에 의해 지역 분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고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는 농촌지역이 나타남.

- 일반적으로 농촌은 불리한 입지 조건으로 인해 1차산업 외의 산업 집적과 성장에 제약이 따르는 지역으로, 도시지역이나 발달한 산업 집적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접근성, 높은 대외 의존도, 열악한 노동시장 및 인적 자본, 성숙단계 산업 혹은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 구조, 낮은 수준의 지역 혁신 역량 등이 특징임.
- 2000년대 중반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의 일부 농촌지역에서 생산성과 고용 증가가 나타났으며, 이들 농촌지역이 각국의 국가 경제 회복을 견인했음(OECD 2016).

OECD는 각국들의 경제회복을 견인한 지역은 대도시나 첨단산업 집적지와 같은 기존의 핵심지역이 아니라 농촌을 비롯한 주변부 지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 논의를 촉발시킴.

○ 농촌 지역임에도 산업 성장이 가능한 배경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공간적으로 보다 분화되고 제품·서비스별 시장 수요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교통·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농촌과 핵심지역 간의 접근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임.

- 핀란드 북부지역은 농림어업, 식품, 목재·펄프 제조 등 일차산업과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저밀도 지역이지만, 최근 핀란드 정부의 새로운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결과로 바이오소재, 의약품 제조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음.

- 프랑스 렌(Rennes) 지역은 도시와 농촌 지자체 간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도시의 수요와 농촌의 생산 영역을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루어냈음.

- 아일랜드 스키베른시는 ICT 인프라 구축으로 도시와의 접근성을 향상하여, 창업 기업들을 위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농촌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있음.

○ OECD는 2017년 발표한 농촌정책 3.0(Rural Policy 3.0)은 저밀도 경제를 포함한 새 농촌패러다임을 제시함.

- 농촌정책 3.0은 경제적 목표와 더불어 사회적·환경적 어젠다를 농촌 정책의 목표로 포함하며,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 지역 구분을 지양하고, 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농촌지역의 유형화와 그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접근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제시함.

- 농촌정책의 추진 방식과 초점이 단기적이고 특정 산업 영역에 한정된 과거 방식에서 탈피하여, 저밀도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영역으로의 확대를 강조. 지식창출과 기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략으로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 기존 농림어업 등 농촌산업과 연계된 혁신 네트워크의 확산, 창업체와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함.

〈표 2-1〉 OECD 농촌 정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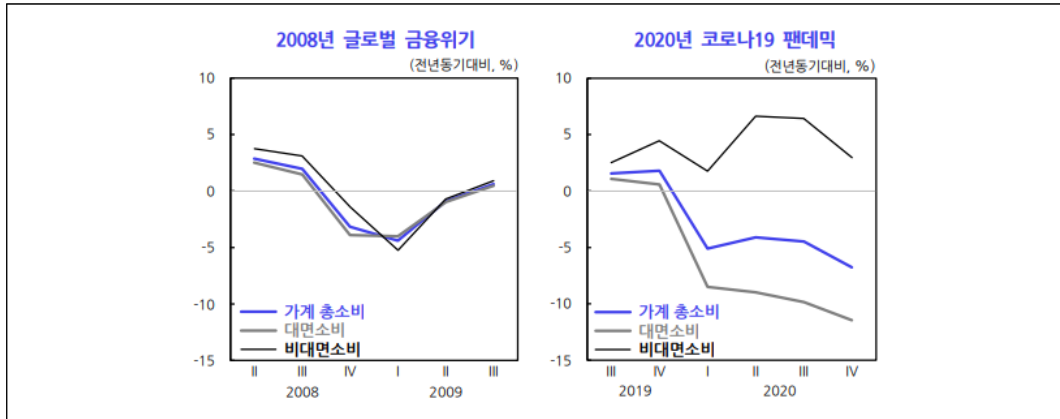
	Old Paradigm	New Rural Paradigm	Rural Policy 3.0
목표	도·농 격차 완화	경쟁력 제고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의 웰빙
정책 대상	단일한 지배적 부문 (농업)	농촌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문을 포함(통합적 접근)	경쟁 우위에 초점을 둔 저밀도 경제
정책 수단	보조금	기업 및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서비스 접근 개선을 포함한 통합적 투자
핵심 주제 및 거버넌스	중앙정부, 농업 주체	다층적 거버넌스 (관, 민, 중간지원조직)	도·농, 농·농 간 연계 등 다양한 수직·수평 통합 거버넌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접근 방식	하향식	상향식	다수의 정책 영역을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 지향

자료: OECD(2019).

○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비대면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구재소비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계의 소비행태가 과거 경제위기와 다른 양상을 나타냄(남창우 2021). 코로나 19 위기 전에는 가계소비 중 대면과 비대면 소비 비중이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비대면소비 비중이 크게 확대됨.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대면접촉이 많은 소비활동이 감소하고 가계 지출에서 대면소비 비중이 감소하고 비대면소비가 비중이 증가함(대면소비 비중(%): (2011~19) 68.5 → (2020) 65.5 / 비대면소비 비중(%): (2011~19) 31.5 → (2020) 34.5)).
- 통상적 경제위기에서 가계는 내구재 구입을 미루는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지만, 2020년에는 대면소비 감소에 따른 소비구성의 변화로 인해 가계의 내구재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 가계의 실질내구재소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2/4분기에는 19.7% 증가함. 과거 경제위기 때와는 달리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계의 소비행태가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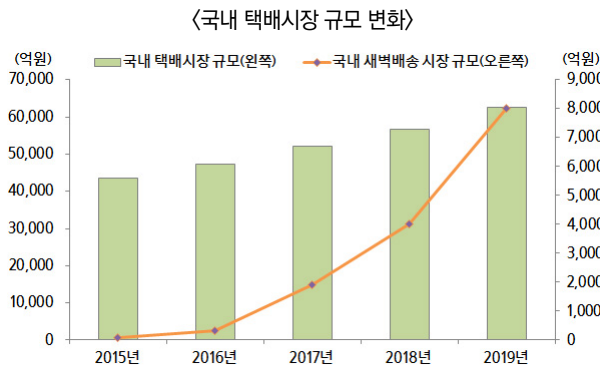
〈그림 2-11〉 2008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가계소비 변화



자료: 남창우(2021).

〈글상자 2〉 라스트 마일 배송(Last Mile Delivery)

ラスト 마일 배송은 ‘상품이 목적지까지 전달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요소들’을 뜻한다. 과거에는 주로 택배업체에서 물류 운송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 등으로 한정된 의미였으나, 최근에는 유통업체가 제품을 주문받아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것까지 포함해 그 개념이 확장됐다. 예전에는 배송이 빠르고 파손 없이 오는 것이 이 구간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가져다주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 스마트 폰을 이용한 주문 시스템의 발전이 더해지며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2015년 100억 원에서 2019년 8000억 원대로 최근 4년 새 80배 급성장했다.



미국의 아마존은 라스트 마일 배송(Last Mile Delivery)의 혁신을 이끌었다. 아마존은 2006년부터 유료 프라임 멤버십 제도를 도입해 무료 배송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한 이후, 국내와 비슷한 방향으로 당일배송, 즉시배송, 새벽배송, 인카 및 인홈 서비스 등으로 서비스를 진화시켜가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왔다. 현재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5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점유율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아마존은 구매한 물건을 고객의 차량까지 배송해주는 인-카 딜리버리(In-Car Delivery) 서비스를 시작했다. 배송지에 차량이 있는 곳을 입력하면 해당 지역까지 이동한 배송기사가 자동차 근처에서 트렁크를 열겠다는 승인 요청을 보내고, 고객은 스마트폰을 통해 이를 승인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타인이 내가 물건을 주문했다는 것 알리기 싫은 고객들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장소인 자동차 트렁크에 배달해줌으로써 호응을 얻고 있다. 월마트는 기존의 매장을 활용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갔다. 월마트는 이미 5,000개가 넘는 미국매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 인구의 90%가 월마트 상점에서 10마일(약 16Km)이내에 살고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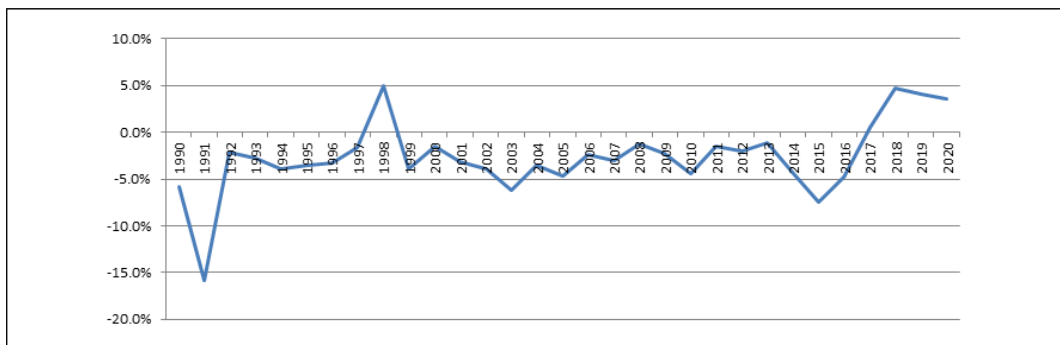
월마트는 기존의 매장에 픽업 센터를 개설하고, 고객이 온라인에서 주문한 상품을 매장에 방문하여 찾아가도록 하는 “클릭 앤 콜렉트(Click&Collect)” 서비스를 시행했고, 인-홈 딜리버리(In-Home Delivery) 서비스를 통해 라스트 마일을 현관문까지가 아니라 냉장고까지로 정의하고, 주문을 하면 월마트 직원이 고객의 동의하에 냉장고 안에 물건을 채워준다. 배송 옵션과 지역 밀도, 고객 선호도에 따라 향후 여러 가지 배송 모델이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지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드론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자율 주행차와 로봇들이 라스트 마일을 책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삼성증권(2020).

○ 도시, 비농업분야 고용 위기 상황과 대비되게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청년세대의 비중이 높아짐(마상진·박시현 2021).

- 2020년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45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5만여 명 증가. 농림어업 취업자는 1990년대 말 IMF위기 시 한해 반짝 상승했다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20년만인 2017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의 농림어업 취업자 변화동향의 특징을 보면 농림어업 취업자는 계절적 변화에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증가 추세를 보이며, 계절간 취업자 변동폭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종사상지위로 보면 경영주, 가족종사자 그리고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임시 근로자가 증가하고, 취업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취업자의 증가가 있었음. 가구형태별로는 농가의 농림어업 취업 증가,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의 증가 경향이 있었음(마상진&박시현 2021).

〈그림 2-12〉 농림어업 취업자 변화(전년대비 변화율): 1990~20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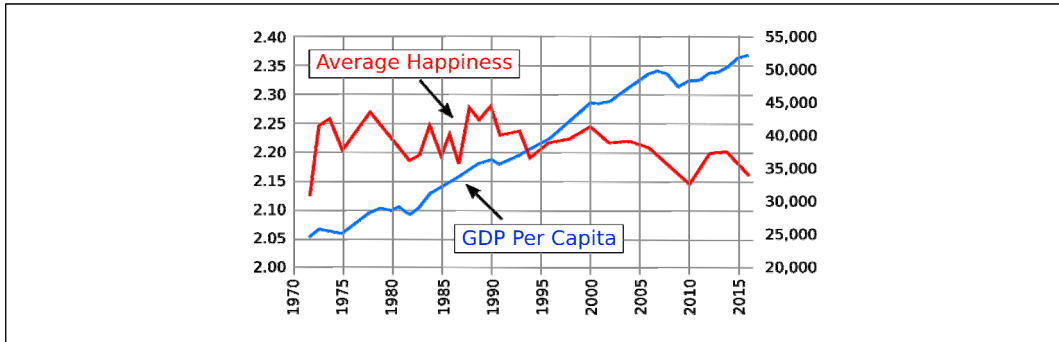
-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취업자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바, 인구 요인(생산가능 인구 변화, 고령화 등)의 영향을 배제한 농림어업 분야 노동 수요를 보면, 타 산업분야와 달리 농림어업 분야의 노동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임금격차나 취업기회 등의 격차로 인해 농업에서 비농업 분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이동이 발생하였는데, 최근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임(최근 10년 산업부문별 취업자 연간 변화율을 보면, 2017년 이후 플러스 성장을 보이는 농림어업과 달리 제조업의 경우 2016년 이후, 서비스업은 2% 이하대 저성장세를 보이다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함).
- 청년세대의 농업종사 경향은 외국에서도 발견됨. EU의 최근 농가조사(2016)를 보면 벨기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35세 미만 청년농 비중이 2013년 대비 증가하였음. 미국 농업센서스(2007~2017)를 보면, 농가 중에 청년농(35세 미만)이 비중이 지난 10년 간 꾸준히 증가하였음(2007년 5.4% → 2017년 6.0%)(임소영 외 2019).

3. 사회·문화 변화

3.1. 워라벨 추구

- 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하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추가적인 소득 증대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 말하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에 다다른 후부터는 경제성장 자체가 삶의 질 향상 담보할 수 없음.

〈그림 2-13〉 이스털린의 역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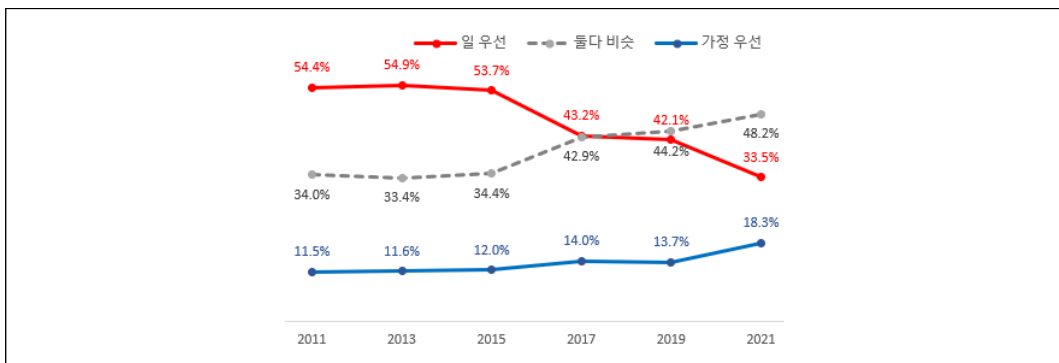


자료: Gualtieri(2018).

○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로 인해 인간의 삶은 편리하고 풍족해지고 있지만 환경오염이나 경쟁심화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전통적 가치보다 다양한 개인적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보다 개인의 취향이나 철학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중시하는 사회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마상진 외 2019).
-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있어 일과 가정생활 중에 가정생활의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통계청 사회조사를 보면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여긴다는 응답이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보다 2019년 처음으로 높게 나타난 이후 2021년 조사에서는 그 격차를 벌리고, 가정을 우선한다는 응답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이는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2-14〉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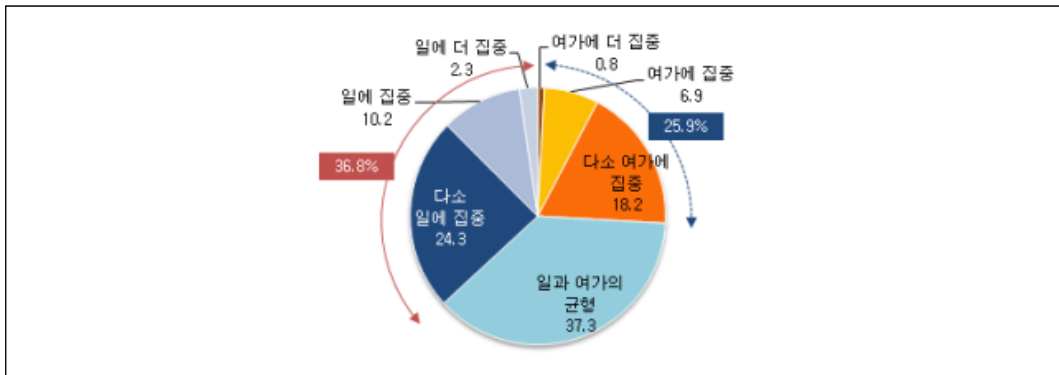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1). 사회조사.

- 웰빙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가 늘어나고,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여가에 대한 국민 관심도 또한 증가함. 문화관광부(2019)의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서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였고, 일에 더 집중한다는 응답은 36.8%, 여가에 더 집중한다는 응답은 25.9%로 나타났다. 세 응답 유형별 행복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가에 집중할수록 행복수준은 더 높았음.

〈그림 2-15〉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3.2. 디지털 전환과 언택트(비대면) 문화 확산

○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에 기인한 디지털 전환은 경제·산업·사회 등 다방면에서 혁신의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됨(김정곤 외 2016).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을 기본적인 매개체로 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은 흔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관행이나 질서를 바꾸면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정의되며(강재원 2019, 조영삼 2020), 보다 넓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한 사회 구조의 혁신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됨.
- 디지털전환은 개인과 조직 및 사회 전체에 디지털화가 초래한 총체적인 영향으로 파

약할 수 있으며, 개인수준에서는 디지털 기술 사용을 통한 변화 촉진으로, 조직(기업) 측면에서는 조직(기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사회적 수준에서는 디지털화의 결과로서 개인, 기업, 사회 및 국가에 의한 기술 적응의 글로벌화된 촉진 과정이며, 디지털화의 총체적·전면적 사회적 영향을 포함함(이상원 2017).

<글상자 3>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

- ① 다수가 필요하지 않은 규모(Scale without mass): 상대적으로 낮은(혹은 제로) 한계비용의 디지털상품은 인터넷 플랫폼과 결합하여 쉽고 빠르게 글로벌 수준의 시장 확보
- ② 넓어진 범위(Panoramic Scope): 디지털 제품(예, 스마트폰)과 정보·데이터의 결합·처리과정은 전례 없는 범위 경제(economies of scope)를 실현
- ③ 시간의 역동성(Temporal Dynamic): 디지털화는 커뮤니케이션 및 비즈니스 혁신, 정보확산을 촉진하는 반면 과거정보에 가치를 재부여하고 과거제품이 시장에서 잊혀 지지 않고 계속해서 거래되는 체제(long tail)제공 가능
- ④ 소프트 자본의 활성화(Soft Capital):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무형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고, 실질자산(real capital)은 플랫폼을 통해 렌트(rent)나 공유(share) 가능
- ⑤ 가치 이동성(Mobility of value): 소프트웨어, 정보가 어디에서나 획득·거래됨에 따라 가치가 어디서 창출됐는지 알기 어려우며, 특정지역(국가)에서보다는 전 세계를 기반으로 창출
- ⑥ 공간적 제약의 상실(Loss of place): ⑤번 특성과 인터넷이 결합하여 지역과 국경에 상관없이 가치가 거래되고, 전통적인 주권(sovereignty), 영토(territoriality)개념과 충돌
- ⑦ 최종소비자의 지능화(Intelligence at the edge): 네트워크 종단(edge)에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가 지능화됨에 따라, 이용자는 개인의 사용 목적에 맞게 네트워크를 활용가능. 단, 집적적인 네트워크 관리의 문제점(privacy, security)이 종단에서 발생
- ⑧ 플랫폼과 생태계(Platforms and Ecosystems): 디지털 기술은 개인, 사회, 기업, 정부 간 상호교류, 데이터 공유 등을 확장시키는 주요한 플랫폼 및 생태계(Ecosystems)를 제공

자료: OECD(2017), 김승현 외(2018) 재인용 내용 재구성.

○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Untact, 비대면)’ 문화가 가속화됨.

- 온라인 쇼핑, 무인 키오스크 등 비대면 방식이 이미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일상 전반에서 더욱 강력한 ‘언택트 세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 문화계에서는 ‘방구석 전시회’, ‘온라인 콘서트’, ‘방구석 응원’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됨. 국립현대미술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시 휴관 중에 사상 최초 온라인 전시를 오픈했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예사의 설명과 함께 전시회 전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를 공개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음.

- 레저 분야에서도 최대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 한적한 곳에서 캠핑이나 낚시를 즐기
고 자전고로 출퇴근 하는 레저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언택트 근무방식으로 전환중임. 원격·재택근무는 이제 더 이상
낮설지 않은 노멀이 되었음.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와 화상 면접, AI 역
량검사 등의 언택트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 초·중·고등 교육기관의 ‘온라인 개학’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식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정책으로, 교육부가
2021년 3월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했음.
- 사회복지 분야에도 언택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하남시는 코로나19
로 인해 경로당, 복지관 등 노인 복지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우울감, 외로움을 호소
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 등 ‘심리방역’을 실시하고 있음. 기초생활 수급
가구와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전화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예
방수칙을 안내함과 동시에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법으로 독거
노인을 돕고 있음.
- 의료계에서도 의료 역량이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되면서 만성질환자 및 경
증환자 치료의 비대면 이용률 급증함.

〈글상자 4〉 코로나와 국내산 농산물 소비 증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식량안보의 중요성 증대, 안전한 농산물, 간편한 농산물 수요를 증대시킴.
 - 코로나19 사태로 나라간 교류가 위축되고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흔들리면서 식량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더부
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축산물 안전성에 민감해진 분위기도 형성됨.
 - 먹거리에 대한 인식 변화는 국산 농산물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로 작용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조사결과 코로
나19 발생 이후 국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27.1%, 외국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 7%, 외국산 농산물
소비 감소 32.1%.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한우와 제철 농산물 등 농식품 소비 증가의 마중물 역할을 했음. 실제 코로나19
에 따른 세계무역 차질로 일부 외국산 농축산물은 수입량이 줄었음. 2020년 오렌지 수입량은 코로나19에 따른 통관 지연
등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했고, 주요 축산물 수입량도 전년보다 8.7% 감소.
-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식문화 역시 농식품시장에 큰 영향을 줌.
 -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식 대신 집밥을 먹는 문화가 퍼지면서 가정간편식(HMR)·밀키트(Meal Kit·반조리식품) 등 간편식
시장이 호황을 맞음. 혼밥족이 주로 찾던 간편식이 가정의 주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함.
 - 최근엔 고급화된 ‘레스토랑 간편식(RMR)’ 등 새로운 종류의 간편식이 쏟아지고 있음.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

르면 국내 HMR시장 규모는 2019년 3조 5,000억 원에서 지난해 4조 원을 돌파, 2022년에는 5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 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도 코로나 시국에 증가하였는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20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6.6% 성장한 4조 9,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자료: 농민신문(2021. 1. 29). 농식품 안전성·편의성·비대면 시대 '성급.'

3.3. 탈도시화

- 선진국에서는 시민들의 산업문명에 대한 비판과 성찰과 더불어 땅으로 돌아가기(back to the land)와 같은 생태 이데올로기가 나타났고 농촌에서의 삶 선호 문화가 사회적으로 팽배하면서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 귀농·귀촌(Urban-Rural Migration)가 1970년대부터 사회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잡음.

<글상자 5> 인구이동 이론 및 농촌으로 인구 이동 이유

- 인구이동 이론(강동우 2016)
 - 불균형모형(the disequilibrium model of interregional labor migration) 이론: 지역 간 임금차이가 존재할 때, 노동력이 더 높은 임금수준이 제공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됨을 설명. 이에 따라 지역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불일치가 해소되고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함.
 - 균형모형(the equilibrium model of interregional labor migration) 이론: 개인의 이주결정이 지역 간 임금수준 차이 뿐만 아니라 지역별 어메니티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받음을 강조. 지역 어메니티에 대한 개인의 이질적인 선호차이는 연령, 학력 등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선별성(the selectivity of migration)을 보이고, 선별적 지역 간 인구이동은 지역노동시장에 필요한 인적자본이 유입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함.
 - 내생적 인적자본모형(the endogenous human-capital model of migration) 이론: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노동력일 수록 자신의 유보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취업기회가 있다면 장거리의 지리적 이동을 고려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이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집적경제의 효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동수요가 증가하여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인적자본이 누적되면서 특정지역에 인구유입이 지속될 수 있음을 설명
 - 이상의 이론에서 확인되는 지역 간 인구이동의 주요 결정요인은 임금 등 노동시장 여건, 지역 어메니티, 집적경제의 수준 등임.
-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 이유
 -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대도시주변에 발달된 주택지역으로 인구이동: 농촌으로 인구이동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장시간 관찰하면 결국 농촌인구의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임(Dahms 1995: 22). 따라서 농촌지역의 인구성장도 그 커뮤니티 자체의 고유한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와의 종속적인 또는 상호의존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임. Urban field는 대도시 교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의 편리성을 이용하고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하려는 욕구로 발달하게 된 커뮤니티를 가리킴. 대도시로부터 120-160km 떨어진 곳에 형성된 이곳을 “basic territorial unit of post industrial society”라고 불림(Friedmann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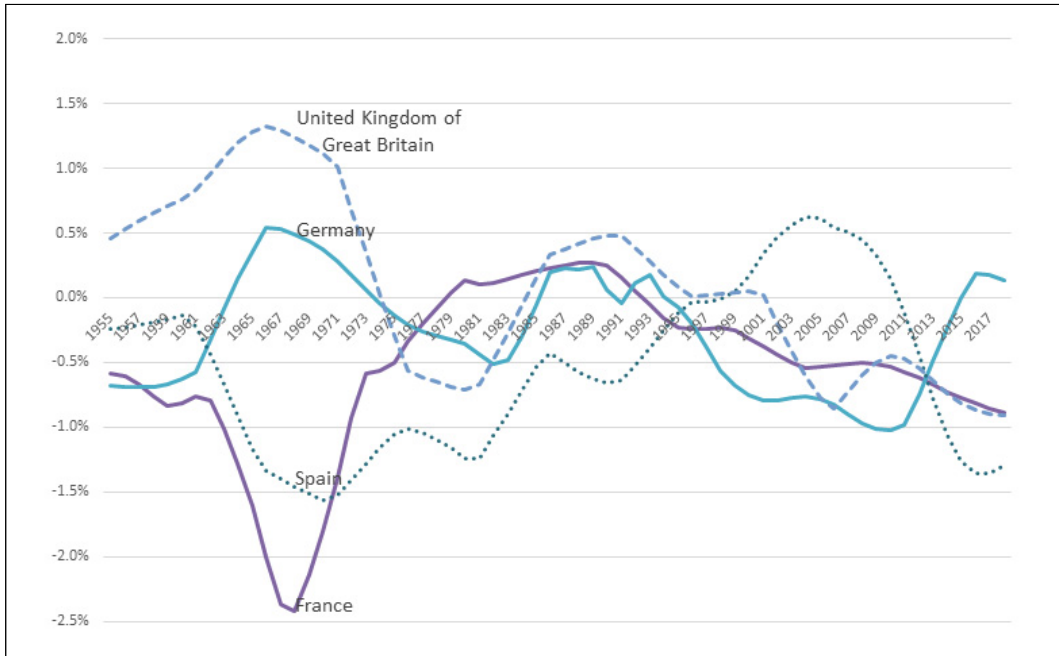
- 농촌 어메니티를 즐기고자 욕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이동 증가: 거의 생기를 잃어가던 일부 농촌지역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새로운 이주자들과 비즈니스의 성장으로 인한 것임. 이러한 농촌커뮤니티의 성장요인은 매우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대도시에서의 근접성, 전통문화자원, 자연적 경관 등 지역적 특성(placespecific)에 기인한다는 것임(Dahms 1995; Deller, Tsai, Marcouiller, and English 2001). 경제목적외 인구이동의 주요변수였다는 일반적인 연구와는 상이하게 1990-2000년 기간 동안 미국의 인구이동 경향을 보면 경관적 요소(landscape 또는 rural idyll)가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의 이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McGranahan 2008).
- 경제적 자원이나 직업기회를 얻기 위한 인구이동 증가: 도시와의 관련성을 강조했던 기존의 이론들은 일부 농촌커뮤니티에서의 인구증가와 비즈니스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음. 왜 어떤 지역은 소멸되고 다른 지역은 서서히 성장하며 또 다른 지역은 번창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인문적,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임. 농촌커뮤니티의 성장이 도시개발의 영향력의 확장이나 효과(urban overspill) 보다는 커뮤니티 자체가 지니고 있는 흡입요인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있음. Dahms(1995)는 캐나다의 작은 마을의 성장에 대해 연구하면서 난 50년 간 작은 커뮤니티의 인구성장은 도시로부터의 이주자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인문적, 환경적 요인으로는 지리적 위치, 환경요소 그리고 기업가들의 투자활동이 커뮤니티 성장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개인과 커뮤니티 조직이 함께 협동하여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려는 상향식 발전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주장함. Hoggart(2007)는 인구센서스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국 농촌지역에 이주하는 사람들을 분석하여 노동계급이 꾸준히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음(Milbourne 2007; Cloke et al. 2003). 영국 뿐 아니라 미국 농촌지역에 미숙련 및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주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Fitchen 1995; Tickamyer 2006; Milbourne 2007) 등은, 농촌지역으로 하향 사회이동(downward social movement)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Hoggart 1997). 농촌지역에서의 노동기회의 증가는 도시인구의 농촌유입의 흡입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Stockdale, Findlay, and Short 2000).
- 생태가치 실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증가에 따른 인구이동: 땅으로 돌아가기(back-to-the land) 운동으로 대변되는 생태주의 귀농 운동은 1960년대와 7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서 발생하였음(박시현 2014). 이 운동은 단순히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이 아니라, 1960년대 주류 사회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정반대되는 가치관이 응집된 문화 현상으로서 자연과 토지에 강하게 연계된 삶의 형태임(Halfacree 2007). 땅으로 돌아가기(back-to-the land) 운동은 산업문명에 대한 반문명적(counter-cultural)인 성격을 강조함. 이는 삶의 가치 실현으로서의 공동생활 추구, 토지경작, 자족적인(self-reliance) 삶, 그리고 생태적인 삶 등을 실천하는 특징을 보임. 미국에서 발생하였지만 1970년대 프랑스, 영국에서도 발생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현상으로 주목을 받았음(Halfacree 2007). 하지만 이 운동은 1970년 중반 이후 그 열기가 주춤하다가 2000년대 초에 퍼머컬처 운동과 유기 소농 조직의 탄생으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음(Permaculture Association 2006).

○ 유럽은 1970년대 서부 유럽에서부터 농촌 인구의 증가가 관찰됨. 1980년대 위축되기도 하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다시 활성화함.

- 영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농촌인구가 증가함. 농촌에는 통근자, 퇴직자, 별장 소유자 등의 이주로 인해서 증가하기 시작한 이후, 2000년대 초반에 구 동구권 국가들이 유럽연합(EU)에 편입됨에 따라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젊은 동구권 인력들이 영국 농촌으로 유입되었음. 2004년까지 대도시에서 매해 평균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출되었으며, 2004년 이후에도 농촌 순유입이 지속됨.

- 프랑스에서 도시 인구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5년부터임. 1975년부터 1982년 사이 농어촌 코뮌(인구 2,000명 미만의 코뮌)의 인구는 매년 1.0%씩 증가함. 1980년대에 도시나 농어촌이나 인구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상태가 10여 년간 지속되다가 1990년대부터 중소 도시가 발달한 레지옹과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특히 산간지역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났는데, 이는 산간 지역 내 소규모 공업, 관광업, 농업, 방목이 새로 발달하였기 때문임(성주인 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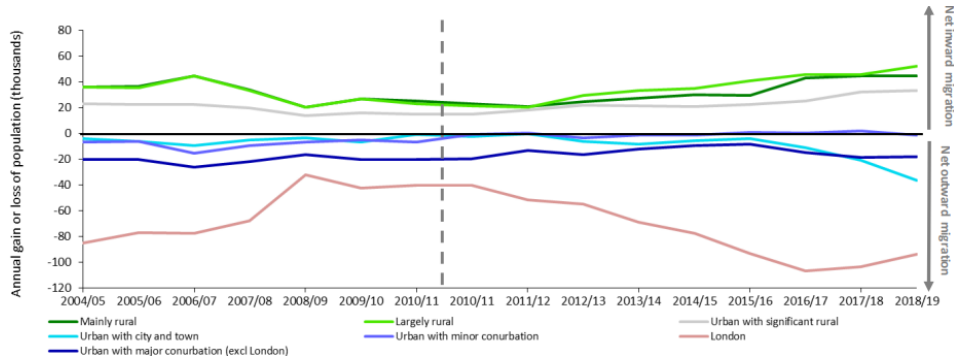
〈그림 2-16〉 유럽 주요 국가의 농촌 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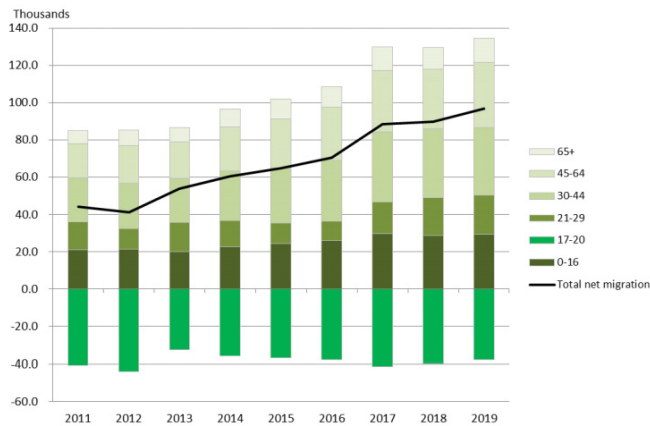
자료: FAOSTAT.

〈글상자 6〉 영국의 농촌 인구 변화

- 영국 농촌의 인구는 2011~2018년 기간 4.3% 증가(동일 기간 도시는 5.6% 증가)함. 도농간 인구 이동을 보면 2004년 이후 농촌 순유입이 발견됨. 2018/19년 순 유입 인구 규모는 전체 농촌 인구의 0.8%로 2010/11년 0.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 반면 도시 인구의 순유출은 2010/11년 0.2% 수준에서 2018/19년 0.4%로 증가.



- 연령대별로는 2018/19년도의 15~19세 인구는 농촌 순유출(대부분 대학 진학 등의 이유)이 있는 반면 20대 이상 인구에서는 순유입이 발생. 20~24세 인구 순유입 7,900명, 25~29세 인구는 5,000명 순유입. 가장 많은 순유입이 일어난 연령대는 30대(26,700명)였음.



자료: Defra(2020). Rural population and mig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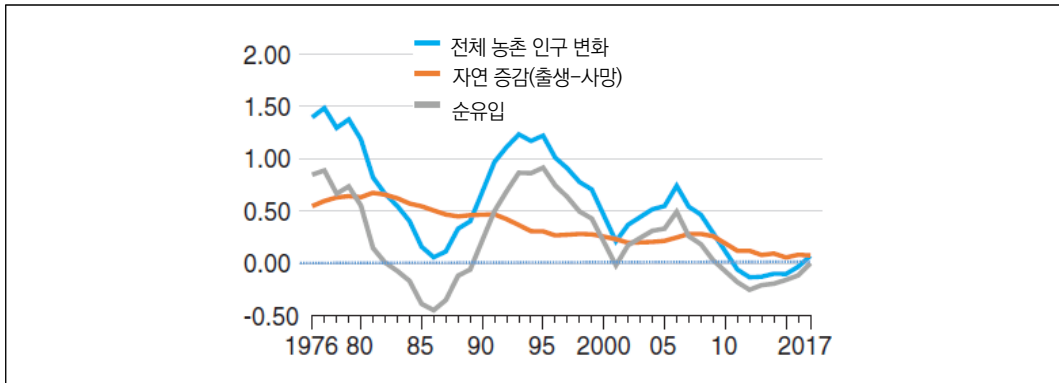
○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인구 3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비대도시 지역 카운티(county)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 1980년 초반 재도시화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다시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

- 1990년대 이후 귀농·귀촌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수의 도시민의 농촌으로 이주함.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이 온화한 기후, 멋진 자연경관, 그리고 삶의 질을 찾아서 농촌 이주함(박성희 2012).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3년 이후 농

촌지역 실업율 감소, 소득 증가, 빈곤율 감소로 인구 순전입이 증가함. 2016-2017 인구센서스(2018년 3월 발표)에서 33,000명이 증가함.

- 농촌 이주자들이 농촌에 고급주택을 짓고 이주하거나 별장을 지어 주말에만 들리는 경우도 늘어나, 지역의 주택가격 및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그림 2-17〉 미국의 농촌 인구 변화 추세: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USDA ERS(2018).

〈글상자 7〉 코로나 팬데믹과 미국의 역도시화

- 미국 시장 여론조사 기관인 Harris Poll의 최근 설문 조사(2020년 4월)에 의하면 39%의 미국인이 코비드 19 위기로 인해 인구가 적은 지역(less crowded place)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음.
- 18~34세 청년 세대일수록 다른 연령대 보다 더 많이 농촌 이주를 고려하고 있었고, 도시민들이 농촌 주민들에 비해 2배 이상 이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알아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미국 내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역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인구 1백만 이상의 대도시의 성장세는 꺾이고 원격 근무(remote work)가 일상화되고, 도심보다는 교외 지역이 더 매력적인 주거 공간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료: Harris Poll⁴⁾; USA Today(2020. 5. 1).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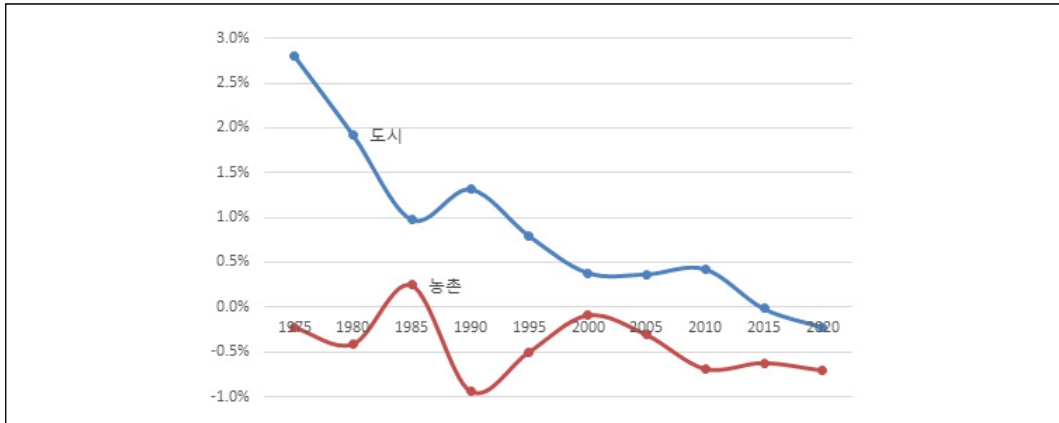
○ 일본의 농촌인구를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음.

여기에는 신규 취농, 전원 회귀 등의 경제·사회 현상이 작용한 것을 추정됨.

4) <https://theharrispoll.com/coronavirus-may-prompt-migration-out-of-american-cities/>.

5) Get me out of here! Americans flee crowded cities amid COVID-19, consider permanent moves.

〈그림 2-18〉 일본의 도시, 농촌 연평균 인구성장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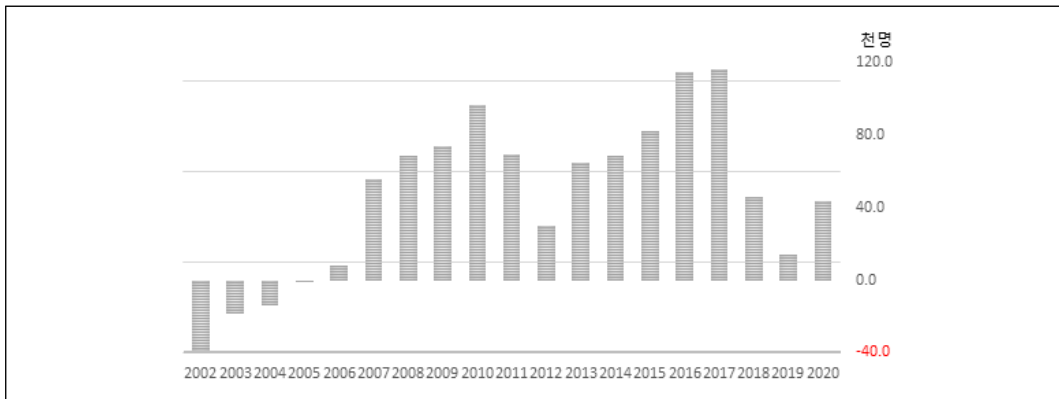
자료: 일본 総務省「国勢調査」,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日本の地域別将来推計人口(平成25年3月推計)」を基に農林水産省で推計.

- 일본은 농업 등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 2차,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구조로 변화하여 1990년까지 신규취농자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헤이세이(平成) 대 불황에 의한 비농업 부문의 기업 도산·인력 구조 조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신규취농촉진사업의 강화, 농업·농촌의 가치 재조명 등을 통해 신규취농자수가 증가해왔고(신경미 2018), 단카이세대(1945~47년생, 베이비붐 세대) 중심으로 농촌으로 이주가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 연간 6만 명 정도가 귀농·귀촌함.
- 일본 총무성(2018)이 도시에서 과소지역으로의 이주, 이른바 전원회귀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인해 전원회귀 인구수 절대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과소 지역 중 도시로 부터의 이주자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수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남. 이른바 시골 중에 시골이나 낙도 및 진흥 산촌 등 과소 지역 중에서도 조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나, 헤세이의 대 합병 전의 구 시정촌 단위 인 ‘지역’의 규모별로 분류 한 경우의 소규모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의 이주자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수가 더 확대하는 경향임. 또한 도시 주민 대상 농산어촌 지역 이주 의향 조사 결과, 농산어촌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 비율은 30%(30.6%)을 초과하고, 젊은층에서 현저하며 높아짐. 이주 동기로 기후와 자연 환경,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것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일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을 바꾸고 싶은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비교적 많음.

○ 우리나라도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출보다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많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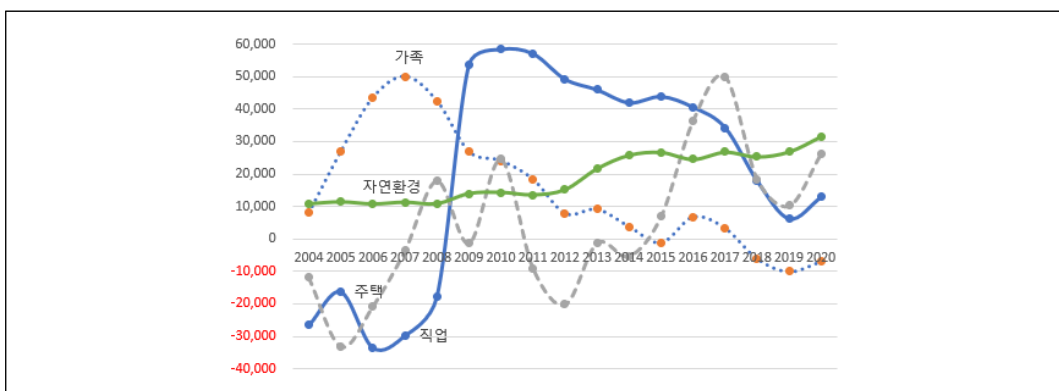
- 농촌 순유입 규모는 2006년 7.6천 명이던 것이 2017년 116.4천 명으로 증가하고, 최근 줄기는 했지만 순유입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도시민의 농촌유입 사유를 보면 자연환경, 주택, 직업 등이 많았는데, 지난 시기 자연 환경 요인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촌인구는 2013년 이후 그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증가추세로 전환됨(2017년 9,745,393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3년 연속 소폭 감소 추세).

〈그림 2-19〉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순유입 규모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그림 2-20〉 이동 사유별 농촌 순유입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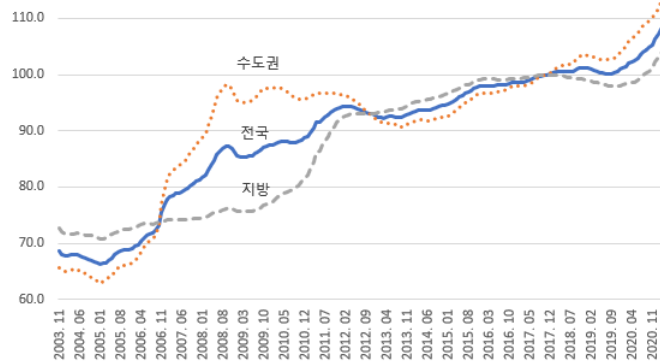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글상자 8〉 우리나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 주택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주택구입 가능성이 점차 어려워짐.
- 2003년 이후 주택매매가격지수(2017.11=100) 변화를 보면, 2003년 68.5이던 것이, 2010년 88, 2015년 96.4에서 2020년 103.4로 상승
-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매매가격지수의 변화를 보면 2000년 초반 지방이 높다가, 2007년 이후 2012년까지는 수도권이 높아졌고, 이후 2013년~2017년 기간 지방이 높다가 2018년 이후 다시 수도권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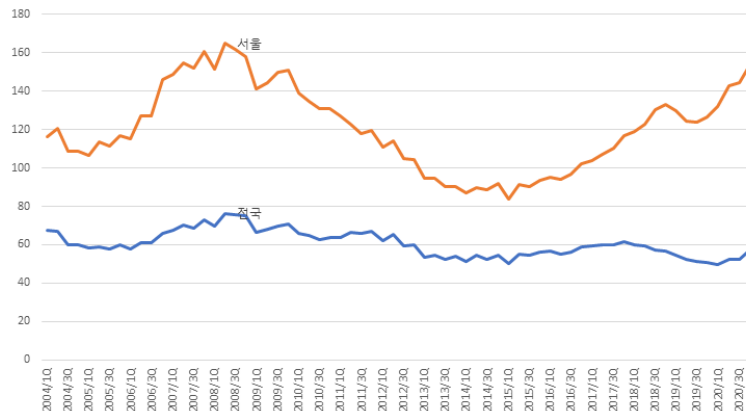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017.11=100).

- 주택구입부담지수⁶⁾ 변화를 보면, 2004년 이후 전국 평균은 50~70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2008년 최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하던 서울은 2015년 1분기 88.5을 기록(전국평균 대비 서울이 1.69)한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20년 4분기에는 153.4를 기록, 전국 평균대비 서울이 2.67로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음.

〈주택구입부담지수 변화〉



자료: 주택금융연구원, 주택구입부담지수.

- 주택구입부담지수(K-HAI) = 대출상환가능소득 / 중간가구소득(월)*100 = (월리금 상환액 / DTI) / 중간가구소득(월)*100.
- 월리금상환액은 LTV 47.9%, DTI 25.7%, 만기 20년 원리금균등 상환대출의 매월 상환액.

4. 메가트렌드에 따른 도농간 인구이동 변화

○ 앞서 검토한 여러 인구, 경제, 사회문화 관련 메가트렌드 변화가 도시민의 농촌 이동⁷⁾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를 토대로 향후에는 어떠한 추세로 변화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용한 국가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함.

○ 분석자료

- 도시에서 농촌 유입인구: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2001~2020)
- 생산가능인구, 노령화지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통계(2000~2020)
- 경제성장율: 한국은행 국민계정(2000~2020)
- 실업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0~2020)
- 주택매매가격지수: 국토교통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003~2020)
- 주당 노동시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0~2020)

○ 분석모형

$$y_t = \beta_0 + \beta_1 X_{1,t} + \beta_2 X_{2,t} + \beta_3 X_{3,t} + \beta_4 X_{4,t} + \beta_5 X_{5,t} + \beta_6 X_{6,t} + \beta_7 t + e_t$$

- 도시민 농촌 유입($y_{1,t}$) ← 귀농·귀촌은 2013~2020년 자료밖에 없어 분석 불가
- 생산가능인구변화율($X_{1,t}$)
- 노령화지수($X_{2,t}$)
- 경제성장율 변화($X_{3,t}$)
- 도농간 실업율 차이(도시-농촌) 변화($X_{4,t}$)

6)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100일 때는 매달 소득의 25%를 주택구입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로, 숫자가 커질수록 부담도 늘어난다 (최상현 2021. 3. 14).

7) 귀농·귀촌의 경우 2013년부터 통계가 작성되었기에 시계열 분석이 불가함.

- 주택매매가격지수 변화($X_{5,t}$)
- 도시 취업자 주당노동시간($X_{6,t}$)
- 추세항(연도)(t)(2000~2020년)

○ 분석결과

- 인구, 경제, 사회·문화 관련 메가트렌드 관련 요인과 도시민의 농촌 이동의 관계를 추세항을 넣어 다중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2-2>와 같음. 도시민의 농촌 이동은 0.05 수준에서는 생산가능인구변화율, 고령화지수, 도농간 실업률 차이변화, 도시취업자 주당노동시간이, 0.1 수준에서는 모든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
- 인구 요인으로 도시 인구의 농촌 유입은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할수록, 고령화지수가 높아질수록 증가함. 향후 생산인구 감소는 귀농·귀촌의 감소 요인으로, 고령인구의 증가는 귀농·귀촌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요인과 관련하여 경제성장율이 낮아질수록 도농간 실업률 격차가 커질수록(도시 실업률이 농촌보다 높을수록) 도시민의 농촌유입이 증가함. 향후 예상되는 저성장 추세 및 도시의 고용 불안은 귀농·귀촌 증가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 사회·문화 요인과 관련하여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할수록, 도시 취업자의 노동시간이 늘어날수록 도시민의 농촌 유입이 증가함. 향후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주요 서방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도시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귀농·귀촌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됨.

〈표 2-2〉 메가트렌드와 도시민 농촌 이동의 관계 분석

메가트렌드 관련 요인		Coef.	Std. Err.	t	P>t
인구	생산가능인구 변화율	6,495.361	1,662.857	3.91	0.002
	고령화지수	5,019.498	1,756.360	2.86	0.014
경제	경제성장률 변화	-451.288	2.336	-1.93	0.077
	도농간 실업률 차이 변화	6,326.003	2,287.455	2.77	0.017
사회문화	주택매매가격지수 변화	4.684	2.485	1.88	0.084
	도시취업자 주당노동시간	28.240	8.936	3.16	0.008
추세항		-17.112	9.073	-1.89	0.084
상수		33,300.000	18,300.000	1.82	0.093

Adj-R²=0.9445.

F(7, 12)=47.18 p<0.001.

5. 요약 및 시사점

- 귀농·귀촌과 관련한 인구, 경제, 사회·문화적 메가트렌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음.
- 인구학적으로는 우리나라는 OECD 회원 중에서도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이하의 저출산 사회이고,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선 고령사회로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령화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이 역시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2020년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경험하였고, 추후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따라 인구 감소가 경제성장을 지체시키는 인구오너스를 경험할 전망이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 경기 불황 속에, 우리나라도 그동안의 고성장시대를 지나 2015년 이후 저성장시대에 진입함. 또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가가 없는 ‘고용없는 성장’을 제조업, 금융업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적으로 도시, 연령별로는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실업율을 보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비대면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이러한 경향을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도시, 비농업분야 고용 위기 상황과 대비되게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청년세대의 비중이 높아짐.

○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감소하면서 점차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여가 우선주의가 사회적으로 팽배해지기 시작함.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가속화됨. 산업사회시대 도시 중심의 상공업 발전에 인력 공급처였던 농촌으로 도시 인구가 다시 회귀하는 역도시화 현상이 197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도 1990년대 말 처음 나타난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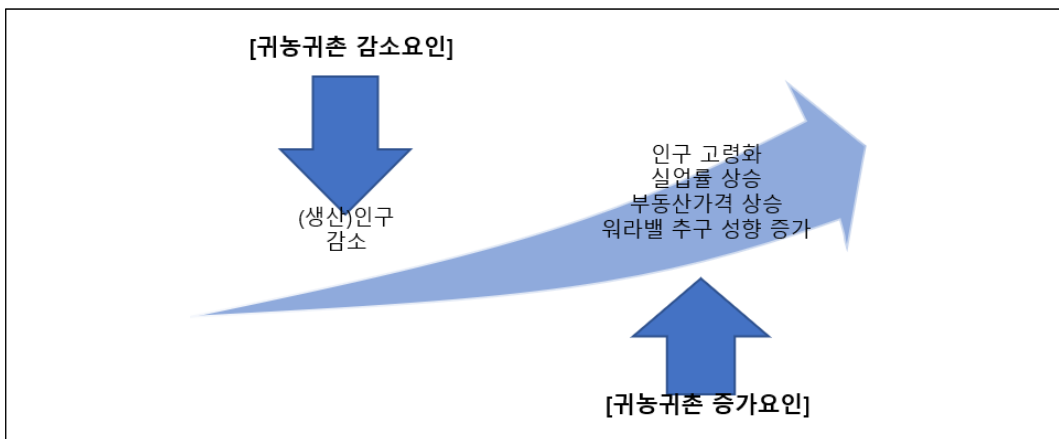
〈표 2-3〉 시기별 우리나라 인구·경제·사회 주요 지표 변화

분야별 주요 지표		2005	2010	2015	2020	비고
인구	총인구(천 명)	48,991	50,515	51,529	51,829	
	인구성장률(%)	0.41	1.49	0.39	-0.04	
	합계출산율(명)	1.08	1.23	1.24	(2019) 0.92	
	생산가능인구(천 명)	38,119	40,824	43,239	44,785	15세 이상 인구
	고령화비율(%)	8.9	10.9	13.1	(2019) 15.5	65세 이상 인구/ 전체인구
	평균가구원수(명)	2.88	2.69	2.53	(2019) 2.44	
경제	경제규모(GDP) (조 원)	806	1,265	1,658	(2019) 1,910	
	경제성장률(%)	(2000~04) 6.0	(2005~09) 3.8	(2010~14) 3.9	(2015~19) 2.7	연평균
	실업률(%)	(2000~04) 3.8	(2005~09) 3.5	(2010~14) 3.4	(2015~19) 3.7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지수	64.9/71.9	96.7/79.3	94.8/97.9	107.7/99.6	수도권/지방 2017=100
사회 문화	소득수준(달러)	16,291	22,170	28,814	(2019) 32,115	1인당GNI
	기대수명(세)	78.2	80.2	82.1	(2019) 83.3	
	출산연령(세)	29.1	30.1	31.2	(2019) 31.9	
	노동시간(주당)	48.6	45.2	43.7	39.0	
	인구이동(농촌순유입) (천 명)	-0.1	96.2	81.8	43.2	

자료: 통계청(각 년도), 생명표·인구이동·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각 년도), 국민계정; 한국부동산원(각 년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각 년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최근의 인구·경제·사회적 메가트렌드는 귀농·귀촌에 다음과 같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로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 특히 농촌 출신의 베이비부머들의 감소는 귀농·귀촌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다만 저성장시대, 고용 없는 성장시대로 대변되는 경제 상황과 주택가격상승은 도시, 비농업분야 인력의 농업·농촌으로의 유입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또한 사회적으로 팽배한 워라밸 추구 성향, 언택트 문화의 확산 등은 귀농·귀촌 인구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그림 2-21〉 메가트렌드 변화와 향후 귀농·귀촌 전망



3

귀농·귀촌 실태

1. 농촌 인구 및 귀농·귀촌 현황과 추세

1.1. 농촌 인구 변화

○ 농촌(읍·면) 인구는 2020년 기준 971.5만 명으로 전체 인구(5,182.9만 명)의 18.74%가 거주하고 있음. 읍지역에는 508.6만 명(9.81%), 면지역에는 462.9만 명 (8.93%)이 거주함.

〈표 3-1〉 도시·농촌의 인구 변화(199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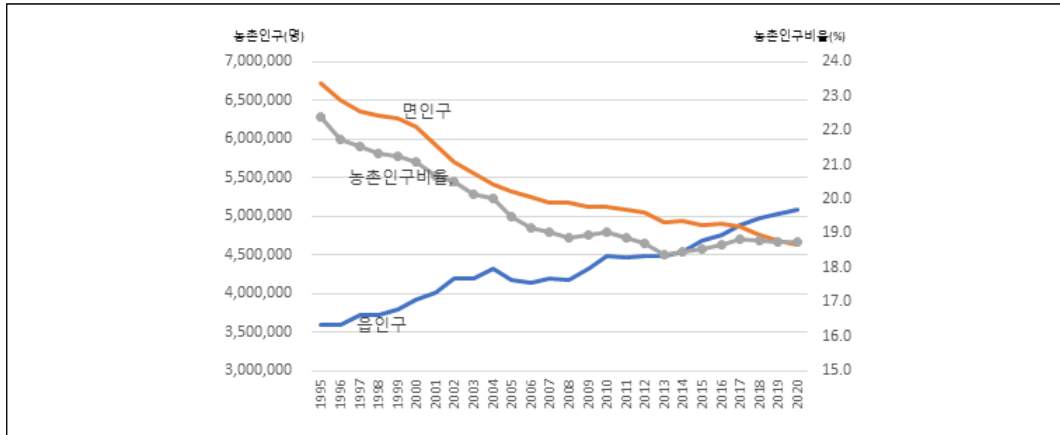
연도	도시 (동)	농촌		전체	
		읍	면		
1995	35,712,020	3,589,625	6,720,138	10,309,763	46,021,783
1996	36,317,237	3,588,088	6,508,143	10,096,231	46,413,468
1997	36,753,973	3,720,841	6,362,145	10,082,986	46,836,959
1998	36,958,044	3,723,180	6,309,947	10,033,127	46,991,171
1999	37,281,574	3,787,208	6,266,896	10,054,104	47,335,678
2000	37,661,591	3,915,593	6,155,374	10,070,967	47,732,558
2001	38,093,754	4,004,227	5,923,562	9,927,789	48,021,543

연도	도시 (동)	농촌		전체	
		읍	면		
2002	38,343,201	4,190,829	5,695,918	9,886,747	48,229,948
2003	38,642,904	4,185,574	5,558,345	9,743,919	48,386,823
2004	38,854,089	4,317,019	5,412,697	9,729,716	48,583,805
2005	39,278,581	4,173,352	5,330,341	9,503,693	48,782,274
2006	39,608,301	4,132,578	5,250,900	9,383,478	48,991,779
2007	39,894,992	4,197,649	5,176,287	9,373,936	49,268,928
2008	40,183,463	4,175,117	5,181,787	9,356,904	49,540,367
2009	40,337,747	4,316,689	5,118,709	9,435,398	49,773,145
2010	40,900,098	4,486,000	5,129,568	9,615,568	50,515,666
2011	41,167,379	4,474,742	5,092,163	9,566,905	50,734,284
2012	41,413,366	4,486,786	5,048,120	9,534,906	50,948,272
2013	41,738,223	4,485,279	4,917,961	9,403,240	51,141,463
2014	41,840,704	4,539,497	4,947,715	9,487,212	51,327,916
2015	41,972,878	4,676,011	4,880,449	9,556,460	51,529,338
2016	42,040,225	4,756,482	4,899,509	9,655,991	51,696,216
2017	42,033,151	4,878,040	4,867,353	9,745,393	51,778,544
2018	42,088,988	4,982,397	4,754,674	9,737,071	51,826,059
2019	42,133,869	5,028,593	4,687,399	9,715,992	51,849,861
2020	42,114,260	5,085,840	4,628,923	9,714,763	51,829,023

자료: 통계청(각 년도), 주민등록인구.

○ 농촌인구는 2013년 이후 그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증가추세로 전환된 이후 2017년 이후 유지 상태(2017년 974.5만 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3년 연속 소폭 감소 추세, 전체 인구대비 비율은 18.7%대 유지). 이는 면지역 인구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읍지역 인구는 농촌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반면, 면지역 인구는 그동안 계속해서 감소함(2017년 처음으로 읍인구가 면인구를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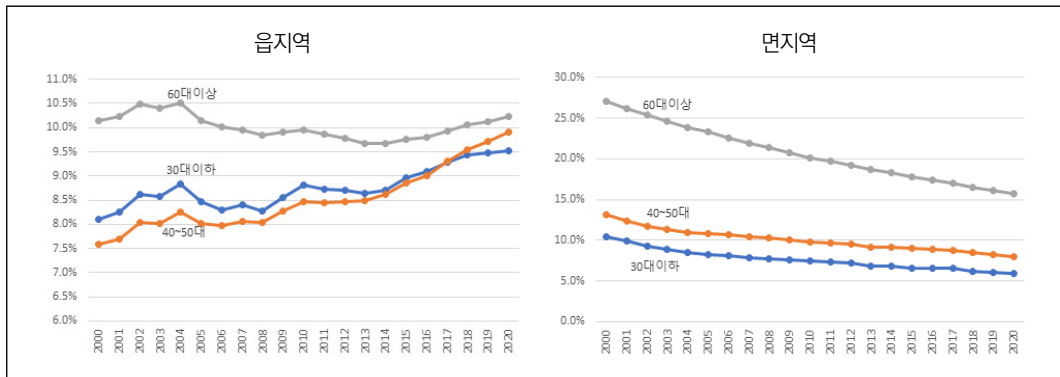
〈그림 3-1〉 읍·면 인구 및 농촌인구 비율 변화



자료: 통계청(각 년도). 주민등록인구.

- 전체 인구대비 농촌인구를 연령대로 보면, 읍지역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면지역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는데 특히 60대 이상의 감소 폭이 큼.

〈그림 3-2〉 연령대별 전체인구 대비 농촌인구 비율



자료: 통계청(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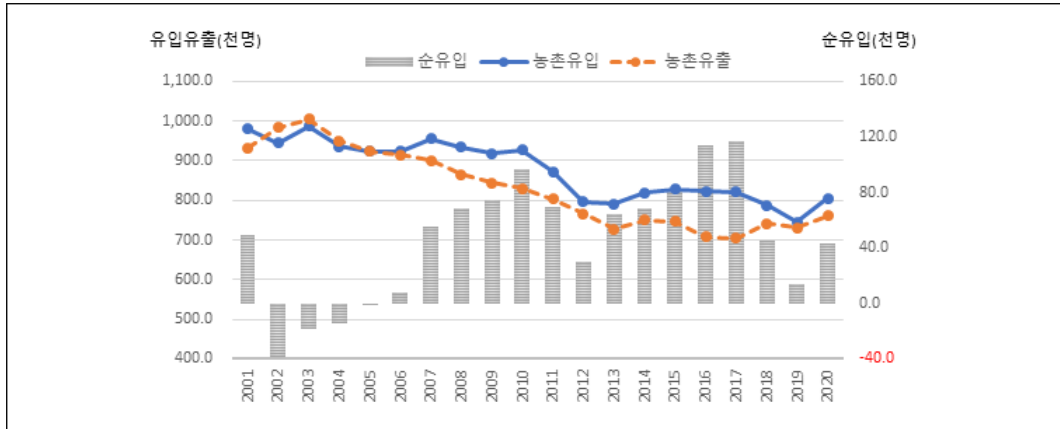
1.2. 도농간 인구이동과 귀농·귀촌

- 도농간 인구 이동을 보면 2006년 이후 농촌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음.

- 2001년 이후 농촌 유입 인구 규모를 보면 2003년 98.7만 명 기록 이후 하락하다가

2014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 이후 2018, 2019년 감소세를 보인 후 2020년 다시 증가. 2020년 농촌 유입 인구는 80.5만 명으로 2019년 대비 6.1만 명 증가. 2006년 이후 농촌 순유입(7.6천 명)을 보인 이후, 2017년 116.4천 명으로 증가하였고, 2018년(4.6만 명), 2019년(1.4만 명) 규모가 줄어들다 2020년(4.3만 명) 다시 증가함.

〈그림 3-3〉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표 3-2〉 인구이동, 귀농·귀촌인구 추이

		단위: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구 이동	30대 이하	466,983	471,630	471,728	465,444	460,312	432,318	407,542	429,420
	40대	123,042	130,159	128,591	125,292	124,871	118,688	110,136	119,033
	50대	105,904	115,441	120,913	120,522	121,107	117,985	113,581	121,850
	60대	52,322	57,316	63,731	67,488	70,698	72,686	71,257	86,048
	70대 이상	42,741	44,997	43,480	43,525	44,033	45,321	43,396	48,603
	계	790,992	819,543	828,443	822,271	821,021	786,998	745,912	804,954
귀농 귀촌 인구	30대 이하	218,581	227,003	244,673	248,720	258,253	240,543	224,099	232,611
	40대	76,414	84,234	84,392	84,022	86,976	81,113	75,202	80,594
	50대	69,837	78,606	83,648	85,054	87,729	84,151	80,171	85,383
	60대	34,779	39,992	45,893	49,346	53,402	53,622	52,149	62,250
	70대 이상	23,159	27,676	28,032	28,906	30,457	30,901	29,024	33,731
	계	422,770	457,511	486,638	496,048	516,817	490,330	460,645	494,569
귀농 가구원	30대 이하	4,834	4,877	5,108	5,307	4,788	4,233	3,413	3,699
	40대	3,177	3,238	3,246	3,132	2,948	2,613	2,167	2,210
	50대	5,624	5,841	6,572	6,750	6,402	5,729	5,377	5,403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0대	2,841	3,057	3,846	4,239	4,408	4,199	4,185	4,925
	70대 이상	842	963	1,088	1,131	1,084	1,082	1,039	1,210
	계	17,318	17,976	19,860	20,559	19,630	17,856	16,181	17,447
귀촌인	30대 이하	213,747	222,126	239,565	243,413	253,465	236,310	220,686	228,912
	40대	73,237	80,996	81,146	80,890	84,028	78,500	73,035	78,384
	50대	64,213	72,765	77,076	78,304	81,327	78,422	74,794	79,980
	60대	31,938	36,935	42,047	45,107	48,994	49,423	47,964	57,325
	70대 이상	22,317	26,713	26,944	27,775	29,373	29,819	27,985	32,521
	계	405,452	439,535	466,778	475,489	497,187	472,474	444,464	477,122

자료: 통계청(각 년도), 인구가동통계, 귀농·귀촌 통계.

○ 농촌 유입인구 중 귀농·귀촌 인구는 60% 수준이고, 귀농·귀촌 중에 96%가 귀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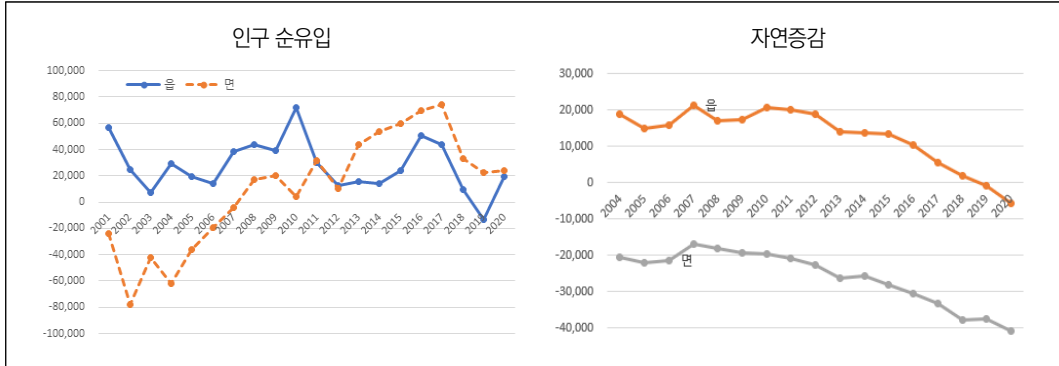
- 도시에서 농촌 유입 인구 중에 1년 이상 거주자 등의 귀농·귀촌 요건⁸⁾을 충족하는 사람을 걸러낸 귀농·귀촌 인구는 농촌 유입인구 중 61.4%인 49.5만 명이었음. 2017년 최고치(51.7만 명)를 기록한 후,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 2020년 다시 증가. 귀농·귀촌 인구 중 96.5%인 47.7만 명이 귀촌인구였음.
- 귀촌 인구의 절반 정도(2020년 기준 48.0%)가 30대 이하가 차지. 귀농은 50대 이상이 2/3(66.1%)를 차지(50대 31.0%, 60대 28.2%, 70대 이상 6.9%)

○ 농촌 유입인구가 증가 추세에서도 불구하고 농촌인구가 유지·감소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감소 때문임.

- 읍지역 뿐 아니라 면지역도 지난 10년 이상 인구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음.
- 읍면별 자연 증감(출생-사망)을 보면 읍지역은 2019년부터 음의 값을 보인 반면, 면지역은 2004년 이후 계속 음의 값을 보였고, 최근 들어 더 심화되고 있었음.
- 인구 유입유출 및 자연증감을 종합해 보면, 농촌 인구 감소는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자연감소에 따른 변화로 볼 수 있음.

8) 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畝·面)지역으로 이동하여 각각 아래 조건을 만족한 사람.
 - (귀농인)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된 사람.
 - (귀촌인) 위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자 중 학생, 군인, 직장 근무자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인 및 동반 가구원 제외.

〈그림 3-4〉 읍면별 인구 순유입 및 자연증감



자료: 통계청(각 년도), 인くい동통계, 인구동향조사.

○ 주민이 살고 있는 농촌 읍면(1,404개)⁹⁾ 중 지난 5년(2016~2020년)간 인구가 유지·증가된 곳은 13.2%(읍은 23.4%, 면은 11.3%)이고, 감소된 지역은 86.8%였음. 인くい동으로 순유입이 있었는데도 인구가 감소한 읍면(자연감소)순유입이 21.8%, 순유출이었는데도 증가한 읍면(자연증가)순유출은 0.8%였음. 증가된 읍면은 대체로 인구가 많고, 평균 연령이 낮고 고령인구 비율이 낮았음. 인구 유지·증가 읍면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대부분은 수도권 또는 지방 특광역시, 지방대도시 인근이었음.

〈표 3-3〉 읍면의 인구 증가, 감소 상황에 따른 인구·연령, 인くい동 현황

		2016~2020년 인구변화		전체
		감소	유지·증가	
읍면	읍(개(%))	177(76.6)	54(23.4)	231(100.0)
	면(개(%))	1,041(88.7)	132(11.3)	1,173(100.0)
전체(개(%))*		1,218(86.8)	186(13.2)	1,404(100.0)
인くい동** (2016~20)	순유출	65.3%	0.8%	66.1%
	순유입	21.8%	12.0%	33.9%
주요 인구특성	인구(명)	4,821	14,932	6,160
	평균연령(세)	50.6	42.1	47.8
	고령인구비율(%)	28.7	15.2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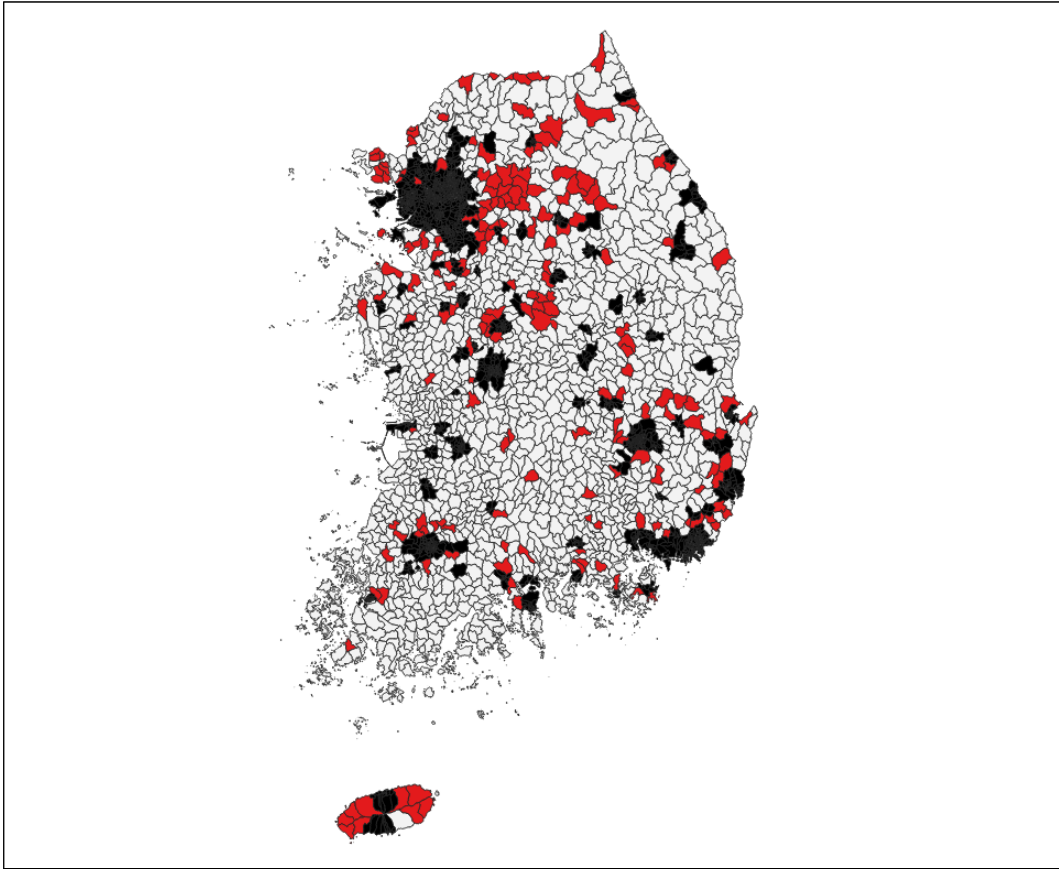
* 군사 접경지역의 민간인이 살지 않는 읍면은 분석에서 제외됨.

** 행정단위 통폐합 등으로 2016~2020 기간 인くい동 정보가 누락된 일부 읍면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

자료: 통계청(2016~2020), 통계정보지리서비스.

9) 2020년 1,413개 읍면 중 민간인이 살지 않는 8개 읍면, 2019년 새로이 생겨난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은 분석에서 제외.

〈그림 3-5〉 인구 유지·증가 읍면의 전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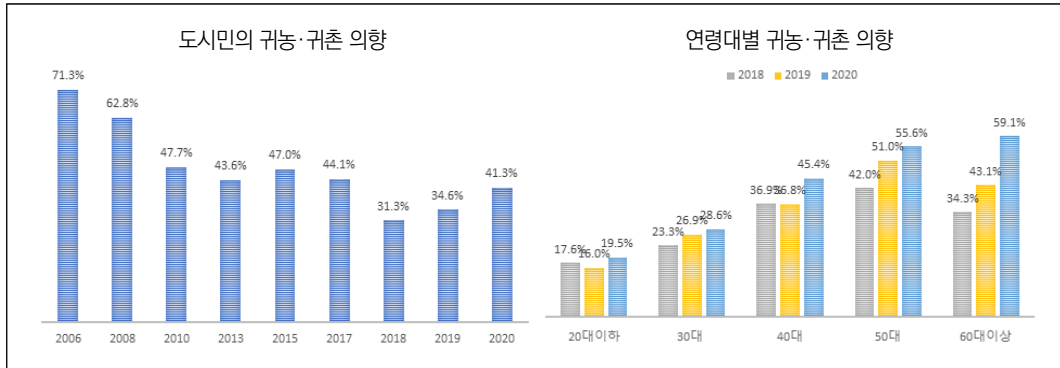


검은색은 동지역, 빨간색이 인구 유지·증가 읍면.
자료: 통계청(2016~2020). 통계정보지리서비스.

1.3. 도시민 귀농·귀촌 의향

○ 2018년 이후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6~2020)이 매년 도시민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조사에 일환으로 조사하는 귀농·귀촌 의향 조사를 보면 매년 낮아지던 귀농·귀촌 의향자 비율은 2018년 이후 다시 높아짐. 연령대가 높을수록 귀농·귀촌 의향이 높았는데, 최근 3년 변화를 보면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귀농·귀촌 의향 변화 상승폭이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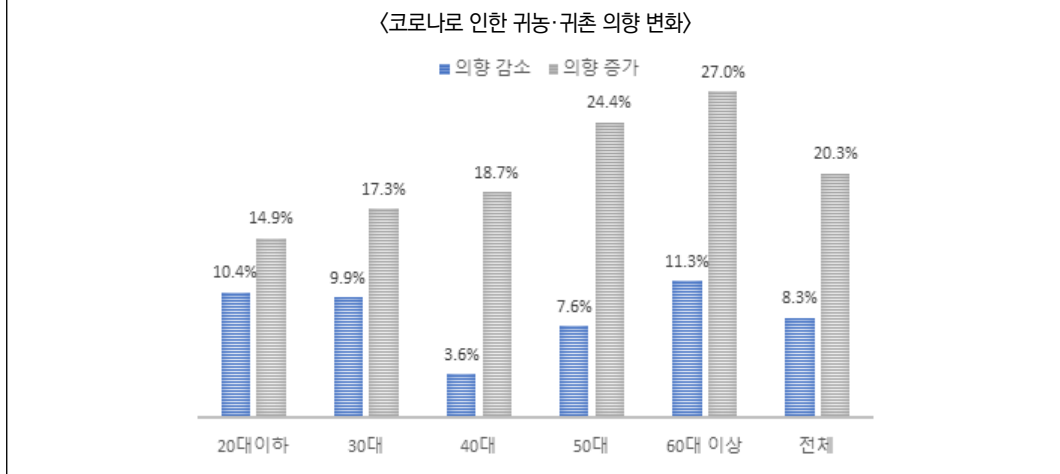
〈그림 3-6〉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변화와 연령대별 의향 차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년도), 국민의식조사.

〈글상자 9〉 코로나와 귀농·귀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0년 연말에 코로나-19로 인해 귀농·귀촌 의향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3%가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여, 감소했다는 응답(8.3%)보다 높았음. 모든 연령대에서 귀농·귀촌 의향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의향 증가가 많았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 귀농·귀촌 의향자들의 귀농·귀촌하려는 이유(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를 보면 자연 속의 건강한 삶(47.8%), 자유로운 삶(21.7%) 등의 휴식 관련 이유가 가장 많았고, 직업, 생활적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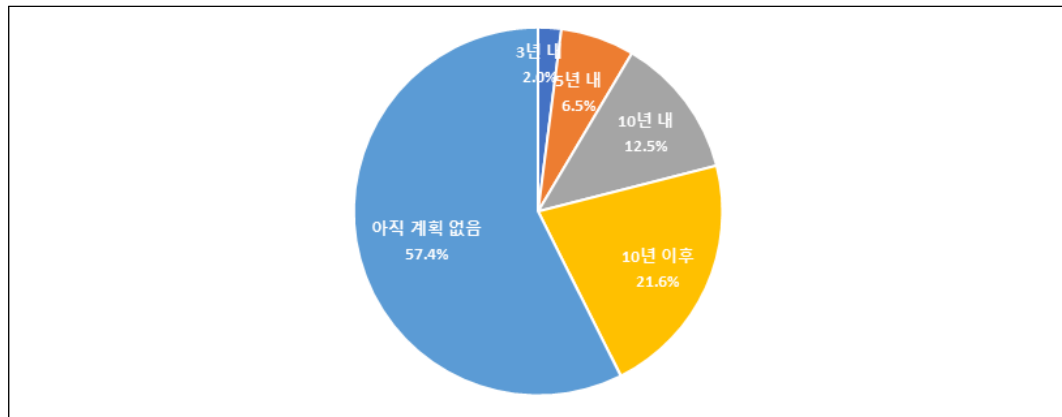
〈표 3-4〉 도시민의 귀농·귀촌하려는 이유

	농촌 거주하며 생계로서 농업 종사	안전식품 자금	자연속 건강한 삶	마을 공동체 생활	인정 많은 곳에서 살려고	자유로운 삶	저렴한 주거비용
20대 이하	6.4%	5.7%	41.4%	4.5%	9.6%	22.3%	10.2%
30대	7.1%	8.5%	37.9%	3.6%	8.9%	29.9%	4.0%
40대	8.7%	6.9%	44.9%	3.1%	7.9%	24.5%	4.1%
50대	7.9%	7.1%	49.8%	3.3%	7.9%	19.5%	4.6%
60대 이상	6.8%	3.4%	57.3%	1.1%	10.0%	16.2%	5.1%
전체	7.6%	6.3%	47.8%	2.9%	8.7%	21.7%	5.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 2019, 2020). 국민의식조사.

○ 귀농·귀촌 의향자들의 예정 귀농·귀촌 시기는 3년 이내 2.0%, 3~5년 이내가 6.5%, 10년 이내가 12.5%, 10년 이후 21.6%, 아직 계획 없음이 57.4%, 귀농·귀촌 의향자 대부분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음.

〈그림 3-7〉 귀농·귀촌 예정 시기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 2019, 2020). 국민의식조사.

○ 귀농·귀촌 의향을 토대로 도시민 중 잠재적 귀농·귀촌 수요자를 추정해보면, 대략 12,247천 명 정도였으며 10년 이내 귀농·귀촌할 구체적인 의향자는 2,501천 명(연간 25만 명) 정도였음. 귀농·귀촌 향후 추정된 규모를 보면 20~3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 이는 20~30대에서는 직업 전환, 직장 이전, 집값 상승 등 비 자발적 이유로 대도시 인근의 도시화된 농촌으로 귀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본인이 귀촌이라고 생각하지 않음)인 것으로 추정되기에 실제로는 이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임.

〈표 3-5〉 귀농·귀촌 의향자 귀농·귀촌 예정시기

연령대	귀농·귀촌 예정 시기				전체
	5년 이내	6~10년	10년 이후	계획미정	
20대	20,211	47,160	80,846	929,724	1,077,941
30대	15,993	55,977	359,852	1,399,425	1,831,248
40대	159,576	247,343	877,668	1,882,997	3,167,584
50대	351,819	695,821	1,039,822	1,759,097	3,846,560
60세이상	450,567	457,097	346,087	1,070,912	2,324,663
전체	998,167	1,503,397	2,704,275	7,042,156	12,247,99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 2019, 2020). 국민의식조사.

○ 귀농·귀촌 의향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농촌 거주경험이 있을수록, 가족원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 관심이 높을수록 귀농·귀촌의향이 높았음.

〈표 3-6〉 귀농·귀촌 의향 관련 요인

관련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SE	β		
(상수)	-0.016	0.081		-0.191	0.849
성별	-0.091	0.014	-0.093	-6.682	0.000
연령	0.026	0.006	0.074	4.164	0.000
학력	0.022	0.013	0.029	1.697	0.090
농촌거주 경험	0.062	0.017	0.061	3.645	0.000
가족농사 여부	0.073	0.018	0.066	4.085	0.000
소득수준	-0.004	0.005	-0.013	-0.883	0.377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	0.132	0.010	0.255	12.940	0.000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0.072	0.010	0.136	6.994	0.000

수정된 $R^2=0.217$, $F(8,4108)=143.9(p<0.00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 2019, 2020). 국민의식조사.

2. 귀농·귀촌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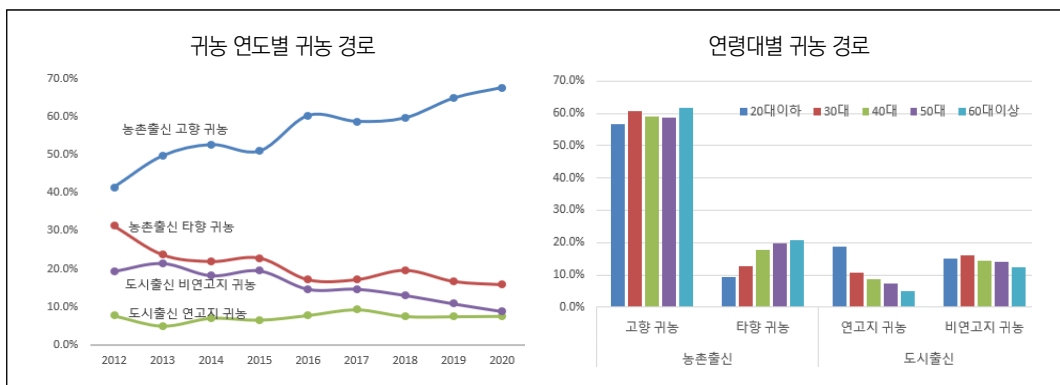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갤럽이 실시¹⁰⁾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통계청 귀농·귀촌 통계 및 인구총조사 등의 자료 분석을 토대로 귀농·귀촌인의 특성을 귀농·귀촌전 특성, 농촌 정착 실태, 정착 애로사항 및 요구 등으로 나누어 분석함.

2.1. 귀농·귀촌전 특성

□ 귀농·귀촌 경로

- 귀농자들의 귀농 경로를 보면 농촌 출신자들의 3/4을 차지할 정도로 많고, 그중에서도 고향 귀농이 많았음. 농촌출신 고향 귀농인 경우는 2012~2020년 시기 평균 57.8%, 농촌출신 타향 귀농 19.4%, 도시출신 비연고지 귀농 15.2%, 도시출신 연고지 귀농이 7.6% 등이었음. 귀농 시기가 최근일수록 농촌 출신 고향 귀농자가 많아지고, 나머지 유형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음. 연령대별은 농촌 출신 고향 귀농비율은 모두 50% 이상이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향출신 타향 귀농이 많아졌고, 도시출신 연고지 귀농이 낮아졌음.

〈그림 3-8〉 귀농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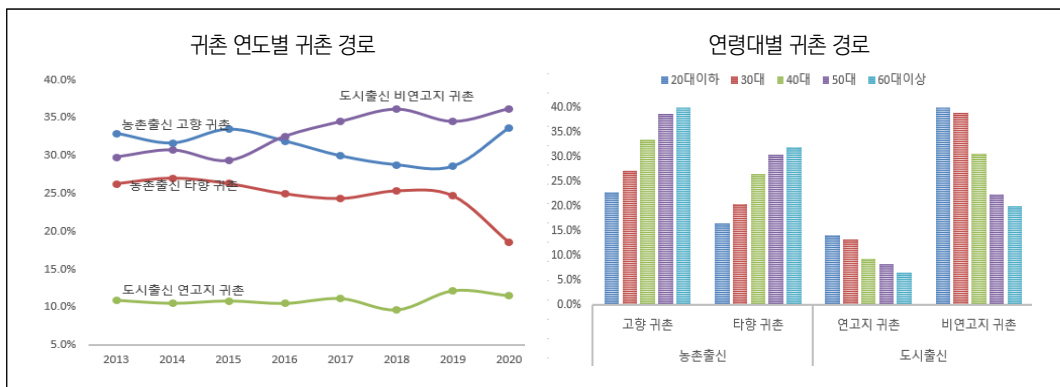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¹⁰⁾ 2016, 2018, 2019, 2020, 2021년 조사가 실시됨.

○ 귀촌자의 귀촌 경로를 보면 농촌 출신자가 대체로 많은 가운데, 최근 들어 도시출신 비연고지 귀촌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추세였음. 2013~2020년 기간 농촌 출신 고향 귀촌자(U턴)는 31.5%, 농촌 출신 타향 귀촌자(J턴)은 24.2%, 도시 출신 연고지 귀촌자는 10.9%, 도시 출신 비연고지 귀촌자는 33.4%였음. 농촌 출신자 보다는 도시 출신자가 증가하고, 연고지보다는 비연고지 귀촌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도시 출신 귀촌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촌 출신 귀촌이 많았음.

〈그림 3-9〉 귀촌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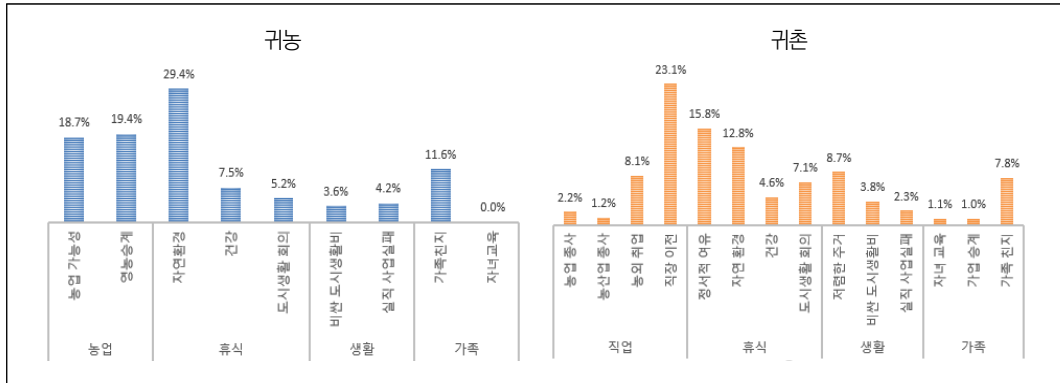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농·귀촌 동기

○ 귀농자의 귀농 동기를 보면 휴식(자연환경, 건강, 도시생활 회의 등) 관련 동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농업 종사 관련 동기였음. 2016~2020년 귀농자의 세부 귀농 동기(1순위 동기)로 영농종사(농업비전·가업승계)(38.2%)가 가장 많고, 자연 환경이 좋아서(29.4%), 가족 친지와 같이 지내기 위해(11.6%),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7.5%),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5.2%) 등의 순으로 많았음. 동기 유형별로 휴식(45.1%), 농업(35.4%), 가족(11.2%), 생활(7.1%)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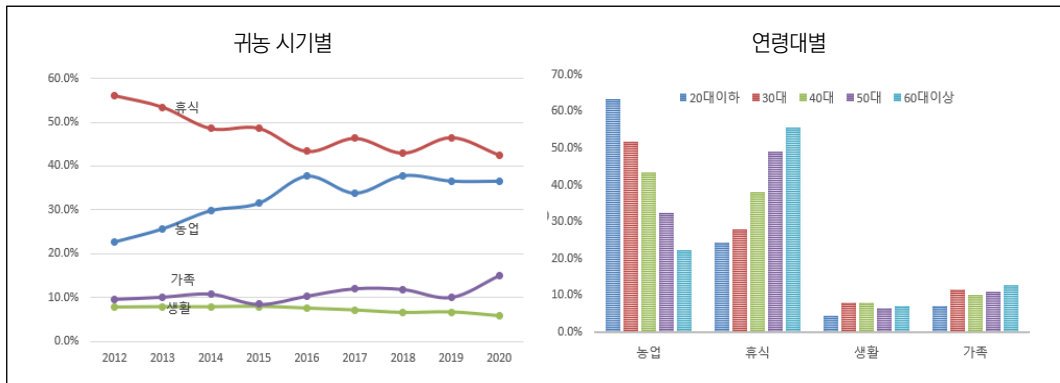
○ 귀농 시기별로 보면 휴식 관련 동기가 줄어들고, 농업 관련 동기가 점차 많아지는 추세였고,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업 관련 동기가 많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휴식 관련 동기가 많았음.

〈그림 3-10〉 귀농·귀촌 동기(1순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그림 3-11〉 시기·연령대별 귀농 동기(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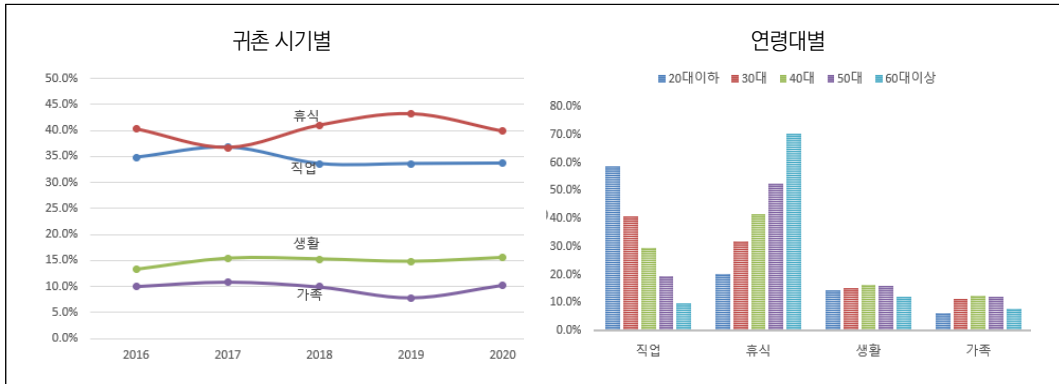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촌자의 귀촌 동기를 보면 휴식(정서적 여유, 자연환경, 건강, 도시생활 회피 등) 관련 동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직업 관련 동기였음. 2016~2020년 귀촌자의 세부 귀촌 동기(1순위 동기)로 직장 이전(23.1%)이 가장 많았고, 정서적 여유(15.8%), 자연 환경(12.8%), 저렴한 주거(8.7%), 농외 취업(8.1%), 가족 친지와 지내려고(7.8%), 도시 생활에 대한 회피(7.1%) 등의 순으로 많았음. 동기 유형별로 휴식(40.2%), 직장(34.5%), 생활(14.8%), 가족(9.8%) 순이었음.

○ 귀촌 시기별 귀촌 동기의 큰 차이는 없었고,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직업 관련 동기(20대 이하는 45.2%, 30대 36.1%, 40대 30.5%, 50대 21.8%,

60대 이상 13.2%), 연령대가 높을수록 휴식 관련 동기가 많았음(60대 이상 65.2%, 50대 57.7%, 40대 42.0%, 30대 36.1%, 30대 27.3%).

〈그림 3-12〉 시기·연령대별 귀촌 동기(1순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21). 귀농·귀촌 실태조사.

〈글상자 10〉 귀촌인 농촌 전입사유

- 통계청이 인구이동통계를 근거로 작성한 귀농·귀촌 통계에서의 귀촌인들의 농촌 전입사유를 보면, 직업(33.6%), 주택(27.8%), 가족(24.3%) 순으로 많았는데, 연령대별로는 1순위를 보면 20대 이하, 30대, 40대는 직업, 50~60대는 주택, 70대 이상은 가족이었음.

〈연령대별 귀촌인 전입사유(%)〉

순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1	직업 (49.7)	직업 (36.0)	직업 (35.8)	주택 (34.7)	주택 (38.0)	가족 (34.5)	직업 (33.6)
2	가족 (28.1)	가족 (26.9)	주택 (30.7)	직업 (31.0)	가족 (22.6)	주택 (33.9)	주택 (27.8)
3	주택 (11.4)	주택 (26.8)	가족 (19.4)	가족 (18.7)	직업 (19.4)	건강 (11.6)	가족 (24.3)

자료: 통계청(2017~2020). 귀농·귀촌통계(누적).

□ 귀농·귀촌 전 종사분야

- 귀농자의 전 직업(가구주 기준)¹¹⁾으로 사무직(20.6%), 장치·기계직(19.8%), 서비스직(15.3%), 판매직(14.7%) 등의 순으로 많았고, 귀촌자의 전 직업으로 사무직(27.4%), 서비스직(18.1%), 판매직(14.6%), 장치·기계직(14.0%) 순으로 많았음. 경제활동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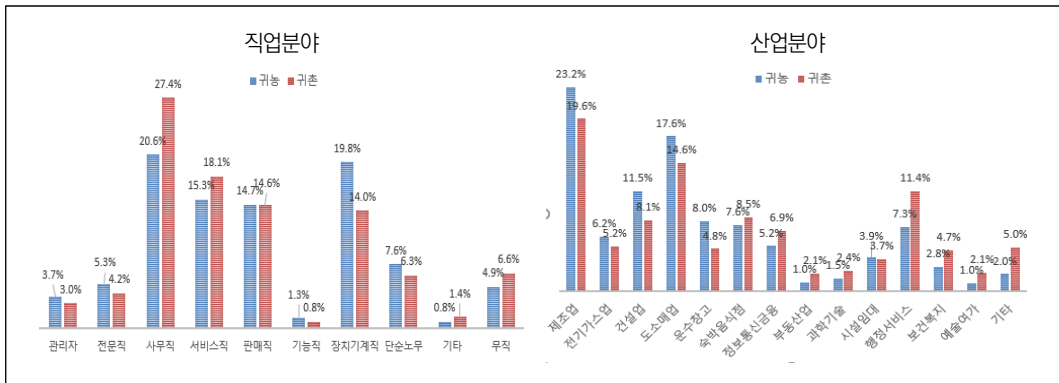
11) 2018년부터 조사됨.

사(통계청 2020)의 도시민 경제활동 분야(통계청 2020)와 비교해 보면, 귀농·귀촌 전 종사 직업 분야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도시민 중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은 전문직, 단순노무직이 적고, 사무직(귀촌), 서비스직(귀농·귀촌 모두), 장치·기계직(귀농)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었음.

○ 귀농자의 전 종사분야를 산업분야¹²⁾로 보면 제조업(23.2%), 도소매업(17.6%), 건설업(11.5%) 등의 순으로 많았고, 귀촌은 제조업(19.6%), 도소매업(14.6%), 행정서비스업(11.4%) 등의 순으로 많았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도시민 종사 산업과 비교해 보면 도시민 중에 귀농·귀촌하는 사람은 과학기술연구, 보건복지 분야는 적고, 귀농 중심으로 전기·가스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비중이 컸음.

○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의 사무직, 서비스직 비중이 높고, 50대 기능직, 60대 이상은 단순노무직, 무직 비중이 많았음.

〈그림 3-13〉 귀농·귀촌 전 종사 직업·산업분야



무직: 학생, 주부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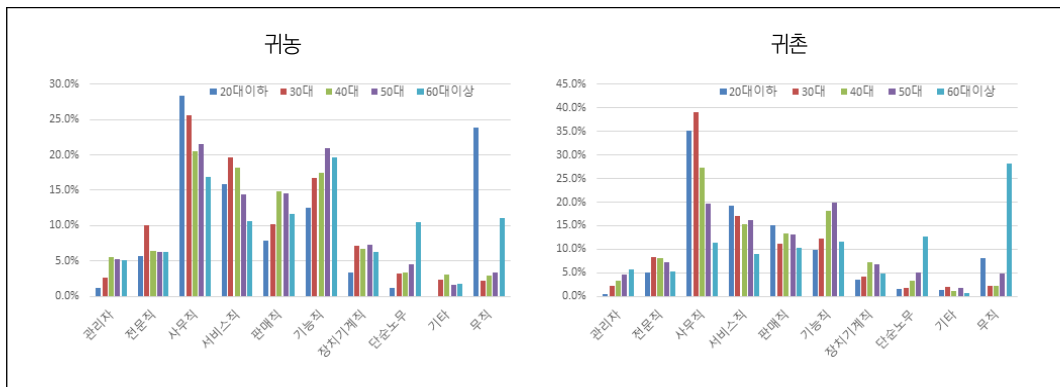
12) 2021년에 처음 조사됨.

〈글상자 11〉 2020 도시민 경제활동인구 직업·산업분야

- 2020년 도시지역 경제활동인구의 종사분야를 직업으로 보면 관리직 1.5%, 전문직 22.0%, 사무직 18.4%, 서비스직 11.0%, 판매직 11.1%, 기능직 8.7%, 장치조립 10.3%, 단순노무 12.8% 등이고 실업은 4.3%였음(농림어업 분야 제외)(통계청 2020).
- 업분야(취업인구 중)별로는 농림어업 1.4%, 제조업 16.1%, 전기가공업 0.8%, 건설업 7.7%, 도소매업 13.8%, 운수창고업 5.7%, 숙박·음식점업 8.1%, 정보통신금융업 6.8%, 부동산업 2.2%, 과학기술 5.0%, 시설임대업 5.3%, 행정서비스업 11.2%, 보건복지업 8.9%, 예술여가업 1.9%, 기타(협회, 가구내 고용, 국제기구 등) 5.1%였음.

자료: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14〉 연령대별 귀농·귀촌 전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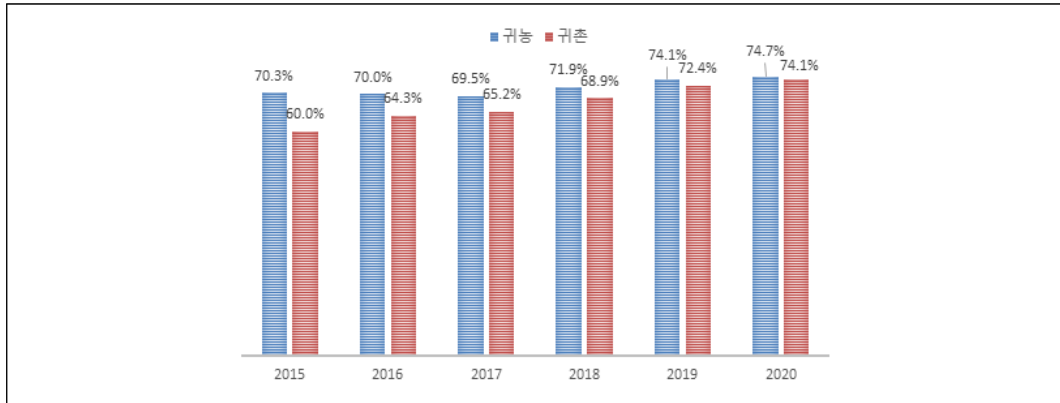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 실태조사.

□ 가구 구성

○ 통계청 귀농·귀촌 통계에 의하면, 귀농·귀촌 중 1인 가구 비중이 70% 이상이었음. 귀농·귀촌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시기별로는 최근일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귀농은 70.3%, 귀촌은 60.0%이던 것이 2020년에는 귀농은 74.7%, 귀촌은 74.1%였음.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2020년 29.4%, 인구총조사)과 비교 시 농촌 이주 시 1인 가구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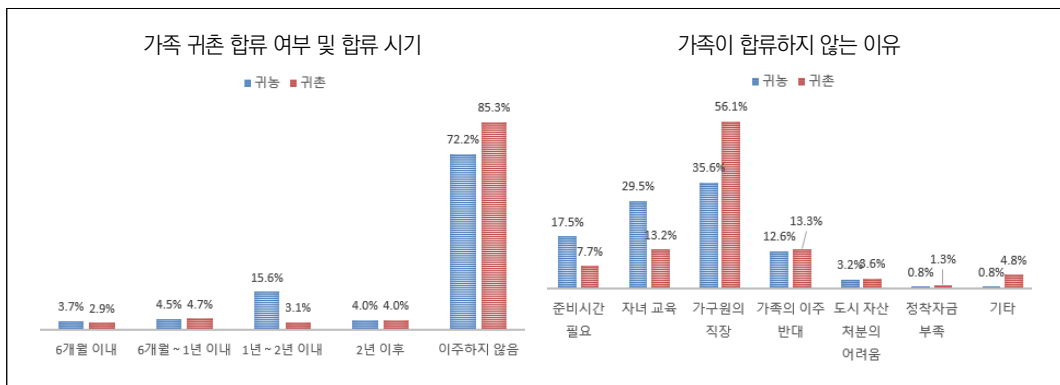
〈그림 3-15〉 귀농·귀촌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



자료: 통계청(각 년도). 귀농귀촌통계.

- 도시 가구원이 합류하지 않는 경우는 귀농은 72.2%, 귀촌은 85.3%였는데, 가구원이 합류하지 않는 이유는 가구원의 직장 문제(귀농 35.6%, 귀촌 56.1%)가 가장 많고, 자녀 교육(귀농 29.5%, 귀촌 13.2%), 가족의 이주 반대(귀농 12.6%, 귀촌 13.3%), 준비시간 필요(귀농 17.5%, 귀촌 7.7%) 등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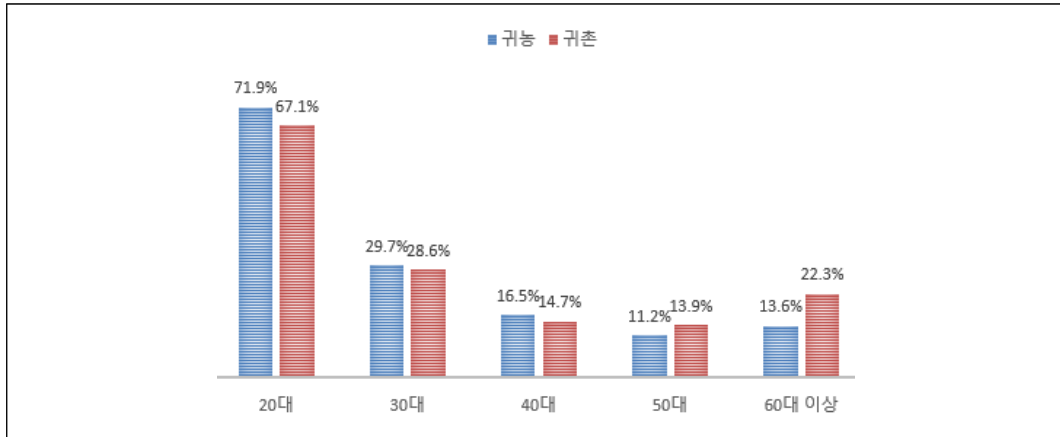
〈그림 3-16〉 귀농·귀촌 가구의 가족 합류 시기 및 가족이 합류하지 않는 이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농·귀촌인의 배우자 여부를 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귀농은 71.9%, 귀촌은 67.1%가 독신(배우자 없음)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았음. 30대 이상의 경우 독신 비율은 30대 귀농 29.7%, 귀촌 28.6%, 40대 귀농 16.5%, 귀촌 14.7%, 50대 귀농 11.2%, 귀촌 13.9%, 60대 이상 귀농 13.6%, 귀촌 22.3% 등으로 20대의 독신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음.

〈그림 3-17〉 귀농·귀촌 독신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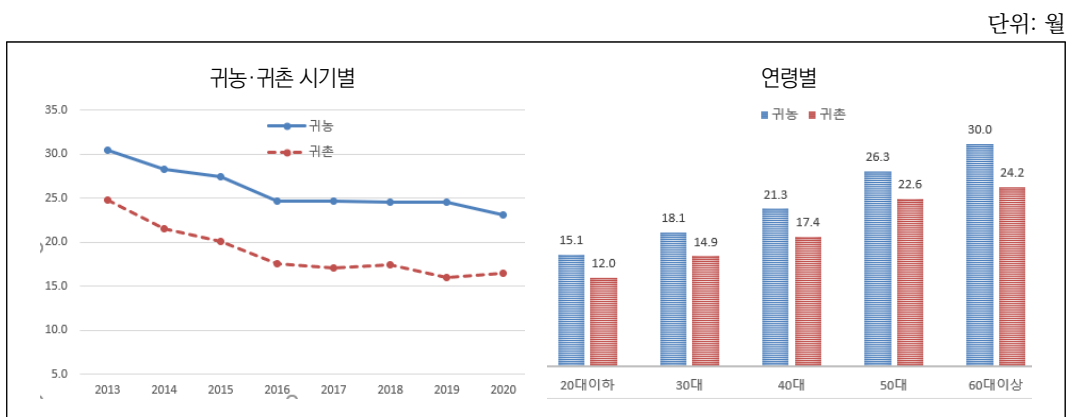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농·귀촌 준비

○ 귀농·귀촌 준비기간을 보면 귀농은 평균 23.1개월, 귀촌은 16.5개월이었음.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2013년 귀농 30.5개월, 귀촌 24.7개월, 2020년 귀농 23.1개월, 귀촌 16.5개월) 연령대가 낮을수록 준비기간을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음(20대 이하 귀농 15.1개월, 귀촌 12개월, 60대 이상 귀농 30.0개월, 귀촌 24.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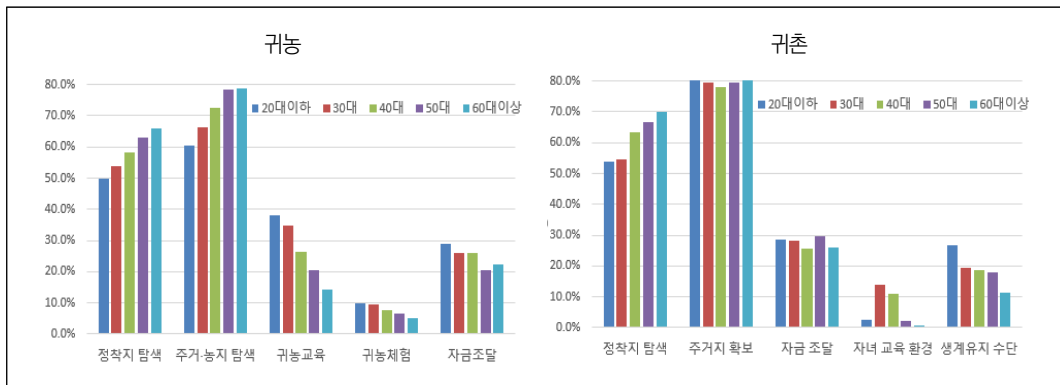
〈그림 3-18〉 귀농·귀촌 준비 기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농·귀촌 준비 내용을 보면, 귀농은 주거·농지 탐색(75.5%), 정착지 탐색(61.3%), 자금조달(23.0%), 귀농 교육이수(22.4%), 귀농 체험(6.9%) 등의 순으로 많았음. 연령대가 낮을수록 귀농 교육, 자금 조달에,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거·농지 탐색, 정착지 탐색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음. 귀촌 준비 내용을 보면 주거지 확보(81.4%), 정착지 탐색(60.5%), 자금조달(27.7%), 생계유지(일자리) 수단 마련(19.6%) 등의 순으로 많았음. 연령대가 낮을수록 생계유지 수단에,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착지 탐색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음.

〈그림 3-19〉 귀농·귀촌 준비내용(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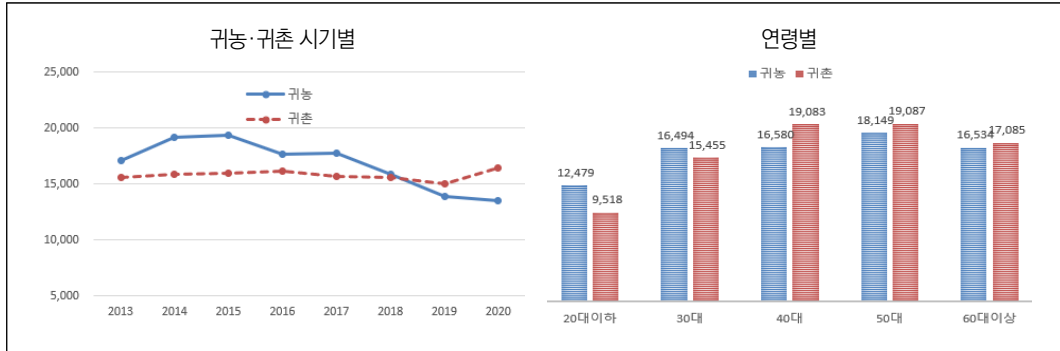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정착 준비자금 규모를 보면 귀농은 평균 1억 3,468만 원, 귀촌은 1억 6,444만 원이었는데, 귀농의 경우 최근에 귀농할수록 점차 자금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귀촌은 큰 변화가 없었음.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 30대 순이었고, 20대가 가장 적었음(20대 귀농 1억 2,479만 원, 귀촌 9,518만 원). 20~30대는 귀농이 귀촌보다 준비자금이 많았음.

〈그림 3-20〉 귀농·귀촌 정착준비 자금

단위: 만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정착 준비자금 마련 경로를 보면 귀농·귀촌 모두 본인 및 배우자 저축(귀농 46.3%, 귀촌 40.0%), 자산 처분(귀농 27.7%, 귀촌 32.6%)이 많았음. 연령대별로 준비자금 마련 경로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속 및 가족의 도움, 금융권 대출이 많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퇴직금, 자산 처분이 많았음.

〈표 3-7〉 연령대별 귀농·귀촌 준비자금 마련 경로

		퇴직금	본인 및 배우자의 저축	자산 처분	상속 또는 가족의 도움	금융권 대출	정부정책 지원금
귀농	20대 이하	3.0%	36.5%	11.7%	29.4%	10.7%	8.6%
	30대	6.9%	38.4%	24.3%	11.4%	11.9%	6.9%
	40대	8.8%	43.0%	29.7%	4.9%	8.8%	4.5%
	50대	14.2%	48.4%	28.0%	2.8%	4.7%	1.7%
	60대 이상	14.5%	50.7%	28.4%	3.0%	2.4%	0.9%
귀촌	20대 이하	2.1%	41.5%	16.9%	26.6%	11.5%	1.0%
	30대	2.5%	40.6%	30.5%	8.9%	15.8%	1.6%
	40대	5.0%	37.6%	40.9%	4.3%	11.3%	0.9%
	50대	9.9%	40.1%	39.8%	2.6%	7.0%	0.5%
	60대 이상	11.3%	39.3%	42.6%	4.0%	2.4%	0.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자금 사용처를 보면 귀농은 주택마련(59.3%), 농지 구입 및 임대(55.3%), 생활비(35.5%), 영농시설 투자(27.6%), 농업경영(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16.7%) 순이었는 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택, 농지에 연령대가 낮을수록 영농시설 및 생활비에 많이 사용하였음. 귀촌은 주택마련(87.9%), 생활비(74.3%), 농지구입(13.8%), 창업(11.0%), 영농시설(4.9%) 순으로 자금을 많이 사용하였는 데, 연령대별 경향성은 뚜렷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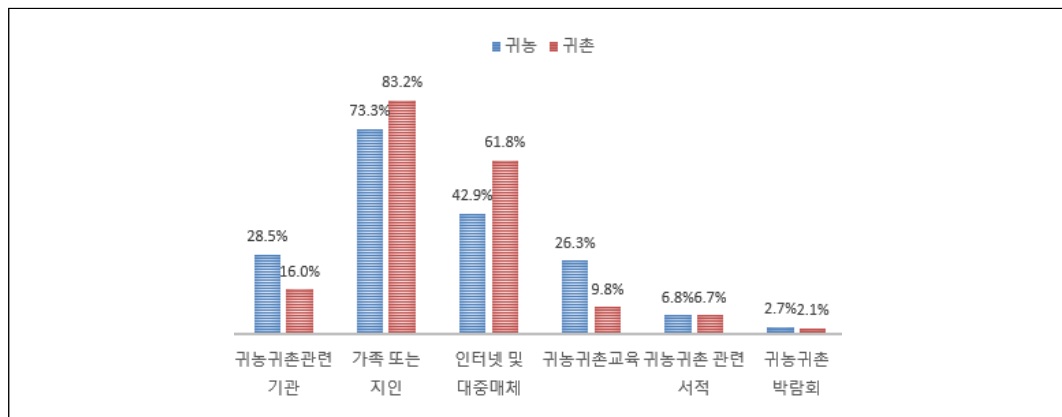
〈표 3-8〉 연령대별 귀농·귀촌 자금 사용처(1+2순위)

		농지 구입	주택마련	영농시설	농작물 재배 및 가축사육	생활비	기타
귀농	20대 이하	49.2%	39.4%	37.0%	17.6%	46.9%	1.4%
	30대	48.1%	50.4%	39.2%	19.5%	37.3%	1.1%
	40대	53.4%	53.8%	31.8%	18.3%	37.5%	0.9%
	50대	58.5%	62.5%	25.6%	16.0%	32.0%	1.3%
	60대 이상	56.1%	65.5%	20.3%	14.7%	37.6%	1.3%
	전체	55.3%	59.3%	27.6%	16.7%	35.5%	1.2%
		주택마련	농지구입	창업비용	생활비	영농 시설	기타
귀촌	20대 이하	86.0%	8.3%	8.4%	82.8%	4.0%	1.4%
	30대	87.8%	9.3%	13.1%	77.5%	4.0%	1.1%
	40대	88.2%	14.7%	14.5%	69.9%	6.4%	0.5%
	50대	88.3%	21.5%	12.9%	64.2%	6.3%	0.5%
	60대 이상	90.2%	19.5%	4.7%	73.2%	4.1%	0.7%
	전체	87.9%	13.8%	11.0%	74.3%	4.9%	0.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농·귀촌 관련 정보수집 경로는 보면 귀농·귀촌 모두 가족 및 지인(귀농 73.3%, 귀촌 83.2%), 인터넷 및 대중매체(귀농 42.9%, 귀촌 61.8%), 귀농·귀촌 관련 정부기관(온/오프라인)(귀농 28.5%, 귀촌 16.0%), 귀농·귀촌 교육(귀농 26.3%, 귀촌 9.8%) 등의 순이었음. 귀농·귀촌 관련 기관 및 교육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중이 귀농이 귀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음.

〈그림 3-21〉 귀농·귀촌 준비 관련 정보 수집 경로(1+2순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2.2. 농촌 정착 실태

□ 종사분야

○ 귀농인은 농외 경제활동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50.7%로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고(두 연령대 모두 55.2%), 30대(50.6%), 20대(47.7%), 60대 이상(43.1%) 순이었음. 귀농 연차에 따른 농외 경제활동 종사비율의 차이는 거의 없었음. 농외 종사분야별로는 일반 직장(24.3%), 농산물 직판(21.5%), 임시직(18.1%), 농업 임노동(14.7%), 일용직(10.7%) 등의 순으로 많았음.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산물 가공, 농산물 직판, 농촌관광 등 농업관련 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아졌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업 관련 활동 및 일반 직장 종사율이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임시직, 일용직 종사율이 높아졌음.

〈표 3-9〉 귀농인 농외 종사분야(중복 응답)

		농외 종사분야								
		농산물 가공	농산물 직판	농촌 관광	농업 임노동	자영업	일반 직장	임시직	일용직	사업외 소득
귀농 연차	1년차	1.6%	19.8%	1.1%	16.0%	21.7%	23.1%	16.2%	10.6%	7.1%
	2년차	4.2%	20.9%	0.7%	14.5%	17.2%	25.4%	17.9%	10.4%	6.8%
	3년차	3.3%	20.8%	1.6%	13.3%	19.4%	24.7%	18.4%	11.8%	8.1%
	4년차	4.5%	23.8%	1.9%	13.7%	20.2%	22.4%	18.8%	11.2%	7.7%
	5년차	3.7%	22.2%	2.5%	16.1%	18.7%	26.1%	19.4%	9.2%	6.8%
연령	20대 이하	6.7%	20.1%	3.5%	19.4%	14.1%	35.9%	9.2%	3.0%	0.0%
	30대	3.4%	16.3%	2.2%	19.4%	16.7%	34.4%	17.4%	7.4%	0.9%
	40대	3.0%	20.3%	1.8%	16.2%	19.6%	34.7%	15.7%	9.7%	2.6%
	50대	3.5%	19.5%	1.4%	12.6%	22.1%	26.3%	18.9%	11.6%	4.9%
	60대 이상	3.6%	27.0%	1.3%	15.0%	16.5%	10.6%	19.0%	11.4%	16.6%
전체		3.4%	21.5%	1.5%	14.7%	19.5%	24.3%	18.1%	10.7%	7.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촌 가구주의 현재 종사하는 경제활동 분야¹³⁾를 보면 일반 직장(정규직)(47.6%)이 가장 많고, 자영업(20.5%), 임시·일용직(11.1%), 영농(8.1%), 농관련사업(2.1%) 등의 순이었음(무직 10.2%).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오래수록 무직이 줄고, 농업 종사비중이 증

¹³⁾ 2016년 조사의 경우 경제활동분야별 활동비중이 조사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

가하고, 일반 직장 취업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었음. 연령대가 낮을수록 일반직장이 많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무직과 농업, 임시일용직이 많았음. 자영업은 30~50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었음.

〈표 3-10〉 귀촌인 경제활동 분야

		경제활동 분야						
		무직	농업	농관련업	임시일용직	자영업	일반 직장	기타
귀촌 시기	1년차	13.5%	5.1%	2.1%	11.8%	19.5%	47.7%	0.2%
	2년차	11.8%	7.8%	1.7%	11.3%	21.0%	46.1%	0.2%
	3년차	9.8%	8.9%	1.7%	10.5%	21.9%	46.8%	0.5%
	4년차	8.3%	9.4%	2.4%	10.9%	20.1%	48.3%	0.6%
	5년차	7.4%	9.6%	2.6%	10.9%	19.9%	49.1%	0.5%
연령	20대 이하	2.6%	5.4%	2.6%	10.0%	12.7%	66.7%	0.1%
	30대	1.1%	4.9%	2.2%	5.9%	19.6%	66.0%	0.3%
	40대	2.3%	7.6%	2.9%	8.5%	26.3%	51.9%	0.4%
	50대	7.6%	9.8%	1.5%	17.6%	28.7%	34.4%	0.3%
	60대 이상	42.5%	14.2%	0.9%	15.7%	15.3%	10.4%	1.0%
전체		10.2%	8.1%	2.1%	11.1%	20.5%	47.6%	0.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 실태조사.

□ 소득

○ 귀농인의 가구소득을 보면 귀농 시 연령을 기준으로 20대 이하가 가장 높고, 30대, 40대, 50대, 60대 이하 순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음. 귀농 전 소득과의 비교해보면, 정착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20대 이하는 정착 2년차부터, 30대는 3년차부터 귀농 전 소득을 회복하고 있었지만, 40대 이상은 귀농이후 소득이 점차 상승하지만, 6년 차까지도 귀농 전 소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음.

〈표 3-11〉 귀농 가구소득 현황 및 변화

단위: 만 원

	귀농 시 연령대	귀농 직전해	귀농 연차					
			첫해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귀농 가구 소득	20대 이하	3,070.0	2,878.5	3,093.3	4,376.2	3,905.6	6,115.9	5,404.7
	30대	3,905.2	2,750.2	3,188.6	4,133.9	4,795.5	4,747.3	4,916.7
	40대	4,287.2	2,548.3	3,749.6	3,742.9	3,551.8	3,984.1	4,243.3
	50대	4,330.6	2,323.3	2,885.6	3,080.1	3,242.2	3,217.0	3,232.1
	60대 이상	3,508.7	1,917.6	2,176.1	2,405.4	2,599.1	2,541.1	2,390.8
	전체	4,043.2	2,339.7	2,837.5	3,171.2	3,364.3	3,524.6	3,678.1
귀농 전과 소득 격차	20대		-191.5	23.3	1,306.2	835.6	3,045.8	2,334.6
	30대		-1,155.0	-716.6	228.7	890.3	842.1	1,011.5
	40대		-1,739.0	-537.6	-544.3	-735.5	-303.1	-44.0
	50대		-2,007.3	-1,445.0	-1,250.5	-1,088.3	-1,113.6	-1,098.4
	60대 이상		-1,591.1	-1,332.5	-1,103.3	-909.5	-967.6	-1,117.8
	전체		-1,703.5	-1,205.8	-872.1	-679.0	-518.7	-365.2
귀농 이후 소득 변화	20대 이하			214.8	1,497.7	1,027.1	3,237.3	2,526.1
	30대			438.4	1,383.7	2,045.3	1,997.2	2,166.5
	40대			1,201.3	1,194.6	1,003.5	1,435.9	1,695.0
	50대			562.3	756.8	919.0	893.7	908.9
	60대 이상			258.5	487.8	681.5	623.5	473.2
	전체			497.7	831.4	1,024.5	1,184.9	1,338.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0.1%로서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져 왔는데(첫해 37.8%, 6년차 54.4%), 이는 연령대에 관계없이 동일했음.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20대 65.2%, 30대 65.3%, 60대 이상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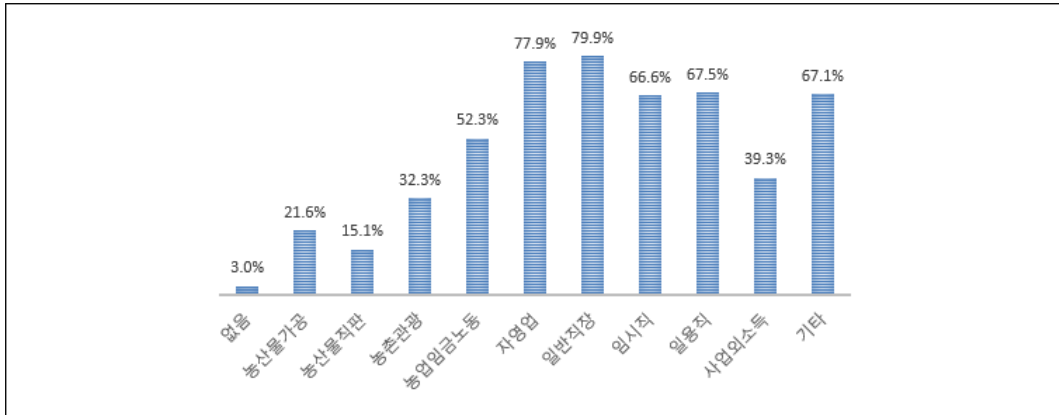
〈표 3-12〉 연령·귀농연차에 따른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귀농 연차						전체
	첫해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20대 이하	56.2%	62.0%	66.4%	70.1%	62.5%	63.8%	65.2%
30대	52.4%	56.1%	66.9%	65.1%	65.9%	69.7%	65.3%
40대	44.9%	54.1%	53.1%	59.4%	59.4%	59.9%	57.6%
50대	37.0%	45.0%	50.9%	48.6%	48.1%	49.2%	48.4%
60대 이상	24.5%	34.9%	35.5%	36.2%	40.3%	41.8%	37.1%
전체	37.8%	44.7%	49.2%	50.5%	51.9%	54.4%	50.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농외경제활동 종류에 따른 농외소득 규모도 차이가 있었는데, 농업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에 비해 비농업분야 활동의 경우가 대체로 농외소득 비중이 높았는데, 특히 일반직장,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가소득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었음(일반직장 78.3%, 자영업 76.3%).

〈그림 3-22〉 농외활동 종류에 따른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 비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촌인의 가구소득을 보면 귀촌 시 연령을 기준으로 40대가 가장 높고, 30대, 50대, 20대 이하, 60대 이상 순으로 높았음. 귀촌 이후 소득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는데, 귀촌 전 소득과 비교해 보면 20대 이하, 30대에서 귀촌 전 소득을 회복하고 있었는데, 20대 이하의 6년차부터, 30대는 4년차부터 회복하지만, 40대 이상에서는 6년차에도 여전히 귀촌 전 소득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음.

〈표 3-13〉 귀촌 가구소득 현황 및 변화

단위: 만 원

	귀촌 시 연령대	귀촌 직전해	귀촌 연차					
			첫해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귀촌 가구 소득	20대 이하	3,418.4	2,846.5	3,094.9	3,172.1	3,305.2	3,317.2	3,601.9
	30대	4,133.9	3,604.2	3,798.2	4,067.5	4,172.6	4,339.1	4,479.6
	40대	4,813.6	3,759.6	4,152.6	4,214.9	4,389.1	4,640.7	4,569.1
	50대	4,719.3	3,345.8	3,914.8	3,680.4	3,762.5	3,907.8	3,628.4
	60대 이상	3,089.2	2,217.7	2,513.3	2,497.8	2,109.9	2,359.3	2,665.4
	전체	4,045.2	3,204.0	3,494.4	3,565.8	3,632.1	3,813.2	3,926.8

	귀촌 시 연령대	귀촌 직전해	귀촌 연차					
			첫해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귀촌 전과 소득 격차	20대 이하		-571.9	-323.5	-246.2	-113.2	-101.2	183.5
	30대		-529.7	-335.7	-66.4	38.7	205.2	345.7
	40대		-1,054.0	-661.0	-598.8	-424.6	-173.0	-244.5
	50대		-1,373.5	-804.5	-1,038.9	-956.8	-811.5	-1,090.9
	60대 이상		-871.5	-575.9	-591.4	-979.3	-729.9	-423.8
	전체		-841.2	-550.8	-479.4	-413.1	-232.0	-118.4
귀촌 이후 소득 변화	20대 이하			248.4	325.7	458.8	470.7	755.4
	30대			194.0	269.3	105.1	166.5	140.5
	40대			393.0	62.3	174.2	251.6	-71.6
	50대			569.0	-234.5	82.2	145.3	-279.4
	60대 이상			295.6	-15.5	-387.8	249.3	306.1
	전체			290.5	361.8	428.1	609.2	722.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 실태조사.

- 귀촌인이 현재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가구소득의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대에 관계없이 자영업, 일반직장 종사자의 소득이 높았고, 그 다음이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 종사자였음 (20대의 경우 농업 종사자의 농가소득이 가장 높았음).

〈표 3-14〉 귀촌인 연령·종사분야별 가구소득

단위: 만 원

	현직업							
	무직	농업	농관련업	임시일용직	자영업	일반직장	기타	전체
20대 이하	1,457.4	5,135.3	2,820.6	2,312.9	3,409.1	3,228.5	2,300.0	3,204.8
30대	1,334.1	3,663.2	4,417.7	2,968.8	4,072.5	4,089.6	3,654.9	3,976.3
40대	2,147.6	4,088.4	3,838.9	3,017.8	4,472.2	4,767.7	3,635.5	4,397.4
50대	2,088.4	3,637.1	3,353.4	2,976.4	4,565.0	4,888.7	2,946.5	4,093.1
60대 이상	2,105.9	2,435.2	2,383.8	2,393.9	3,572.0	3,458.1	3,632.1	2,580.6
전체	2,053.2	3,534.5	3,566.7	2,721.9	4,156.7	4,088.3	3,504.6	3,684.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 실태조사.

- 귀농·귀촌 가구 소득 관련 요인을 보면 귀농의 경우 정착기간이 길수록, 귀농 시 연령대가 낮고, 가구주가 여성보다는 남성일수록, 경지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높았음. 귀촌의 경우 정착기간이 길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40대가 가장 많음), 남성보다는 여성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았음. 귀농의 경우 농외활동 여부에 따라 농가 소득에 차이가 있었음

데, 농외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일반직장, 자영업을 할 경우 농업 관련하여 농촌 관광을 할 경우 소득이 높았음. 귀촌의 경우 무직에 비해 모든 경제활동에서 가구소득이 높았는데, 일반직장, 자영업, 농업, 농관련업 등의 순으로 높았음.

〈표 3-15〉 귀농·귀촌 가구소득 관련 변인

변인	귀농				귀촌			
	B	β	t	p	B	β	t	p
(상수)	4151.022		27.754	0.000	1330.754		11.436	0.000
농촌 정착기간	133.485	0.064	6.128	0.000	88.790	0.061	5.892	0.000
귀농귀촌당시 연령대	-516.837	-0.181	-16.979	0.000	106.729	0.071	5.942	0.000
성별	-261.495	-0.041	-3.953	0.000	168.903	0.041	3.967	0.000
경지규모	0.034	0.170	16.308	0.000				
(귀농) 주 농외 활동 분야 (없음=0)	농산물 가공	529.751	0.013	1.307	0.191			
	농산물 직판	232.891	0.017	1.603	0.109			
	농촌관광	1255.495	0.027	2.661	0.008			
	농업임금노동	-342.739	-0.028	-2.632	0.008			
	자영업	1120.197	0.110	10.301	0.000			
	일반직장	1282.741	0.143	13.137	0.000			
	임시직	-31.186	-0.003	-0.280	0.779			
	일용직	-422.613	-0.031	-2.941	0.003			
	사업외소득	395.614	0.025	2.358	0.018			
기타	1043.958	0.022	2.117	0.034				
(귀촌) 종사 분야 (무직=0)	농업				1452.264	0.191	14.466	0.000
	농관련업				1546.760	0.106	9.414	0.000
	임시일용				652.504	0.099	7.058	0.000
	자영업				2108.057	0.411	25.233	0.000
	일반직장				2118.335	0.513	26.150	0.000
기타직				1341.216	0.042	3.991	0.000	
수정된 R ²	0.118				0.121			
F(df)	80.095(14, 8361)				127.912(9,8368)			
p	0.000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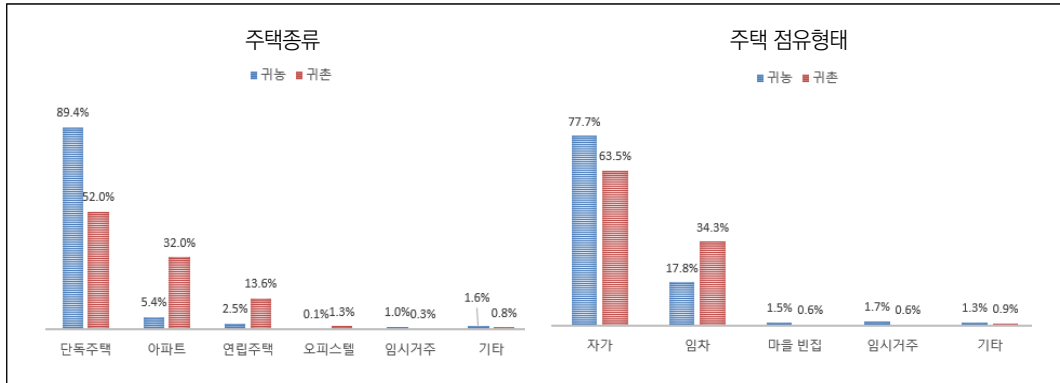
성별: 남=1, 여=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주거

○ 현재 사는 주택의 종류로 단독주택이 가장 많았고, 점유형태별로는 자가 형태가 가장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귀촌의 경우 귀농에 비해 주택 종류로는 아파트(귀농 5.4%, 귀촌 32.0%), 점유형태로는 임차 비중(귀농 17.4%, 귀촌 34.3%)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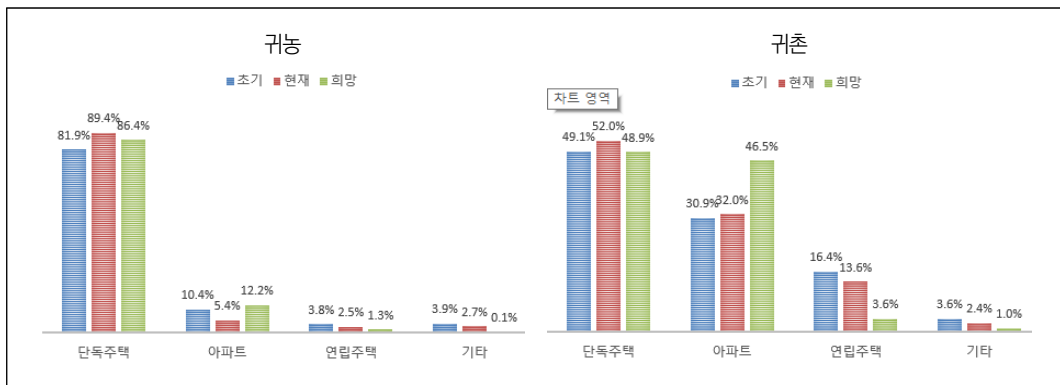
〈그림 3-23〉 현재 귀농·귀촌인이 거주하는 주택종류와 점유형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농·귀촌 초기에 비해 현재 주택의 점유형태별로 자가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는데, 주택종류별로는 귀농의 경우 단독주택이 늘고, 아파트, 연립주택은 줄어들었고, 귀촌의 경우 단독주택, 아파트가 늘고, 연립주택은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었음. 희망거주 형태는 귀농·귀촌 모두 현재보다 아파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었음.

〈그림 3-24〉 귀농·귀촌 초기와 현재의 주택종류 변화 및 희망 주택종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지역사회 생활

○ 귀농·귀촌인들의 마을행사, 지역농민단체, 일반사회단체, 귀농·귀촌 모임 등 지역사회 모임 참여 실태를 보면, 귀농인에 비해 귀촌인들의 참여가 낮았음. 마을행사 참여율은

귀농 65.6%, 귀촌이 36.4%, 귀농·귀촌모임에는 귀농 33.2%, 귀촌 17.2% 등이었음.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마을 행사 참여비율이 높았고, 나머지 유형의 모임에는 대체로 30~50대가 20대 이하, 60대 이상 보다 참여 비율이 높았음.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모든 유형의 모임에서 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음.

〈표 3-16〉 연령 및 귀농·귀촌 연차에 따른 지역사회 모임 참여율

		귀농				귀촌			
		마을행사	지역농민 단체	일반사회 단체	귀농귀촌 모임	마을행사	지역농민 단체	일반사회 단체	귀농귀촌 모임
연령	20대 이하	49.4%	38.6%	31.8%	32.6%	25.2%	15.7%	19.1%	13.2%
	30대	61.7%	52.3%	37.8%	40.6%	27.3%	12.4%	18.6%	13.1%
	40대	64.5%	48.8%	35.2%	34.8%	37.2%	17.1%	24.1%	19.2%
	50대	65.7%	43.1%	33.1%	34.8%	43.0%	17.9%	22.4%	22.2%
	60대 이상	67.6%	35.7%	29.6%	28.5%	48.8%	15.7%	20.2%	18.3%
귀농 귀촌 연차	2년차	61.7%	36.5%	28.9%	31.8%	31.4%	12.0%	16.6%	15.4%
	3년차	64.6%	42.5%	33.4%	34.0%	35.4%	15.4%	19.1%	18.2%
	4년차	66.2%	42.1%	33.4%	32.0%	38.9%	16.1%	20.7%	16.7%
	5년차	66.8%	44.4%	33.4%	34.5%	38.6%	16.9%	24.7%	17.8%
	6년차	69.1%	47.5%	34.8%	33.8%	38.9%	18.9%	24.8%	18.2%
	전체	65.6%	42.4%	32.7%	33.2%	36.4%	15.6%	20.8%	17.2%

참여: 주도적으로 참여, 적극 의견개진, 자주참여하지만 의견개진 않음에 해당하는 응답의 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농·귀촌인들의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보면, 귀농이 귀촌보다 좋았음. 귀농의 경우 73.8%가 좋은 반면, 귀촌은 54.0%가 좋다고 하였음.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지역주민 관계가 좋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고,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좋다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귀촌의 경우가 더 두드러졌음(2년차 37.6%. 6년차 64.2%).

〈표 3-17〉 연령 및 귀농·귀촌 연차에 따른 지역사회 모임 참여율

		귀농			귀촌		
		좋음	보통	나쁨	좋음	보통	나쁨
연령	20대 이하	59.1%	44.3%	2.3%	50.6%	48.3%	1.1%
	30대	74.2%	56.8%	0.7%	53.9%	44.3%	1.8%
	40대	75.5%	58.0%	1.0%	55.9%	42.8%	1.3%
	50대	73.3%	56.4%	1.9%	53.7%	44.4%	1.9%
	60대 이상	73.7%	55.3%	2.4%	56.7%	42.5%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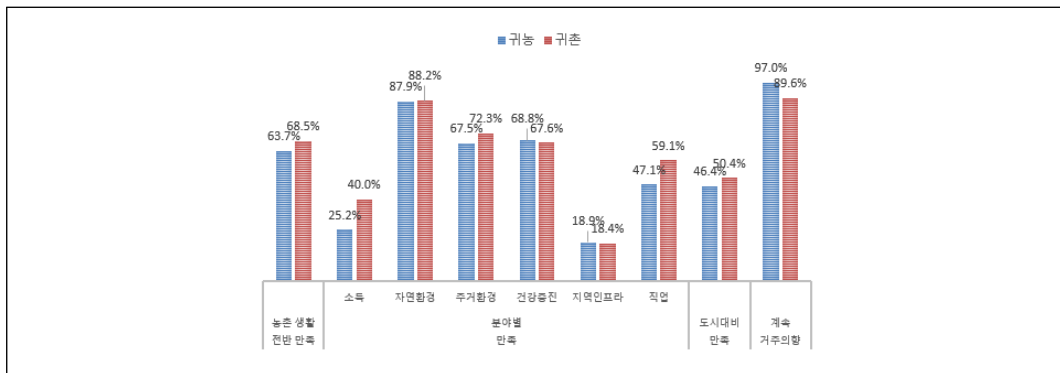
		귀농			귀촌		
		좋음	보통	나쁨	좋음	보통	나쁨
귀농 귀촌 연차	2년차	73.4%	25.2%	1.4%	37.6%	60.3%	2.1%
	3년차	73.2%	24.7%	2.1%	50.1%	48.8%	1.0%
	4년차	72.1%	25.9%	1.9%	53.8%	45.2%	0.9%
	5년차	74.6%	23.5%	1.8%	62.0%	36.4%	1.6%
	6년차	75.8%	22.5%	1.7%	64.2%	34.3%	1.6%
전체		73.8%	24.5%	1.8%	54.0%	44.5%	1.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농촌생활 만족도, 향후 거취

○ 귀농·귀촌인들의 농촌생활 만족도를 보면, 농촌생활과 관련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이 귀농은 63.7%, 귀촌은 68.5%였음(불만족은 귀농 5.0%, 귀촌 1.9%). 도시생활 대비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경우(귀농 46.4%, 귀촌 50.4%)도 낮아졌다는 경우(귀농 8.9%, 귀촌 4.7%)보다 훨씬 많았음. 생활 영역별로 보면 자연환경, 주거환경, 건강증진, 직업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만족비율이 높았지만, 소득과 지역인프라(문화, 의료, 편의) 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지역 인프라의 경우 불만족 비율이 더 높았음(귀농 만족 18.9%〈불만족 35.8%, 귀촌 만족 18.4%〈불만족 33.5%). 농촌생활 전반 및 생활영역별 만족 비율을 보면 귀촌이 귀농보다 대체로 높았지만, 농촌 계속거주 의향은 귀농(97.0%)이 귀촌(89.6%)보다 높았음.

〈그림 3-25〉 귀농·귀촌인의 농촌 생활만족 및 계속 거주 의향



* 직업만족은 2021년에만 조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농·귀촌인들의 농촌생활 만족과 관련 있는 변인을 보면, 연령, 귀농·귀촌 연차, 가구 소득, 지역주민 관계 등이 유의도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 귀농·귀촌 모두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촌 정착 연수가 귀농의 경우는 늘어날수록, 귀촌의 경우 짧을수록, 귀농·귀촌 모두 가구소득이 많고, 지역주민 관계가 좋을수록 농촌생활 만족도가 높아졌음.

〈표 3-18〉 귀농·귀촌인의 농촌 생활만족도 관련 변인

변인	귀농				귀촌			
	B	β	t	p	B	β	t	p
(상수)	3.846		91.185	0.000	3.743		102.613	0.000
연령대	0.025	0.037	3.603	0.000	0.041	0.099	9.590	0.000
귀농·귀촌 연차	0.008	0.017	1.674	0.094	-0.002	-0.005	-0.489	0.625
성별	-0.002	-0.001	-0.130	0.897	0.025	0.021	2.113	0.035
가구 소득	0.000	0.081	7.908	0.000	0.000	0.126	12.435	0.000
지역주민관계	0.188	0.201	19.965	0.000	0.131	0.150	14.642	0.000
수정된 R ²	0.049				0.053			
F(df)	97.349(5,9399)				105.581(5,9374)			
p	0.000				0.000			

성별: 남=1, 여=2.

가구원구성: 단독=1, 2인 이상=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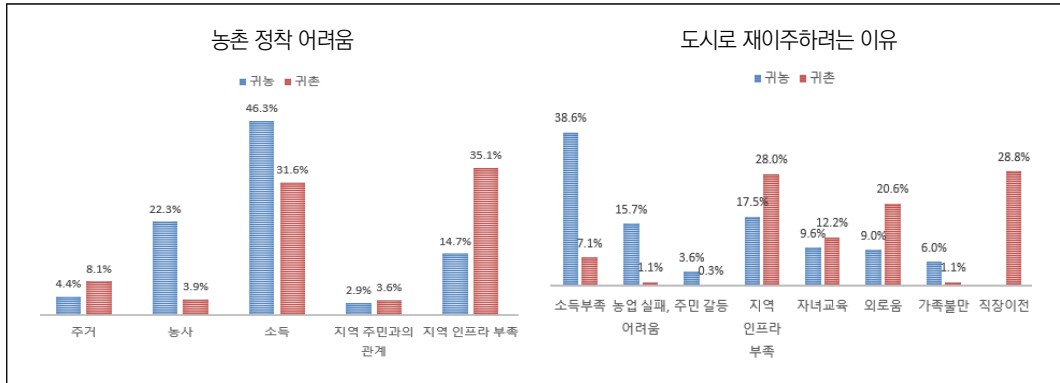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2.3. 정착 애로사항 및 정책 요구

□ 정착 애로

○ 귀농·귀촌인의 정착 장애요인으로 귀농의 경우 소득 문제, 귀촌의 경우 지역 생활 인프라 부족이 가장 컸음. 큰 정착 장애요인이었음. 농촌 정착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귀농의 경우 소득(46.3%), 농업(22.3%), 지역 인프라 부족(14.7%) 순이었고, 귀촌의 경우 지역 인프라 부족(35.9%), 소득(30.7%) 순으로 많았음. 도시 재이주 의향자들의 이주 이유를 보면 비슷한 경향성이 발견되는데, 귀농은 소득(38.6%), 지역인프라(17.5%), 농업 실패 및 농업 노동 어려움(15.7%) 순이었고, 귀촌은 직장 이전(28.8%), 지역 인프라 부족(28.0%), 외로움(20.6%) 등이 있었음.

〈그림 3-26〉 농촌정착 어려움 및 도시 재이주하려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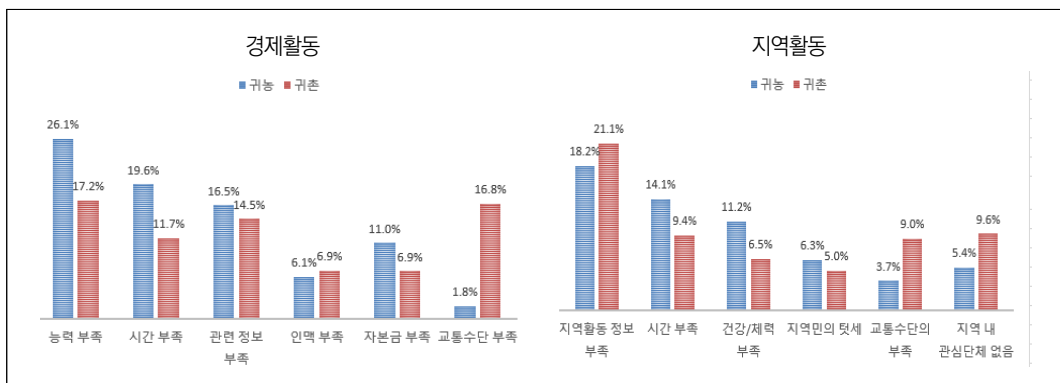


귀촌인의 도시로 재이주 이유는 2021년 조사만 분석(직장이전 항목 추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경제활동 관련 어려움(귀농의 경우 농외활동 어려움)에 대해 귀농인은 능력 부족(26.1%), 시간 부족(19.6%), 일자리 등 관련 정보 부족(16.5%), 자본금 부족(11.0%)을 지적하였고, 귀촌인은 능력 부족(17.2%), 교통수단 부족(16.8%), 관련 정보 부족(14.5%), 시간 부족(11.7%), 관련 등을 지적하였음. 한편 지역활동 관련 어려움으로 귀농·귀촌인 모두 지역 참여 활동 정보의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귀농 18.2%, 귀촌 21.2%)하였고, 그 다음 귀농의 경우 시간 부족, 건강·체력 부족, 지역민의 텃세 등의 순으로, 귀촌의 경우 시간 부족, 교통수단 부족, 건강·체력 부족, 지역민의 텃세 등을 지적하였음. 경제활동·지역활동 모두 귀농인에 비해 귀촌인들은 교통수단 부족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었음.

〈그림 3-27〉 경제 및 지역사회 활동 어려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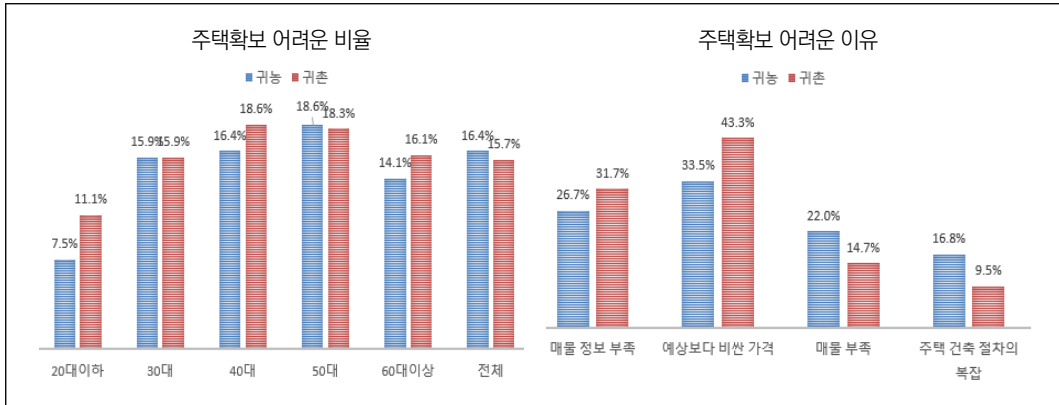


어려움 없음, 기타 응답 삭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농·귀촌 초기 주택확보 관련 어려움을 겪었던 비율은 귀농의 경우 16.4%, 귀촌은 15.7% 였는데, 귀농·귀촌인 모두 예상보다 비싼 가격(귀농 33.5%, 귀촌 43.3%), 매물정보 부족(귀농 26.7%, 귀촌 31.7%), 매물 부족, 주택 건축 절차의 복잡함 등의 순으로 많이 지적했음.

〈그림 3-28〉 주택확보 어려움을 겪은 비율 및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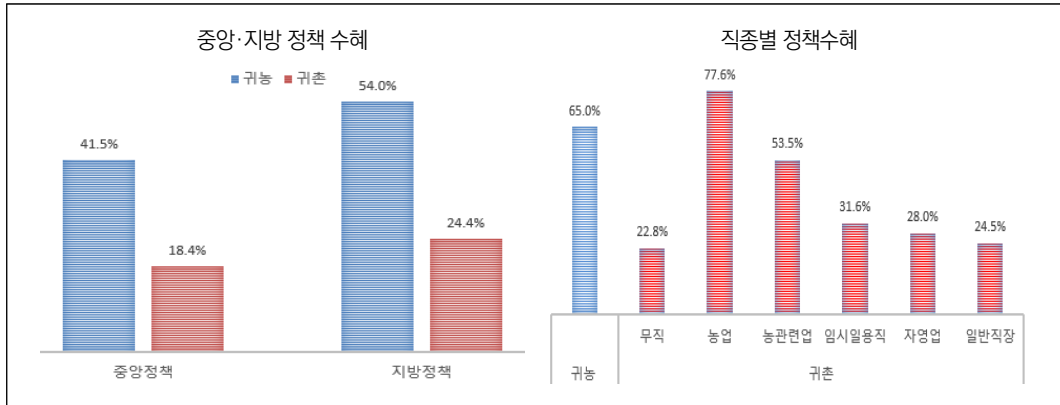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정책 문제점 및 요구

- 귀농인에 비해 귀촌인들의 정부 정책(귀농귀촌종합센터, 지원센터 이용, 정착자금 지원, 시설·기계 임대, 주거 지원, 세제 혜택 등) 수혜율이 대체로 낮았음. 귀농인의 정책 수혜율은 65.0%로 귀촌인(30.2%)보다 두 배 이상 높았음. 정책 주체별로 보면, 귀농인의 정책 혜택 비율은 중앙 정부 41.5%, 지방 정부 54.0%인데 비해 귀촌인은 중앙 정부 18.4%, 지방정부 24.4%였음. 귀촌인의 직종별로는 더 편차가 컸는데, 농업 종사자는 77.6%, 농관련 산업 종사자는 53.5%인데 비해 비농업분야 종사자는 매우 낮은 편이었음(임시 일용직 31.6%, 자영업 28.0%, 일반 직장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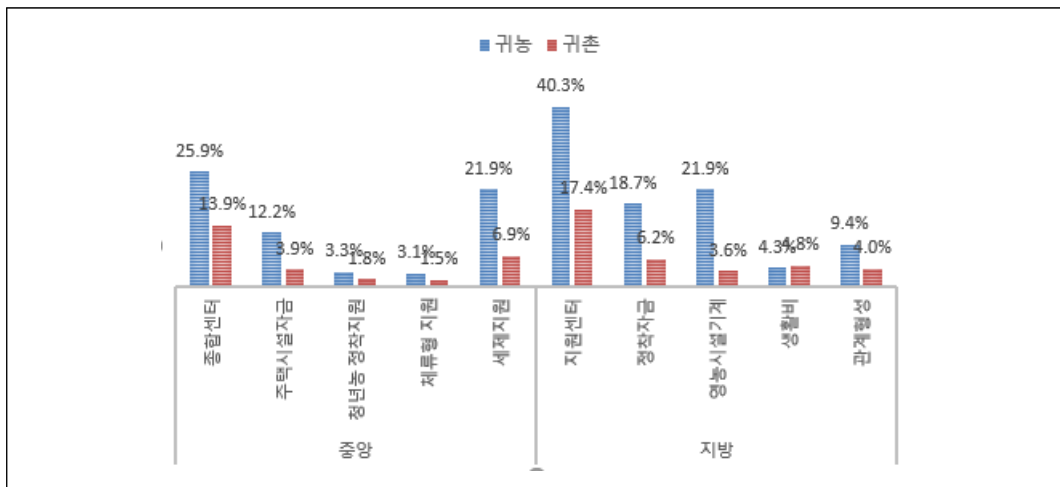
〈그림 3-29〉 귀농·귀촌인 정책 수혜 실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세부 정책 주체 및 정책 내용별 수혜 현황을 보면, 중앙 정책으로 귀농·귀촌 종합센터의 서비스(상담, 교육, 정보제공) 수혜 비율이 귀농 25.9%, 귀촌 13.9%로 가장 많고, 세제 혜택(농지 취득료, 재산세, 의료보험, 연금 등) 수혜가 귀농 21.9%, 귀촌 6.9%, 주택시 설자금은 귀농 12.2%, 귀촌 3.9%였고, 나머지 정책은 수혜율이 5% 미만이었음. 지방 정책으로 귀농·귀촌 지원센터 서비스 수혜 비율이 귀농 40.3%, 귀촌 17.4%, 정착자금 지원이 귀농 18.7%, 귀촌 6.2%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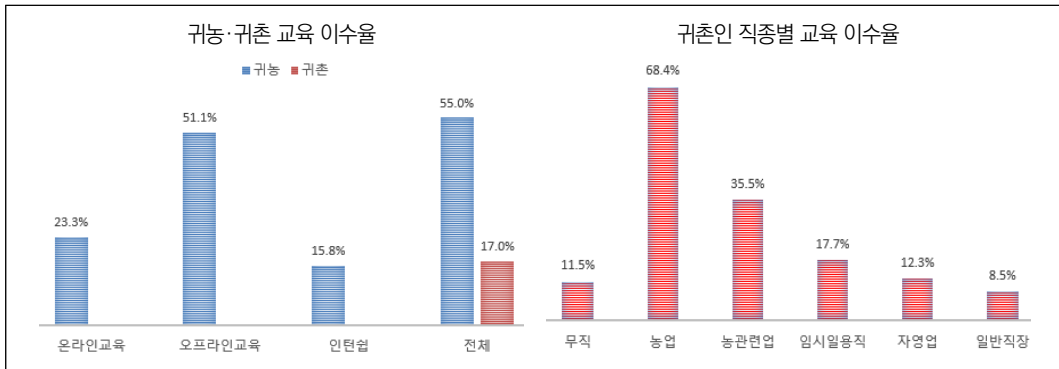
〈그림 3-30〉 귀농·귀촌인의 정책수혜 실태(세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농·귀촌인 중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귀농의 경우 55.0%, 귀촌의 경우 17.0%였음. 교육 종류(귀농인만 조사 됨)별로 보면 오프라인 교육이 51.1%, 온라인 23.3%, 인터넷 15.8%였음. 귀촌인의 경우 직종별 교육 이수율 차이가 컸는데, 농업 종사자는 68.4%, 농관련업은 35.5%가 교육을 이수한 반면, 나머지 직종은 이수비율이 20% 미만(임시일용 17.7%, 자영업 12.3%, 일반직장 8.5%)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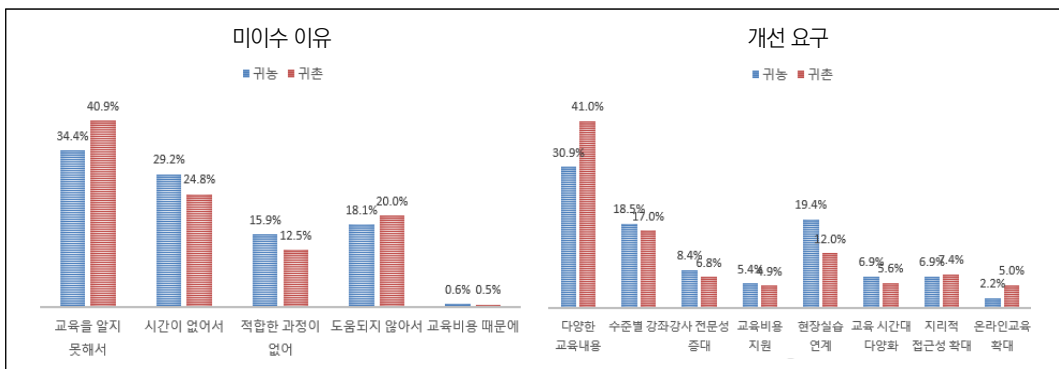
〈그림 3-31〉 귀농·귀촌인 교육이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귀농·귀촌 모두 교육을 알지 못해서(귀농 34.4%, 귀촌 40.9%), 시간 부족,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적합한 과정이 없어서 등의 순이었음. 귀농·귀촌 개선 요구로 귀농·귀촌 모두 다양한 교육 콘텐츠, 수준별 강좌, 현장 실습 연계 등을 많이 지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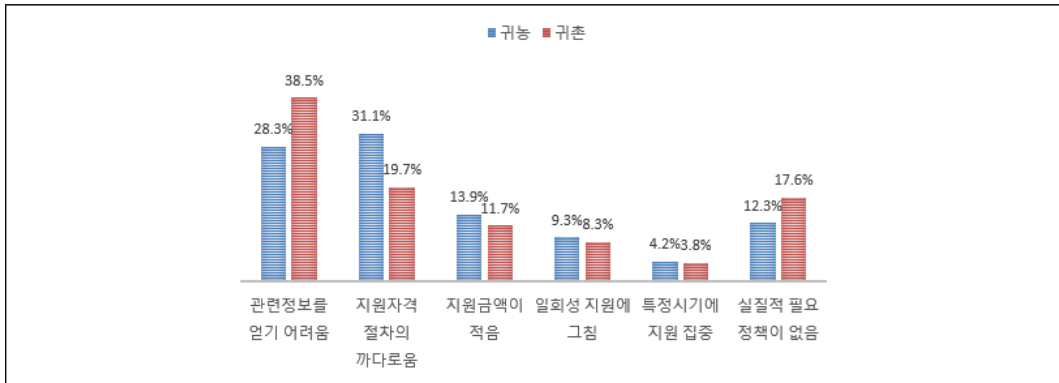
〈그림 3-32〉 귀농·귀촌 교육 미이수 이유 및 개선 요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농·귀촌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귀농인은 정책 지원 자격 및 절차의 어려움(31.1%), 정보 접근성 부족(28.3%), 지원 금액이 적음(13.9%) 등을 지적하였고, 귀촌인은 정보 접근성 부족(38.5%), 정책 지원 자격 및 절차의 어려움(19.7%),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없음(17.6%) 등을 주요하게 지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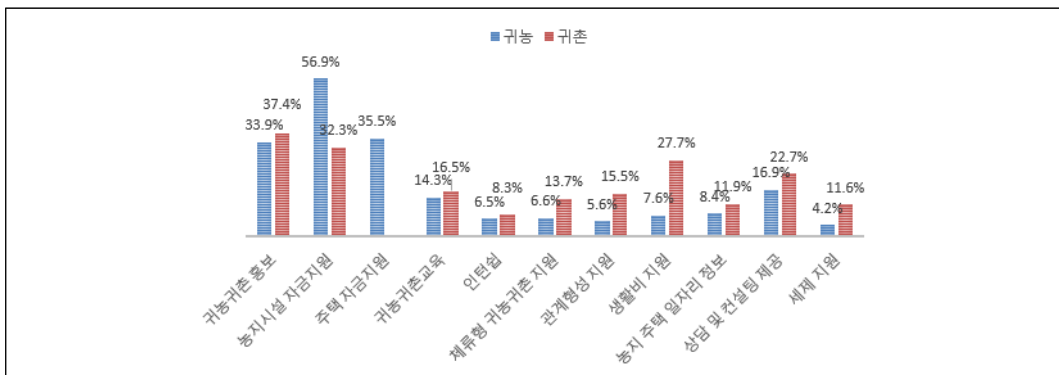
〈그림 3-33〉 귀농·귀촌 정책의 문제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농·귀촌 관련 필요 정책으로 귀농인들은 농지 및 시설 자금 지원(56.9%), 주택 자금 지원(35.5%), 귀농·귀촌 홍보(33.9%), 상담 및 컨설팅 제공(16.95), 귀농·귀촌 교육(14.3%) 등의 순으로 많이 지적했음. 귀촌인들은 귀농·귀촌 홍보(37.4%), 농지 및 시설 자금 지원(32.3%), 생활비 지원(27.75), 상담 및 컨설팅 제공(22.7%) 등을 많이 지적했음.

〈그림 3-34〉 귀농·귀촌 필요 정책(1+2순위)



* 귀촌의 경우 '주택지원'은 조사항목에 없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농·귀촌 의향자에게 주거, 귀농·귀촌지 및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정착자들에게는 귀농·귀촌 지원 정책 접근성, 생활편이시설, 소득 지원 등의 정책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글상자 12〉 귀농·귀촌 의향자의 정책요구

• 농촌에서 살아보고 싶은 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의 관련 정책 수요(송미령 외 2019)를 보면, 주거 지원 요구가 가장 많고 (39.6%), 농촌에 대한 종합 정보(부동산, 교육, 일자리, 마을 등) 제공,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33.3%), 농촌 살아보기 및 체험 지원(23.7%), 일자리 지원(20.8%)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연령대	정책 지원 요구(단위: %)										전체
	농촌 정보 제공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농촌 살아보기 체험	주거 지원	주택 개보수 지원	저리 용자	일자리 지원	농지 임대 매매 정보	자기 계발 교육 지원	기타	
20대	32.4	23.8	28.6	41.0	12.4	8.6	27.6	10.5	7.6	1.0	100.0
30대	37.0	37.0	23.0	35.2	15.2	7.3	21.8	5.5	10.3	1.8	100.0
40대	34.9	34.1	23.3	33.7	18.1	12.4	22.1	8.4	11.2	0.4	100.0
50대	35.3	36.5	22.5	42.2	14.9	8.5	18.8	6.1	13.1	0.3	100.0
60대 이상	35.3	29.4	24.0	44.8	18.1	6.8	18.1	10.0	12.2	0.0	100.0
전체	35.2	33.3	23.7	39.6	16.1	8.9	20.8	7.8	11.5	0.6	100.0

자료: 송미령 외(2019).

3. 귀농·귀촌지 특성

3.1. 귀농·귀촌 대상지로의 농촌

- 관련법에서의 농촌 정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농산어촌지역이란 ‘시와 군’ 지역 중 ① 읍·면 전지역, ② 동 지역 중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도시지역(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촌’이외에 다시 “준농촌”을 구분하고 있는데, “준농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함(「농촌정비법」 제2조 제2호).

-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 설치기준 등):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다만,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을 읍으로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7조)

- 시 조건: ① 시가지구성 거주인구비율 60% 이상, ② 상업, 공업 및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비율이 60% 이상, ③ 행정안전부령(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이하인 시의 평균 이상, 인구 밀도가 인구 10만 이하인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평균 인구밀도보다 높을 것, 인구증가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의 거주인구와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
- 읍 조건 ①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 ②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

〈글상자 13〉 산촌 기준

• 산림기본법 제3조: 산촌이란 '산림면적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 "산촌"(14년 말 기준: '18~'27)
 (1995년 산림기본법 제정 시 일본 산촌진흥법을 참조하여 만들)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일 것(국토의 70%가 산림)
2.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106명/km²)일 것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19.7%)일 것

⇒ 11개 시·도, 109개 시·군 내 466개 읍·면

- 국가균형발전법(균발법):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한 법(2004년 제정)으로 지역을 성장축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구분. 일반농산어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촌 정의와 동일. 성장축진지역은 농촌 지역 중에서도 생활환경이 열

약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임.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2015년 제정) 농촌과 관련하여 낙후지역을 정의함. 균발법의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낙후지역으로 구분함.

〈표 3-19〉 국가균형발전법의 지역구분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지역행복생활권지역
대상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농산어촌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 및 183개 도서 * 균형위 심의를 거쳐 행안부장관 및 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개 접경지역 시·군 및 371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 지역이 아닌 188개 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농복합형태시의 읍·면 및 군 지역 (123개 시·군) * 세종시, 제주도 행정시의 읍·면 포함 (광역시의 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일반시,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143개 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지역개조사업: 전국 시군구
* 특수상황지역 해당지역 제외					
※ 전체 229개 시·군·구는 우선 일반농산어촌,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 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은 추가적으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주관 부처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국토부	농식품부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개발 관련 기본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서개발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경지역지원법, 도서개발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인 삶의 질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산림개발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소도읍 육성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사업 법률준용

자료: 기획재정부(2020).

〈표 3-20〉 성장촉진지역 지정 기준

구분	지표	자료 및 산식
인구	인구밀도	시·군 주민등록인구/시군면적
	연평균 인구변화율	시·군 10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	지방소득세	최근 3개년 시·군 지방소득세 총액 평균
	GRDP	최근 3개년 시·군 GRDP 평균
재정	재정력지수	최근 3개년 시·군 재정력지수 평균
접근성	생활SOC	생활SOC 11개 시설에 대한 시·군 내 평균접근성 추정결과를 표준화
	지역접근성	기준 광역대도시와 해당 시·군 간의 인구를 곱한 값을 두 지점 간의 이격거리와 교통 소요시간을 곱한 값으로 나눔

주: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는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 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에서 제공.

자료: 국토교통부(2019).

○ 외국의 농촌 기준

- OECD: 완전한 도시(PU(Predominantly Urban): 도시 거주인구 비중 85% 초과), 중간지역(IR(Intermediate Region): 도시 거주인구 비중 50% 이상~85% 이하), 완전한 농촌(PR(Predominantly Rural: 도시 거주인구 50% 미만) → 최근 인구 외에 인구 밀집지까지의 운전 소요시간(1시간)을 포함.
- 미국: 인구(5만 명 미만), 도시화, 통근 정보를 기준으로 구분(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화된 지역한 곳 이상과, 통근 측면에서 중심지와 사회적 경제적 통합이 견고한 인근 지역을 포함; Micropolitan statistical area: 인구 1만 이상 5만 미만의 도시 클러스터 한 곳 이상과 통근 측면에서 중심지와 사회적 경제적 통합이 견고한 인근 지역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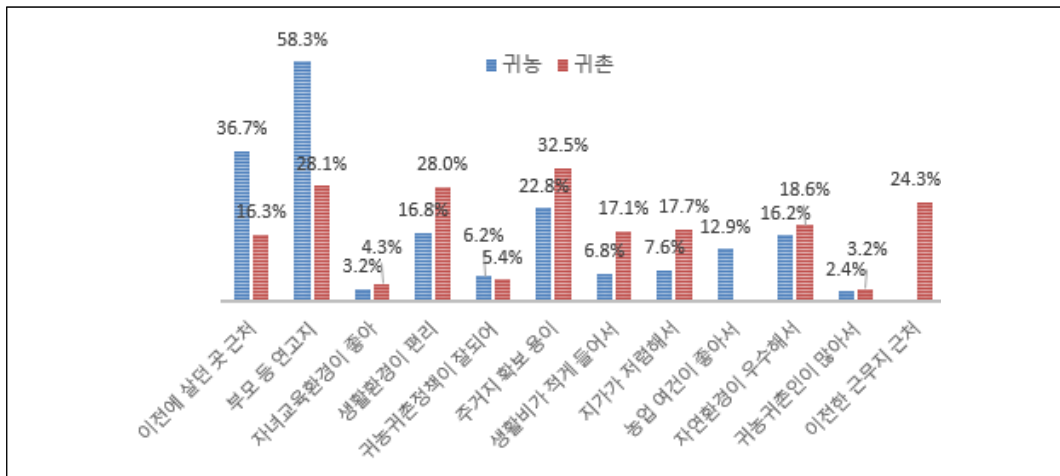
〈글상자 14〉 일본의 농촌

- 농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음.
- 시(市): 인구 5만 명 이상, 중심지가지의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상공업(2, 3차산업) 등에 종사하는 세대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
- 정(町): 도부현마다 차이가 있음(3천 명 이상(도야마현, 오카야마현, 효고현)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만 5천 명 이상(도치기현)).
- 촌(村): 촌을 규정하는 법적 요건은 없음.

3.2. 귀농·귀촌인의 귀촌지 결정

○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의 귀농·귀촌지 결정요인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귀농의 경우 부모 등의 연고지(58.3%), 이전에 살던 곳 근처(36.7%) 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거지 확보 용이(27.7%) 등이 많았는데, 귀촌의 경우 주거지 확보 용이(32.5%)가 가장 많고, 부모 등의 연고지(29.1%), 생활환경 편리(28.0%), 이전 근무지 근처(24.3%) 등이 많았음.

〈그림 3-35〉 귀농·귀촌지 결정요인(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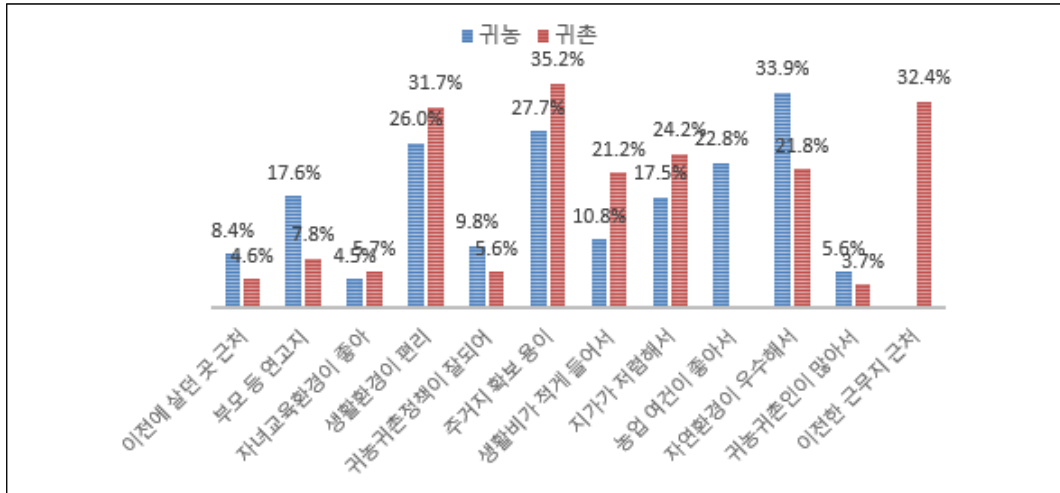
* 귀농의 경우 이전한 근무지 근처, 귀촌의 경우 농업 여건이 좋아서가 조사항목에 없음.

** 귀촌의 경우 조사항목에 이전한 근무지 근처가 추가되어 조사된 2021년 조사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농·귀촌지 결정에 있어 연고지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주기에 비연고지 귀농·귀촌인들의 귀농·귀촌지 결정요인을 별도로 분리해서 보았는데, 연고지가 아닌 곳에 귀농·귀촌한 경우 귀농은 자연환경 우수(33.9%), 주거지 확보 용이(27.7%), 생활환경 편이(26.0%)가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고, 귀촌은 주거지 확보 용이(35.2%), 이전한 근무처 근처(32.4%), 생활환경 편이(31.7%) 등의 응답이 많았음. 즉, 귀농·귀촌 모두 주거지 확보와 생활환경 편이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더불어 귀농의 경우는 자연환경, 귀촌의 경우 직장 요인이 귀농·귀촌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었음.

〈그림 3-36〉 비연고지 귀농·귀촌 결정요인(1+2순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3.3. 귀농·귀촌지 유형별 분석

□ 인구규모별 귀농·귀촌지

○ 읍·면 지역 모두를 농촌으로 했을 경우 도시화된 다수 지역이 귀농·귀촌 대상지로서의 농촌으로 간주됨.

- 읍·면지역에서도 인구규모가 일정 이상인 지역을 분리하여 접근 필요
- 다양한 기준이 고려될 수 있지만, 읍·면 지역 관련 통계의 가용성을 고려 지방자치법의 읍 기준 2만 명을 경계로 구분하여 분석

○ 2020년 기준 인구 2만 명 미만 읍면(1,296개)의 귀농·귀촌은 2020년 기준 249천 명으로 전체의 51.0%를 차지함. 전체 읍면 중 109개(7.7%) 인구 2만 명 이상의 읍·면이 전체 귀농·귀촌 인구의 49.0%를 차지함.

〈표 3-21〉 읍·면 인구규모에 따른 귀농·귀촌 현황

	읍면인구규모	2016	2017	2018	2019	2020
읍면수	2만 명 미만	1,302	1,299	1,298	1,295	1,296
	2만 명 이상	111	106	107	110	109
	전체	1,405	1,405	1,405	1,405	1,405
귀농인수	2만 명 미만	11,562	11,324	10,767	10,223	11,227
	2만 명 이상	1,457	1,439	1,288	1,281	1,343
	전체	13,019	12,763	12,055	11,504	12,570
귀촌인수	2만 명 미만	253,020	261,573	249,428	237,752	238,363
	2만 명 이상	222,469	235,614	223,046	206,712	238,759
	전체	475,489	497,187	472,474	444,464	477,122
귀농·귀촌인수	2만 명 미만	264,582	272,897	260,195	247,975	249,590
		54.2%	53.5%	53.7%	54.4%	51.0%
	2만 명 이상	223,926	237,053	224,334	207,993	240,102
		45.8%	46.5%	46.3%	45.6%	49.0%
	전체	488,508	509,950	484,529	455,968	489,692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각 년도), 귀농·귀촌통계.

○ 읍면 인구 규모별 주요 지역 특성

- 2만 명 미만 읍면: 귀농은 많고 귀촌이 적은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어 있고, 전입자들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주거리가 상대적으로 길고, 직업 및 자연경관 요인으로 이동한 유입된 경우가 많은 농업 중심 지역(농가인구 비율이 높음)
- 2만 명 이상 읍면: 귀농이 적고 귀촌이 많은 지역으로, 지역민이 상대적으로 젊고, 전입자들 연령대도 상대적으로 낮고, 이주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이주 목적이 주택인 경우가 많고, 농외 일자리(사업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광역시, 경기도, 제주 지역, 경남 일부 지역)

〈표 3-22〉 읍·면 인구규모에 따른 귀농·귀촌지 특성 비교

		읍면 인구규모		전체	
		2만 명 미만	2만 명 이상		
인구(2020)(명)		4,356.1	37,332.9	6,914.4	
인구밀도(2020)(인구/km ²)		68.0	663.3	106.4	
지역민 평균 연령(2020)(세)		48.0	37.5	43.8	
귀농(2020)(명)		8.7	12.3	8.9	
귀농인구비율(2020)		0.20%	0.03%	0.13%	
귀촌(2020)(명)		183.9	2190.4	339.6	
귀촌인구비율(2020)		4.22%	5.87%	4.91%	
전입 특성 (2020)	전입자 평균나이(세)	40.7	36.9	39.1	
	평균이동거리(km)	71.8	56.1	65.2	
	전입 사유	직업	30.3%	26.4%	28.7%
		가족	25.1%	23.9%	24.6%
		주택	23.6%	34.9%	28.3%
		교육	5.5%	3.9%	4.8%
		주거환경	3.2%	3.1%	3.1%
		자연환경	5.6%	1.9%	4.0%
		기타	6.8%	5.8%	6.4%
사업체밀도(사업체수/km ²)(2019)		6.3	47.1	9.0	
농가인구 비율(%) (2015)		29.3%	6.8%	20.3%	
지역 분포	대구광역시	4	5	9	
	부산광역시	2	3	5	
	울산광역시	7	5	12	
	인천광역시	19	1	20	
	세종시	9	1	10	
	강원도	115	4	119	
	경기도	110	31	141	
	충청남도	148	13	161	
	충청북도	95	7	102	
	전라남도	221	8	229	
	전라북도	156	3	159	
	경상남도	186	10	196	
	경상북도	224	14	238	
	제주도	8	4	12	

* 군사 접경지역의 민간인이 살지 않는 읍면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통계청(각 년도), 인구이동통계, 주민등록인구, 귀농·귀촌통계, 통계지리정보서비스.

〈글상자 15〉 인구 상위 10개 읍면

- 귀농·귀촌 대상 읍면 중 인구 상위 10개 읍면은 대부분 대도시·중소도시 인근의 도시화된 비농업중심의 인구 5만 명 이상 읍지역임.

광역	기초	읍면	인구 (2020)	귀농 (2020)	귀촌 (2020)	농가인구비 (2015)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120,421	6	7,102	1.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118,521	12	6,827	2.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112,080	9	10,822	2.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93,126	10	3,580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89,389	11	4,028	3.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85,844	15	5,272	4.0%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82,029	10	4,131	1.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81,760	9	6,789	4.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75,617	21	5,568	4.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70,703	7	2,683	1.0%

□ 귀농·귀촌 비율별 귀농·귀촌지

○ 인구대비 귀농·귀촌인구 비율에 따른 지역구분

- 읍면별 인구대비 귀촌인구 평균 3.86%, 귀농인구 평균 0.25%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 * 귀촌多, 귀농多 읍면: 귀촌인구 평균 3.86% 이상, 귀농인구 평균 0.25% 이상
 - * 귀촌多, 귀농小 읍면: 귀촌인구 평균 3.86% 이상, 귀농인구 평균 0.25% 미만
 - * 귀촌小, 귀농多 읍면: 귀촌인구 평균 3.86% 미만, 귀농인구 평균 0.25% 이상
 - * 귀농小, 귀촌小 읍면: 귀촌인구 평균 3.86% 미만, 귀농인구 평균 0.25% 미만

○ 지역유형별 주요 특성

- 귀촌, 귀농 모두 많은 지역: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인구밀도가 낮고), 인구가 고령화되어 있고, 전입자들 연령대가 높고, 농가가 많고, 농외 일자리가 적은 지역. 도시 전입자들의 이동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수도권 근처(강원, 인천, 충북북부 지역)
- 귀촌 적고 귀농 많은 지역: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인구밀도가 낮고), 인구가 고령화되어 있고, 전입자들 연령대가 높고, 농가가 많고, 농외 일자리가 적은 지역. 이동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지방 지역(충북남부, 경상, 전라 지역)

- 귀촌 많지만 귀농 적은 지역: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인구 밀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 정도가 낮고, 전입자들 연령대도 낮으며 농외 일자리 상대적으로 많아 직업적 이유로 전입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제주 지역)
- 귀농, 귀촌 모두 적은 지역: 도시로부터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지만,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농외 일자리도 어느 정도 있는 지역

〈표 3-23〉 귀농·귀촌인 비율에 따른 귀농·귀촌지 특성 비교

		귀농, 귀촌 비율				전체	
		귀촌多, 귀농多	귀촌多, 귀농小	귀촌小, 귀농多	귀촌小, 귀농小		
읍면수		126	356	523	400	1,405*	
인구(2020)		3,103.8	14,519.2	2,340.0	7,327.6	6,914.4	
인구밀도(2020)(인구/㎢)		38.0	226.8	36.7	122.6	106.4	
지역민평균나이(2020)		50.5	39.9	53.1	45.4	43.8	
귀촌인구(2020)		152.1	944.9	67.0	216.2	339.6	
귀촌인구비율(2020)		4.90%	6.51%	2.87%	2.95%	4.91%	
귀농인구(2020)		11.3	8.3	9.5	8.0	8.9	
귀농인구비율(2020)		0.37%	0.06%	0.41%	0.11%	0.13%	
전입 특성 (2020)	전입자 평균나이	43.9	37.5	45.2	39.9	39.1	
	이동거리(m)	70,402.2	59,709.6	82,095.2	71,545.8	65,236.4	
	전입 사유	직업	27.6%	28.7%	24.7%	30.3%	28.7%
		가족	24.4%	23.0%	29.6%	26.7%	24.6%
		주택	22.9%	32.3%	17.9%	23.5%	28.3%
		교육	4.9%	4.5%	5.2%	5.6%	4.8%
		주거환경	3.3%	2.9%	3.9%	3.3%	3.1%
		자연환경	9.9%	2.9%	9.0%	4.0%	4.0%
	기타	6.9%	5.8%	9.5%	6.5%	6.4%	
사업체밀도(사업체수/㎢)(2019)		2.98	18.9	2.3	11.9	9.0	
농가인구비율(2015)		38.0%	11.1%	48.1%	21.8%	20.3%	
지역 분포	대구광역시	0	8	0	1	9	
	부산광역시	0	5	0	0	5	
	울산광역시	0	8	0	4	12	
	인천광역시	6	12	1	1	20	
	세종시	0	7	0	3	10	
	강원도	27	42	20	25	114	
	경기도	7	113	2	16	138	
	충청남도	5	38	53	65	161	
	충청북도	14	22	42	24	102	
	전라남도	21	13	118	77	229	
	전라북도	9	17	96	37	159	
	경상남도	7	34	80	75	196	
	경상북도	28	27	111	72	238	
제주도	2	10	0	0	12		

* 군사 접경지역의 민간인이 살지 않는 읍면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통계청(각 년도), 인구이동통계, 주민등록인구, 귀농·귀촌통계, 통계지리정보서비스.

〈글상자 16〉 귀농·귀촌 유형별 상위 10개 읍면

- 귀촌多, 귀농多 읍면(상위 10개): 대도시가 근접해 있거나 공공기관 소재하였으면서도 농업 발달, 교통여건이 좋음 → 경북 안동 풍천면(경북 도청 소재지), 성주 선남면(대구 달성군과 근접), 영천 고경면(육군 3사관학교 위치), 강원 화천 사내면(춘천, 포천시, 가평 인접), 홍천 남면(경기도 양평 인접), 황성 둔내면(영동고속도로 근접), 전북 완주 구이면(전주 근접)

광역시	기초	읍면	인구(2020)	귀농(2020)	귀촌(2020)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9,029	22	459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7,075	25	266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6,838	24	351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6,702	15	908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6,503	19	447
강원도	홍천군	남면	6,184	14	460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6,154	17	220
강원도	황성군	둔내면	5,889	17	271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5,874	10	382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5,804	16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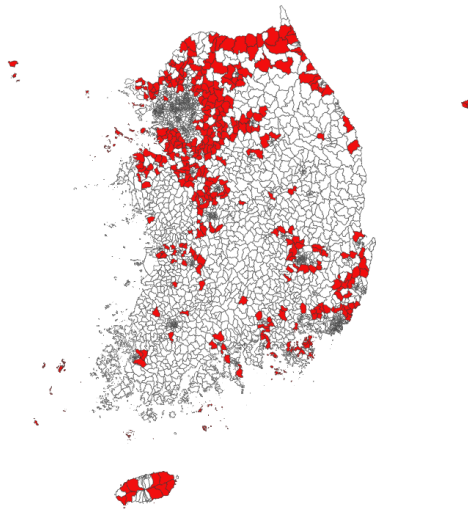
- 귀촌小, 귀농多 읍면(상위 10개): 대도시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통(지역 내 교통 요지)이 좋고, 경관도 좋고, 농업이 발달한 곳

광역시	기초	읍면	인구(2020)	귀농(2020)	귀촌(2020)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6,968	18	230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6,438	16	232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6,279	17	185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5,732	14	18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5,551	16	210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5,356	17	168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5,340	20	184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5,316	20	177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5,024	15	144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5,017	13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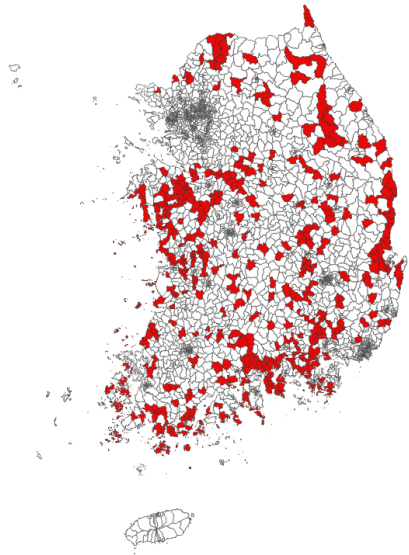
• 귀촌多, 귀농小 읍면(상위 10개): 대도시와 근접한 인구 7만 명 이상의 읍지역

광역	기초	읍면	인구(2020)	귀농(2020)	귀촌(202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120,421	6	710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118,521	12	6827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112,080	9	1082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93,126	10	358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시읍	89,389	11	4028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85,844	15	5272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82,029	10	4131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81,760	9	6789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75,617	21	5568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70,066	14	4452



- 귀농小, 귀촌小 읍면(상위 10개): 대도시 외각 베드타운(직업이유로 원거리 출퇴근) 또는 농촌의 지역 거점 읍

광역시	기초	읍면	인구(2020)	귀농(2020)	귀촌(202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70,703	7	2683
경상남도	창원시	내서읍	64,835	4	1525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49,131	11	177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40,899	18	826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39,066	45	1463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38,232	11	876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36,335	9	1424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34,932	14	1184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34,917	12	1245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33,444	7	879



4. 소결

○ 심각한 고령화 상황인 농촌 지역 인구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멈추었지만, 이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감소를 상충시키는 도시민의 농촌 순유입으로 인한 것임. 농촌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 인구 변화에 차이가 있는데 읍지역은 인구가 유지되고 있지만, 면지역은 감소가 계속되고 있었고, 읍면 지역을 인구 감소, 유지·증가 지역으로 구분한 결과 읍지역의 3/4, 면지역의 9/10 정도가 지난 5년(2016~2020년) 인

구 감소가 있었고, 인구 감소지역 농촌 대부분은 대도시에서 떨어진 읍면지역이었음. 즉 전체적으로 도시민의 농촌 유입으로 인해 농촌 인구의 유지·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다수 농촌은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 감소, 도시로의 순유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

- 최근 들어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코로나 19로 인해 더 높아지고 있었는데, 도시민 중에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농촌에 거주 경험이 있거나, 가족원 중에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음. 이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농촌 관계 인구의 확대가 중요함을 시사함. 한편 귀농·귀촌 의향자들은 주거, 일자리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고, 귀농·귀촌 정착 초기자의 경우 귀농·귀촌 정책 접근성, 생활 편의시설, 소득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귀농·귀촌 저변확대를 위해 귀농·귀촌 관련 체계적 정보의 종합적 제공이 중요함을 시사함.
- 귀농·귀촌인 중에 귀농의 경우 농촌 출신 고향 귀농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귀농 동기가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농업 종사자 농지, 시설 등 초기 투자 비용이 점차 높아지면서 초기 진입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반면 귀촌의 경우 도시출신 비연고지 귀촌자가 증가하고 휴식 관련 동기가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려는 욕구가 높아지는 것이 귀촌으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도시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직종(사무직, 서비스직, 장치·기계직 등)과 산업분야(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에서 귀농·귀촌이 많이 이뤄졌고, 귀농·귀촌인 중에 1인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대의 경우 특히 많았음. 고용 취약 직종과 산업분야 1인가구 특히 20대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귀농인 중에 절반은 농외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었고,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농업 관련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였음. 귀촌인들은 귀촌이후 거의 절반 정도(47.6%)는 일반 직장 취업, 1/5 정도는 자영업(20.5%), 그리고 1/10 정도가 농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10.2%)하고 있었고(무직은 10.2%), 정착기간이 길어지며 농업관련 활동 증가

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음. 귀농·귀촌 가구의 소득은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높아졌지만, 정착 6년차에도 귀농·귀촌 전 소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음. 다만 연령 대별로는 20~30대의 경우 귀농·귀촌 전 소득을 회복하고 있었음. 귀농·귀촌 가구 소득 관련 요인을 보면 귀농의 경우 정착기간이 길수록, 귀농 시 연령대가 낮고, 경지규모가 클수록, 농외활동으로 일반직장, 자영업하거나 농업관련하여 농촌관광을 할 경우 소득이 높았음. 귀촌의 경우 정착기간이 길수록, 연령대가 40~50대 일수록 일반직장, 자영업, 농업, 농관련업 등을 할수록 소득이 높았음. 귀농의 경우 소농, 농외활동이 적은 계층, 귀촌의 경우 20~30대, 임시·일용직, 무직자들에 대한 소득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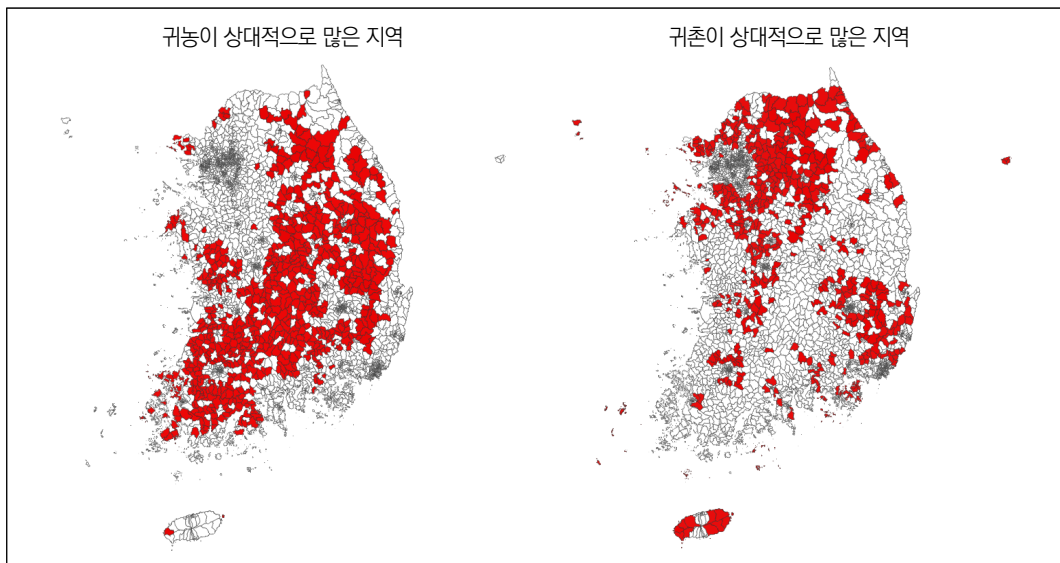
○ 농촌 생활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귀농·귀촌인들은 만족하고 있었는데, 분야별로는 자연환경, 주거, 건강 측면의 만족에 비해 소득, 지역생활 인프라와 관련한 만족은 상대적으로 떨어졌음. 귀농·귀촌 정착 장애요인으로 소득과 지역생활 인프라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음. 귀농·귀촌 모두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귀농의 경우 정착 연수가 늘어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반면, 귀촌의 경우 낮아졌고, 귀농·귀촌 모두 소득과 지역주민 관계가 중요한 관련 요인이었음.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관계 정도는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높아졌는데, 귀농인에 비해 귀촌인의 낮았음. 이는 귀농·귀촌인의 소득, 지역생활 인프라 대책 그리고 특히 귀촌인들의 지역사회 융화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귀농인들에 비해 귀촌인들의 교육이수 및 정부 정책 수혜(귀농귀촌종합센터, 지원센터 이용, 정착자금 지원, 시설·기계 임대, 주거 지원, 세제 혜택 등)를 받지 못하고 있었음. 귀촌인 중에서도 농업 종사자 중심으로 관련 정책에 접근하고 있었음. 귀촌인들은 특히 귀농귀촌관련 기본적인 정책 홍보와 상담·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귀농에 비해 많았음. 귀촌인에 대한 귀농·귀촌 정보, 교육 및 정책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 귀농·귀촌 지역 결정에 있어 도시와의 근접성, 일자리, 주거여건, 경관 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귀농인들은 상대적으로 인근 대도시와의 교통, 농업 여건을 중시하고, 귀촌인들은 자연경관, 주택·토지가격 저렴, 취·창업 여건이 좋은 곳에 정착하고 있었음. 읍

면의 인구규모에 따라 귀농·귀촌이 양상이 달라졌는데, 2만 명 미만 읍면에는 귀농은 많고 귀촌이 적었고, 2만 명 이상 읍면에는 귀농이 적고 귀촌이 많았으며 이 지역은 지역민이 상대적으로 젊고, 전입자들 연령대도 상대적으로 낮았고, 이주 목적이 주택인 경우가 많아 이주 거리가 짧았고, 농외 일자리(사업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인구 2만 명 이상의 읍·면은 전체 읍면에 7.7%였지만 전체 귀농·귀촌 인구의 49.0%를 차지하였음. 귀농·귀촌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커, 특히 인구 규모(2만 명 미만 읍면과 2만 명 이상 읍면)별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인구대비 귀농·귀촌 규모별 지역 특성 분석 결과, 귀촌이 많은 지역은 수도권 지방대도시 인근의 대규모 주거 및 농업 이외 일자리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제주 지역)이었음. 귀농이 많은 지역은 도시와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경관이 좋은 농업 지역(충북남부, 경상, 전라 지역)이었고, 귀촌, 귀농이 모두 어느 정도 활발한 지역은 농업이 발달하고 농외 일자리는 적지만,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강원, 인천, 충북북부 지역)이었음. 도시 인근의 주거단지, 교통이 편리한 농업지역 등에 비해 귀촌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와 떨어진 원격지 농촌으로의 귀촌 유입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하였음.

〈그림 3-37〉 귀농·귀촌지 분포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귀농귀촌통계, 인구가동통계.

4

귀농·귀촌 정책 평가

1. 귀농·귀촌 정책 역사¹⁴⁾

1.1. 고대·근대·일제강점기

○ 우리나라의 귀농·귀촌은 역사적으로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감.

- 삼국시대부터 실업자 또는 도시 인구 분산 정책으로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었음. 삼국 시대의 주요 권농책(勸農策)으로 사용하던 방법은 공사에 게으르고 전야를 황폐케한 지방관을 응징함으로써 농토의 확장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관아의 급하지 않은 토목공사를 농한기로 미루어 농민으로 하여금 농시를 잃지 않도록 하는 방법, 도시에서 방황하는 도시근로자를 귀농시켜 토지에 정착시키고 토지를 개간시키는 방식, 농경기술(農耕技術) 또는 특정한 농작물의 재배를 장려 등이 있었음(국사편찬위원회 1990a) (마상진 외 2018 재인용). 이러한 정책은 이후 고려시대·조선시대에도 이어짐.

○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귀농운동이 일어남.

¹⁴⁾ 마상진·박대식(2019)의 '귀농·귀촌의 역사적 고찰과 시사점' 논문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 귀농운동(歸農運動)이란 도시의 학생이나 지식인이 사회문제에 대한 지성적 각성을 가지고 농촌으로 들어가 농민을 위하여 농민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귀농운동이 조직적으로 추진된 것은 1929년 조선일보사의 문자보급운동과 1931년 동아일보사의 브나로드(vnarod) 운동에서 본격화되었음. 두 언론기관은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귀농운동을 전개하였음. 이 운동을 통해 농민들에 대한 문맹퇴치, 농사개량, 민족의식 고양 등을 도모하였음.

1.2. 해방 이후 1990년대 까지

○ 해방 이후 빈민, 실업자와 귀환동포를 위한 귀농 정책이 있었음.

- 해방직후의 실업자와 귀환동포에 대한 귀농 알선(1947년), 1950년대 난민정착사업, 1960년대 군사정권의 식량증산과 도시실업해결을 위한 귀농정착사업, 1980년대 도시 영세민 농촌이주 사업(1982~1990) 등이 있었음. 이때까지만 해도 귀농이라 함은 난민, 빈민들 대상의 농촌 이주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한 현상이었음(마상진 외 2018).

○ 1960년대부터 민간의 농민운동 차원에서 귀농이 이뤄지고, 이는 정책적으로는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인력정책으로 귀농 정책 추진으로 이어짐.

-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1970년대 중반 확산된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농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전국적인 이른바 ‘학출자¹⁵⁾의 투신’으로 이어짐. 사회 민주화 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의 귀농은 농촌 민주화는 물론이고, 농민운동의 현장화와 전국화를 가능케 만듦으로써 농촌과 농민이 제 목소리내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음. 1980년대 초의 ‘농어민후계자자금제도’가 생겨나면서 더 확산됨(유정규 1998).

¹⁵⁾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가들의 집단적 노동현장 투신을 가리킨다. ‘위장취업자’, ‘학출’, ‘학베리’ 등으로 일컬어진 이들은 모두 1만 명이 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한겨레신문 2015. 5. 21. 역사에 청춘 내던진 ‘학출’의 삶).

- 1990년대에는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인력정책으로 귀농이 이뤄진다 우루과이라운드 (UR) 타결이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42조 원 사업)이 시행되고, '돌아오는 농촌 건설'이라는 농업정책이 1992년부터 추진되면서 전업농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그 일환으로 대학생 선도농가지원(선도개척농사업)이 추진됨. 농과대학이나 농학계 대학원 졸업자로서 농촌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1억 원의 자금을 제공하여 귀농을 돕는 제도였음. 1994년부터 실시된 이 프로그램에 따라 1998년까지 139명을 지원하였음(유정규 1998).

1.3. 1990년대~2000년대 후반

- 1990년대 후반 IMF사태로 인한 외환위기 영향으로 생계형 귀농·귀촌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직업 알선을 위한 전업대책 성격으로 영농정보 제공, 영농 기술교육, 귀농정착지원 등을 주골자로 하는 귀농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되었음(마상진 등 2017).

- 당시 노동부의 '귀농희망자영농훈련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였으며 귀농 희망자에 대해 농촌진흥청, 농협,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에서 교육기관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초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였음. 귀농 후 농촌진흥청, 농림수산물정보센터 등에서 전문경영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귀농정착자금 등을 지원하였음. 귀농정착자금 용자는 호당 2,000만 원이고(연리 5%, 2년 거치 3년 상환), 1998년부터 2000년에 걸쳐 총 4,598호에 800억 원이 지원되었음(마상진 2016). 이후 귀농인 교육은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에서 농업정보활용법, 농가경영설계 및 진단 등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위한 '귀농인 영농교육'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서 2001년 신규후계농업인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이원화하면서 농업을 희망하는 농촌 외부인력 유입을 도모하였음(마상진 등 2011).

- 2000년대 중반부터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새로운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재고시키고자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이 추진됨.

- 2005년 12월 21일에는 농림부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제70회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방안”이 논의되고 여기에서 도시민의 단계별(준비, 실행, 정착) 이주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과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지원을 아우르는 정책이 제시됨.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농림부는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2006년 10월 서울 코엑스에서 “전원마을 페스티벌”을, 2007년 10월에는 농어촌연구원에서 “전원생활 엑스포”를 개최된다. 2007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지자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프로그램”이 추진됨.

1.4. 2000년대 후반 이후

○ 2000년대 후반부터 귀농·귀촌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차원의 체계적 정책 사업 추진이 이뤄짐.

-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악화되는 고용 상황의 탈출구를 제시하는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 등의 농촌 정착 의향 증가라는 사회 트렌드에 부응하고자 조기 퇴직, 은퇴 등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에게 일자리 제공, 타 산업 경험 인력 유입이 농식품 산업 부문 경쟁력 강화 기여, 농촌 지역 주민 확보 및 문화, 관광, 서비스 분야 활력 증진 등을 목표로 2009년 최초의 종합적인 귀농·귀촌 정책 방안으로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추진됨.
- 귀농·귀촌 희망자의 농촌 이주 과정을 ‘정보 탐색’, ‘결심’, ‘실행·정착’의 3단계로 파악하여 각 단계별 지원 정책을 수립하였음. 1단계는 정보탐색 단계(기초 정보 종합 제공), 2단계는 결심 단계(맞춤형 상세정보 제공), 3단계는 실행·정착 단계(창업·정착 지원)로서 각 단계에 맞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추진과제로는 ① 귀농·귀촌 추진체계 구축, ② 온·오프라인 귀농교육, ③ 농산업인턴 지원 확대, ④ 주택문제 해결 지원, ⑤ 창업자금 및 컨설팅 지원, ⑥ 신용보증 지원, ⑦ 농촌정착 지원, ⑧ 농식품업과 농촌생활 가치 발견 홍보 등 8개 분야 정책 대안으로 구성됨.

〈표 4-1〉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의 추진과제

과제	세부과제
1. 귀농·귀촌 추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종합센터 설치 • 귀농·귀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
2. 온·오프라인 귀농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및 품목재배 이론 관련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 대학이 운영하는 실습전문 합숙교육 과정 확대
3. 농산업인턴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업 인턴제 확대
4. 주택문제 해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 주택구입자금 융자, 수리비 보조
5. 창업자금 및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및 축사 구입자금 지원 시 전문가 컨설팅 • 농지은행 위탁 농지 우선 임대 대상에 귀농인 포함
6. 신용보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 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 90%까지 보증
7. 농촌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유대 강화를 위한 멘토링 지원 • 30대~40대 젊은 인력에 농어촌뉴타운 입주 자격 부여 • 농식품 가공 분야 1인 창업 활성화 지원 • 지역사회 융화 촉진 문화·서비스 활동 강화
8. 농식품업과 농촌생활 가치 발견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문화 프로그램' 확대 • 지역별 취업 홍보프로그램 제작·지원

자료: 김정섭 외(2016).

- 이 정책을 통해 귀농자 영농정착자금 지원(1,500억 원, 연리 3%), '귀농·귀촌 종합센터' 설치, 온·오프라인 귀농교육, 농가 방문을 통한 실습체험 참가비 지원(1인당 참가비 15만 원 기준 80% 지원), 대학에서의 실습전문 합숙교육과정(2개월), '농업인턴제'(선도농가 농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현장실습 1인당 월 120만 원(국비 50%, 지방비 30%, 농가 20%, 6개월 이내)지원) 등이 실시됨.

○ 2011년에 처음으로 귀농 가구가 1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갑자기 확산됨에 따른 정책 대응 요구도 커지면서 정부는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2012년에 새로 발표함.

- 2012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은 정책 목표를 '귀농 가구 2만 호 달성'으로 삼으면서,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는 것 자체를 중요한 목표로 삼았음.

〈표 4-2〉 2012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의 추진과제

과제	세부과제
1. 정보전달 시스템 개선 (One-Stop 서비스)	• On-Off 라인의 상호기능을 보완하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확대·재편
2.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확대	• 단계별(관심, 이주 등), 직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및 온라인 강의 추진 • 성공한 귀농·귀촌인을 현장 멘토로 활용하는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운영 • 기업의 회사원 퇴직대책 일환으로 교육 지원 • 수도권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 교육 협력 • 4대강과 연계한 귀농교육 실시
3.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확대	• 선도농가 실습 지원 사업 도입 • 영농·영어 창업 및 주택마련 정책자금 융자 지원 • 농어촌주택 및 농지 구입에 따른 세제 감면
4. 지자체 도시민유치 활성화	•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 확대 • 수도권 중심지에 '귀농·귀촌 종합상담센터' 설치
5. 사회적 붐 조성 및 홍보 강화	• 귀농·귀촌 페스티벌 개최
6. 법적 지원 근거 등 제도 마련	• 관련 법령 제개정 검토 • 지자체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행정조직 정비 • 귀농·귀촌 관련 통계 정비 및 보완

자료: 김정섭 외(2016).

- 2012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귀농어업인의 육성 규정이 삽입(제29조의 2)되고, 귀농·귀촌 양적 확대를 정책 목표(귀농 2만 호 달성)로 설정하며, 6개 분야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농림축산식품부 2016a)〈표 4-2〉.

○ 이후 귀농·귀촌 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종합적으로 갖춰지고, 법정 계획으로서 귀농·귀촌 종합 지원정책이 추진됨.

-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되고, 이에 근거하여 2016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함.

2. 귀농·귀촌 정책 현황

2.1. 법적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조항신설이유(2012. 10. 22.)

-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고 있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귀농어업인**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이유(2015. 7. 21.)

- 최근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울러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귀농, 귀어 및 귀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귀농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귀농, 귀어 및 귀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귀농, 귀어 및 귀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목적(제1조)

- 이 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3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5조).
-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에 따라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을 각각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어업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 축사, 양

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 주요 경과

- 2017. 3. 21: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문화
- 2019. 7. 1: 귀농·귀촌 지원 정책 부정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환수와 제재규정이 미비 및 사후관리를 강화, 행정구역상 동일한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직업·분야 등에서 종사하다 귀농귀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귀농어에 필요한 정착지원, 영농·영어 등의 지원 근거 마련(제7조 1항)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 시행령 제5조의2(귀농어업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 귀농·귀촌 정책의 목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유지

-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해결
- 도시민의 농촌 정착 유도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2.2.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

○ 2015년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6년 수립된 이 계획은 2017년부터 5년 동안 시행되었음.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이라고 비전(vision)을 제시했다. 핵심 성과 목표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였음.

- 청년(2030세대) 귀농 창업 1만 가구 육성
- 귀농 5년차 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90%까지 향상
-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 상생 협력으로 농촌 활력 증대

○ 이상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 5대 추진전략 및 17개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음.

- 5대 추진 전략: ‘수요자 중심 교육체계 개편,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소득·일자리·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층 농촌 유입 촉진’
- 17개 추진과제: ① (청년층 농업창업 지원) ‘청년 창농 교육농장’ 운영, 6차산업 창업 연계 등을 통해 청년층의 귀농 성공모델 창출 지원, ②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귀농귀촌 교육체계 개편, 품목별·과정별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교육 강화, ③ (안정적 정착지원 강화) ‘일자리 연계 플랫폼’ 구축,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④ (귀농귀촌 저변 확대)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⑤ (융화지원,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융화 프로그램 지원, 귀농귀촌 민관 거버넌스 구축 운영

○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전에도 몇 차례 “귀농·귀촌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프로그램이 발표된 바 있었음. 그것들과 비교할 때 ‘1차 계획’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된 부분이 두 가지 있음.

- 첫째는 ‘청년 귀농’에 대한 관심이었음. 계획을 수립할 당시, 100만을 넘는 전국 농가 중에 경영주 연령이 40세 미만이 이른바 ‘청년 농가’의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음. 종래에는, 농촌에서 나고 자라면서 농사일을 부모와

이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운 청년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로와 청년이 농업 부문에 진입하는 경로는 ‘농과계 학교’를 졸업하고 신규 취농하는 경로, 이 두 가지가 청년의 유력한 신규취농 경로라고 인식되었음. 그러나 이 경로들을 통해 농업에 진입하는 청년의 숫자는 극히 적은 것이어서, 한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는 절박한 인식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확산되고 있었음. 한국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이웃 일본에서도 청년의 신규취농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세워 시행하고 있었음. 가령, ‘청년 신규취농 급부금 제도’ 같은 것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했음.

- 둘째는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었음. 귀농·귀촌 정책이 기본적으로 도시로부터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농촌에서의 생활에는 일자리와 주거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필수임. 그런데 농지 가격 상승, 농업 소득률 정체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귀농인이 전업농가로서 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농외소득을 얻을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음. 게다가 귀촌 가구들도 농촌에 와서 경제활동에 추가적으로 참여하려는 수요가 확인되고 있었음. 한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 경제의 내수 위축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적 개입 없이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다고 보았음.

〈표 4-3〉 농림축산식품부 및 유관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

	준비단계	실행단계
종합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한 One-Stop 정보 서비스 • 귀농·귀촌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교육·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아카데미(기본 소양교육) •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심화교육) • 유관기관 협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귀농 장기교육 • 경영실습 임대농장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일자리 탐색·체험교육 •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채용지원 • 농촌 유희시설 활용 창업 지원
주거·정착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에서 살아보기 • 귀농인의 집 조성 •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 귀농닥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 농촌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2.3. 주요 귀농·귀촌 사업

2.3.1. 준비단계

□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한 One-Stop 정보 서비스

- 중앙 및 지자체 지원정책, 교육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 제공
- 농지·주택(농어촌공사), 임업(임업진흥원),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지원(농협) 협동상담
- 수요자 맞춤형 지역정보 서비스 제공
- 각 지역 전문가와 상담기회 및 정보 제공

□ 귀농·귀촌박람회

- 농업·농촌·식품산업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 및 창업 정보를 청년 구직자들에게 제공하고자 제공
-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비대면) 및 온라인 콘텐츠 구성(주최/주관: 농식품부, 농협·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축산물품질평가)
- 참여기업/기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140여 개
* 유관단체, 협회, 농업법인, 농어촌공사, 마사회, 농협중앙회, aT 등

□ 귀농·귀촌 아카데미(기본 소양교육)

- 교육목적: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및 은퇴예정자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 교육대상: 귀농귀촌 희망 또는 예정자
- 교육내용: 이론 및 사례 중심의 귀농귀촌 기초소양교육

□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심화교육)

- 교육목적: 귀농귀촌 관심·준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운영을 통해 농업 창업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 교육대상 및 내용
 - [귀촌(탐색/준비)] 연령 구분 없음: 농촌생활 적정기술, 농촌일자리 탐색, 지역문화와 여가생활,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소규모 친환경 영농 등
 - [청년창업농(탐색/준비)] 만 40세 미만: 농산업 최신트렌드, 청년창업농을 위한 기업가 정신, 농산업 재무회계, 혁신적 창농 아이템 등
 - [전직창업농(탐색/준비)] 4050세대: 농업인으로서 삶과 변화 관리, 비즈니스 마인드, 농산물 유통전략, 농촌에서의 가족생활 등
 - [은퇴창업농(탐색/준비)] 60대 이상: 은퇴와 농업인으로서의 변화, 농촌에서의 보건 의료, 은퇴창업농의 자산관리와 재테크 등
 - [장애인창업농(탐색)] 장애인(가족 포함): 귀농과 치유농업, 장애인 귀농 정착 및 역귀농 사례, 가족과 함께하는 귀농귀촌 의사결정 등
- 교육혜택 : 교육비 70% 국고 지원(교육생 자부담 30%)

□ 유관기관 협업교육

- 사업목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관·지원조직 간 연대·협업을 통해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체계 마련
- 사업내용: 대상별 다양한 협업모델 운영(교육·상담, 유통지원 등)
 - 남북하나재단 협업교육·상담: 탈북민 귀농귀촌기초교육(1단계) 및 탈북민 영농기초교육(2단계)
 - 국방전직교육원 협업교육: 전역예정간부에 대한 귀농귀촌 기본교육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협업교육: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 농업기술교육

□ 농업 일자리 탐색·체험교육

〈탐색교육: 4일〉

- 교육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등으로 농업분야 취·창업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실습 교육 제공 및 일자리 연계
- 교육대상: 농업분야 전직 희망자 및 영농관련 체험 희망자
- 교육기관: 전국 농업마이스터대학, 서울특별시 지원 서울농장
- 교육장소: 농업마이스터대학 9개소(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서울농장 3개소(충북 괴산, 경북 상주, 전남 영암)
- 교육내용: 농업·농촌 이론교육(3일) + 농업분야 일자리탐색 및 현장실습(1일)
 - 농업분야 취·창업 정보, 정착지원 정책 등 3일간의 이론교육을 수강하고, 현장실습교육장(WPL), APC, 농장 등에서 근로실습을 진행
- 교육혜택: 교육비 무료(국비 100%), 농식품부 지원사업 신청 시 귀농·영농 교육시간 인정

〈체험교육: 2주〉

- 교육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등으로 농업분야 취·창업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실습 교육 제공 및 일자리 연계
- 교육대상: 농업분야 취·창업 전직 희망자 및 귀농귀촌 희망자
- 교육기관: (주)지역아카데미
- 교육장소: (이론교육) 비대면 화상 교육, (실습교육) 각 지역별 농촌마을, 농가, 농업회사 등 농업·농촌 현장
- 교육내용: 총 80시간(농업·농촌 이론교육(5일) + 농작업 실습교육(5일))
 - (이론) 농업·농촌 이해, 귀농·귀촌 정보, 농업분야 일자리 탐색 및 취·창업 정보 등
 - (실습) 농업·농촌 현장에서 농작업 현장실습체험

* 농작업 현장실습비를 교육생에게 지급(최저시급 수준)

○ 교육시간

- (이론) 1주차 월~금, 09:00~18:00
- (실습) 2주차 월~금, 농작업 현장에 따라 실습시간 상이(4~8시간/일)

○ 교육비: 무료(국비 100%)

□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¹⁶⁾

○ 교육목적: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귀촌인에 대한 창업 중심 실무교육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교육대상: 농촌지역 주소지 이전 후 5년 이내(농산업 창업경험이 없는 경우 7년)의 귀촌인

○ 교육일정 및 시간: 총 80~100시간(교육기관별 상이)

○ 교육장소: 전국 12개 교육기관

○ 교육비: 교육기관별 상이

○ 교육내용

- (이론) 실무적 관점에서 창업에 도움이 되는 농산업 창업 환경 이해, 실무요령, 전략 수립, 사업자등록 프로세스 등 특성에 맞는 교육
- (컨설팅) 실습 중심의 맞춤형 상담을 통해 창업 아이템 구체화 지원
- (과제수행) 토론, 견학, 실습, 사례 분석 등

○ 교육혜택

- 교육비 지원(국고 70%)
- 농식품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귀농·영농 교육시간 인정

¹⁶⁾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글상자 17〉 도농교류활성화지원사업(한국농어촌공사)

-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농외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
 - 농어업·농어촌 가치인식 제고를 위한 도시민·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민간단체(35개), 초등학교(50개) 공모선정, 현장체험 기회 제공
 - 농어촌관광 자원조사로 관광주체에게 정보제공 및 연계 프로그램 확대: 철도노선과 농촌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확대, 여행업계 프로모션, KOICA 씨앗(CIAT)사업을 농촌관광과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 농어촌지역 일자리·소득창출을 위한 “농촌관광기업” 육성: 체험마을, 농가맛집, 농촌민박 등 관광주체가 공동으로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역량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기업 육성
 - 마을 공동협의체(9개 도협의회) 육성: 체험마을 자생력 제고 지원, 도단위 마을공동협의체 지원을 통해 공동으로 마케팅, 홍보, 역량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자립기반 마련
 -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확대 및 농촌관광경영체 품질관리: 농촌관광사업 등급제 확대 및 품질 유지를 위한 지도점검 추진
 - 웰촌포털 활성화 및 애플개발 경진대회 등을 통한 고객맞춤형 정보 제공: 체험휴양마을·농어촌지역 관광정보 제공 및 농어촌관광 신규 콘텐츠 개발

□ 농촌에서 살아보기

- 사업목적: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
- 지원내용: 참가자는 마을별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 전반에 관한 밀도 높은 생활을 지원받음. 참가자에게는 별도 참가비 없이 최장 6개월의 주거(농어촌체험휴양마을·귀농인의 집 등) 및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월 15일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급
- 사업규모: 운영마을은 전국 80개 시군에서 98곳 선정(2021년 3월 기준)되었으며, 운영 예정 규모는 약 500가구(지역 주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귀농형’이 36곳,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을 농촌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귀촌형’이 51곳,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기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참여형’이 11곳)

□ 귀농인의 집 조성

- 사업목적: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제공 지원, 귀농인의 집 입지는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과 시·군이 협의하여 자율 선정,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을 위한 거점마을로 육성
-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리모델링·수리하거나, 이동식 조립 주택을 구입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2021년 현재 493개 운영 중)
- 귀농인의 집 수리: 기존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유주와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리

□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 사업목적: 도시민 등 귀농 실행 단계에 있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이해, 농촌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One-Stop 지원센터 건립·운영. 도시민의 귀농·귀촌 관심에 부응하고 귀농 실행단계에서 두려움 해소와 안정적 정착 기회 제공
- 지원대상: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신청일 현재 귀농 또는 귀농·귀촌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시·군으로 한정함.
- 사업내용: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건립)’에 필요한 하드웨어지원 사업이며, 준공 후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지자체의 재정 지원,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통한 각종 수익·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시장·군수는 입주민의 모집과 초기 적응 및 향후 안정적 정착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귀농·귀촌 활성화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인원을 확보·배치해야 함.
- 홍천군, 금산군, 제천시, 구례군, 영주시, 고창군, 영천시, 함양군 등 8개소 운영 중

□ 귀농닥터

- 사업목적: 귀농귀촌 진입단계의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귀농선배 및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여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교육성과 확대를 위해 기초교육 수료자 중심으로 우선 지원
 - * 귀농귀촌 아카데미, 방문형 귀농귀촌교육, 공모, 청년귀농 장기교육 수료자
- 지원내용: 귀농닥터가 보유한 해당품목 영농기술 및 경영노하우 등 현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 중심의 전반적인 자문
 - 멘토: 연간 최대 20회 / 1회당 10만 원 자문수당 지급
 - 멘티: 1인당 최대 8회 신청 가능

□ 청년귀농 장기교육

- 사업목적: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실습중심의 장기체류형 귀농교육지원
- 교육내용: 청년특화 실전형 귀농교육과정으로 농촌현장 내 품목기술 습득 및 현지적응 교육(6개월 내외) 및 품목, 농지임대 등 창농을 위한 귀농정착 멘토링 지원(1인/3회) → 전담멘토수당 지급: 전담인력(1인) 운영에 따라 월 30만 원 수당 지원
- 교육혜택: 국고 70% 지원(자부담 30%)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가점 2점)
 -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자금 용자 선정 시 우대(가점 5점)

2.3.2. 실행단계

□ 도시민 유치지원사업¹⁷⁾

- 사업목적: 지자체의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교육·체험 및 지역융화 프로그램 운영, 임시주거 등 지원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
- 사업내용: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농촌체험, 지역 융화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3년을 1주기로 6억 원 지원)
- 지원규모 : 성과 평가를 통해 예산집행 저조 지자체(20% 절감) 및 2주기 이상 참여 지자체 지원율 차등적용('19년부터 국비지원 개선)
* 1주기 사업비의 100% → 2주기 80 → 3주기 60 → 4주기 이후 50 지원

□ 경영실습 임대농장¹⁸⁾

- 사업목적: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온실) 농업 경험 및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후 안정적 운영 역량 제고
- 사업 내용: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영농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농업인 포함)에게 임대
-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 및 공유지(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창업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 대상자 확정(연령, 영농경력, 영농기반, 병역, 거주지 등 요건)
- 지원내용: 국고 50%, 지방비 50%(시설원에 재배시설(철골비닐온실, 비닐온실) 신축비 및 개보수비), 지원 한도 : 30개소 / 개소당 300백만 원(국비 150, 지방비 150)

17) 2020년부터 도시민유치지원·귀농인의집·마을단위 융화교육 → (통합) 귀농귀촌유치지원.

18)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 사업목적: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체험 등)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정착률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배기술 등을 선도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성공 농업(귀농)인으로부터 영농기술습득, 정착과정 상담·경영기법, 창업과정 등 연수, 영농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 농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 농산업분야 창업(일자리창출) 시,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 지원내용: 귀농연수생에게 3~7개월간 매월 80만 원 지급 + 선도농가에는 멘토 수당 매월 40만 원 지급
- 지원자격: 귀농연수생(최근 5년 이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 또는 해당지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 농업인), 선도농가(지자체 추천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등)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¹⁹⁾

- 사업목적: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경영·기술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문농업경영체 육성
 - 일정규모 이상인 청년농 투자계획에 대한 심층컨설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적정투자를 유도하며, 투자성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역량 강화 및 수익 창출에 기여. 투자와

¹⁹⁾ 농림축산식품부. 2020. 2021년 농업경영컨설팅(일반) 지원사업 시행지침.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경영·기술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농의 투자효율성 제고

○ 지원조건

- 법인경영체: 상한 3천만 원 이내(국고보조 한도 900만 원)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 5년차 이하 귀농인): 상한 1천만 원 이내(국고보조 한도 300만 원)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²⁰⁾

○ 사업목적: 영농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함.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함.

○ 사업대상: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이어야 신청자격이 부여됨(건강보험료 부과액(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자산·소득이 많은 청년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정착금 지원: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 월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 지급함(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교육 지원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매년 136시간 수준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경영마인드 제고, 기초 수준의 기술력 확보 유도

²⁰⁾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필수교육(40시간): 경영 마인드(인문교육 포함), 회계실무, 중앙·지방의 농업정책 등
- 선택교육(96시간): 품목별 생산 기술, 유통·마케팅 등 경영기법, 농촌정착 과정 등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²¹⁾

- 사업목적: 스마트팜 영농 지식과 경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 실습 위주의 장기교육(총 20개월)을 통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취·창업에 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기관: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선정된 4개소(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기관)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상주): 딸기, 토마토, 멜론, 오이
 - 경상남도 농업자원관리원(밀양):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김제): 딸기, 엽채소, 오이, 가지, 아스파라거스
 - 전라남도 순천대학교(고흥): 딸기, 토마토, 멜론, 만감류
- 교육 내용: 스마트팜 청년창업을 위한 입문교육 운영(2개월, 180시간 이상)
 - 스마트팜 농업기초(경영관리, 시설관리, 작물생리, 품목재배), 스마트팜 관련 정보통신기술 및 데이터 분석 등 교육
 - 첨단 기술(ICT, IoT 등) 및 데이터 분야(AI, 빅데이터 등) 외부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한 특강 심화과정 운영
 - 교육형, 경영형 실습 및 실습효과 제고를 위한 현장지도, 컨설팅 제공
 - (교육형 실습) 시설관리, 작물생리 분야 중심의 실습과정(6개월 이내, 480시간 이상) 운영
 - (경영형 실습) 교육생 주도하에 재배부터 판매까지 영농 전 과정 실습(12개월 이내, 960시간 이상) 및 현장지도·컨설팅을 통한 영농지도

²¹⁾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1. 「2021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모집 공고문.

○ 교육 혜택

- 교육 수강료 전액 무료
- 교육기간(약 1년 8개월, 교육 당일) 동안 숙식 지원(숙박시설 및 식사 직접 제공 또는 월 최대 70만 원 실습실비 지급 등)
- 국내·외 우수 현장 전문가의 영농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

○ 교육수료자 혜택

- '수행실적 우수자'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우선권 부여(최대 3년)
- 교육 수료생 대상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 부여
- 교육 수료생 대상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 비율 우대

□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 사업목적: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함.
- 지원내용: 사업대상자(사업수혜자)는 만 18~39세 이하의 미취업자. 농업법인은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5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전업농 생산규모 기준으로 상위 40% 내외의 법인을 선정함.
- 인턴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이며 월보수의 50% 이내를 연간 600만 원(6개월)까지 지원함.

□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업목적: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인력의 농산업 유입으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 향상 및 농고·농대생의 취업 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됨.
- 사업대상: 농업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주요 농정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행됨. 지원분야는 3개 분야(① CEO 및 관리자급, ② 전문인력, ③ 농고·농대졸업생)임.

- 지원내용: 경영체별 최대 1명*(지원분야, 연차에 따라 월 80~180만 원)을 채용가능하며, 농고·농대 채용 또는 농촌 거주 전문인력 채용 시 1명 추가 채용지원이 가능함.

□ 농촌체험휴양마을 채용지원

- 사업목적: 농촌체험 관광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대표의 업무부담 경감과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
- 사업내용: 사무장 활동비(국비·지방비 각 50%)를 지원, 월 180만 원 수준(지자체별 상이),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보장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자금을 지원하며,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 농촌 유희시설 활용 창업 지원

- 사업목적: 농촌의 유희시설을 창업공간 또는 교육·문화·돌봄 등 사회서비스 공급 공간으로 활용하여 농촌 일자리 창출 등 농촌지역 활력을 제고
- 신청자격: 지자체(농촌지역 시·군)
- 지원내용: 유희시설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비
- 지원한도: 개소당 450백만 원(국비 225, 지방비 225)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추가 지방비 또는 자부담

□ 농촌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 사업목적: 청년들에게 귀농귀촌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고령화 및 과소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 사업내용: 기초 시·군 대상 공모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30호 내외), 공동보육(육아나눔)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1동)을 위한 기반조성 및 시설건축비 지원 → 지구(시·군)당 총사업비 8,025백만 원(1년차 40%, 2년차 40%, 3년차 20%)

○ 입주대상: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귀농귀촌 신혼부부 → 최초 계약 시 5년 이상 임대

○ 입주자 지원

- (일자리) 스마트팜 혁신밸리나 농공단지 등 주변 일자리 연계(4곳 중 1곳은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18~'19)과 연계 추진)

- (지원 프로그램) 영농 교육, 임대농지 제공, 판로 지원, 자녀 양육·의료비 지원 등 별도 지원 계획 연계 시 우선 지원

□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²²⁾

○ 사업목적: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

○ 사업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지원내용

- 창업자금: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자금(세대당 3억 원 한도 이내)

²²⁾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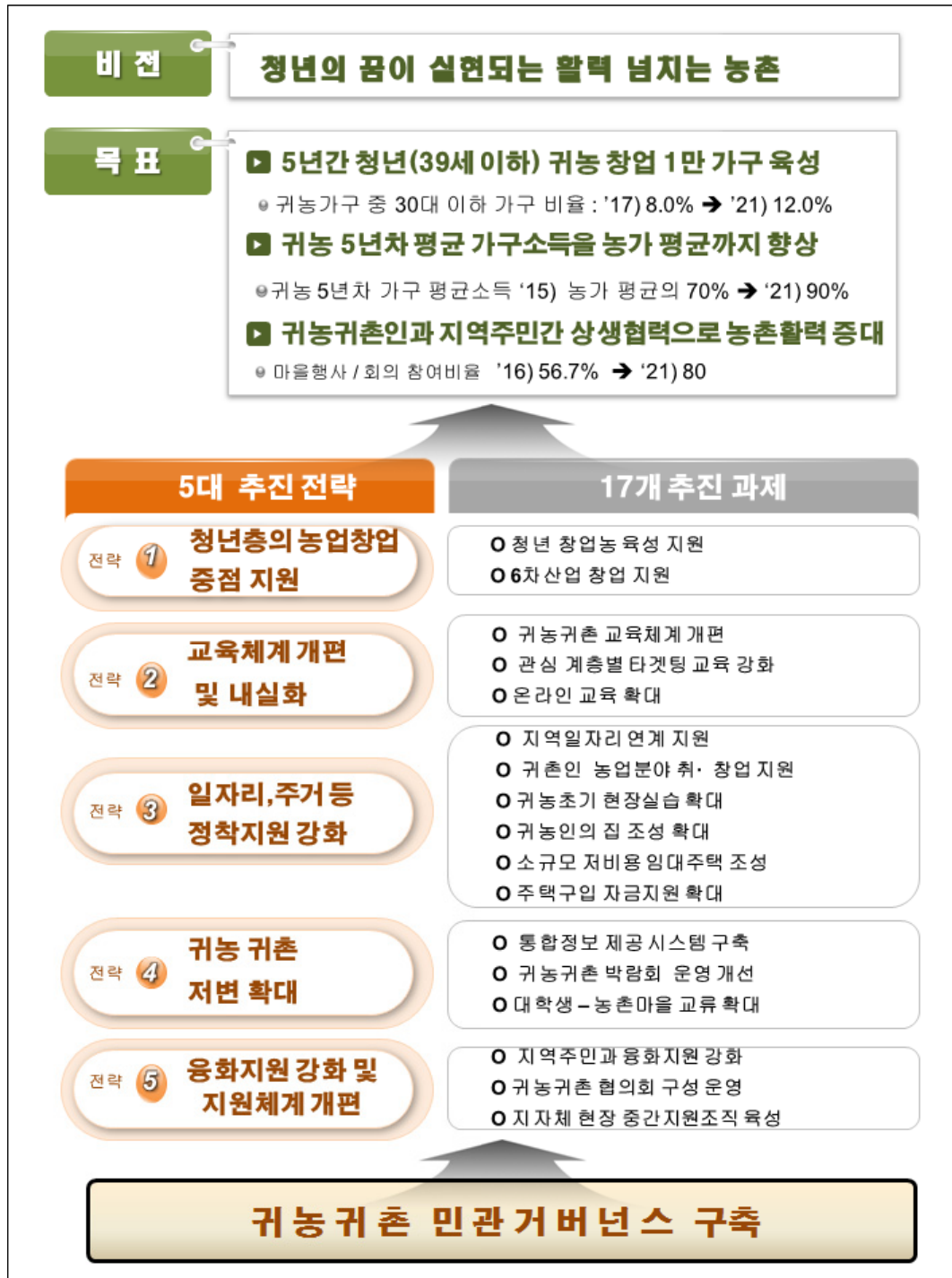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비용: 세대당 7,500만 원 한도 이내
- 대출금리: 2%(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글상자 18> 귀농·귀촌 관련 기타 유관 정책

- 농촌 공간 계획과 농촌 협약
 - 농촌 공간 계획은 농촌 공간 계획 제도화 및 농촌재생뉴딜을 통해 농촌 공간을 정비하고, 도시민 수용 능력을 제고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정책. 시·군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공장·축사 이전 등 정비 비용을 확대 지원하고 농촌 협약을 통해 생활 SOC, 일자리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사업규모: '21 5개소(10억 원): 과산, 영동, 영월, 상주, 김해 → '22 45개소(140억 원)로 확대
 - 농촌 협약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통합형 농촌협약 확대 추진. 지자체 주도로 수립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2020년 12개소에서 2021년 20개소로 확대
- 사회적 농업 활성화
 -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지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에 ①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②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 ③ 사회적 농업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농촌 재능나눔 활성화
 - 농촌 지역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 주민 건강 및 복지 서비스 지원, 주거 및 마을환경 개선, 교육 및 문화증진 기회 증대 등 추진
 - 농촌재능나눔 활동 희망 단체·개인, 기관·기업체, 대학생 등 대상 단체당 최대 3천만 원(국비 100%)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그림 4-1〉 2016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3.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3.1. 핵심성과 목표에 대한 평가

□ 청년(2030세대) 귀농 창업 1만 가구 육성

○ 귀농 가구는 지난 5년 1.2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 가구 비율은 10% 수준을 유지하여 매년 1,300가구 정도가 유입. 2021년에도 최근 추세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제1차 계획’ 기간 중에 청년 귀농 가구 수는 대략 6,500~7,000호 사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표 4-4〉 청년 귀농 가구 현황 및 비율(2015~2020)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9세 이하	1,168 (9.6%)	1,353 (10.4%)	1,340 (10.5%)	1,356 (11.3%)	1,212 (10.5%)	1,370 (10.9%)
전체	12,114	13,019	12,763	12,055	11,504	12,57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1. 7. 15.

○ 하지만 귀촌자(2015~2019년) 중 농업 경영체 등록 가구(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²³⁾ (2.14%)까지 고려하면 연평균 3,600여 가구, 2017~2021년 기간 대략 1만 8천 가구가 새로 생겨난 것으로 추정됨.

〈표 4-5〉 최근 5년 청년 귀촌 가구 중 농업종사자 추정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귀촌가구 농업종사비율	2.88%	2.60%	2.20%	1.83%	1.18%	2.35%
귀촌가구	143,594	146,927	143,736	140,642	149,724	144,442
농업종사 귀촌가구	4,143	3,820	3,159	2,573	1,762	3,391

주: 귀촌가구 농업종사비율: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²³⁾ 귀농·귀촌실태조사에서의 귀촌자의 농업종사율은 이보다 높아 2015년 귀촌자는 19.0%, 2016년 17.0%, 2017년 14.8%, 2018년 11.7%, 2019년 8.2%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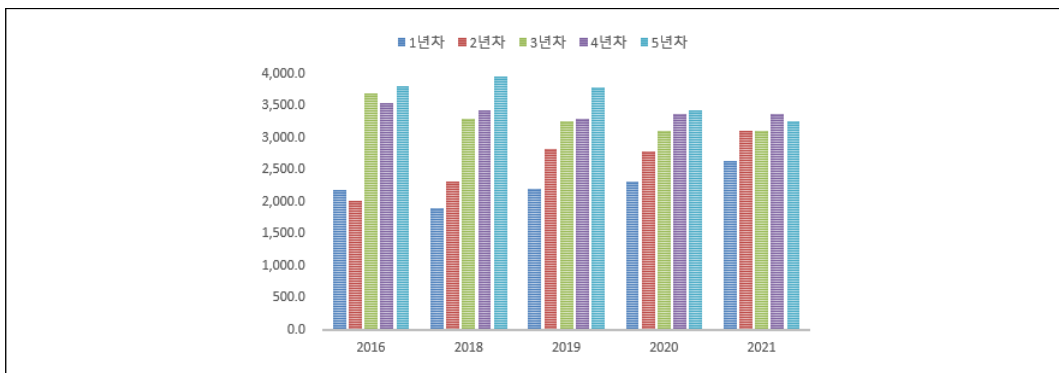
○ 귀농가구 만으로 보면 당초 목표가 달성되었다기 보기 힘들지만, 귀촌 이후 농업종사가 구까지 고려하면, 당초 기대한 정책의 성과는 충분히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귀농 5년차 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90%까지 향상

○ 귀농 가구의 소득 변화를 1차 계획의 주요 지표로 정한 까닭은, 종래의 여러 대책에서 ‘귀농·귀촌 인구 증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았던 것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됨.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조절할 수 없는 사회, 경제, 문화 등 거시적인 요인에 좌우되므로 정책 성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정책 수단이 도시에서의 안내, 교육, 홍보에 집중되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 귀농·귀촌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촌으로 이주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발상으로부터, ‘귀농 가구의 소득 변화’를 주요 지표로 정하였음. 귀농 첫해에, 이주 전 도시에서 얻던 가구 소득의 절반 수준의 소득을 얻다가 4~5년 사이에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구소득을 얻는 일반적 경향을 고려하여, 그 ‘안정적 가구 소득’이 한국 농가의 평균 농가소득의 90%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목표치를 정하였음.

○ 지난 5번(2016, 2018, 2019, 2020, 2021)의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귀농가구의 귀농 5년차 소득은 일반 농가소득(통계청 농가경제조사)의 90.2%였음. 모든 조사에서 귀농 가구의 농가 소득은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음.

〈그림 4-2〉 조사시기별 귀농연차에 따른 가구소득 변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표 4-6〉 조사 시기별 귀농 5년차 소득

단위: 만 원

소득	연령대	조사시기					평균
		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 농가 소득	30대 이하	3,057.4	7,327.8	5,271.4	4,431.5	4,144.3	4,819.1
	40대	7,926.5	3,582.9	4,972.5	3,992.5	3,484.7	4,026.8
	50대	3,238.0	3,524.5	3,218.5	3,227.8	3,099.9	2,892.4
	60대 이상	2,755.4	2,182.9	2,447.7	2,536.3	2,693.3	3,084.7
	전체(A)	3,805.0	3,948.6	3,794.1	3,434.3	3,249.2	3,646.2
일반 농가 소득(B)		3,721.5	3,823.9	4,206.6	4,118.2	4,502.9	4,074.6
A/B		1.022	1.033	0.902	0.834	0.722	0.902

* 각 조사시기별 소득은 전년도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통계청(각 년도). 농가경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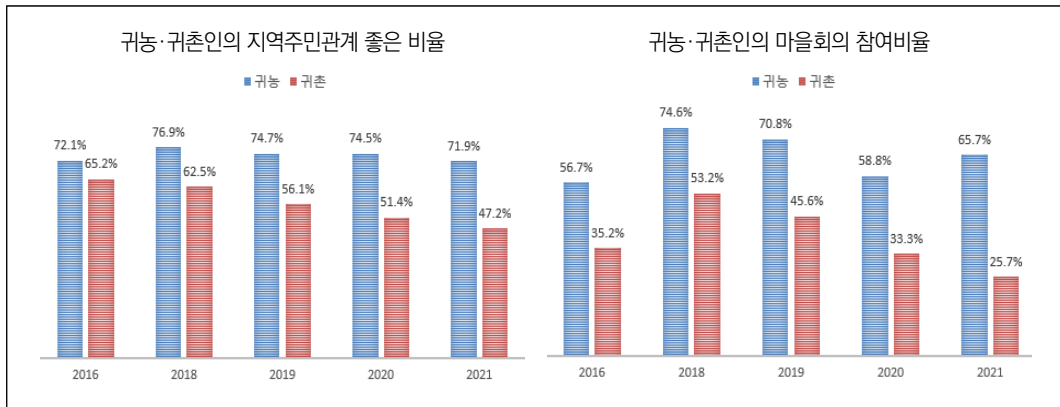
○ 다만, 조사시기별 5년차 소득을 보면, 최근 일수록 점차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 농가 대비 소득 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었음(2019년 90.2% → 2021년 72.2%). 영농 규모화, 농외소득 지원 등 귀농 가구의 소득 대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간 상생 협력으로 농촌 활력 증대

○ ‘1차 계획’을 수립하던 2016년 당시,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매스컴에 빈번히 노출되는 사건은 ‘귀농·귀촌인과 토박이 주민 사이의 갈등 사례’였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갈등’이라는 표현은 과도한 것이며, 이주민과 토박이 주민 사이의 다툼이나 갈등으로 인해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 현상, 일명 ‘역귀농’의 비율도 세간에는 과장되어 알려져 있음에도 이주민과 토박이 주민의 ‘융화’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귀농·귀촌 가구의 마을 행사 및 회의 참여 비율이 주요 성과 지표로 설정됨.

○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시기에 관계없이 귀농의 경우 지역주민관계가 좋다는 비율이 70% 이상이었는데, 귀촌의 경우 귀농보다 낮았고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하락하고 있었음(귀촌자 중 지역주민 관계 좋다는 비율은 2016년 조사에서는 65.2%였는데, 2020년 조사에는 51.4%였음). 마을 회의에 참석(가끔 참석, 적극 참석, 주도적 참석 포함)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귀농의 경우 80% 이상이였지만, 귀촌은 2016년 조사에서는 64.3%에서 2021년 47.2%로 점차 하락하였음.

〈그림 4-3〉 조사시기별 귀농·귀촌인의 지역주민관계 및 마을회의 참여비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2020).

- 귀농·귀촌인의 지역주민과의 관계, 지역사회 참여는 귀농의 경우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귀촌의 경우 개선의 여지가 있었음.

3.2. 주요 추진 전략별 평가

□ (전략 1) 청년층의 농업 창업 중점 지원

- ‘1차 계획’에서 첫 번째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청년층의 농업 창업 중점 지원’이었음. 이 전략에는 몇 가지 과제들이 포함되는데, 크게 나누어 ‘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과 ‘6차 산업 창업 지원’의 두 범주로 나뉨. ‘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 분야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너무도 부족한 청년 농가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 성격으로 제안된 사업이었음. ‘1차 계획’ 수립 연구에서는 제안되었지만, 공식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도입되어 재정 사업 측면에서는 이 분야의 정책 조치가 강화된 측면이 있음.
- ‘청년 창농 교육농장’(청년귀농 장기교육)을 계획 기간 동안 누계로 90개소 운영할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 사업은 현재 29개소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 사업의 기본 개념은 가업을 승계하는 것도 아니고 농과계 학교에서 영농을 배우지도 않은, 농업 경험이 없는 '귀농 청년'을 농촌 현장의 토박이 농민 집단이 영농을 가르치고 정착들 돕게 하려는 취지로 설계된 사업임 → 연간 교육인원: ('18) 50명 → ('19) 100 → ('20년 이후) 150
- '17년 시범사업(2개 교육기관, 10명)을 거쳐 '18년 본격 도입, 올해까지 총 234명(29개 기관) 수료, 이 중 70명 귀농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유례없이 많은 재원을 투입한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으로, 농업에 이제 막 진입한 청년들의 현금 소득을 보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8년 이후 4개년 동안 총 6,600명이 사업 수혜를 받았다. 이미 영농경력자보다 예정자가 점차 증가(2018년 42.5% → 2021년 67.6%)하는 것도 매우 고무적임.

〈표 4-7〉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자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계	
영농 경력	예정자	680(42.5)	950(59.3)	1,051(65.6)	1,217(67.6)	3,898(59.1)	
	1년차	653(40.8)	464(29.0)	438(27.4)	483(26.8)	2,038(30.9)	
	2년차	183(11.4)	126(7.9)	76(4.8)	71(3.9)	456(6.9)	
	3년차	84(5.3)	60(3.8)	35(2.2)	29(1.6)	208(3.2)	
	계	1,600	1,600	1,600	1,800	6,600	
성별	남성	1,320(82.5)	1,321(82.6)	1,298(81.1)	1,451(80.6)	5,390(81.7)	
	여성	280(17.5)	279(17.4)	302(18.9)	349(19.4)	1,210(18.3)	
	계	1,600	1,600	1,600	1,800	6,600	
계열	농업계졸업	551(34.4)	477(29.8)	471(29.4)	447(24.8)	1,946(29.5)	
	한농대 졸업	236(42.8)	225(47.1)	194(41.2)	190(42.5)	845(43.4)	
	비농업계 졸업	1,049(65.6)	1,123(70.2)	1,129(70.6)	1,353(75.2)	4,654(70.5)	
	계	1,600	1,600	1,600	1,800	6,600	
귀농 여부	귀농	1,158(72.4)	1,115(69.7)	1,112(69.5)	1,292(71.8)	4,677(70.9)	
	재촌	442(27.6)	485(30.3)	488(30.5)	508(28.2)	1,923(29.1)	
	계	1,600	1,600	1,600	1,800	6,600	
영농 기반 마련	증여· 상속	전체	156(9.8)	68(4.3)	62(3.9)	77(4.3)	363(5.5)
		일부	115(7.2)	262(16.4)	265(16.6)	292(16.2)	934(14.2)
	부모와는 별도	793(49.6)	451(28.2)	789(49.3)	882(49.0)	2,915(44.2)	
	부모기반 없음	536(33.5)	819(51.2)	484(30.3)	549(30.5)	2,388(36.2)	
	계	1,600	1,600	1,600	1,800	6,6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4. 2). 보도자료.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신규 창업인력의 지속적 유입 및 창업농을 포함한 농업종사자 증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을 통해 농업 외부 청년 및 신규 창업 인력 지속 유입, 매출액·농업소득 각각 1.7배 증가, 영농기반(농지면적) 2배 확대되는 성과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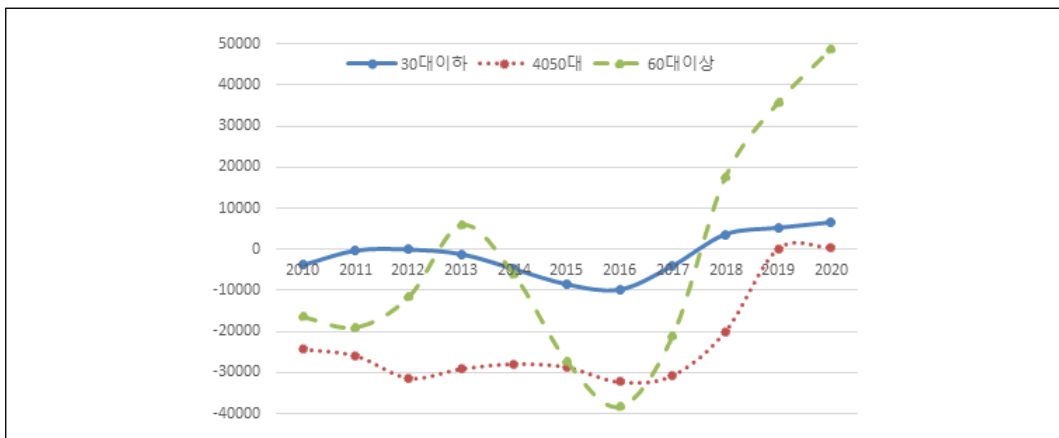
* 영농 창업예정자('18. 42.5% → '20. 65.7)

* 귀농인(71%) 및 비농업계 졸업생(69%)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보면 20~30대 농림어업 종사자수가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고(2018년 3.5천명 증가, 2020년 6.4천명 증가), 연령세대별 전체 취업인구 중 농림어업 비율을 보면 2017년부터 증가. 30대 이하 청년세대의 농림어업 종사비율은 2016년 0.78%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 0.94%, 2020년에는 1.07%에 이룸(김경진 외 2021).

- 이렇게 창농 뿐만 아니라 고용인력, 무급가족종사 등을 통해 농업 창업을 준비하는 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이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간접 효과로도 볼 수 있음(마상진 외 2021).

〈그림 4-4〉 연령대별 농림어업 종사자 변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6차산업 창업 지원'이라는 분야에 귀농귀촌인 대상 6차산업 교육과정 신설, 지역별 6차산업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관련 정보 제공,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한 창업 코칭 등 여러 세부 사업이 편성됨.

-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에 6차산업 관련 교육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6차 산업 정책과 관련된 사업(6차 산업화 지구 내 귀농창업 아카데미,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들에게 정보 제공, 창업코칭, 기술교육, 안테나숍을 통한 판로 지원 같은 수단은 2차적 지원에 한정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정책과 귀농귀촌정책 간의 연계성 미흡으로 인한 실행력이 부족. 지역 차원에서도 지역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와 귀농귀촌지원센터 간 협력 체계 미흡으로 지역 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각각의 유용한 사업들의 활용되지 못함.
- 농산물 가공이나 농촌 관광 같은 분야에서도 창업 당시의 초기 투자가 적지 않게 필요한데, 그런 투자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는 자본 측면의 지원사업이 보강될 필요가 있음.

○ 최근 다양한 청년 취농 지원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었지만, 대다수 취농 지원이 정착 초기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 종료 후 안정적 정착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는 미지수

- 정착 초기 교육·생활비 지원 관련 사업(농림축산식품부청년농 영농정착사업, 해양수산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사업) 및 법인체 취업지원 사업(인턴, 전문인력지원)외 아직까지 관련 정책 미흡
- 승계 이외 영농어 기반이 없는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취농어 정착 모형 활성화 미흡.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자 다수가 부모 영농기반자로 부모 기반 없는 비율은 38.3%임(3개년 누적 선발자 4,800명 선발자 기준)

□ (전략 2)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 중앙정부 수준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지원 종합센터 주관하의 교육과정 개편이 이 전략 부문의 핵심 내용임. 분야별로 과정별로 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표준 교안 개발)되고, 단계별, 연령별, 직능별 맞춤형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특히 온라인 교육은 COVID-19 사태와 더불어 급격히 확대되었음.

- 귀농 단계를 탐색기, 준비기, 실행기로 나누어 교육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특히 탐색, 준비기의 경우 대상을 청년창업농(40세 미만), 전직창업농(40~50대), 은퇴 창업농(60대 이상), 귀촌, 장애인 창업농 등으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교육을 제공함.
 - * <청년 창업농> ① 탐색 / ② 준비, <전직(중년) 창업농> ③ 탐색 / ④ 준비, <은퇴 창업농> ⑤ 탐색 / ⑥ 준비, <귀촌> ⑦ 탐색 / ⑧ 준비, <⑨ 장애인창업농>
 - * ('20) 총 45개 과정 운영: 청년 6, 전직 17, 은퇴 4, 귀촌 16, 장애인창업농 2
- 남북하나재단, 국방부, 법무부 등과 연계하여 탈북민, 전역예정 군인, 출소자 등에 대한 귀농 교육 제공
 - *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 전역예정 군인 교육 운영('17. 168명 → '20. 179), 남북하나재단과 협업, 탈북민 대상 교육 운영('17. 9명 → '20. 40)
- 비농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귀농 교육 추진: 민간기업(은퇴예정 직장인 등), 대학 취업지원센터(구직희망 대학생 등)
- 코로나 이후 교육 여건,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교육 콘텐츠 신규확충 및 기존 노후화된 영상·자료 대체 및 종합점검을 통해 내실화함(기존 콘텐츠 개선 및 전체 리뉴얼: 29종, 신규 귀농귀촌 온라인 콘텐츠 개발: 38종) → 교육 수요인원 증가: ('19) 82,281명 → ('20) 98,983명

〈표 4-8〉 분야별, 단계별, 연령대별 맞춤형 귀농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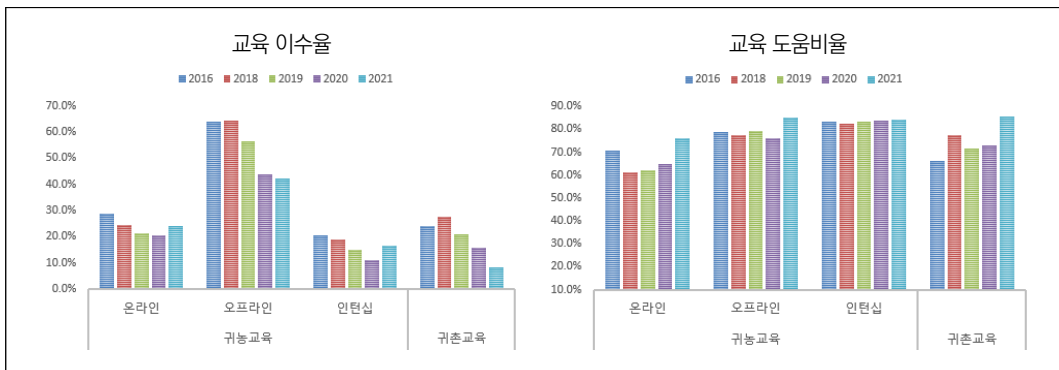
분야	단계	교육대상	교육내용
청년 창업농	탐색	만 40세 미만 청년층 귀농창업 희망자	농산업의 트렌드, 전자상거래, SNS등 다양한 유통 및 홍보 방법의 활용과 시장 선도 가능한 새로운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및 적용
	준비		
전직 창업농	탐색	40~50대 중년층 귀농창업 희망자	농산업 전직희망자 대상의 귀농귀촌의 이해, 농산물 유통전략, 사업 계획 수립, 비즈니스 마인드, 농산업 재무회계, 토지 및 주택 마련·관리, 품목이론 및 실습 등 정착과 지속적인 경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창업농 육성
	준비		
은퇴 창업농	탐색	60대 이상 장년층 귀농창업 희망자	농산업 전직희망자 대상의 귀농귀촌의 이해, 지역민-귀촌인간 갈등 관리, 토지 및 주택 마련·관리, 품목이론 및 실습, 농산물 유통전략, 소규모 농산업 창업 등 안정적인 은퇴창업농 육성
	준비		
귀촌	탐색	전 연령층 귀촌 정착 희망자	생활기술, 농촌일자리, 소규모 영농 등 귀촌 생활의 정착을 중심의 교육 구성
	준비		
장애인 창업농	탐색	장애인 및 보호자 중 귀농창업 희망자	장애인 및 보호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장애인 귀농귀촌과 품목 이해, 귀농과 치유농업, 가족치유타발 등 정착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삶의 질 향상

자료: 농림축산교육문화정보원(2021).

○ 귀농·귀촌 이수율을 보면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교육이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점차 증가추세였음. 실제 귀농·귀촌 교육은 가구 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었음.

- 농림축산식품부·갤럽의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의하면 귀농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인턴십 교육, 귀촌 교육 모두 이수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였음(온라인, 인턴십의 경우 2020년 대비 2021년 이수율이 소폭 상승). 가장 많은 사람이 이수하는 귀농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2016년 조사에서 63.8%였던 것이, 2021년에는 42.4%로 감소하였고, 귀촌 교육은 같은 기간 24.0%에서 8.1%로 감소하였음.
- 다만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교육 종류에 관계없이 60% 이상이었고, 최근 조사일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었음.

〈그림 4-5〉 조사시기별 귀농·귀촌교육 이수율·도움비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농·귀촌 교육은 귀농·귀촌 가구 소득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었음. 귀농인의 귀농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소득 변화(현재 소득에서 귀농 첫해 소득 차한 값)차이를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인턴십 등 교육 종류에 관계없이 귀농교육 이수자가 비이수자보다 소득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5% 수준)하게 많았음(이수자와 미이수자의 소득 변화 차이: 온라인 533만 원, 오프라인 698만 원, 인턴십 455만 원). 귀촌교육 여부에 따라서도 귀촌자 소득 변화에 차이가 있었는데, 비이수자의 소득 변화가 367만 원인데 비해, 이수자는 936만 원이었음.²⁴⁾

²⁴⁾ 귀농·귀촌 실태에서 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귀농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인턴십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지만, 귀촌의 경우 구분되지 않게 조사됨.

〈표 4-9〉 귀농·귀촌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가구소득 변화 비교

단위: 만 원

교육 이수여부	귀농교육			귀촌교육
	온라인교육	오프라인교육	인턴십	
이수(A)	1,393.5	1,325.9	1,367.4	935.6
미이수(B)	860.9	628.4	912.9	367.4
전체	984.9	984.9	984.9	464.4
A-B	532.6	697.5	454.5	568.1
P	0.0000	0.0000	0.0000	0.0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농·귀촌 이후 가구 소득 변화 관련 변인 분석 결과를 보면 귀농·귀촌 관련 개인 특성변인을 통계적으로 통제(다중 회귀분석)한 상황에서도 귀농·귀촌을 이수한 경우의 소득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음. 귀농의 경우 연령, 성별, 귀농 연차, 경지 규모, 농외활동 등을 통제한 상황에서 가구 소득 변화에 교육이수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음(유의도 수준 0.05). 귀촌의 경우도 교육 이수여부가 귀농·귀촌 연차, 연령대, 성별, 종사 분야에 관계없이 가구 소득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음.

〈표 4-10〉 귀농·귀촌 가구소득 변화 관련 변인

변인	귀농				귀촌			
	B	β	t	p	B	β	t	p
(상수)	1674.855		11.927	.000	948.570		10.548	.000
귀농·귀촌 연차	146.503	.085	8.551	.000	66.655	.075	7.361	.000
연령대	-285.235	-.128	-12.195	.000	-57.549	-.064	-5.504	.000
성별	-117.373	-.022	-2.229	.026	28.339	.011	1.123	.262
경지규모	.020	.128	12.712	.000				
(귀농) 주 농외 활동 분야 (없음=0)	농산물 가공	-112.258	-.003	-.333	.739			
	농산물 직판	-61.933	-.005	-.521	.603			
	농촌관광	781.723	.020	2.006	.045			
	농업임금노동	-524.344	-.050	-4.923	.000			
	지역업	-384.450	-.045	-4.335	.000			
	일반직장	-463.340	-.061	-5.787	.000			
	임시직	-391.938	-.044	-4.314	.000			
	일용직	-447.151	-.038	-3.791	.000			
	사업외소득	-427.474	-.031	-3.106	.002			

변인	귀농				귀촌			
	B	β	t	p	B	β	t	p
(귀촌) 종사 분야 (무직=0)	농업				803.699	.167	13.964	.000
	농관련업				797.376	.086	8.194	.000
	임시일용				117.700	.028	2.391	.017
	자영업				319.074	.099	7.515	.000
	일반직장				53.839	.021	1.358	.174
	기타직				284.801	.014	1.384	.166
교육 이수	216.068	.090	8.768	.000	-385.931	-.117	-10.753	.000
수정된 R ²	0.072				0.074			
F(df)	51.857(14,9386)				74.579(10,9369)			
p	0.000				0.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농교육이 대상별,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등 질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뤄졌지만 오프라인 교육 이수율의 경우 점차 감소하고 있고, 아직 귀촌자 중에 교육 이수자 비율이 높지 않음을 감안하여, 오프라인 귀농 교육 및 귀촌자 교육 저변 확대에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전략 3) 일자리, 주거 등 정착지원 강화

○ ‘1차 계획’을 수립할 당시 구속력 있는 재정 계획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나 주거와 관련한 재정지원 사업을 충분하게 확정할 수 없었음. 그러다보니 일자리와 관련된 세부 사업들은 ‘연계’ 등과 같은 말로 표현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적 재정 지원사업이 아닌 정책 수단들로 편성되었음. 가령,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력하는 것 자체를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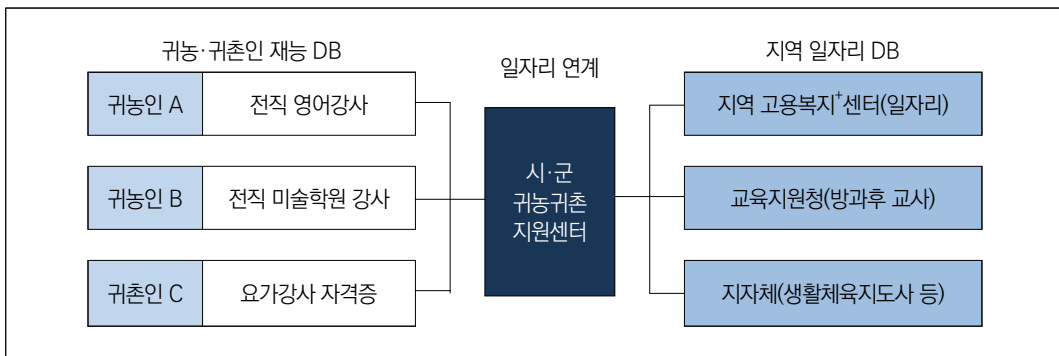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통제하는 일자리 사업의 경우 일정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귀농·귀촌 홈페이지를 통한 일자리 정보 통합제공: 홈페이지 회원 수(누적) ('20) 48,094명, 방문자 수: ('20) 2,986,819명, 일평균 8,161명
- 농업일자리 탐색·체험교육의 신설(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분야 구직자 증가 가능성에 대응하여 이들의 특성(정보·준비부족)을 감안한 교육과정 신규 개설

('20.6). 도시농협(도시민, 4h), 농업일자리 탐색·체험과정(실직·구직·휴직자, 4일·2주) 총 129회 운영, 26백 명 교육 수료* → 도시농협(11개) 51회/1,095명, 4일 과정(마이스터대 등 10개 기관) 54/915, 2주 과정 24/565

- 농업인력지원사업: 농업인력증개센터 확대('19: 50개소 → '20: 92 → '21: 130)를 통해 도시 등 유희인력과 구인처 간 일자리 연계 확대 → 실적(9.29): 회원가입 1,402명, 모집인원 4,032명, 구직신청 912건(403명)
- 농외 일자리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인력 풀을 구축하고('17), 지역 일자리와 연계 서비스 제공함 → ('18) 인력풀 11천 명 구축 / 967명 취업 → ('20) 14천 명 / 1,228명

〈그림 4-6〉 귀농·귀촌인 일자리 연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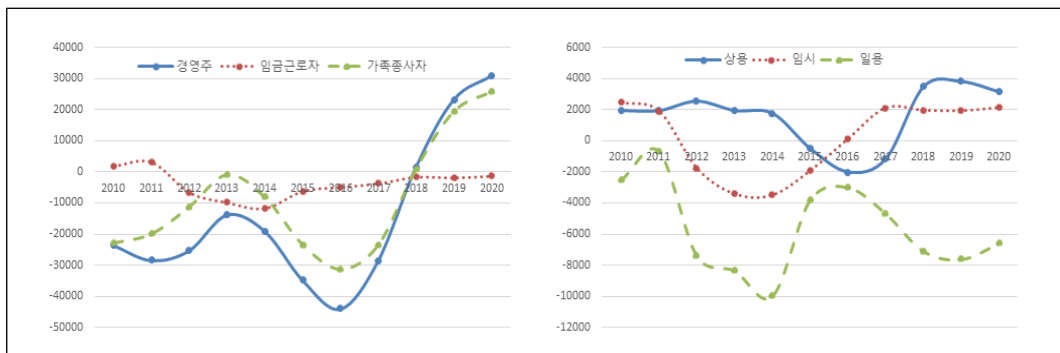


- 농업 법인 취업 및 농산업 창업 지원: 2018년 115개 법인 180명 매칭 → 2019년 131개 법인, 210명 → 2020년 116개 법인, 202명 매칭(정규직 전환 66명)
- 귀촌인 창업교육 신설: 귀촌인 대상 실무중심 창업교육을 확대 운영(분야·지역 등을 고려하여 9개소(기존 7, 신규 2) 기관지정)하여 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농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 → 연간 교육인원: ('19 신규) 200명 → ('20년 이후) 300; 교육 후 창업률: ('19) 12.0% → ('20) 15.2%

○ 일자리 관련 사업은 농림어업 상대적으로 안정적 종사상 지위를 가진 임금근로자(일용보다는 임시, 상용) 증가에도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함.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종사상지위별 농림어업 취업자는 경영주가 91.9만 명(63.6%)(고용 6.0만 명, 무고용 85.9만 명), 임금근로자가 12.6만 명(8.7%)(상용 3.8만 명, 임시 3.9만 명, 일용 4.8만 명), 가족종사자가 40.0만 명(27.7%)이었음. 연도별로 보면, 경영주, 가족종사자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경영주 2016년 4.4만 명 감소, 2018년 1.6천 명 증가, 2020년 3.1만 명 증가), 임금근로자는 유지 상태였음(김경진 외 2021).
-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상용·임시 근로자는 증가세(2015년 5.9천 명 감소, 2018년 7.6천 명 증가, 2020년 3.9천 명 증가)이고, 일용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임. 최근 3년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의 55.6%는 경영주 증가, 46.7%는 가족종사자 증가에 의한 것이었음(김경진 외 2021).

〈그림 4-7〉 농림어업 취업자 종사상지위별 전년대비 변화: 2010~2020(3년 이동평균)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농촌 지역 현장에서 타 부처를 통해 시행되는 ‘일자리 정책’이 귀농·귀촌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필요
 - 대내·외 정보서비스와 협업·연계를 통한 정보 콘텐츠 확대: 도농인력증개(농정원 인 재기희실) + 지역별 워크넷(고용부) + 지역·품목 안내서비스(빅데이터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시민의 실직·폐업 등 지속적인 문제 발생으로 농업·농촌 분야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원하는 지역, 원하는 정보 등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정책 시프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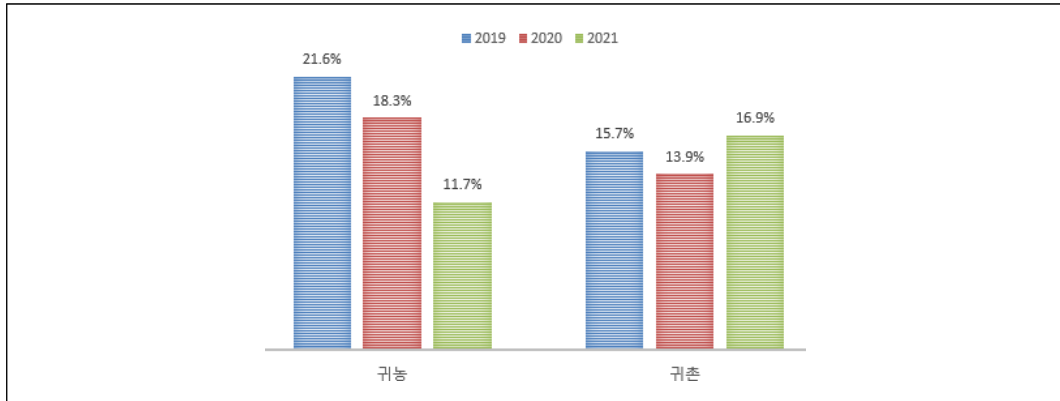
○ 주거와 관련해서는 임시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귀농인의 집’, ‘소규모 저비용 임대주택 조성사업’이 추진됨.

- ‘귀농인의 집’은 현재 493개소(강원도 10, 충북 37, 충남 38, 전북 148, 전남 105, 경북 94, 경남 57, 제주 4)가 조성되어, 당초 목표(2021년 500개소)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
- ‘소규모 저비용 임대주택 조성’ 과제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시범적인 성격(전국적으로 4곳: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상주시)을 지니고 있어, 본격적으로 사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귀농·귀촌 주택단지(LH) 시범사업: LH는 2019년부터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해왔으며, 보성운곡단지, 상주공검단지(20가구) 건설 중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전국에 8곳(홍천, 금산, 제천, 구례, 영주, 고창, 영천, 함양)에 조성되어 있고 204세대 체류
- 귀농·귀촌인의 주택 신축·구입 자금 지원 한도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 5천만 원을 7.5천만 원으로 증액(당초 목표 1억 원)

○ 주택 마련과 관련하여 귀농·귀촌인들의 정착 초기 어려움을 겪는 비율을 보면, 귀농의 경우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귀촌의 경우 큰 진전이 없었음.

- 2019년부터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정착 초기 주택 마련 어려움을 겪은 비율을 보면 귀농의 경우 2019년 21.6%에서 2021년 11.7%로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귀촌의 경우 큰 변화가 없었음(2019년 15.7%, 2020년 13.9%, 2021년 16.9%).

〈그림 4-8〉 귀농·귀촌 초기 주택 마련 어려움을 겪는 비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주거 문제의 경우 귀농·귀촌자 의향자, 및 귀농·귀촌 실행자의 농촌 정착과 관련하여 가장 정책 요구가 높은 분야이니만큼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귀농·귀촌 의향자 조사(송미령 외 2019): 주거(39.6%), 농촌에 대한 종합정보(일자리, 교육 등) 제공(33.3%), 살아보기 및 체험(23.7%), 일자리(20.8%)
 - 귀농·귀촌 실행자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은 ‘귀농인의 집’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추후 지속적 보완·확대 필요

□ (전략 4) 귀농·귀촌 저변 확대

- 귀농·귀촌 저변확대와 관련하여 ‘통합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 개선’, ‘대학생-농촌마을 교류 확대’ 등의 세부사업이 추진되었음.
- 귀농·귀촌 통합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은 어느 정도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임.
 - 각종 교육에 관한 정보에서부터, ‘수요자 맞춤형 지역정보’, ‘도농 인력증개시스템’이나 ‘지역별 워크넷’ 등과 같은 일자리 정보, ‘농촌에서 살아보기’ 같은 체험정보 등이 관련 웹페이지에 집적함.
 - 최근 종합센터 홈페이지 회원이 희망 지역·관심 품목 입력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거처 회원DB를 해당 시·군에 제공하고, 당해 지역과 회원 간 정보 교환 및 상담이 이뤄지도록 유도함.

- 향후 종합센터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여 귀농귀촌 정책 수요와 관계부처·지자체의 정책 연계, 귀농귀촌 소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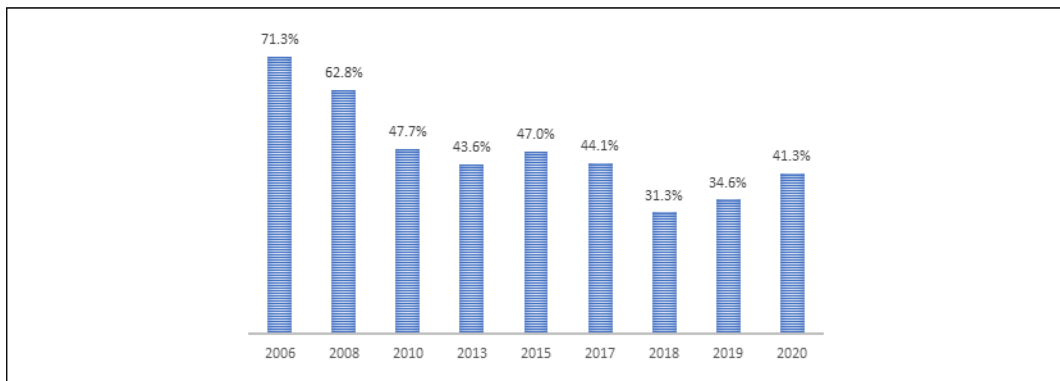
○ 귀농·귀촌 박람회는 농업·농촌·식품산업 분야 다양한 일자리 및 창업 정보를 청년 구직자들에게 제공하고자 2019년 일자리 박람회와 통합됨.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가 힘들어지면서 박람회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비대면) 및 온라인 콘텐츠 구성을 강화함 → 2020년 행사 총 참관객 : 23,272명, 온라인 페이지뷰 : 169,110건(홈페이지 164,999, 유튜브 영상 4,111), 총 상담실적 7,472건(채용 7,233, 창업 239)

○ 청년층 귀농·귀촌 저변확대와 관련하여 대학생 농촌교류단을 조직, 농촌마을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농번기 일손 지원, 학습 및 취·창업 기회 제공한다는 사업도 계획되었는데 2017년 실시(10팀 291명 참여)이후 지속되지 못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도시민 귀농·귀촌 의향 조사 결과를 보면, 감소세를 벗어나 2018년 이후 증가세 전환되었는데, 귀농·귀촌 저변 확대 정책이 이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그림 4-9〉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년도),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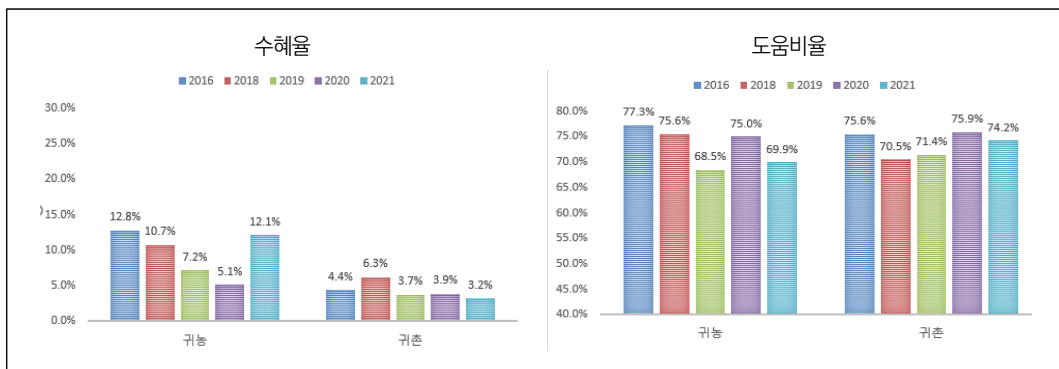
□ (전략 5) 융화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 귀농·귀촌인과 토박이 주민 사이의 화합이 계획을 수립하던 당시에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되었음. 그러나 ‘화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인위적인 정책 개입 수단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음. 교육을 확대하거나, 귀농·귀촌인이 참여하는 동아리 모임을 지원하거나,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주민 여럿이 ‘지역사회 발전 공동사업’을 추진할 기회 마련 등이 제안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융화 교육’은 상당히 진행됨: 70개 시·군 1,400개 마을(시·군 당 20개 마을)에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운영. 융화교육 예비강사 역량교육 추진. 전국 34개 시·군 융화교육 강사DB 지원(128명), 현장교육 운영(3회)
- 학습모임 및 동아리 활동 지원이나 ‘지역사회 발전 공동사업’ 같은 제안은 정책 사업으로 시행되지 않음.

○ 귀농·귀촌인의 주민 관계 형성 지원 정책 수혜율은 10%대로 낮았고, 귀농인에 비해 귀촌인의 수혜율은 더 낮은 편이었음(2021년 귀농 12.1%, 귀촌 3.2%). 다만 정책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높아, 정책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귀농·귀촌 모두 평균 70%를 넘었음. 융화 지원과 관련한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특히 귀촌인들에 대한 기존 주민들과의 융화지원 정책 개선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그림 4-10〉 주민 관계 형성 지원 정책 수혜율 및 도움 비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귀농·귀촌 정책 추진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중앙, 지자체 단위의 '귀농·귀촌 협의회 구성 운영'이 추진됨.

- 중앙단위 귀농·귀촌 정책 협의회: 2017~2019년 개최(식품부,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및 전문가 참석: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추진방향 및 시·도 단위 정책협의회 운영결과 공유, 정보서비스 구축방안 논의 등), 2020년에는 실무협의회로 대체
- 시도 단위 귀농·귀촌 정책 협의회: 2019년 지역 맞춤 정책 발굴,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시·도 협의회운영(시·도 귀농귀촌 담당국장, 시·군 귀농귀촌 부서장, 귀농·귀촌인, 기존 농업인, 여성 정책가 등 참석: 타 지자체의 특색 있는 선도사례 공유 등)
- 민관 협력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한다는 취지로 귀농·귀촌협의회가 운영되었지만 정책 제언·심의 보다는 단순 정책 공유 및 소속 단체의 애로사항 토로 등으로 형식화됨.

○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는 '귀농귀촌지원센터'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세부 과제로 제안됨('21년에는 도시민농촌유치지원, 귀농인의 집, 마을융화교육 사업 확대·통폐합).

-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이 일부 확대되면서 2020년 현재 전국 77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 수준의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일부 늘어남 → '07~'09년 시범운영, '10년부터 공모를 통해 총 86개 시·군 참여(중복 포함)

〈표 4-11〉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수행 지자체 현황

강원(6)	충북(9)	충남(10)	전북(13)	전남(21)	경북(16)	경남(10)	제주(1)
양구(10~12)	괴산(19~21)	공주(17~22)	고창(10~21)	강진(10~21)	경주(20~22)	거창(12~20)	1서귀포
양양(10~21)	단양(10~15)	금산(10~21)	군산(19~21)	고흥(15~20)	고령(15~17, 19~21)	고성(19~21)	(13~21)
홍천(14~22)	보은(13~21)	논산(16~21)	김제(14~22)	곡성(10~21)	김천(18~21)	남해(13~21)	
화천(10~16)	영동(13~21)	부여(15~20)	남원(10~21)	광양(17~22)	문경(14~22)	밀양(19~21)	
횡성(16~21)	옥천(11~13, 19~21)	서산(16~18)	무주(13~22)	구례(13~21)	문경(14~22)	산청(17~19)	
괴산(19~21)	음성(19~21)	서천(14~22)	부안(15~20)	나주(13~21)	봉화(10~21)	의령(15~21)	
	제천(15~21)	아산(20~22)	순창(10~21)	담양(17~22)	상주(10~21)	창녕(13~21)	
	증평(16~21)	청양(11~13, 17~22)	완주(10~21)	무안(20~22)	성주(20~22)	하동(11~22)	
	충주(14~16, 20~22)	태안(16~21)	익산(18~20)	보성(17~19)	안동(10~12)	함양(15~20)	
		홍성(12~21)	임실(13~21)	순천(10~21)	영덕(19~21)	함천(18~20)	
			장수(10~21)	신안(19~21)	영양(17~22)		

강원(6)	충북(9)	충남(10)	전북(13)	전남(21)	경북(16)	경남(10)	제주(1)
			정읍(15~21) 진안(10~21)	여수(19~21) 영광(10~21) 영암(10~20) 완도(10~12) 장성(10~21) 장흥(10~12, 18~20) 진도(15~21) 함평(18~20) 해남(15~21) 화순(14~22)	영주(16~21) 영천(13~21) 울릉(20~22) 울진(13~15) 의성(14~22) 청송(1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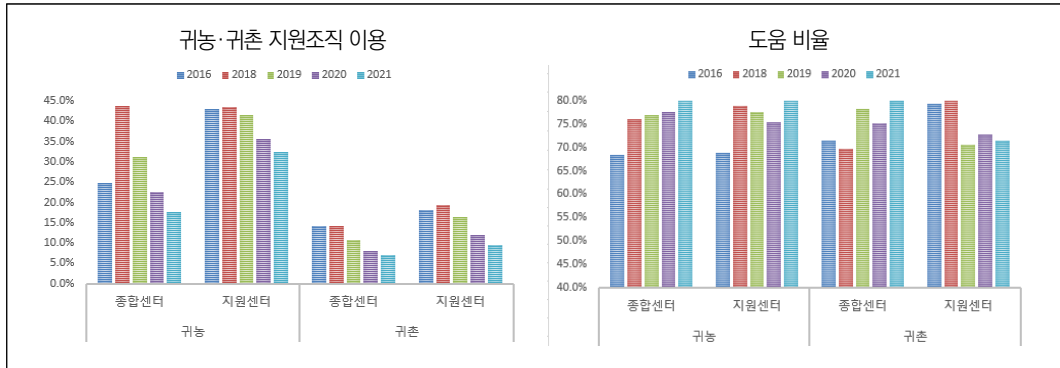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20). 내부자료.

-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조직 형식이나 구체적 활동 내용은 지역마다 상당한 편차를 보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간판만 ‘지원센터’라고 둔 상태에서 전화를 받고 정책지원 사업 정보를 전달하는 비정규직 직원 한두 명을 채용하여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에서부터, 비록 소수이지만 지역의 민간 부문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의 보조금으로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지자체로부터 위탁 시행하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시도하는 지역도 있음. 시·군의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정책 전달체계의 가장 말단으로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위임. 이들의 활동이 귀농·귀촌 정책의 성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귀농·귀촌 지원조직은 중앙보다는 지자체, 귀촌인보다는 귀농인의 이용이 많고 이용률은 점차 감소하였음.

- ‘귀농·귀촌실태조사’ 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중앙단위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경우 귀농인의 25.9% 정도(2016~2021년 조사 종합)가, 귀촌인의 13.9% 이용하고 있었고, 지자체 귀농귀촌지원센터의 경우는 귀농인의 40.3%가, 귀촌인의 17.4%가 이용하고 있었음.
- 귀농·귀촌 종합센터 및 지자체 지원센터 이용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종합센터의 경우 2018년 조사에서 귀농인의 43.8%가 이용하였는데, 2021년 17.6%로 감소하였고, 지원센터는 2018년 43.6%에서 2021년 32.4%로 감소하였음. 귀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음(종합센터 이용: 2018년 14.2% → 2021년 6.9%, 지원센터 이용: 2018년 19.3% → 2021년 9.6%).
- 만족도는 모든 형태의 중간지원 조직에서 65% 이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음.

〈그림 4-11〉 귀농·귀촌시기별 귀농·귀촌 지원조직 이용 현황 및 도움 비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갤럽(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실태조사.

○ 향후 귀촌인에 대한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2〉 제1차 귀농·귀촌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및 실적·성과 평가

5대 추진 전략	17대 추진 과제	추진 실적('17~'20)	성과 평가
① 청년층의 농업창업 중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창업 교육농장 운영 청년 창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곳, 234명(누계) - 청년창업농 48백 명('18~'20) 	미흡 양호
②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촌 교육체계 개편 관심 계층별 타깃팅 교육 강화 온라인 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 유형화, 일자리교육 도입 - 군인·탈북민 교육확대 - 85종, 86천 명('20) 	양호 양호 양호
③ 일자리 주거 등, 정착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일자리 연계 지원 귀촌인 농업분야 취·창업 지원 귀농초기 현장실습 확대(농진청) 귀농인의 집 조성 확대 소규모 저비용 임대주택 조성 주택구입 자금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촌인 12백명 취업지원 - 창업교육사업 도입, 561명(누계) - 500명 → 730 - 192개소 → 493 - 4개소 추진('19~'21) - 50백만 원 → 75 	양호 양호 보통 보통 미흡 보통
④ 귀농귀촌 저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 개선 대학생-농촌마을 교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개선, 플랫폼 구축 추진 - 일자리박람회와 통합('19) - 10팀 291명 참여('17) 	보통 보통 미흡
⑤ 융화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과 융화지원 강화 귀농귀촌 협의회 구성 운영 지자체 현장 중간 지원조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사업 도입('19) - 협의회 운영('17~) - 귀농귀촌센터 50개소 → 77 	보통 미흡 보통

4. 소결

-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귀농·귀촌 정책은 2015년에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도시민의 농촌 정착 유도 및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1차 종합계획이 수립·추진됨.

-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의 핵심 성과 목표인 청년 귀농가구의 양적 확보, 적정 소득 달성, 지역주민과 상생협력 등과 관련한 관련 지표를 검토한 결과 대체로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음.
 - 청년 귀농가구의 양적 확보와 관련하여 귀농가구만으로 보면 당초 목표가 달성되었다기 보기 힘들지만, 귀촌이후 농업종사 가구까지 고려해보면 당초 기대한 정책의 성과는 충분히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귀농 5년차 가구의 농가소득 평균이 90.2% 수준으로, 소득 관련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최근 들어 일반 농가대비 귀농가구 소득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에 경영 및 유통, 농외 소득 개선 지원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함.
 - 귀농·귀촌인의 지역주민과의 관계, 지역사회 참여는 귀농의 경우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귀촌의 경우 개선의 여지가 있었음.

-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주요 전략으로 청년층의 농업 창업 중점 지원,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일자리·주거 등 정착지원 강화, 귀농·귀촌 저변 확대, 융화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등이 추진되었고, 전략별로 대부분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일부 분야의 경우 개선의 여지가 있었음.
 - 청년층 농업창업 중점 지원과 관련하여,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신규 창업인력의 지속적 유입 및 창업농을 포함한 농업종사자 증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 창농예정자가 점차 증가하고, 창농 뿐만 아니라 고용인력, 무급가족종사 등을 통해 농업 창업을 준비하는 인력이 증가하고 있었음.

- 귀농·귀촌 교육 내실화와 관련하여, 분야별로 과정별로 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표준 교안 개발)가 진행되고, 단계별, 연령별, 직능별 맞춤형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특히 온라인 교육은 COVID-19 사태와 더불어 급격히 확대되었음. 귀농·귀촌교육 이수자 정착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실제 귀농·귀촌 교육 이수자의 소득이 비이수자보다 높았음. 귀농교육이 대상별,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등 질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뤄졌지만 오프라인 교육 이수율의 경우 점차 감소하고 있고, 아직 귀촌자 중에 교육 이수자 비율이 높지 않음을 감안하여, 오프라인 귀농 교육과 귀촌자 대상 교육 확대에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일자리·주거 등 정착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귀농·귀촌 홈페이지를 통한 일자리 정보 통합제공, 농업일자리 탐색·체험교육, 농업인력지원사업으로 농업인력증개센터 확대, 농외 일자리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인력 풀 구축, 지역 일자리와 연계 서비스 제공, 농업 법인 취업 및 농산업 창업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통제하는 일자리 사업의 경우 농림어업 상대적으로 안정적 종사상 지위를 가진 임금근로자(일용보다는 임시, 상용) 증가에도 일정 부문 기여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농촌 지역 현장에서 타 부처의 계통을 통해 시행되는 ‘일자리 정책’이 귀농·귀촌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함. 주거와 관련해서는 임시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귀농인의 집’ 확대, ‘청년 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귀촌인의 주택 신축·구입 자금 지원 한도 확대 등이 추진되었는데, 주거 문제의 경우 귀농·귀촌자 의향자, 및 귀농·귀촌 실행자의 농촌 정착과 관련하여 가장 정책 요구가 높은 분야이니만큼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귀농·귀촌 저변 확대와 관련하여 ‘통합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 개선’, ‘대학생-농촌마을 교류 확대’ 등의 세부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최근 도시민 귀농·귀촌 의향 조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의 감소세를 벗어나 2018년 이후 증가세 전환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청년층 귀농·귀촌 저변 확대와 관련한 지속적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융화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른바 ‘융화 교육’은 상당히 진행되었는데, 귀농·귀촌인의 지역주민과의 관계, 지역사회 참여는 귀농의 경우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귀촌의 경우 개선의 여지가 있음. 귀농·귀촌 정책 추진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귀농·귀촌 협의회 구성 운영’이 추진되었는데, 민관 협력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한다는 당초 목적 성취는 다소 미흡하였음.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는 ‘귀농귀촌지원센터’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육성이 세부 과제로 제안되었는데, 양적 확대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전담자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 확보 등 질적인 측면의 개선 여지가 있었음.

5

귀농·귀촌 관련 유관 부처 정책

- 유관 부처에서 추진되는 일자리, 주거·생활 인프라 등 귀농·귀촌인들의 요구가 높은 분야 정책 그리고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과 관련한 문화·공동체 활성화 정책 등을 검토함.

1. 일자리(취·창업) 정책

1.1. 행정안전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018~2021)²⁵⁾

-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2018년부터 2021년 까지 총 7만 명 이상의 청년을 지원)

²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List.do>)(2021. 3. 8).

○ 목적

- 지역 청년의 대도시 이주로 지역 기업은 구인난 호소, 중앙부처의 하향식·일률적 사업으로는 지역별로 상이한 고용여건 대응에 한계
-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일자리사업을 통해 청년고용을 창출, 취·창업이 지역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보완(주거, 복지 등) 필요

○ 유형

- ① 지역정착지원형 : 지역기업(마을기업, 농어업법인 등)에 청년을 지원 → 지역정착 유도
- ②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 창업 지원(임대료, 교육 등) 또는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
- ③ 민간취업연계형 : 지역사회서비스 등 일 경험과 경력 형성 → 향후 민간 취업 연계

〈표 5-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유형별 지원내용

구분	지역정착지원형 (1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2유형)	민간취업연계형 (3유형)
취·창업 분야	마을기업,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기반 법인·단체	신규창업 및 민간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예) 미술관 큐레이터, LPG가스점검
지원 기간	2+1년 (3년차 취·창업 시 추가지원)	2년간 (취·창업 지원)	1년 이내 (일 경험 후 민간 취·창업 연계)
지원 내용	인건비, 직무교육비 등(2년간) ※ 3년차 추가지원 ※ 정주여건 지원: 지자체 자체재원	취·창업지원: 인건비 외 (교육비, 임대료 등)	인건비, 직무교육비, 자격증 취득비용 등

자료: 행정안전부(2019).

○ 추진실적

- (양적 측면) 참여 지자체, 사업의 다양성, 참여인원이 확대
- (질적 측면) 참여 청년의 상당수가 만족하고 있으며, 청년의 비수도권으로의 정착·분산을 유도하는 효과

〈표 5-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와 예산

구분	인원			예산				
	목표	실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실집행액	(실집행률)
'19년	25,900	36,394	(140.5%)	2,210	2,209	(99.9%)	1,730	(78.3%)
'18년	10,250	11,056	(107.9%)	831	828	(99.9%)	699	(84.4%)

자료: 행정안전부(2019).

○ 주요 사례

〈표 5-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례

	전남 마을로	경북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기간	2017~2023	2017~2020
사업목적	마을 사업장 청년 고용 및 정착지원	도시 청년의 지역유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활력 촉진
대상연령	만 18~39세	만 15~39세
'19년 참여인원	1,000명 (기존 500명, 신규 500명)	200명 (2년차 100명, 신규 100명)
취창업분야	시군이 추천한 마을사업장 195개	게스트하우스, 카페, 디자인 상품제작 등
지원내용	청년인건비(월180~200만 원) 교통·숙박비(월30만 원), 직무교육, 청년 교류 활동 지원, 사업장 컨설팅 등	정착비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연 30백만 원/인)
지원기간	최대 2년	최대 2년
성과	195개 사업장, 500명 취업	도외 지역청년 74명 증가, 평균 경쟁률 6.3대 1

자료: 행정안전부(2019).

□ 청년마을 만들기²⁶⁾

○ 청년 유출 방지와 도시청년의 유입을 위해 거주와 창업공간을 지원해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

- 2018년에는 전라남도 목포시 '괜찮아마을', 2019년에는 충청남도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에는 경상북도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이 운영
- 청년마을을 3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 등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2021년은 총 12곳으로 확대 모집

26) 행정안전부 우리결에 반가운 변화 홈페이지(<https://happychange.kr>)(2021. 4. 5).

○ 사업내용(2021년)

- 선정규모: 12개소 / 대상지역별 5억 원
 - 사업기간: '21. 4월 ~ 11월말
 - 시행주체: 청년단체·기업(등록된 영리·비영리 모두 가능, 임의단체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 공간조성: 유휴공간을 활용, 민간이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카페/펍/호텔/세어하우스/생태농업/지역 콘텐츠 등)으로 조성
 - * 프로그램: 지역커뮤니티에 필요하고 청년들에게도 주목받는 비즈니스 분야를 발굴하여 지역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 네트워크: 지역주민-청년 및 내·외부 청년 간 교류·협력 활동 지원
 - * 홍보: 홍보 콘텐츠(영상, 책자, 카드뉴스 등) 제작, 온·오프 홍보 활동 등 지원
- 청년들이 지역사회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지역 정착 및 정주율 제고 추진

〈표 5-4〉 2021년 신규 청년 마을 사업 주요내용

선정지역		사업 주요내용
부산	동구(초량동)소멸 (주)공공플랜	【소통으로 길을 연결하는 이바구 마을】 • 이바구마을(도시민박촌)을 거점으로 지역자원(빈집, 공유공간 등)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창업·창직 지원
인천	강화군(강화읍)소멸 협동조합 청풍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마을의 주인 Local Master】 • 청년과 지역주민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협력의 경험을 나누고 응원하는 공동체 방식의 삶 모색
울산	울주군(상북면) 발효문화(주)	【마음과 몸, 꿈을 발효하는 365醱酵마을】 • 지역 내 발효식품(장류·김치·술·요거트 등) 장인에게 제조법을 배워 제품 개발 및 발효 식당·마켓·카페 창업 지원
강원	강릉시(중앙동)소멸 (주)더웨이브컴퍼니	【“강릉(떠나지 말고, 이주해 와서) 살자”】 • 중앙동 일대의 청년 창업가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청년들에게 기술멘토링을 실시하는 창업공동체 형성
충북	괴산군(감물면)소멸 (주)뫼하농	【뫼하는 농부들, 뫼하농】 • 농업이론 교육, 다양한 농업 실습, 청년농업인 멘토링 등 농업경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청년귀농인 정착 지원
충남	청양군(청양읍)소멸 청년협동조합 청양사람	【청양의 맛있는 동네, ‘청·맛·동’】 • 청년들의 독특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통해 청양의 지역자원(고추·구기자·멜론 등)을 활용한 지역상품 제작·판매

선정지역		사업 주요내용
	공주시(중학동)소멸 (주)퍼즐랩	【청년이 디자인하고 제안하는 High-end Local】 • 백제 및 근대화 유산을 간직한 공주 원도심에 정착한 청년팀의 사례를 전수하여 창업 활동 지원
전북	완주군(고산면)소멸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청년을 확대하는 지역, 지역에서 완주하는 청년】 • 사람과 일, 정보가 오가는 비밀언덕중개사무소를 통해 상생창업, 공간모색, 지역-청년 교류 등 정착지원
전남	신안군(안좌면)소멸 스픽스	【노두(섬과 섬을 잇는) 마을】 • 아름다운 섬과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 정착 지원
경북	영덕군(영해면)소멸 (주)메이드인피플	【천천히 걸어가고 싶은 청년들의 터전, 두꺼비 마을】 • 영덕 블루로드(트레킹 코스)와 영해면 근대화역사거리를 중심으로 걷기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트레킹 마을 조성
	상주시(남원동)소멸 무양주택 외 8개 업체	【우리처럼 살 수 있어요, 이인삼각 로컬러닝메이트】 • 남원동에 정착한 청년창업자들이 지역 경험과 경제적 자립 경험을 밑거름으로 안정적 정착 지원
경남	거제시(장승포동) (주)공유를위한창조	【청년들의 아웃도어 라이프가 있는 아웃도어 아일랜드】 • 목공을 좋아하는 마케터, 캠핑을 즐기는 기획자, 서핑을 사랑하는 공간운영자 등이 모여 아웃도어 비즈니스 창출

자료: 행정안전부(2021.4.18).

□ 마을기업 육성사업²⁷⁾

○ 목적: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

○ 마을기업 유형

- 자립형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나가는 마을기업
-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설립 전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단계의 마을기업
- 청년마을기업: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
- 우수마을기업: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마을기업

²⁷⁾ 마상진 외(2019).

○ 지원내용

-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대 3개년 간 1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3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차년도 마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 별도심사를 받아 선정되어야 함.
- 마을기업 지정 전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1천만 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1.2. 문화관광부

□ 관광두레 사업²⁸⁾

○ 관광두레 사업은 주민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에 관한 소관부처별 분절성과 개별 사업체 중심의 지원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한 사업임.

- (단계별 인큐베이팅)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경영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 이 과정에서 주민 주도의 관광경영주체 형성과 관광사업 운영에 대한 학습과 준비(사업체 형성 전 단계부터 지원, 지역관광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접근)
 - * 지역밀착형 멘토링 시스템 지원
 - * 타 부처 커뮤니티 기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포괄하되, 교육·훈련을 통해 관광경영 공동체로 특화·육성
- (맞춤형 지원) 지역의 유무형 잠재자원, 관광사업을 위한 수요(needs), 인력 등을 파악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관점에서 사업 계획 및 신청(자율성과 유연성 확보)
 -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며, 공공유희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경영공동체 활성화 및 재정적 자립 유도(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중심의 지원)
 - * 타 사업은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등 기업형 조직화에 집중

²⁸⁾ 문화체육관광부(2013).

- (지역 자원 연계) 지역 관광경영 공동체가 타 부처의 지역개발사업 및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관광시설, 방문자센터, 농산물판매장, 마을공동시설 등을 관광사업에 활용 및 운영·관리. 시설 간 연계 및 유희화된 시설의 경영주체가 되어 시너지 효과 창출(타부처 연계·협력)

○ 사업내용

- 추진체계: 문체부(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사업총괄 진행)·한국관광공사(홍보 및 마케팅) ⇒ 관광두레PD(현장 밀착지원, 기초자치단체(지원 협력) ⇒ 주민 사업체(창업 및 경영개선)
- 선정 대상: 관광두레PD ○명 및 해당 기초지자체 ○개, 지역별 1인

1.3.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²⁹⁾

○ 목적: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육성

○ 지원대상: 예비 창업자, 창업 후 2년 미만 기업, 재도전 창업자

○ 지원내용

- (창업자금) 최소 10백만 원~최대 50백만 원까지 차등지원(평균 30백만 원 내외)
- (창업공간)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기본 사무집기 제공
- (멘토링) 상시 상담을 제공하는 담임 멘토링과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 멘토링 제공

²⁹⁾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1).

- (창업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사후관리)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 연계, 교육, 컨설팅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 제공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농촌융복합산업분야)³⁰⁾

○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기술(IT) 직무에 특화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등으로 구분되며 기업 특성에 맞게 다양한 직무에 적용하고 있음.
- (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 (빅데이터 활용형) 앱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 (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 및 DB화 등

〈표 5-5〉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분야	수행기관	인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청년 디지털 일자리	한국농어촌공사	660
식품기업 온라인 홍보 마케터 양성	식품산업협회	200
외식기업 국내외 시장조사 지원	한국외식산업협회	100
농식품 벤처창업 청년 일자리 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7
스마트팜 청년 일자리 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50

자료: 고용노동부(2020. 7. 31.)

³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7. 31.).

1.4.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³¹⁾

○ 목적: (사회적)협동조합을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형” 창업을 지원하고, 운영 중인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의 고도화 지원

○ 지원대상

- 청년 등 일반인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및 기설립된 협동조합
- 각 부처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고, 중점 육성이 필요한 특화 분야
 - 예시: 프리랜서, 사업자연합, 사회서비스(발달장애인 돌봄, 협동유치원), 기타 규모화·확산에 적합한 협동조합형 사업모델 등

○ 지원내용

- (멘토링) 선배 협동조합이 팀 창업 방식으로 협동조합 설립 및 초기사업화 지원
- (컨설팅) 생애주기 및 특성에 적합한 협동조합 맞춤형 컨설팅
- (활동비용) 시장조사, 시제품 개발 등 창업프로그램 참여 중 소요되는 활동자금
 - ※ 설립분야는 창업팀당 최대 6.5백만 원 지원

1.5.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상인 육성(소상공인진흥공단)³²⁾

○ 중소기업벤처부는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청년몰(청년상인 집적단지) 조성으로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31) 마상진 외(2019).

32)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http://idea.sbiz.or.kr/mbl/local_policy)(2021. 6. 6).

- 지원대상: 전통시장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상인(창업), 전통 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도약)
 - (신규창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빈 점포 또는 기존점포(50% 이내) 창업희망자
 - (재도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창업한 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인 자
 - (가업승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직계가족으로부터 사업을 계승예정인 자

- 지원내용: (신규) 40백만 원 / (재도약) 20백만 원 / (가업승계) 5백만 원
 - 청년창업: 창업교육, 체험 점포 운영,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등 청년상인 창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
 - 비용 지원은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사후 정산 원칙이며, 제품 판매를 위한 재료비, 물품구입비, 장비임차료 등 직·간접비, 자산취득비 등은 지원 제외
 - 전략업종 선정 → 상인 공모/선정 → 창업교육 → 체험점포 운영 및 인테리어 등 점포 오픈 준비 → 점포 오픈 → 경영·판로 지원
 - 청년상인 도약지원: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시작품 제작,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
 - 지자체·상인회 추천 → 심사·선정 → 전문가 컨설팅 → 시작품·디자인 개선 지원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창업진흥원)

- 사업목적: 지역의 자연환경·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

- 지원대상: 예비 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의 로컬 크리에이터*
 - * 로컬크리에이터 :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지역가치, 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지역특화관광, 거점브랜드, 디지털문화체험, 자연친화활동 등)

〈표 5-6〉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구분	내용
지역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문화나 고유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 • (기대효과) 플랫폼과 더불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므로, 지역을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비대면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가능
로컬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산물, 미활용 작물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유통 • (기대효과) 위생적인 환경에서 재배되는 스마트팜이나 농수산 산지와 연결된 구독경제, 종자개발부터 유통·제조·판매 등이 다양하게 결합된 6차산업 발전
지역기반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 (기대효과) 수공업과 DIY 활동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로컬제조업으로 육성
지역특화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자원(자연환경, 여행지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 지역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기대효과) VR 등을 활용한 가상 관광, 체험 등의 관광 수요증가 예상
거점브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거점 역할 • 지역성과 희소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 • (기대효과) 쇼핑은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 오프라인 소비는 단순소비보다는 가치소비(Meaning Out)가 중요해져 지역별 거점브랜드 육성이 필요
디지털문화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과학 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재해석 또는 체험 • (기대효과) AR, VR 등과 결합된 디지털 문화체험 콘텐츠 시장 확대 예상
자연친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로 상이한 자연환경(바다, 산, 강 등)에서 진행되는 서핑,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 (기대효과) 집단적 활동(테마파크 등)보다는 가족 또는 나홀로 단위의 레저활동(캠핑, 글램핑 등)의 수요 증가 예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1a).

○ 지원내용: 로컬 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 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예비 창업자: 50명 내외(사업화 자금 최대 1천만 원 지원)
- 기창업자(업력 7년 이내): 200명 내외(사업화 자금 최대 3천만 원 지원)

○ 주요특징: 전국 17개 시·도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창업지원으로 전 지역이 고르게 성장하는 경제 균형발전에 이바지

□ 복합청년몰 (소상공인진흥공단)

- 사업목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내 유희공간 확보가 가능한 시장을 대상으로 고객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환경 개선,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내 유희공간(500㎡ 내외) 확보가 가능한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내 복합청년몰 설치를 희망하는 상권관리기구 및 지자체
- 지원내용: 청년점포 및 공용공간, 고객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환경 개선, 각 부처 및 민간 협업 시설,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등 지원이며 (기반조성) 바닥정비, 진입환경 개선, 공용공간(공용라운지, 공동창고, 쉼터, 화장실, 안내센터 등), 전기·수도·가스, 소방·안전 등 기반조성, (확장시설) 청년상인 영업관련 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지역민 생활·소통공간, 각 부처 및 민간협업 공간 등, (청년상인 창업) 청년상인 모집 및 창업교육, 입점지원(점포 리모델링, 임차료 보조), 메뉴·레시피 개발, 경영기술 컨설팅 등, (공동마케팅 등) 공동이벤트, 통합홍보물 제작, 온라인·SNS 홍보·마케팅 등
- 지원한도: 몰 당 30억 원 이내로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2. 주거·생활인프라 정책

2.1. 주거플랫폼 사업

○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1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12개를 선정하여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

〈그림 5-1〉 2021년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지역



자료: 국토교통부(2021).

○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

- (투자선도)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 (지역수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소규모 편의시설(생활SOC) 공급

① (투자선도지구) 경남 함양 e-커머스 물류단지

- 경남 함양군에서는 (주)쿠팡이 설치 예정인 대규모 물류센터와 연계하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 (면적) 650,858㎡ (사업비) 총 1,740억 원 (사업기간) '22~'26년
- 물류단지에 물류·유통·가공·제조 등 다양한 민간기업 등을 유치·집적화하여 물류거점을 조성하고, 인근 지역에 물류단지 근로자와 기존 주민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100호)과 복합커뮤니티시설 등도 함께 공급

② (지역수요맞춤지원)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주거플랫폼

- 거창군·영동군·옥천군은 폐교위기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 지자체, 학교, LH 등이 함께 노력하여 전·입학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
-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돌봄공간,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공유카페, 생활체육공간 등을 조성하고, 초등학생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정비

③ (지역수요맞춤지원) 청년 창업과 연계한 주거플랫폼³³⁾

- 정선군·청양군·상주시·의성군·하동군에서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스마트팜 교육 등 다양한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
- 지자체별로 창작·홍보·판매 등을 위한 스튜디오 제공, 예비창업자 역량강화 교육과 전문가멘토링,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창업·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
- 이들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과 지역 내 부족한 생활·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공급하여 정주여건을 개선

³³⁾ 베타뉴스(2021. 8. 1).

- ④ (지역수요맞춤지원) 그 밖에도, 고창군·강진군·영암군에서는 인근 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근로자 및 기존 거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를 조성하는 주거플랫폼 사업 진행

2.2. 귀농·귀촌 임대주택

○ LH는 2019년부터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해왔으며, 보성운곡단지와 함께 경북 상주시 공검면 상주공검단지(20가구)에 주택을 건설 중임.

- 보성과 상주 모두 올해 12월 입주가 목표로, 상주의 경우 조만간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민에게는 경작지 유상임대와 농업창업자금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됨.
- 보성운곡단지 내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별 200㎡(60.5평) 대지에 단독주택·주차장·텃밭·마당으로 구성됨. 공급평형은 전용면적 기준 단층형(5가구) 36㎡(약 11평), 복층형(13가구) 59㎡(약 18평)다. 임대가격은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임.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나 구성원으로 국민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자격 충족 시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음.

2.3. 귀농·귀촌 주택 리츠(LH)³⁴⁾

○ 추진배경: 부동산금융기법을 활용하여 LH자산(공동주택용지)을 지렛대 삼아 농촌지역에 활력을 주는 귀농귀촌주택 공급모델 마련

-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소외지역 주택개발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패키지형 공모방식”으로 주택개발리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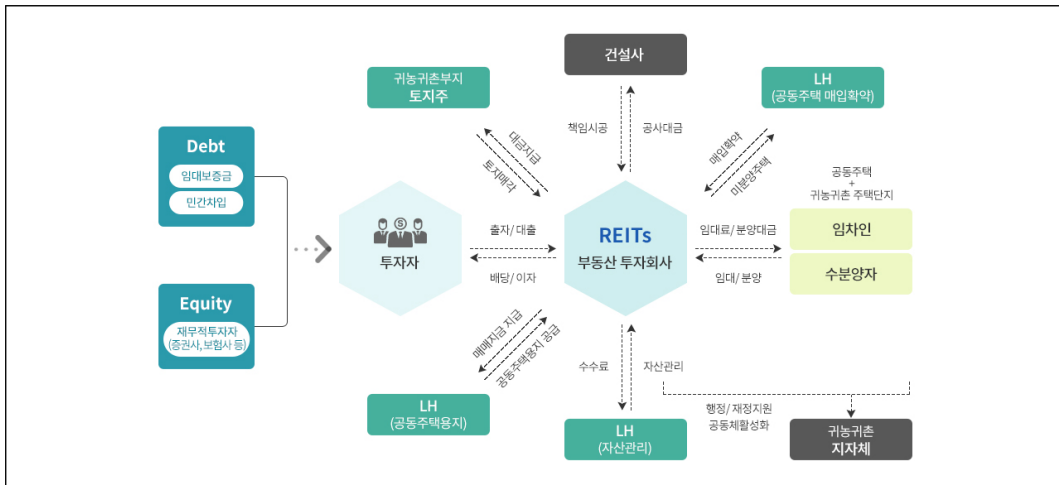
³⁴⁾ 이미홍 외(2020).

- LH 공동주택용지와 농촌지역 귀농귀촌주택부지를 리츠에 패키지로 공급하여 도시 지역의 편중된 개발이익을 농촌지역에 사회적 재분배

○ 사업개요

- 『주택개발리츠』가 사업시행자로서, LH공동주택용지(분양)와 지자체 소유 귀농귀촌부지(4년 임대 후 분양)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 후 청산(시공사 책임준공)
- 임대조건은 시세보다 저렴하며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도시에 거주 중인 귀농귀촌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그림 5-2〉 귀농·귀촌 리츠 사업 추진체계



자료: 이미홍 외(2020).

○ 참여자 역할

- (LH) 공동주택용지 매각, 미분양 매입확약(상가, 귀농귀촌주택 제외), 자산관리회사 (AMC)
- (지자체) 행정지원, 입주자지원 프로그램 등 공동체 활성화
- (건설사) 책임준공, 분양 및 임대, 분양률연동 공사비
- (금융기관) 총 사업비 조달

○ 추진경위

- '19.12. 농촌지역 지자체와 MOU 체결(LH↔의성군, 구례군)
- '20.03. 의성군 사업대상지 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 → 지역주민의 폐교부지 존치 민원으로 사업 잠정보류
- '20.06. 구례군 사업대상지 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 → '20.8월 토지 감정평가 실시 및 토지취득 협의
- '20.07. 신규후보지 발굴 및 사업구상 협의(하동군)

○ 사업추진현황

- 경남 하동군 악양면은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 최참판댁과 평사리 들판, 지리산 형제봉 등산로 입구 인근에 위치하며 △2022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 △2024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한다.

〈그림 5-3〉 귀농·귀촌리츠 사례(경남 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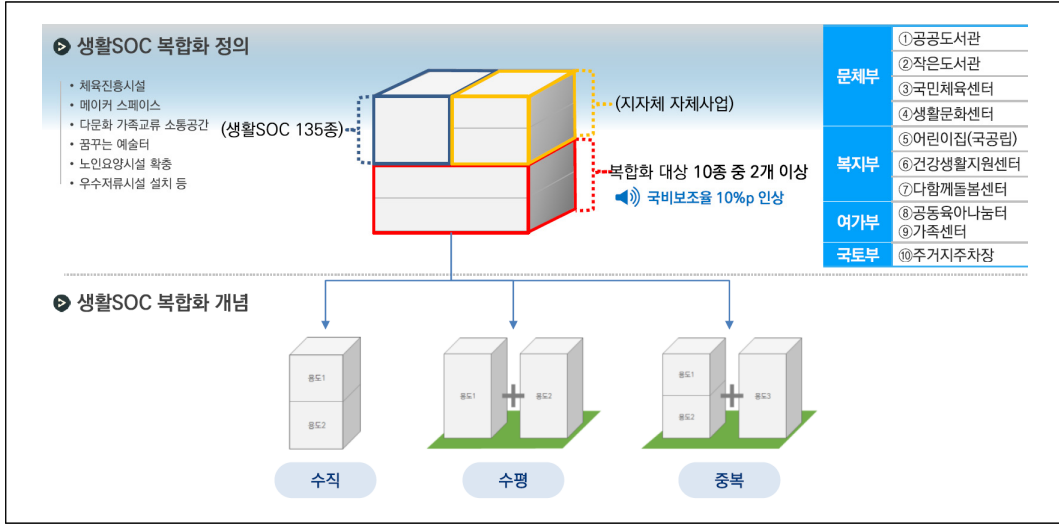


자료: 이미홍 외(2020).

2.4. 생활 SOC 복합화 사업

-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2019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임(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 2020).

〈그림 5-4〉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2020).

- 이 사업은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생활SOC를 각각 설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생활SOC를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함으로써 부지 이용의 효율을 제고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함. 7개 중앙부처(국조실,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와 11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발전투자협약(지역이 주도하여 다부처 묶음 사업을 기획하면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의·조정을 거쳐 수평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체결하고,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녹색건축물 건립, 주변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품격 향상 등을 행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함.
- 대상시설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0종 시설(① 공공도서관, ② 작은도서관, ③ 국민체육센터, ④ 생활문화센터, ⑤ 국공립어린이집, ⑥ 주민건강센터, ⑦ 다함께돌봄센터, ⑧ 공동육아나눔터, ⑨ 가족센터, ⑩ 주거지주차장)를 정하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신청을 받아 '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전국 289개 사업을 선정함.

〈표 5-7〉 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시범사업(2019년 균형위 의결)

지역	사업명	사업비(억 원)	관계부처	
			주관	협조
서귀포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구축사업	182(국비91)	복지부	농림부
거창·합천	거창송강기 생산기반 세계 송강기 허브도시 조성	241(국비91)	행안부	산업부·고용부
부산	해양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182(국비91)	산업부	과기·해수·중기부
광주광산구	지역이 주도하는 시민체감형 공기산업 추진	182(국비91)	산업부	과기·환경·중기부
군산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182(국비91)	해수부	행안부·국토부
청주·증평	세계3대 광천수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250(국비91)	문체부	환경부·국토부
세종	도농상생 로컬푸드 운동 확산 기반 구축	361(국비91)	농림부	문체부·환경부
의성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 포레스트	182(국비91)	국토부	문체·농림·복지부
완도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182(국비91)	해수부	복지부·기상청
강릉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181(국비90)	산업부	문체부
홍성	유기농업 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 홍성형 프로젝트	182(국비91)	농림부	교육부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2020).

3. 문화·공동체 활성화 정책

3.1. 행정안전부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³⁵⁾

○ 사업목적: 저출생·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이주 등 지역 내 인구 감소로 인한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공동체 및 자치 기반 붕괴, 관리비용 상승 등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2017년~)

-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활수준(national minimum)을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균형발전 촉진
- 청장년의 정착과 창업을 지원하고, 귀촌을 활성화시키는 등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추진

³⁵⁾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 5. 11).

○ 지원내용 및 규모

- 2019년: 청장년과 귀촌인들의 지역 자원(역사·문화·특산물 등)을 활용한 창업 공간, 창업 컨설팅·교육·실습실 등 창업 지원 시설, 정보교류 및 쉼터, 문화·예술 창작 공간 등 소통·교류 공간 조성 등이 → 총 4~5개 자치단체(자치단체당 8~10억 정도, 특교세+지방비)
- 2020년: 인구감소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특성 및 현장수요에 맞추어 자치단체가 원하는 사업(소프트웨어)을 공모하여 선정·지원 → (지원규모) 8~16개 자치단체(자치단체당 1~2억 원, 국비+지방비)
-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활력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제안하는 4가지 유형의 인프라 구축사업(시설건립, 공간조성 등) 공모선정 → 총 6개 자치단체(자치단체당 특교세 5억), (총사업비) 60억 원(특교세 30, 지방비 30)

〈표 5-8〉 2021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대상

지자체		사업명
충북	괴산군	수육정 관광지 청년관광활력 특화사업
전남	화순군	청년이 행복한 화순 ZZang 프로젝트
경북	예천군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조성
경남	하동군	하동 청년센터 징검다리 조성
전북	진안군	청년거주&창업공간 “청년 with 꿀벌집”
전남	곡성군	도담 도담 마을만들기 사업

자료: 행정안전부(2021).

○ 주요 사업성과

- 강원도 평창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지역활력센터 및 IT기반 스마트타운’을 조성
- 충북 음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의 적응능력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신축’
- 북 문경은 청년 이주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및 셰어하우스를 건립하기 위해 ‘청춘 텃밭사업’ 등을 추진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³⁶⁾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며 청년들의 다양한 지역 활동을 도와줌.
 - 지역 멘토와 전문가를 연결하고, 청년공동체 간의 연계망 구축과 과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 '17년 16개 팀을 시작으로 '19년까지 51개 팀이 지원을 받았음. 올해에는 1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16개 팀이 선정되어 지역과 연계한 활동을 진행

〈글상자 19〉 청년공동체 활동 사례

- (프로젝트그룹 짓다) 마을 주민, 지역 청년단체 등과 함께하는 감자 수확 축제인 '팍터짐 페스티벌' 개최 등 청년, 마을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 운영(제주 제주시)
- (다른코리아) 청년 역량강화 사업, 청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스타트인로컬(Start in Local)'이라는 지역 기반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하여 기존의 공간과 창업 전문가,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연계하는 등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대전 유성구)
- (왓슈) 지역 청년모임 '왓슈'를 설립하여 농업관련 기술 전달·컨설팅 등 무연고 귀농 주민,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도우며, 소규모 지역행사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 이주민간 교류 증진(충남 홍성)
- (AJA 지리산 청년 공동체) 시골살이를 원하는 청년들이 모여 삶의 자립,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청년공동체로 직접 수확한 밀과 쌀을 이용한 채식 요리 워크숍 개최, 은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목금토 공방 운영 등 다양한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전북 남원)

자료: 행정안전부(2020).

□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사업³⁷⁾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가치 회복으로 도시지역은 소원했던 이웃 간의 공동체 복원, 농촌지역은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도록 함.
 -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주민들이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가치를 찾는 풀뿌리 자치활동과 이웃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공동체 내 돌봄을 활성화

³⁶⁾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 7. 17).

³⁷⁾ 행정안전부(2021).

○ 사업추진체계

- (행안부)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을 통해 사업 기획·총괄 및 자치단체 사업추진 지원
- (시·도) 시·도별 자체 사업 추진 및 관할 시·군·구의 사업을 총괄·지원하는 사업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
- (시·군·구) 사업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전담팀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배치(주민자치, 복지, 총괄 부서 등)
- (읍·면·동) 주민센터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사업 추진
- (협력체계) 지자체별 자체 추진협의회 운영,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그림 5-5〉 읍·면·동 기본 조직·인력 모델

구분	모델	기능	조직	인력 구성*
읍·동	기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상담, 통합사례 관리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복지+건강 서비스 주민 대표기구 구성·운영 지원 등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팀) 자치 1명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 3명, 간호 1명
	공공서비스 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보건복지 대상 범위 확대 종합상담 실질적 민·관연계 주민 대표기구 구성·운영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팀) 자치 1명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 7명, 간호 1명
면	기본형	• 읍·동 기본형 모델과 동일		
	농어촌 특성화형	• 기본형 모델과 동일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마설치(전담 인력만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 1명, 복지 2명, 간호 1명

자료: 행정안전부(2021)

○ 읍·면·동 조직 기본방향

- '22년까지 전체 읍·동은 「기본형」을 거쳐 「공공서비스 연계형」으로 단계적 전환
 - * 기본형: 행정팀에 주민자치 전담인력 1명,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인력 1명이 추가된 형태
- 면은 「기본형」 또는 「농어촌특성화형」으로 전환 추진

○ 인력별 주요 업무

- (시·군·구 사업 총괄인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체계 구축, 자체사업 기획·총괄, 관련 부서 및 소관 읍·면·동 지원 등
- (읍·면·동 복지인력)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발굴 및 방문상담, 보건·복지·건강 등 전문 종합상담,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주민역량 강화
- (읍·면·동 간호인력) 위험도별 지속적 건강관리, 맞춤형 지역사회자원연계, 건강현황 분석에 따른 해결전략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읍·면·동 주민자치 인력) 주민자치회 구성 지원,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지원, 민·관 협업 실행 지원 등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³⁸⁾

- 사업목적: 지역주민들이 지역활동이나 지역사회혁신사업에 필요한 유희공간을 공동 매입·운영하는 경우 금융지원(보증·저리대출)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증·저리대출) 및 컨설팅 지원 등 제공

<글상자 20>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업무협약(MOU) 체결('19.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기관) 행정안전부-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내용) '19년 시범사업 및 '20~'22년 본사업 저리대출·보증 제공<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안전부) 사업 총괄, 사례 발굴 및 선정 기준 수립, 협력사항 조정 등- (농협은행) 37.5억 원의 보증재원을 신보에 제공 등- (신용보증기금) 농협의 보증재원(37.5억 원)의 10배(375억 원) 보증, 건당 최대 5억 원 한도 내 100% 보증 제공(0.5% 고정보증료율)
--

자료: 행정안전부(2021. 4. 30)

- 사업규모: 1건당 10억 원 한도 내 금융지원('20~'22, 3년간 총 375억 원)

³⁸⁾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 4. 30).

○ 사업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조건) 융자금리 2.95% 내외('20.12월 기준), 보증료율 0.5%

〈글상자 21〉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사례

- '목포 건맥1897'은 지역주민 100여 명이 구도심 건해산물 거리에 협동조합형 마을편과 마을 호스텔을 조성함. 이 단체는 향후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축제 등에 활용함.
-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임대료 상승에 부담 갖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간을 확보할수 있게 되어 치과와 한의원으로 제한되었던 진료과목을 확대. 또한, 돌봄센터 등도 만들어 우리동네사랑방 역할을 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
- '제주 푸른바이크쉐어링'은 농촌마을에 자전거 학교를 조성하고 자전거로 여행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자전거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전거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등 지역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함.

자료: 행정안전부(2021. 1. 5).

3.2. 문화관광부

□ 지역문화인력 양성/배치 사업³⁹⁾

○ 2017년 시작된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인력과 문화시설의 매칭을 통해 지역의 문화인력을 발굴하고 경력경로를 개발함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 시설에 안정적 고용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임.

-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문화인적 자원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인력이 지역에서 '발굴-양성-활동'할 수 있는 자생적 문화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문화시대 지역의 문화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인력이 지역문화시설에서 실무자로 근무하며 문화현장이 원하는 지역문화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함.

39) 마상진 외(2019).

○ 지원규모

- 사전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40개 지역문화시설(시설별 1명, 총 40명)
- 연속지원 참여시설 15개 시설, 신규지원 참여시설 25개 시설

○ 지원내용

〈지역문화인력 인건비 지원〉

- 대상: (지역문화시설)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인력)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
- 내용: 지역문화인력 인건비 월 2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역문화인력·시설 프로젝트 지원〉

- 대상: 2018년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문화인력 및 지역문화시설 담당자
- 내용: 지역문화시설 담당자의 협력지원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인력이 주도적으로 기획, 운영하는 시설의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비 지원
- 규모: (신규) 400만 원, (연속) 600만 원 지원

〈지역문화인력·시설 역량 지원〉⁴⁰⁾

- 대상: 2018년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문화인력 및 지역문화시설 담당자
- 내용: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네트워크 CoP(Community of Practice) 지원
 - * 지역문화의 이해, 지역 문화인력의 역할·미션·자기비전 수립 교육 등
 - * 지역문화시설 담당자 대상 멘토링방법 교육을 통한 시설 내부 역량강화
 - * 지역문화인력 간 네트워크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CoP 지원

40) 마상진 외(2020).

□ 문화 이모작 사업⁴¹⁾

- 이 사업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력으로 농어촌문화리더양성 사업을 시범운영 하게 되었으며 2012년 이후 문화부 산하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여 공모로 지역주관단체를 선정하여 추진 중인 사업임. 본 사업의 목적은 지역 고유의 마을 문화 매개인력 발굴을 통한 지역 문화발전 기반 마련 및 문화매개 인력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사업 발굴 및 지역문화 역량 강화에 있음.
- 사업대상: 농산어촌, 도농지역 예비 문화리더(마을 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귀농/귀촌인 그룹 등)
- 사업내용: 마을 주민공동체 문화 매개인력 발굴 및 문화공동체 형성지원, 마을 주민공동체 지원, 주민 문화기획 및 공동체 교육 컨설팅, 사업 결과공유회
- 사업성과: ‘2010년 농어촌 마을 문화심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문화이모작 사업은 ‘농어촌 구석구석, 촘촘히 스미는 문화물결’이라는 비전 아래 지금까지 1,560명의 예비문화리더, 24,800여 명의 주민, 28개 지역교육기관이 참여함(지역문화진흥원 2021).

〈표 5-9〉 문화이모작 사업 추진체계

사업주체	역할	내용
지역문화진흥원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신청
	지역 교육기관 모집공모 및 선정	4개 교육기관 선정
	선정 기관 워크숍 및 컨설팅	공동 커리큘럼 개발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전체 사업 홍보 및 성과관리	교육 및 현장실습 홍보, 성과관리
	성과공유회 운영	교육생 간 성과공유회 및 시상
지역 교육기관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운영	4개 기관 교육생 모집 및 교육 교육생 관리, 지역간 네트워크 활동 등
	현장실습 관리 및 지원	현장실습 관리 및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내부자료.

41)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rcda.or.kr>)(2021. 8. 8).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지역문화진흥원)⁴²⁾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여 건강한 지역문화를 만들기를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매개로 한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문화적인 삶을 향유하고, 이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품격과 행복온도를 높여나가는 공동체
- 지원사업
 -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동일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반지원(마을공동체 형성 지원)>과 사업 경험이 있는 마을이 인근 마을의 공동체를 발굴하고 확산을 지원하는 지역협력네트워크지원으로 진행
 - 생활문화공동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 마을 자원과 주민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마을활동가 및 참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컨설팅, 공동체 간의 연계를 위한 지역 교류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생활문화 활동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으로 건강한 지역문화 형성 및 지역 간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줍.

4. 소결

- 농림축산식품부 외에 지역소멸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과 관련한 일자리, 주거·생활인프라, 공동체 활성화 등 관련 정책들이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
 - 일자리: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 주거·생활인프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 문화·공동체: 행안부, 문화부

⁴²⁾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 귀농·귀촌 정책은 지역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인 만큼 부처 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공동 대응 필요 → 행안부, 국토부, 문화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농촌 정책 유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 필요
 - 문화이모작 사업: 문화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협력(2010년)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행정안전부-농협-신용보증기금(2019년)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2020년)
 - 생활SOC 복합화 사업: 범부처

6

국내외 귀농·귀촌 정책 우수 사례

1. 국내 지역 사례

1.1. 수도권⁴³⁾

○ 서울시는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인력과 자본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을 살리는 상호 공생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떡거리, 문화, 일자리, 자원, 정보, 비즈니스)을 추진함.

□ 삶의 경로탐색 프로젝트(별의별)(서울시)

○ 사업목적: 지역에서 일거리를 기반으로 도시와는 다른 일상을 보내며 새로운 삶의 경로를 모색(농촌 지역의 일거리를 매개로 현지에서 2~4주간 살아봄)

○ 사업대상: 새로운 삶의 경로를 모색하는 만 19~39세 청년(모집인원: 40명)

○ 지원내용: 프로그램 참가비 무료, 프로그램 참여기간 숙박비, 1일 1회 식비

⁴³⁾ 우성희·송하진(2019)을 바탕으로 최근 자료 수정 보완.

○ 세부프로그램(2018년 1곳 → 2019년 4곳 → 2020년 6곳으로 확대)

- 영광 이주돌봄: 사람과 사랑을 잇는 마을가게 ‘동락점빵’ 보조, 어르신 농사를 돕고, 어린이 농부학교 거들기,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는 복지 활동
- 옥천 이주기자: 옥천신문사 기자 동행 취재, 취재 실습, 인터뷰 등 보조, 교정 및 교열, 신문배송 참여, 옥이네밥상, 월간옥이네 등 지역 네트워크 활동 연계
- 홍성 이주농부: 유기농 농업실습(청년 농부들과 함께 하는 쌈채소, 허브 수확 등), 마을 활동 및 지역 공부 모임 참여
- 춘천 이주유학: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일상적 돌봄 보조,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가꾸는 텃밭운영, 어르신 반찬배달, 이미용 도움, 춘천 내 사회적경제 기업 및 센터 탐방
- 춘천 이주발전: 공유자원(커먼즈) 이해와 공부, 공유자원 조사 및 지역 공동체 탐색, 프로젝트(공간 기획, 춘천 공유소모임 만들기) 실행
- 상주 이주다양: 폐교 기반 카페, 목공방, 농산물 가공장, 곤충 체험·전시장
- 공간조성 및 콘텐츠 기획: 친환경 유기농 실습(고추, 오이, 깻잎, 쌀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 패키지(디자인) 및 온라인 스토어 판매 보조

○ 협력기관

- 홍성: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마을연구소일소공도협동조합
- 영광: (사)여민동락공동체
- 옥천: 주간옥천신문(주)
- 춘천: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춘천사회혁신센터, 동네방네협동조합
- 상주: 청년이그린협동조합
- 재단법인 해피빈

○ 사업성과: 지역 자체적인 재원을 투자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이 2주를 살아보고 이후 더 머물고 싶거나 지역 사회 정착을 고려하는 경우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 현장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연결

□ 서울청년 지역상생 일자리 사업

- 역량 있는 서울청년이 직접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살아보며, 지역기업에서의 근무 및 사회 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10개 지자체가 공동지원하는 사업
 - 서울거주 청년의 개별 적성에 맞는 지역일자리 경험기회 제공
 - 지역사회에 서울 청년의 경제활동 및 교육·복지 활동 수행으로 지역 경제활력 제고

- 사업 참여 지자체 및 지역 운영기관
 - 지방자치단체: 총 10곳(강원 속초시, 강원 영월군, 강원 태백시, 충북 괴산군, 충남 부여군, 충남 보령시, 전북 장수군, 전남 목포시, 경북, 경남)
 - 지역 운영기관(진흥원): 총 10개 운영기관(서울산업진흥원, 강원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경상연구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광주 테크노파크,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경제진흥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지원내용
 - 수도권 외 지역기업 약 8개월간 근무기회 제공(세전 월 220만 원 급여 보장)
 -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직무교육 및 멘토링 제공
 - 매 3개월마다 최대 30만 원 장기근속 수당(복지포인트) 지급(최대 90만 원 지원)
 - 근로 및 자취 생활에 필요한 초기 정착 응원키트 제공
 - 지역 기업/명소 탐방 프로그램 제공
 - 청년 간 친목도모를 위한 네트워킹 활동 참여기회 제공
 - 기업과 청년 상호 동의 시 사전체험기간 지원(5일)

□ 넥스트로컬 (서울시)

- ‘넥스트로컬(Next Local)’은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서울청년에게는 지역에서 새로운 창업모델을 발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프로젝트
- 전국 지자체 지역자원을 연계, 활용해 창업하면 시범운영비용을 비롯해 최대 7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 창업유형은 지역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연계한 비즈니스형 뿐 아니라 생활거주지 및 사업소재지 등의 이주를 통한 지역안착형 그리고 타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지역 확장형으로 구분
- 2기 사업은 2020년 6월 말 201명을 초기 선발해 2개월간 13개 지자체 대상으로 자원 조사를 진행
 - 1차로 선발된 46개 팀 98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창업코칭 및 교육,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지원
 - 나주 특산물인 쪽을 활용한 친환경 샴푸바(나주 ‘모노무브’), 고창에서 나는 검정 겉보리를 활용한 커피 대체음료인 흑다향음료(고창 ‘달차컴퍼니’), 홍성의 유기농 농산물로 구성된 밀키트(홍성 ‘초록코끼리’) 등 총 89종의 상품을 개발
 - 나주 ‘모노무브’는 나주 쪽 샴푸바로 목표액의 6002%(3,001만 4,000원)을 달성했으며, 앵콜 요청으로 펀딩을 재오픈. 의성 양파를 활용해 양파 카라멜라이징 상품을 개발한 ‘마스플래닛’과 고창의 자연발효식초를 활용한 0칼로리 탄산음료를 개발한 ‘플라이밀’도 각각 4,237%, 4,070%를 달성
 - 창업활동 과정에서 총 16건의 기술이전 및 특허출원이 이뤄졌고, 지역주민 4명을 포함해 3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 지자체와 재단 등 지역 현지 기관들과 총 39회의 업무협약을 체결
 - 넥스트로컬 2기 창업팀의 지속적인 성장과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하기 위해 21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비공개 행사로 벤처캐피탈(VC) 및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투자대회를 운영

□ 도시 - 농촌 상생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사업⁴⁴⁾

- 사업 목적: 도시와 농촌의 위기 극복과 인간적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 간 상생협력 추구, 공동체 주도의 순환과 공생의 내발적 발전전략 추진으로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활력 증진, 상생공동체 문화 확산 및 지속가능한 상생교류 촉진
- 사업내용: 서울시 자치구 공동체, 농촌공동체가 희망하는 교류사업 및 일손돕기 포함 도·농 교류회 진행 → 매칭 공동체당 1년차 1천만 원, 2년차 7백만 원, 3년차 5백만 원 활동비 지급

〈표 6-1〉 도시-농촌 상생공동체 구축사업 내용

유형	사업내용
농산물 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을 통한 판로지원 • 자치구 공동체 직거래 행사
정보교류 및 상호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공동체 활동 정보교류를 통한 상호 역량강화: 공동워크숍, 방문교류, 선진사례 투어 등
체험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체험 및 식생활 체험을 통한 교류활성화: 공동체 단합,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등 • 농번기 일손돕기, 공동체 교류프로그램 운영: 서울 자치구 공동체에서 농촌일손지원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 도시농업 관련 교류
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및 축제 방문 - 마을행사, 사회적경제 행사, 지역축제, 상생문화프로그램제작 등 - 공동체 간 별도의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농촌지역 문화사업 지원 및 교류
귀농귀촌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관심 주민 조직 및 교류: 농작업 및 선배 귀농귀촌인과의 대화, 귀농귀촌 지역 정책소개 등

자료: 서울시(2021. 2. 23).

○ 신청자격

- 도시공동체: 서울 자치구 공동체(프로그램 운영에 최소 20명 이상 조직 가능 공동체)
- 농촌공동체: 지역 시·군 공동체(최소 20명 이상 조직 가능 공동체) → 읍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휴양마을
- 기타 공동체 사업 추진 마을 등), 농촌개발사업 추진 권역(마을), 공동체 범위의 사회적경제조직, 공동체지원조직 등

⁴⁴⁾ 서울시 보도자료(2021. 2. 23).

○ 지역상생 코디네이터 육성

- 각 공동체별 담당 지역상생코디네이터(간사) 지정
- 월 30시간의 활동비 지급[서울시 자치구 공동체 지역상생코디네이터(간사)에 한함]
- 코디네이터 교육 및 교류회 3회

○ 추진사례

- 2018년: 강북-평창, 관악-상주, 서대문-완주, 성동-포천, 은평-홍성
- 2019년: 광진-홍천, 동작-순창, 용산-괴산, 종로-남원
- 2020년: 노원-곡성, 송파-거창

□ 연결의 가능성(서울 청년 지역교류 지원사업)

○ 사업목적: 서울과 지역의 청년들이 교류하며 발생하는 가능성과 기회를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공공의 장 개척.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모델 발굴 및 추진

○ 지원대상: 대표자가 청년(만 19~39세)인 법인, 기업, 단체

○ 지원유형: ① 연결형, ② 교류형

- 연결형: 서울과 지역 청년단체 연결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지역교류 모델 가능성 탐색
- 교류형: 청년마을조성 등 구체적인 현장 활동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진행

○ 지원내용: 연결형 최대 3천만 원, 교류형 최대 1억 원 이내 차등지원 및 교육지원 등

○ 지원규모: 총 7억 원

□ 청춘 마을(인천 강화)

- 청춘 마을은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청년 일자리 플랫폼이자 문화 관광 거점공간. 농업 6차 산업화 모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관광객의 체험활동 중심의 문화 공간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운영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불은농촌문화센터에서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10주 과정의 기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9~11월에는 실습과 창업 컨설팅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창업과 취업을 지원
- 교육은 ① 수제맥주·천연발효빵·막걸리 등 자연발효 기술, ② 화문석 직조, 돌담 쌓기, 친환경 목공 등 생활 기술, ③ 문화디자인, 스마트폰 영상 제작 등 문화 기획, ④ 초음파 농법, 목화 재배 등 대안 농법 등 4개 분야
- 청춘마을 운영비 5억 7천만 원은 인천시와 고용노동부가 분담하고 교육 프로그램은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가 위탁 운영

〈글상자 22〉 강화 협동조합 청풍상회

협동조합 청풍상회는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의 재래시장이인 풍물시장과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청년들로 이뤄진 협동조합이다. 현재 5명의 청년이 함께 〈한판식당〉(토스트 등 판매) 〈아삭아삭순무 민박〉(게스트하우스), 〈스트롱파이어〉(떡)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민박집과 떡은 한 건물을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1층에 떡이 2, 3층은 민박집으로 운영 중이다. 처음에는 3명의 청년이 모여 '청풍상회 화덕식당'이라는 화덕 피자집으로 시작했다. 2013년 강화 풍물시장 육성 사업단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가게를 얻었다. 원래 풍물시장 육성 관련 사업에서 청년문화사업 기획자로 활동하던 '유마담(유명상)'과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장사를 하다 강화로 이주해 살던 '베니스(조성현)' 및 강화도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지내던 김토일 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사람도 더 모이면서(총총, 수리)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었다. 강화의 사례는 협동조합 청풍상회가 이 지역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주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하게 된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조망하였다. 특히 청풍과 같이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과의 협력이 눈에 띄었다.

자료: 우성희 등(2019).

1.2. 강원

□ 홍천군 전원도시 특구⁴⁵⁾

○ 홍천군은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국·도비를 포함 사업비 242억 원을 들여 3개 분야의 11개 특화사업을 추진함.

-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⁴⁶⁾는 수도권 귀촌인을 위한 전원생활형, 건강 목적의 귀촌인을 위한 산림휴양형, 농업경영 목적의 귀농인을 위한 농업경영형 등 4개 권역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원격의료 서비스, 농가소득 전략품목 육성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함.
- 귀농인이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 센터를 운영함.

○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원사업 추진과 더불어 홍천군은 지역민과 귀농·귀촌인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이장, 청년귀농인, 등으로 구성된 멘토단, 5년 미만의 귀농·귀촌인으로 구성된 상생네트워크 등의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했으며 갈등관리 위원회를 조직해 교육,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 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상생 발전시키고 있음.

-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현실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귀농·귀촌 갈등민원 전담해결팀을 운영.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갈등 발생 초기에 해결하기 위해 귀농·귀촌 멘토단, 마을대표자,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켜 ‘현장·전담해결팀’과 ‘갈등관리위원회’를 상시 운영
- 현장해결팀은 읍·면장이 운영주체가 되어 갈등민원제출(접수) 시 현장에서 갈등요인을 파악하고, 마을지도자와 귀농·귀촌 멘토를 중심으로 현장해결을 추진함. 현장에서 해결되지 못한 갈등민원의 경우 기획감사실 귀농·귀촌지원센터로 통보되면, 다양

45) 강원도민일보(2020. 10. 21).

46)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지역특구법 2004~).

한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시도하게 되며, 미처리 건은 갈등관리위원회에 상정됨. 상설로 운영되는 갈등관리위원회는 귀농·귀촌 전문가를 참석시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함.

1.2. 충북

□ 충북형 농시⁴⁷⁾

○ ‘충북형 농시 조성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인구 유출에 따른 과소화로 소멸 위기에 봉착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 수준의 생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촌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촌 인구 유출을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사업임.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식품부) 또는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부)과 같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부족한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충북형 농시 조성 사업을 지원

○ 사업내용

- 1단계 사업('20~'22 / 80억 원(도비 40, 시군비 40)): 영동군(황간면), 증평군(증평읍), 괴산군(괴산읍), 단양군(매포읍)

- 2단계 사업('21~'23 / 80억 원(도비 40, 시군비 40)): '20년 선정(4개 시군)

* '21년 선정(3개 시군)

○ '19년 하반기 1단계 사업으로 영동군(황간면), 증평군(증평읍), 괴산군(괴산읍), 단양군(매포읍) 등 4개 시군을 우선 선정

- 청주시 내수읍: 보건·문화분야(건강관리실, 문화소극장)

47) 마상진 외(2019).

- 옥천군 옥천읍은 교통·안전분야(안전보행로, BIS정류장)
- 진천군 진천읍은 보건·의료분야(케어팜, 찾아가는 한방약손)
- 음성군 삼성면은 의료·복지분야(독거노인응급안심서비스, 복지회관)

□ 1939 행복공동체⁴⁸⁾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지역의 젊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과소마을(2020년 농촌마을 10곳 중 한 곳은 20가구 미만)이 늘어나고 농촌공동화가 현실화 되면서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추진
-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최근 농촌지역 갈등의 핵으로 떠오르는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생 행복공동체(20개소)를 육성
- 지속적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 마을 청년활동가(11명)를 배치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 업종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청년주도형 사회적기업(2~5개소)과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육성(1개소)
- 청년의 영농참여 확대, 청년농부의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 육성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유입으로 농촌산업 구조를 농촌융복합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청년 예비농부 우리지역 정착 유도(20명)와 도시청년 농촌지역 창업(10개 단체·모임)을 지원
- 그밖에 문화, 복지,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 CEO 육성, 모델 발굴, 사례 확산 등 성공한 청년 CEO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공동체(7~11개소)를 육성

⁴⁸⁾ 충청북도 인터넷신문(2018. 7. 25).

〈글상자 23〉 제천시 덕산면 청년마을 청년농촌정착플랫폼

2019년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이 설립되고 청년 농촌정착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였다. 덕산면 공동체의 성과를 토대로 덕산면 나아가서 우리나라 농촌의 미래를 담당할 청년들의 농촌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다. 청년마을은 2019년부터 농식품부의 사회적 농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청년마을은 사회적 약자인 청년(특히 도시의 청년)에게 대안적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농촌 재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마을은 청년농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청년이 농촌에서 농사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하는 새로운 농촌 주민으로 정착하기 바란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마을배움터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장인을 만나 기술을 연마하여 앞으로 자립할 기반을 마련해준다. 마을 배움터에서는 청년 2인 이상이 요청하면 그에 맞게 연간 24강좌(1년 4학기)를 개설한다. 공유지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3천 평의 농지를 확보하여 사회적 농업의 실천 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자체 사업 수입,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일자리’ 등을 활용하여 생활비를 지원하고, 5년 후에는 덕산면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과 연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마을에는 현재 6명의 청년이 일하고 있는데, 4명은 정부 사업을 연계하여, 2명은 자체 수입으로 고용하고 있다.

자료: 오마이뉴스(2021. 1. 22).

1.3. 충남

□ 충남 마을만들기 지원센터⁴⁹⁾

○ 충남도는 민선6기에 들어와 “광역은 광역답게”라는 취지에서 광역의 ‘정책적 유도’ 기능을 통해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였음. 충남연구원(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 시·군 단위의 적절한 상호경쟁과 협력을 유도하면서 현장밀착형으로 추진과정을 주도하였음(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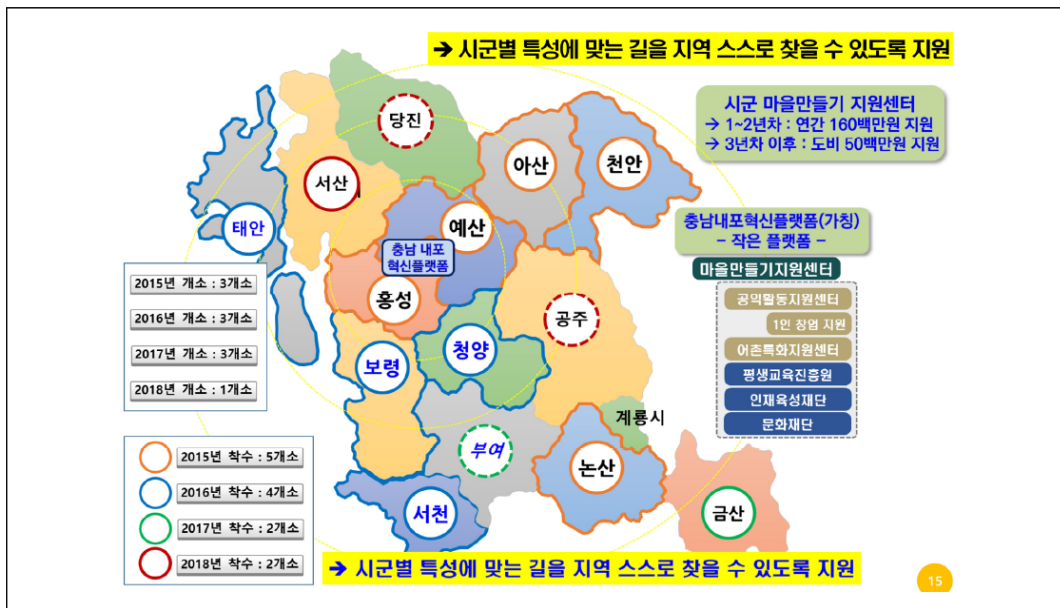
- 2015년부터 시작된 공모사업은 연간 160백만 원(도비 80, 시군비 80만 원)을 2년간 지원하고, 3년차부터 100백만 원(5:5 매칭)을 지원하고, 최대한 인건비 중심으로 집행하도록 지침을 만들었음. 4명 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부족한 예산은 시군비의 추가 매칭을 유도함. 또 부족한 사업비는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함.
- 충남연구원(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은 공모사업 예산 일부(시·군별 연간 20백만 원 이내 소액 예산, 2년간)를 활용하여 광역의 체계적인 ‘정책적 유도’ 역할을 수행하고 시·군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49) 마상진 외 (2020).

○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농촌마을의 배움과 소통 창구로써 충남 광역의 희망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간지원조직

- 충남 희망마을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2016년 7월에 설치
- 충남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충남연구원이 수탁 운영 중
- 시군과 광역의 협력 네트워크 법인을 구성하여 2019년에 독립 운영(예정)

〈그림 6-1〉 충남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현황



자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2019).

○ 현장밀착형 지역인재 양성과 신규 확보 지원

- 시군 핵심 리더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심화연수 기회 제공
- 마을현장 지향형 외부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

○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행정사업 지원체계 정비

- 마을에서도 정보 소외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
- 다양한 행정사업이 마을현장 맞춤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비

○ 마을과 행정, 광역과 기초의 협력관계 구축

- 마을과 행정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 시군의 역할, 광역의 역할을 구분하면서 상호 협력

○ 사업 착수(2015년) 이후 5년간 예산 투자는 광역 센터를 포함하여 총 85억 원 정도. 15개 지자체 중에서 13개가 개소한 2019년 기준으로 보자면 매년 시군 지자체만 보자면 17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셈임.

〈표 6-2〉 충남도 광역, 시·군 중간지원조직 연차별 투자실적(2015~19)

구분	합계	연차별 투자실적(백만 원)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8,534	800	1,620	1,856	2,023	2,235	
광역 센터	1,554	-	180	396	483	495	2016. 8개소
기초 합계	6,980	800	1,440	1,460	1,540	1,740	2015년 착수
도비	3,490	400	720	730	770	870	도비 50%
시군비	3,490	400	720	730	770	870	

주: 시·군 지원센터 예산은 공모사업 연도별 지원액 기준으로 산정.

자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2019).

- 2020년부터 도비와 시군비의 매칭 비율을 3:7로 전환하고, 총액 규모도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총 200백 만 원, 행정직영인 경우에는 총 100백 만 원으로 차등할 예정. 민간위탁을 촉진한다는 취지가 있고, 재정분권으로 시군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차원이기도 함.

□ 서천 삶기술학교⁵⁰⁾

○ 삶기술학교는 서천군에 청년들이 일정기간 머무르며, 자신의 삶을 설계와 실현을 위한 기술들을 배우며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문화를 만들어가는 학교임.

⁵⁰⁾ 조원지 외(2021).

- 4년 전 ㈜자이엔트 한산모시문화제를 위해 구성된 문화기획단으로 참여하면서 서천군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서 지역 자원인 ‘한산모시’와 ‘소곡주’를 활용하여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문화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됨.
 - 청년 창업 기업인 ㈜자이엔트가 2019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협업과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 ‘삶기술학교’가 만들어짐.
- ‘삶기술학교’의 취지와 비전은 도시청년들이 시골마을에서 자신의 삶의 기술을 교환하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자립공동체로서 ‘나만의 삶의 기술하다’와 교수도 학생도 없는 학교에서 삶기술자(삶지니)가 되어 ‘삶’과 ‘일’을 배우며 자립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당신의 삶기술이 마을이 됩니다’로 함.
- 삶기술학교는 ‘삶에 필요한 의식주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 낸다는 목표 하에 ‘삶지니’로 활동하는데 삶지니는 엔지니어의 준말인 ‘지니’와 ‘삶’이 결합된 개념임.
 - 핵심 가치로 ‘비움: 대안적 삶을 통해 나를 찾는다’, ‘배움: 마을의 전통기술을 배워 자립한다’, ‘채움: 나만의 삶기술을 완성한다’를 설정하였음.
- 빈집을 리노베이션한 ‘노란달팽이’는 거점 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행안부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필요한 공간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 5명의 청년을 고용되어 진행됨.
- 삶기술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전통자원과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는 ‘한 달 살기’로 서천에 내려와 ‘삶기술학교’에 입학하는 청년들에게 한 달 거주비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명인에게 기술을 직접 배워가며 자신의 기술과 접목하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홍성 평민마을학교⁵¹⁾

- 홍성군 홍동면에 위치한 평민마을학교는 ‘학교라는 닫힌 공간에서 경직된 교과과목이 진행되어 온 기존 제도교육과 대안교육에서 벗어난 학교의 재개념화와 새로운 교육방식’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임.
 - 2015년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의 오후 일과를 ‘마을기반 학습과 활동’으로 구성하여 학습들의 묶음을 ‘평민마을학교’이 시작함.
 - 2016년 도시 청년에게 농사와 농촌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2박 3일 ‘촌스러운 일 상캠프’ 단기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2017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의 ‘청년귀농교육농장 시범사업’을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이 진행하게 됨.
 - 2018년부터 평민마을학교 평민강좌가 운영되었으며, 2020년 평민마을학교가 ‘마을 학습생태계’로 확장되었으며, 마을학습생태계는 주변 농장과 지역단들을 연결하여 농사와 학습을 마을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 시작함.

- 평민마을학교는 농촌 마을을 터전으로 마을단체들의 운영협의체가 함께 운영
 - 평민마을학교의 가치와 운영원리는 ‘농촌 마을학습의 새로운 틀에서 마을 단체들과의 학습을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세대 간 교류’, ‘농사는 농민에게, 마을은 마을주민에게 배우는 학교는 마을과 지역사회’, ‘농촌 현실에 맞는 지식과 삶을 모색하여 마을 문화 형성’, ‘욕구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구성’에 중심을 두고 있음.

- 농촌 마을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공간으로서 일, 학습, 만들기, 놀기를 통해 농촌 마을을 이해하고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봄.
 - ‘일’은 홍동면과 장곡면에 소재한 농장에서 농사에 직접 참여하고, ‘학습’을 위해 늦은 오후에 마을 세미나 토론회, 특강 등 다양한 학습모임과 마을 행사에 참여하게 됨.
 - 농촌 행사와 다양한 일에 직접 참여하며 마을 주민되기를 경험하는 ‘만들기’ 과정과

51) 조원지 외(2021).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마을의 생활 문화를 익히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놀이' 과정이 운영되고 있음.

- 평민마을학교 입학은 참여조건으로 '농사-학습-마을-일'에 마을주민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학교의 취지와 원칙에 동의하는 4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기간은 2주에서 3개월까지 가능함.

1.4. 전북

□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⁵²⁾

-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생생마을만들기, 농촌관광, 귀농귀촌, 농촌유학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전북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전북 지역 소개와 귀농귀촌 기초 등 이론교육, 농장 견학, 체험 실습 등 현장교육, 영농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귀농·귀촌 교육은 서울사무소 또는 지역 관련 기관·단체에서 운영
 - 귀농·귀촌 기초교육은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으로 귀농귀촌 시 필요한 기초 정보(농지, 작물 선택, 가공 등)를 제공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교육은 '귀농귀촌학교', '창농 및 농업기술 교육', '마을융화교육', '농업 이외 실용기술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 마을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원활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
 - (찾아가는) 마을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과 선주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튜브 교육, 현장방문,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⁵²⁾ 조원지 외(2021).

○ 농업 이외 실용기술교육은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융화를 위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실용기술교육이 운영되고 있음.

- 실용기술교육 영역은 취미부터 직업 관련 기술까지 다양하며, 시·군별로 차별화된 교육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음. 또한 농업 활용한 치유농업, 농산물 가공이 등과 직·간접적인 교육이 일부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음.

〈표 6-3〉 전북의 농업외 실용기술교육 현황

교육명	대상	주요 내용	지역
농촌살이 적정기술	귀농귀촌인	치유농업, 갈등관리, 리더양성 등	남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귀농귀촌인, 지역민	스마트스토어, 오순도순 실용교육, 천연염색 실용교육	정읍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기술, 목공기초, 생활인문학	군산
		목공, 가죽공예, 보일러	임실
		농기계, 목공예, 전기용접, 정보화 등	남원
		핸드커피, 트리클라이밍, 도자기	김제
		농촌생활기술, 천연화장품, 용접	완주
		농산물을 활용한 알코올 발효 및 식초 발효	진안
		용접, 목공예, 바느질, 제과제빵, 공예	무주
제과제빵, 예코힐링, 다육이체험	부안		

자료: 조원지 외(2021).

□ 농촌 과소화대응인력 육성사업⁵³⁾

○ 전라북도 농촌 지역에 정착(귀농)하여 전문 현장인력을 육성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

○ 사업유형

[농촌과소화대응인력]

- (읍·면형): 농촌 읍·면지역에서 주민들과 공동체 활성화, 농촌 과소화대응 활동을 기획, 추진할 인력을 선발하여 지원(10명)

* 활동장소: 무주군 안성면, 활동형태 : 단일사업단으로 2~3팀을 구성하여 활동

⁵³⁾ 전라북도(2017).

- (마을형): 과소화된 농촌마을, 보조사업이 진행(완료) 중인 마을의 공동체 활동, 관리, 운영활성화를 추진할 인력을 선발하여 지원(14명)

* 활동장소: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활동형태: 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에 배치되어 1인당 5~6개 마을을 전담관리

[디딤돌청년협업농장]

- (농장형): 체계적인 영농실습을 통해 귀농, 창농을 희망하는 인력을 선발하여 농촌 정착 지원(5명)

* 활동장소: 하서미래영농조합법인(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활동형태: 영농실습(벼, 양파, 마늘, 쌈채소, 하우스농사 등)

○ 지원내용

- 과소화대응인력육성사업: 활동비 200만 원, 9개월간

* 활동비는 4대 보험료(개인부담)를 포함한 금액이며 시·군 협의를 통해 활동 시간, 형태, 활동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2017년 12월까지만 지원

- 디딤돌청년협업농장: 영농활동비 80만 원, 9개월간

* 법인(운영주체)과 협의하여 영농실습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공동배분, 4대 보험료(개인부담)는 지원하지 않으며, 상해보험 등은 법인과 협의하여 가입, 2017년 12월까지만 지원

- 사전·심화 교육을 통해 활동에 필요한 개인역량개발 지원

- 활동 후에는 전라북도 내에서 귀농, 창농하실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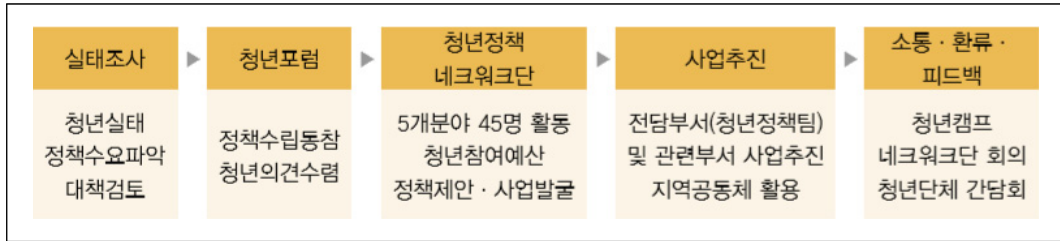
□ 완주 청년 JUMP 프로젝트⁵⁴⁾

○ 농촌을 청년 유입 활성화 지역으로 변모하고자, J(일하다: 취업, 창업) U(머물다: 주거, 정착), M(어울리다: 참여, 교류), P(성장하다: 문화, 교육, 복지) 비전을 갖고 청년정책팀이 신설되어 2016년 8월부터 시행.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함.

⁵⁴⁾ 마상진 외(2020).

- JUMP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문제 및 정책수요 파악과 이에 대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청년 취업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청년 자생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임. 또한, 단순히 취업의 문제가 아닌, 청년들의 정주화를 위해, 일자리, 주거, 양육, 문화 등 청년의 전반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둬. 마지막으로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인재와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임.
- 사업 대상: 취업, 출산, 주거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 정책 효용성을 높이고자 만 19세부터 39세인 청년에 집중(2015년, 완주 인구의 25.2%)함.
- 사업 내용은 (1) 일자리 진입 지원, (2) 주거·생활안정, (3) 청년활동생태계 조성, (4) 인재양성·역량강화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사업을 진행함.
 - 일자리 진입 지원은 청년 인턴제를 통해 공동체를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고, 단계별 성장 시스템을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둬. 또한, 도내에서 청년이 취업 시 사업체에 임금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역점을 둬.
 - 일자리와 함께 기초 여건인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해 청년 쉼어하우스를 마련하고, 청년희망 대출, 행복주택(공공임대) 사업을 실시. 더불어 귀농 귀촌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귀농 귀촌 숙박비를 일부 지원하고, 농촌형 청년쉐어하우스를 조성함.
 -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생활을 안정하면서,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청년활동생태계 조성과 인재양성·역량강화 사업을 실시. 구체적으로 청년 성장플랫폼을 조성하고, 청년 동아리 활동지원, 정책네트워크 구성, 청년 참여 할당제를 실시하고, 청년 문화 활동가를 양성함과 동시에 청년 공유 학교를 실시. 그리고 청년 문화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청년들이 전시, 공연, 강연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함.

〈그림 6-2〉 완주 청년 JUMP 프로젝트 추진절차



자료: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2019).

○ 완주군 JUMP는 일차적으로 청년층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촉진하는 성과를 가져옴. 예상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은 2017년 373명, 2021년 443명임. 청년 일자리를 창출로 청년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내 청년들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지역사회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일자리 생태계를 형성함으로써 관련 부문에서의 일자리 파급효과를 가져옴.

〈글상자 24〉 완주의 주요 청년 정책

- 청년배움지원사업: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한 자기개발 비용의 80% 지원
- 청년 쉼어하우스: 독립, 취업/창업, 귀농귀촌 등 주거취약계층 청년에게 쉼어하우스 제공으로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 ① 지원내용: 임대료 보증금 및 월세 지원, ② 사업내용: 삼례, 이서, 봉동, 고산 등 8개소의 쉼어하우스를 통해 최장 2년간 월 5만 원의 임대료로 주거 제공
- 청년마을학교: 청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방식으로 청년강사에게는 강의기회를, 청년학습자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
- 청년정책아카데미: 청년정책의 필요성과 정책 참여방법,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청년당사자들의 정책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위한 아카데미
- 창업공동체: 같은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비즈니스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득 및 사회서비스 모델 창업공동체”를 선정 지원(지원내용: 사업비는 단위사업 수행과 목적달성에 직접 연관이 있는 직접사업비, 홍보디자인 개발 지원, 상표 및 특허지원, 정보화 지원, 신제품 개발, 판로개척 및 마케팅 사업,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등)
- 청년공간: 청년들이 쉬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청년공간) 조성: 삼례 청년공간, 고산 청년공간, 이서청년공간, 청년의식기움, 청년창업랩실
- 청년 정책이장단: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관심을 가지고 활동이 가능한 지역의 청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청년정책협의체(13개 읍면 주민으로 청년 및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고 해당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청년). 월 2회 이상 청년이장 프로그램(워크숍, 반사회) 참여하여, 완주군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활동 참여, 지역 청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새로운 청년 발굴, 지역에 필요한 청년활동 및 프로젝트 제안·추진, 청년이장 기본활동(워크숍, 반사회, 정례회의 등) 참여 및 추진

자료: 완주군(2019). <<http://www.wanju.go.kr>>.

□ 완주 귀농·귀촌 지원⁵⁵⁾

- 로컬푸드를 통한 월급 받는 농가 육성
 -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완주 한우협동조합
 - 연매출 693억 원, 월급 받는 농가 2,500농가
- 거주시설 지원
 - 완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1년 단위 거주 및 교육지원
 - 귀농인의 집: 1년~1년 6개월 거주 지원
 -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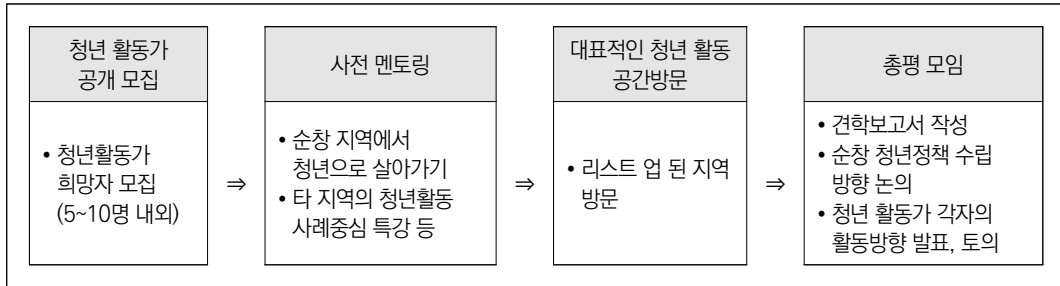
□ 순창군 청년 정책⁵⁶⁾

- 추진배경: 그간 주거, 일자리, 문화분야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 시행해 왔지만 20~30대 초·중반 청년들이 성장, 자립 기반을 갖추기 위한 지원책이 부족, 순창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 순창 청년인재 육성과 지역 정착유도를 위한 청년 친화도시라는 순창지역 이미지 구축
- 추진내용
 - (1) 순창 청년활동가 육성
 - 근거: '순창 청년 기본조례' 제13조(청년 정책사업의 추진)
 - 대상: 순창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만 19세~만 49세)
 - 방법: 공개모집 후 면접을 통해 선발(5명 내외)
 - 순창 청년활동가 교육(청년정책투어): 국내 우수 청년정책 실행 지자체 및 청년공동체, 청년정책 관련기관 등을 방문, 교육

55) 이 연구의 귀농·귀촌 정책 3차 포럼 (2021. 7. 26) 발표자료.

56) 마상진 외(2020).

〈그림 6-3〉 순창 청년활동가 사업 추진체계



자료: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2019).

(2) 순창 청년 정책 협의체 설치

- 근거: '순창 청년 기본조례' 제11조(청년정책협의체)
- 대상: 순창지역에 거주, 재학, 재직 및 기타 활동을 하는 청년(만 19세~49세)
- 방법: 공개모집(25명 이내)

(3) 순창 청년 정책 위원회 설치

- 근거: '순창 청년 기본조례'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 대상: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청년정책관련 부서장), 위촉직(순창 군의회 추천의원, 청년단체 활동 경험자, 청년정책 협의체 임원, 기타 필요하다 인정되는 자 등) 위원으로 구성
 - * 순창청년정책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
- 임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가능)

(4) 청년 공동체 네트워크 조성

- 근거: '순창 청년 기본조례' 제13조(청년 정책사업의 추진)
- 대상: 순창지역에 거주, 재학, 재직 및 기타 활동을 하는 청년(만19세~만49세)
- 방법: 팀별 등록(5명 내외)
- 활동사항: 팀별 순창지역 현안문제 인식 및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리빙랩(Living-project) 프로젝트 활동

- 초기 단계는 순창군에서 프로젝트 2~3개 제시 후 과제해결 형식으로 진행*(타지역 사례) 춘천 소셜 리빙랩(춘천 사회혁신센터), 금천 1번가 리빙랩 프로젝트(서울 금천구), 대구×청년 소셜 리빙랩(대구광역시), 양주 리빙랩(경기 양주), 성동 리빙랩(서울 성동구) 등

(5) 청년 거점시설 조성

- 근거: '순창 청년 기본조례' 제13조(청년 정책사업의 추진)
- 조성·운영: '21년 상반기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2020년 3월 중 공모계획 시달)
- 대상: 순창 교육청 앞 의용소방대 연합회 건물(부지: 순창군, 건물: 전북도 소유) 및 현 자원봉사센터 활용(구 순창읍 농업인 상담소)
- 방법: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최대 1,000백만 원)
- 공간구성: 주민 및 청년 아이디어 공모 형식을 통한 공간구성 구상
 - * 북카페, 소규모 갤러리, 공유오피스, 공유부엌, 세미나실, 미디어 영상 교육공간 등
 - * 미디어 영상 교육 : 각종 미디어 콘텐츠제작, 일러스트, 유튜브, 웹툰, 영상제작 및 편집 등

1.5. 전남⁵⁷⁾

- 전라남도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민선7기 들어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인 인구청년정책관을 신설해 인구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함.

□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 저출산·고령화로 농어촌 인구 감소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전국에서 지방소멸 위험지

⁵⁷⁾ 마상진 외(2020).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전남의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수시책을 발굴하는 취지에서 추진함.

-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 빈집 리모델링 등 공간 조성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업당 최대 4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라남도는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함.
- 광양 ‘청년 취업지원 올인원’을 비롯 순천 ‘청년 맥가이버 육성’, 완도 ‘섬마을 새댁 기 살리기’ 등 35개의 참신한 사업을 발굴해 젊은 인구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원도심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유공간을 활용한 순천의 ‘빈집뱅크제’, 농어업 분야 가업을 잇고자 하는 고흥의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등이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받음.

□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어 및 귀촌에 관심 있는 서울 등 다른 지역주민이 5일부터 60일간 전남지역 농어촌에서 살아보는 체험 프로그램. 이는 도·농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 도에서는 운영을 희망하는 17개 시·군 마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과 실제 현장 일치 등 1차 현장점검을 실시, 열린 전문가 심사로 2차 사업계획 발표를 거친 결과 농촌형 30개 마을·농가 운영자를 최종 확정함. 도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고 청년형 5개 시·군 6개 마을사업자도 선정. 이들 운영자에게는 사업비 총 5억 원 지급. 참가자들은 숙박과 농어촌 체험교육프로그램 등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육점수를 부여함.

□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 행정자치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에서는 청년에게 일

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지역에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있음. 마을단위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해 약정기간(2년) 근무 후 사업장에 취직하거나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19).

○ 사업 내용

- 기간/대상: 2019~2023년 / 귀촌(예정) 청년(만 18~39세)
- 사업량: 2,000명
 - * '18년 선정 500명 포함, '21년 대상자는 23년까지 지원
- 사업비: 1,880억 원(국 635, 도 605, 시군 533, 자부담 107)
- 사업내용: 2년간 청년 인건비(월 180~200만 원), 교통·숙박비(월 30만 원), 직무교육, 청년 교류활동 지원, 사업장 컨설팅 등 지원(2년 후 고용승계 시 3년차 지역정착금 1,000만 원 지원)
- 추진방법: 마을사업장 발굴·선정(도·시군·자문단) → 청년 모집·매칭·직무교육·사업장배치(도·시군·수행기관) → 사업장 및 청년 관리(도·시군·수행기관)

〈글상자 25〉 순천시 낙안면 면장 공모

- 전남 순천시 낙안읍성이 위치한 낙안면은 2019년부터 낙안면은 공무원이 민간 귀농인 신길호(51)씨가 면장을 맡음. 개방형직위로 뽑은 지방 첫 읍면동장임(민간인 읍면동장은 전국 두 번째). 순천시는 낙안면장 자리를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도 지원 가능한 개방형직위로 선정한 뒤 공모를 거쳐 최종 선발함.
- 면장 채용 심사에 지역 주민들도 참여함. 선발시험위원회를 통과한 최종 후보 2명은 낙안면 주민 100명 앞에서 동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계획을 발표. 주민들은 이 심사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올림.
- 청년 시민활동가 출신 경쟁 후보를 제치고 최종 선발된 신길호 면장은 고흥군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군 생활을 하다가 해병대 소령으로 전역. 민간 회사 기획실장 등을 거쳐 7년 전 포항으로 귀촌한 농업인임.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직원 28명과 함께 약 66만㎡ 규모로 농사를 지으며 가공·유통·체험 등으로 연매출 10억 원을 올림.
- 공모 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달리 읍면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보여주기식 사업에 열을 올릴 것이라는 내용임. 읍면동장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자체장의 선거 도구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기도 함.

자료: 중앙일보(2018. 12. 25).

1.6. 경북

□ 청정⁵⁸⁾ 경북, 프로젝트(서울청년, 지역으로 가다)⁵⁹⁾

- 서울시와 경상북도는 날로 늘어가는 청년실업 문제와 지방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실행(2019년). 두 지방자치단체장은 서울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일자리 문제와 반대로 출구가 없는 지역기업의 구인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교집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함.
- 일자리를 구하는 서울 청년들이 6개월 동안 경북지역에 살면서 경북도내 5개 시군(안동, 청송, 예천, 문경, 상주)에 위치한 기업에 근무함으로써, 청년은 경험과 역량을 쌓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고 지역 기업은 서울에서 온 젊은 인력으로 활기를 얻어 청년과 지역 모두를 동시에 성장하게 하는 프로젝트, 바로 그것이 '청정경북 프로젝트'임. 결국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서울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동시에 꾀함.
- 선발과 진행을 서울시와 경북이 직접 보증하고 청년들에게 지급할 인건비(월 220만 원/세전) 역시 두 지자체의 재원으로 마련함.

□ 도시청년 시골파견제⁶⁰⁾

- 경북도가 2017년부터 지방소멸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범 시행중인 사업으로 도시 지역에서 참신한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경북에서 창업의향을 가진 청년들을 공모로 선발해 1인당 3,000만 원의 창업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함(경상북도 2020).

58) 청정(靑停): 청년이 머무르다.

59) 서울특별시 뉴스(2020. 1. 30).

60) 마상진 외(2020).

- 2017년 시범사업을 통해 3개 팀 10명을 선정해 지원했고, 2018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를 지원받게 됨.
 - 당초 10명이었던 사업 인원이 23개 시·군 100명으로 확대됨. 2018년에는 평균 6.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는 5.9:1의 경쟁률을 기록함.
 -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가 청년 창업가들에게 선호되는 이유는 성장기까지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임.
 - 최종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활동비와 사업 자금을 연간 3천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사업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음.
 - 1차년도에는 기반을 닦고 2차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의미임(자료: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9. 7. 22).

□ 의성 이웃사촌시범마을⁶¹⁾

[사업추진배경]

-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성군은 농촌 지역 저성장과 도·농간 지역 격차 발생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론에 봉착함.
 - 한국고용정보원 (2018)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의성군 지역소멸지수⁶²⁾ 1위(0.151)를 기록
- 의성은 기존의 중심지(의성읍) 외에 서부권을 중심으로 제 2생활 중심지가 필요하다는 인식
 - 지방자치 민선 7기를 맞아 의성군에서는 경상북도와 함께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2019년부터 지역의 인구 유입을 목표로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동시에 갖춘 청년마을을 조성

61) 경상북도(2020).

62)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

〈표 6-4〉 의성 이웃사촌시범마을 추진사업 내용

분야	내용	
창농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조성 •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 • 안계청년허브센터 설치 • 반려동물산업 육성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예술창고 조성 • 청년시범마을 일자리사업 추진 •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 •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매력 있는 주거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빈점포 리모델링 사업 추진 • 안계면 소재지 도시재생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주거단지 단계별 조성
의료·문화·교육 등 농촌생활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형 혁신학교 지정 • 경북형 마을돌봄터 신설 •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품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 3대 필수의료체계 내실화
선·후 주민 간 마을공동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성청년정책단 운영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살림꾼 양성교육 시행
청년유치 및 시범마을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마을청년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마을홍보 전개
연계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과짜방 설치 • 청년사회적기업 육성 • 위전 레포츠특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육성 •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시행

○ 일자리·소득 창출 사업

- 물류센터·저장창고·가공공장 등을 갖춘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관광명소가 될 식생활 체험공간과 문화공간도 조성
-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창농을 희망하는 도시 청년에게 5년간 스마트팜을 임대하고 창농을 지원. 스마트 팜 5개동(약 26,000㎡)을 조성해 운영하며, 모집된 청년(50명, 3년 계약)에게 월급(200만 원)을 지급
- 반려동물복합문화센터(80억 원 투자)를 단북면 노연리 의성국민체육센터 인근 32,600㎡터에 준공하고, 애견호텔, 수영장, 테마공원, 캠핑장, 교육장 등 운영. 추후 관련 산업인 사료와 반려용품 등의 제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조성 계획
- 청년시범마을 일자리 사업: 도시 유입 청년과 기존주민 간 공동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 지역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역관광, 교육 및 복지 모델, 특산물 및 지역자원 활용 제품, 지역 IT기반 조성 등 마을·지역자원 활용 관련 창업 지원(팀당 5천만 원 이내 창업사업화 지원금, 4천만 원 이내 리모델링 지원금 지원).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창업 전문 컨설턴트 지원

- 서울시의 '지역상생 청년일자리사업'⁶³⁾을 활용, 서울의 청년들이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거주하며 도농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청년을 선정하고 의성군과 서울시가 정착·창업자금을 지원
- 창업허브센터(2020년 12월 준공)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사무공간 및 기숙공간을 제공
- 청년들의 소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폐교를 활용한 팜문화빌리지를 만들고, 도시청년과 의성주민 1명이 팀으로 청년창업할 경우 자금을 지원
- 청년창업 프로그램(로컬 CEO 과정, 사회적경제기업 도전과정, 초기창업패키지 도전과정) 운영: 의성군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과 상황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청년 창업프로그램을 운영. 예비창업가, 창업 3년 이내, 창업 3년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등 특성과 시기에 맞는 과정을 준비하여 창업한 청년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줌.

○ 주거·생활환경 조성

-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빈집·빈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스틸하우스·컨테이너 하우스 설치와 폐업중인 여관 리모델링을 통해 초기에 유입한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 더불어 안계면 소재지 인근에 50~80세대의 임대주택을 조성
- 경상북도-한국토지주택공사 상생협약의 결과로 LH-청년행복주택 140세대가 건립
- 생활여건개선을 위해 농촌 '3·6·5생활권 구축'으로 30분 내 보건·보육, 60분 내 교육·문화, 5분 내 응급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수요에 맞춘 복합커뮤니티센터, 명품 국공립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을 건립하여 청년들과 기존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함.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안계면 일원에 총 182억 원을 투자하며, 2021년까지 일자리·문화·복지 등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4,000㎡)(안계 행복플랫폼)를 건립

⁶³⁾ 서울 청년(만 19~39세)이 지역과 연계해 창업 시 자원조사단계(교통·숙박 등 실비지원)와 아이템 숙성과정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

- 안계초등학교를 ‘경북형미래학교’로 지정해 스마트교실을 구축하는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특성화 교육 실시. 안계초등학교 KT-AI스쿨 조성
- 어린이 공원 내 KT 쉼터 조성
-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을 받아(총 22억 원) 지상 2층, 연면적 661㎡, 보육정원 약 90명 규모로 안계어린이집을 이전·신축
- 분만이 불가능한 지역 산부인과를 분만 가능 산부인과로 전환,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영남제일병원 리모델링 및 의료진 보강(소아청소년과 개설), ‘출산통합지원센터’는 장난감대여, 베이비 카페 등이 마련, 마을돌봄터 설치 등의 청년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추진

○ 마을 공동체 활성화

-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해 주민 아이디어 경진대회, 선진지견학 등의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동시에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청년들의 이주·정착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민 원탁회의, 이웃사촌사업 세미나와 같은 주민 참여 활동 활성화시킴.
예) 의성 서부권역 주민행복 ‘함께이룸’ 아이디어공모전: 지역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법을 찾고 직접 사업을 진행해볼 수 있도록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협업으로 추진
- 주민자치 마중물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하고 자립가능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을별로 1년차 3백만 원, 2년차 2천 5백만 원을 지원
- 마을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등 청년문제를 청년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청년 중심의 현실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성청년정책단⁶⁴⁾을 운영

⁶⁴⁾ 귀농귀촌, 문화복지, 일자리창업, 지역참여, 주거공간 총 5개 분과로 나누어져 분과별 연구모임, 공유대회 및 심화과정, 정책제안대회를 통해 청년 지원정책 발굴과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

- 경상북도의 '청년괴짜방⁶⁵⁾'이라는 (사회적경제) 지역청년 네트워크 공간도 조성
- 이웃사촌 주민동아리 사업: 주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주민단체를 발굴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 선정된 동아리는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받음. 선정된 동아리는 민속예술공연활동과 문화·예술·교육 재능기부, 스포츠 및 지역건강 확산활동, 체험수업과 교육공동체 활동, 일손돕기와 노인돕기 및 지역봉사활동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활동을 하게 됨.
 - * 주민 동아리 현황: 아리랑민요예술단(민요공연), 민속예다원(퓨전난타공연), 꽃길만걸자(문화예술활동), 안계에서함께살아요(엄마강사체험수업), 목련배드민턴(체육및봉사활동), 엄마는사랑을신고(교육공동체활동), 분리스타(환경정화활동), 안녕(지역문화활동), 청세권(사진문화활동), 진배구(체육및공동체활동), 안계parkGolf(어르신건강및문화활동) 등
- 잇는 살롱: 지역 내 청년들이 다양한 주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잇는 살롱'을 운영함. 잇는 살롱을 통해 의성에서 살고 있는 이웃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촌에서 다양한 문화기회를 만들어감. 요가, 음악, 영화, 와인 등을 주제로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농촌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감.
- 예술가 1촌 맺기: 의성과 마을을 알아보는 탐색의 시간을 보냈던 작가와 청년 창작촌에서 원데이클래스, 청년 에브리마켓 그리고 자신들의 작품활동과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예술반상회를 진행하여 의성군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르신 모두를 만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게 해줌.

○ 청년유치

- 청년팸투어: MOU를 체결한 도시지역청년단체 회원을 초청하여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소개하고 복지·문화체육시설과 사업조성지를 둘러보도록 하는 사업

⁶⁵⁾ 경상북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문화가 융합된 사회적경제 청년 네트워크 공간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조성.

- 도시청년 의성 살아가기 사업 추진(청춘구 행복동(hangbokdong.com)): 매기수 15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총 12주간 의성군 안계면에서 생활(기초 6주 프로그램: 함께 살며, 지역을 알아가는 과정 → 심화 6주 프로그램: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귀농 또는 귀촌을 체험하며 공동체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사업성과]

○ 중앙공모사업 연계 유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선정(3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 확보)
-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15억 원을 확보
- 2021년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구축 지원사업' 선정: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의성군의 서부권역 7개 면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

○ 인구변화

- 의성군 귀농귀촌 인구 증가(전년대비): 2019년 81가구 110명 → 2020년 89가구 3명
- 안계면 청년인구(25~39세) 증가: 2011년 675명 → 2017년 513명 → 2018년 496명 → 2019년 504명 → 2020년 537명
- 의성군 합계출산율: 2017년 1.40명 → 2019년 1.76명(전국 3위)(경북도 평균 1.09명, 전국 평균 0.92명)

〈표 6-5〉 의성군 귀농·귀촌 인구 변화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귀농	가구	162	172	177	172	173	213
	인구	252	273	281	266	260	277
귀촌	가구	1,067	1,141	1,101	1,187	1,267	1,316
	인구	1,299	1,385	1,385	1,400	1,516	1,502
귀농·귀촌	가구	1,229	1,313	1,278	1,359	1,440	1,529
	인구	1,551	1,658	1,666	1,666	1,776	1,779

자료: 통계청(각 년도).

○ 청년 정착: 현재 20~30대 청년 129명이 의성에서 농업과 창업에 도전했고, 54명이 터전을 잡음. 17개팀(15개 창업, 2개 준비 중)이 창업

- 청년시범마을 일자리 사업 00명
- 스마트팜 48명 수료 → 8명 도내 창업(보조금 1억 5,000만 원과 용자 2억 원 등 3억 5,000만 원을 지원)
- 청년 창업: 수제맥주 공방인 '호피홀리데이', 유럽식 파스타 식당인 '달빛레스토랑', 지역 농산물 판매점인 '진팜'
- 청년 거리 조성: 소보안계로에 안리단길이 조성되어 청년거리도 거듭남. '고라니북스', '비출담다' 등이 있는 안계시장길은 청년예술촌거리로 변신
- 의성 살아보기: 1기에서만 15명의 수료 청년 가운데 9명의 청년이 정착. 2기에서도 6명이 정착에 성공. 서울·경기·대구·부산 등 전국에서 온 참여자(28명) 중 절반이 넘는 15명의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 '청춘구 행복동' 운영진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관내 기관단체에 취업. 의성 살아보기: 수제비누 공방 '프로젝트 담다'와 안사면 빈 우체국을 활용한 퓨전요리점 '안사 우정국' 등 창업

○ 농촌마을 활성화

- 주민이 주도하는 프로그램 발굴 등 행복마을자치사업은 2019년 17개 마을에 이어 20년 43개, 21년 37개 마을에서 사업이 이뤄짐.

〈글상자 26〉 의성군 안계면 ‘이웃사촌 지원센터’

- 경북도와 의성군은 시범마을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공모사업에 지난 5일 선정돼 향후 3년간('19~'21년) 100억 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 확보



- 경북도와 의성군이 의성군 안계면 일원에 추진 중인 이웃사촌 시범마을(이하 '시범마을') 사업에 주민 소통창구가 만들. 이웃사촌 지원센터는 시범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주민 공동체 활성화, 도시 청년유치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
- 주요 사업: 지역주민 원탁회의, 마을살림꾼 양성교육, 주민역량강화교육, 도시청년단체 팸투어, 주민대표·도시청년단체 합동 워크숍 등
-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청년들에게 일자리, 문화, 출산·육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간혁신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통합지원원프라 마련, 청년·주민 밀착형 문화기반 조성, 여성 출산·돌봄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

자료: 경상매일신문(2019. 9. 8). 재편집.

[성공요인]

- 도와 군 지자체가 연계하여 중앙정부 사업 유치
- 투입 대비 효과성이 낮은 일시적, 대중요법식 처방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책추진
 - 예)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청년의 농촌 거주 관련 유관사업 통합적 추진
- 전문성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농촌개발 분야 전문가를 센터장 주도하에 관련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이웃사촌지원 센터를 운영. 기존 주민과 유입 청년의 연결고리로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 지역 주민의 교육도 담당해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원활유 같은 역할 담당

○ 관계인구 확대

- 관계인구 즉 의성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을 늘리는 정책 추진

〈글상자 27〉 상주 청년이그린 협동조합

- 청년이그린협동조합(이하 청그협)은 경북 상주시 이안면 아천리에 있는 폐교를 중심으로 모인 귀농한 청년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다.
- 7년 전 이 마을로 귀촌하여 이주자 출신으로 이장이 된 장동범씨의 주도적 역할아래, 청그협은 '지역민과 청년이 협력하고 상상하여, 즐겁고 행복한 농촌,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자'는 목표로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기도 하고 폐교의 공간을 활용해 작은도서관, 공부방, 어린이 합창단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 현재 구성은 청년 9명, 마을 주민 2명 총 11명이다. 근거지가 되는 폐교는 이전에 중학교로 쓰이던 건물이며 이 건물의 관사에서 5명의 청년이 거주하고 있고, 마을에 2명 이웃마을 또는 다른 지역에 2명의 청년이 거주하고 있다.
- 청년이그린협동조합의 현재 활동은 크게 네 가지이다.
 - 지역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
 - 직접 협업농장을 운영해서 농작물을 생산
 - 폐교를 활용해서 카페, 가공장, 공부방 준비
 - 지역 어린이 합창단, 마을할머니들과 놀기 등 지역활동

자료: 우성희 등(2019).

2. 외국 사례

2.1. OECD 지역 일자리 정책

○ OECD 국가들이 경제위기 시에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진 일자리 정책상의 대응 사례를 정리하면 일자리 연결서비스(Better matching service), 교육훈련 투자(Investment in education and training), 일자리 창출(Job creation),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Support for business to raise productivity), 지역 역량 함양(Building local capacities) 등으로 나눌 수 있음(OECD 2011)(마상진 2017).

- (1) 일자리 연결 서비스: 국가별로 실직자(displaced people)를 지역 수준의 원스톱숍(one-stop shops)이나 응급데스크(emergency desks)를 통해 새로운 직업으로

연결하는 지원활동들을 해왔음. 몇몇 국가들은 민간단체 또는 노동조합이 직장 간 이동(work-to-worktransitions)을 돕는 정책에 깊이 관여하기도 함. 한 예로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가 30개의 직장이동촉진센터(mobility centre)를 설립하여 회사 간, 산업부문 간, 직업 알선조직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실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돕고 있음.

- (2) 교육훈련 투자: 20세기에도 경기 침체에 실직 근로자들이 신흥 산업분야에서 고용을 위해 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 교육훈련에 재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는 오늘날에도 특히 일자리 취약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기존 고용자들의 기술 향상과 청소년의 취업능력 개발과 관련한 광범위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이탈리아 트렌토지역에서는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고용이 취약한 지역의 노동자들에 대한 전문 기술 유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음.
- (3) 일자리 창출: 많은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지역 차원의 일자리창출에 영향을 주는 경기 부양책을 도입했음.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식사 배급 서비스 및 보육과 같은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실직자를 고용한 지방 정부에 특별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지역차원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켰음. 또한 OECD 국가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장기적으로 좀더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가 및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등의 기존과 다른 경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음. 예를 들어,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정부는 사회적 경제부문 강화를 위해 사회투자기금(Social Investment Fund)을 조성하여 700만 유로를 투자했음.
- (4) 기업의 생산성 지원: 다양한 지역에서 향후 경기침체에 덜 취약하도록 현지 산업의 생산성 및 적응성에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음. 예를 들어, 이탈리아 밀라노시는 젊은 기업가들이 수행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패션, 에너지 및 식품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혁신 프로그램을 시작했음. 이 프로그램은 상공회의소, 시립대학, 국립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및 밀라노 주 기업협회(Province of Milan Firms Association)가 공동으로 지원했음.

- (5) 지역 역량 개발: 각국 정부는 보다 많은 수의 구직자를 취업시키기 위해 지역차원에서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했음. 지역 경제 재건을 위한 여러 당사자 간의 공동접근(joint approach)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 차원에서 조정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한 예로 호주 정부는 일시적으로 실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을 돕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지역고용조정자(local employment coordinators)’를 임명했음.

2.2. EU 농촌활동가 육성 프로그램(EMRA)

- EU에서는 ‘농촌 애니메이터’ (Rural Animator)라는 새로운 직업을 농촌지역에 확립하고자 2009년 ‘농촌 애니메이터 육성을 위한 유럽 석사프로그램(EMRA: European Masters Programme for Rural Animator)’를 도입함(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19).
 - 유럽 내 7개 대학에서 참여: Nicolaus Copernicus University(Poland), Babes-Bolyai University(Romania), Széchenyi Istvan University(Hungary), The Eston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s(Estonia), The University of Rostock (Germany), The University of Valencia(Spain), The Mediterranean Agronomic Institute of Chania(Greece)

〈표 6-6〉 EMRA 프로그램 내용

	주요 내용	
기본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개발 이론 • 농촌지역 연구 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활동가의 역할
전문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농업 • 인간과 사회적 자본 • 환경계획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농촌과 농촌관광 • 농촌경제의 다각화 • 교육과 농촌진흥

자료: 유학렬(2021).

※ 농촌 애니메이터(농촌 활동가)의 정의

- 농촌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고 유지시키고, 농촌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 또는 복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촉진하는 사람

- 농촌 활동가는 사회적 유대관계 재구축과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촉진하는 사람
- 농촌 활동가는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모든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촉진해야 하며, 풀뿌리에 기초하여 지역의 요구와 그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을 찾아야 함.
- 농촌 활동가는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활동해야 함.
- 농촌 활동가는 농촌발전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식·비공식적 지역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의 형성과 작동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자와 지역공동체(주민) 간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농촌 활동가는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에 대한 이해와 지식기반 위에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도시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애니메이터와 구분됨.
- 농촌 활동가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일상적인 경제 및 사회 활동을 촉진함.

○ EMRA의 농촌활동가에 대한 지원

- 농촌 활동가에게 잠재적 농촌개발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이해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촌개발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을 갖추도록 지원
- 농촌 활동가들이 직업적으로 자격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촌 활동가들이 농촌개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EMRA는 인문, 사회 과학(사회학, 경제, 정치학, 사회심리학), 지리, 농업, 공간계획, 공학, 경영, 교육 및 관련 분야 졸업생 가운데 농촌지역에서 활동할 용의가 있거나, 이미 활동 중인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함.

2.3. 영국

□ 농촌 새출발 프로그램(Fresh Start Academy)

- ‘농촌 새출발 프로그램’(Fresh Start Academy)을 통해서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농업 및 농촌부문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제공함. 농업 관련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박대식 외 2014).
 - ‘농촌 새출발 프로그램’은 주로 저녁시간에 회계사, 은행원 등 다양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시리즈로 개최함. 사례발표 등도 하고 참여자들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함.
 - 최근에 전문가 대상 아카데미(Specialist Academy)가 새로 도입되어 현재 총 12개의 지역 아카데미(5개는 일반, 7개는 전문)가 있음.
 - 이 프로그램은 단지 청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현재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22~35세 정도임.
 - ‘농촌 새출발 프로그램’의 공식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훈련·연수 서비스로는 ① 산업기술(초·중급 IT, 경영, 고객서비스, 온라인 마케팅, 비즈니스를 위한 웹사이트 개발), ② 기능적 기술(수학, 영어, ICT), ③ 고용기술(고용지원 및 작업장 기술, 이력서 작성, 자기 소개서, 면접 준비, 지원서 작성 등), ④ 인적 개발(생활기술, 금전관리, 신뢰감 및 자존감 정립), ⑤ ESOL(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 교육), ⑥ 비즈니스 계획(창업 및 발전), ⑦ 실전 연수(지역의 고용주들과 함께) 등이 있음.

□ 농촌 비즈니스 승계 촉진(Rural Business Succession Solicitor)⁶⁶⁾

- 농촌은 농업경영체 뿐만 아니라 농촌의 삶의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체의 유지가 지역 사회의 경제적 건강에 매우 중요함. 영국의 Harper Macleod는 은퇴와 폐업을 모색하고 있는 농촌 지역사회의 사업체 소유자들의 퇴출을 통제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기존 소유자가 가족, 직원 또는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비즈니스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증된 출구 전략을 개발함.

⁶⁶⁾ <https://www.porterdodson.co.uk/rural-succession-planning-solicitors>

○ 기존 소유자 및 인수자(승계자)에게 사업체 승계계획을 제시하고 연결해 줌으로써 농촌 사업체의 폐업과 경제적 손실을 막고, 인수자는 적은 비용으로 사업체를 인수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적응을 하게 함과 더불어 그 지역 사회 유지에 도움을 줌. 기존 소유주는 은퇴 후 시차를 두고 신규 인수자에 대해 어느 정도 감독을 유지하여 연기된 대가를 완전히 받을 때까지 사업에 대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함. 인수자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업을 인수하는 것 외에도 인수자가 현지 커뮤니티에 익숙하거나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많은 농촌 비즈니스가 지리적 위치로 인해 신규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하면서 비즈니스 승계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에 집중하고 더 작은 지역에 구매자 검색을 집중함으로써 차례로 광고 비용과 협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함.

□ 세컨드홈(Second Home)

○ 영국에서는 세컨드홈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대안적 거주형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음(양진홍 외 2020).

- 세컨드홈이 증가하면서 지역에 국한된 특정 이슈가 아니라 보편적 현상으로 부각되면서, 지역의 주택시장 및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과 세컨드홈 개발 계획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⁶⁷⁾

- 최근 조사(England Housing Survey 2018-19)에 의하면 잉글랜드내에 772,000 가구가 세컨드홈을 보유함. 이는 2008-09년(572,000)에 비해 20만 이상이 증가한 것 (소유 이유: 39.0% 주말이용, 35.0% 장기투자, 16% 이전에 살던 집, 9% 은퇴 대비 등)

○ 소득세 공제나 주민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세컨드홈 소유를 촉진

67) 영국은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으로 부유해져 개인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여유, 여가가 늘어나면서 1950~1960년대 세컨드홈 수가 증가(1934년 1만 세대에서 1969년까지 20만 세대로 증가)(Gallent, & Tewdwr-Jones 2001). 세컨드홈 개발이 활발하여 1996~2002년 사이에는 신축 건물의 30%가 세컨드홈과 비어 있는 건물에 해당, 주로 잉글랜드의 남서부 해안 지역에 분포함(Paris 2009). 1990년대 높은 이자율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세컨드홈도 침체. 2000년대 후반 경제 후퇴 시기에 환율이 낮아지면서 국내 여행이 많아졌고 여행지 숙소도 호텔보다는 직접 취사가 가능한 하이엔드 주거 유형이 유행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세컨드홈을 소유하면서 회복됨.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계획 정책으로 직접 세컨드홈 개발을 규제하거나 지원하지 않고, 개발 계획의 허가 과정에서 개발자가 민간주택과 함께 저렴한 주택을 함께 공급하도록 지역자치단체가 조절할 것을 제도화함.
- 제1주거(primary residence)와 제2주거(second residence)로 용도 등급을 분류. 주로 일 년의 대부분을 거주하는 주거지는 하나이며 제1주거로 등록하고, 제2주거는 거주할 수 있는 시설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거도 포함
- 지역계획(local plan) 및 마을계획(neighbourhood plan)을 통해 규제함. 지방분권 이후 지역계획과 마을 계획이 발전하면서 지역민이 지역에 있는 주거를 소유, 임대하여 살 수 있도록 형평성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발 규제와 조율이 생김.

2.4. 미국

□ 교실에서의 농업(Ag in the Classroom: AITC)⁶⁸⁾

- AITC 추진배경: 1920년대 이후부터 미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음. 이에 따라 국가의 입법가들 대다수가 비농업 지역 출신이 되어가고, 농업과 직접적 관계를 가진 경우가 점차 드물어지며, 생산 중심의 식량 및 농업 정책에서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의 초점 이동이 한 국가의 식량 수급 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이 생겼음.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1980년대 들어 미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국민 농업, 환경, 식품 관련 문해(Agricultural Literacy)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인 AITC가 추진됨(마상진 2014).
- AITC는 미 농무부 NIFA의 지원 하에 전국단위 조직(National Agriculture in the Classroom)이 운영되고, 주정부 단위의 활동은 지역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일부 주에서는 자원봉사 네트워크에 의해 교사 교육 및 교재 배분이 이뤄지

⁶⁸⁾ 마상진(2014).

고, 몇몇 주들은 교육부, 또는 농업부 아니면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제공하기도 하며, 어떤 주는 농업 단체 또는 품목 단체를 통해서도 제공함.

○ AITC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요 활동(일리노이주 사례)

- 교재 및 교안 제공: 교사들을 위해 교과 운영과 관련하여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와 교안 제공
- Acres of Agventures: 지역 내 교사들이 농업 내용을 교과에 잘 접목시킨 우수 사례를 공유
- Adopt a Classroom: 지역 농민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농업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농민이 학생들에게 글이나 사진을 통해, 또는 농장 방문을 통해 농업과 관련한 궁금증 해소
- Grant: 농업교육 관련 교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며, 특히 신규 교사들에게 많은 혜택을 줌
- Teacher of the Year: 매년 농업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교사를 선정하여 시상
- Preservice Teacher Workshop: 사범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순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농업과 관련한 교안 작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 (PreService Teacher Packet)를 무료로 제공
- Agricultural Awareness Conference: 매년 주지역 내의 농산업체와 교육자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농업과 교육에 대하여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대회 개최
- Summer Agricultural Institute: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교사들이 농업 관련 내용을 자신들의 교과에서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그림 6-5〉 미국 농업문해(Agricultural Literacy) 내용구조



자료: American Farm Bureau Foundation for agriculture. <<https://www.agfoundation.org/pillars>>.

□ 농촌 일자리 촉진 사업(Rural Jobs and Innovation Accelerator Challenge)

○ ‘농촌 일자리 촉진 사업(Rural Jobs and Innovation Accelerator Challenge or Rural Jobs Accelerator)’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활동을 계획하고 구현할 수 있는 자원을 농촌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상향식 지역 경제 개발 전략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USDA 2012)

- ‘농촌 일자리 촉진 사업’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하나로 모아 미국 농촌의 지역적 강점을 구축하고 미래의 주요 산업에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임.

○ 참여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 상공분야(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NIST MEP), Department of Commerc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USPTO), Denali Commission), 교육분야(Department of Education), 고용노동분야(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ETA)), 주

거·환경분야(Department of Energy,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 Office of Sustainable, Housing and Communitie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

- 이 사업의 목표는 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할 수 있는 빈곤한 농촌 지역 사회의 능력을 가속화하고, ② 농촌 지역 사회가 지역 자산을 식별 및 최대화하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역 기회 및 자체 식별 클러스터에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농촌 기업-협동조합 육성(Rural Business-Cooperative Service)

- 미국 농무부(USDA)의 'Rural Business-Cooperative Service'를 통해 농촌 기업과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 농촌 주민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함. 이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 및 성장시키거나 농업 시장 및 바이오 기반 경제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본, 훈련, 교육 및 기업가적 기술을 제공함(USDA 2021).

- USDA 산하 농촌개발부서(Rural Development) 책임하에 농촌 주거서비스 부서(Rural Housing Service), 농촌 생활편의 서비스(Rural Utilities Service) 그리고 민간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농촌 주민 기업-협동조합을 위해 다음 사항을 도와줌.

- 대출 보증(Guaranteed Loans): 농촌 기업과 협동조합이 일반 상업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연방 정부가 대출을 보증해 줌으로써 농촌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지원함.
- 직접 대출(Direct Loans): 민간 농촌 기업-협동조합에서 직접 대출을 하지 않고, 농촌 비즈니스 개발을 지원할 중간 지원조직에 직접 대출을 하고, 이 기관을 통해 제대출이 이뤄짐.
- 비영리 단체 및 공공 기관에 대한 보조금(Grants to nonprofit and public bodies). 민간 농촌 비즈니스 개발을 지원하는 일부 프로젝트를 수행할 비영리 경제 개발 그룹, 마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함.

- 민간 농촌 기업 및 농업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Grants to private rural businesses & agricultural producers):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 벤처를 지원하고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경쟁을 통해 지급함(일반적으로 50-75%의 매칭 자금이 필요).
- 교육 자료 제공 및 연구 수행: 협력 원칙 및 관행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교육 보고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재 및 새로운 문제를 다루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및 출판(출판 분야: 협력 기본 및 이해, 협력 이사 및 회원 책임, 협동 이론과 실천, 협동 조합원 설계(및 기타 여러 주제))

□ 단독 가구 주택 지원 프로그램(Single Family Housing Program)⁶⁹⁾

○ 단독 가족 주택 수리 대출 및 보조금은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제거하고, 필요한 수리를 수행하고, 주택을 개선 또는 현대화하고, 장애인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을 보다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인 및 저소득 주택 소유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저소득 가정의 공과금 지출을 줄여줌.

- 단독가구 주거 직접 융자(Single Family Housing Direct Home Loans):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불 지원(단기적으로 모기지 지불을 줄이는 일종의 보조금 지급)을 제공하여 저소득 및 초저소득 신청자가 농촌 지역에서 적절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단독가구 주거 융자 보증(Single Family Housing Home Loan Guarantees): 승인된 대출 기관이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에 해당 농촌 지역의 기본 거주지로서 적절하고 적당하고 품위 있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 적격 신청자는 100% 자금 조달로 적격 농촌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 건설, 재건, 개선 또는 이전할 수 있음. 이 프로그램은 적격 농촌 주택 구매자에게 100% 대출을 연장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승인된 대출 기관에 90% 대출 어음 보증을 제공
- 주거 보전 보조(Housing Preservation Grant): 저소득 및 초 저소득 농촌 시민이

⁶⁹⁾ <https://www.rd.usda.gov/programs-services/single-family-housing-programs>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주택의 수리 또는 재할을 위해 후원 단체에 보조금을 제공. 지원자는 인구 2만 이하의 농촌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함.

- 지역자조 주거 기술지원 보조(Mutual Self-Help Housing Technical Assistance Grants): 지역 자조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조직에 보조금을 제공. 보조금 수혜자들은 농촌 지역에 자신의 집을 지을 때 저소득 및 초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을 감독. 그룹 구성원은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조직의 기술 지원을 받아 서로의 집에서 대부분의 건설 노동을 제공
- 농촌 택지 융자(Rural Housing Site Loans):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한 택지 구입 및 개발을 위한 두 가지 유형의 융자를 제공. 섹션 523 대출은 자조 방식으로 건설될 주택만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 개발하는 데 사용. 섹션 524 대출은 건설 방법에 대한 제한 없이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가족을 위한 부지를 취득 및 개발하기 위해 이루어짐. 저소득은 지역 중위 소득(AMI)의 50-80%, 중간 소득의 상한선은 AMI의 115%

〈글상자 28〉 미국 농무부 소득·재산 적격 지역 정보(the USDA Income and Property Eligibility Site)

- 미국 농무부는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별 수혜자들의 해당 프로그램 수혜 가능 지역 여부를 알려주는 정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이트는 잠재적인 신청자가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됨. 많은 USDA 대출을 받으려면 가계 소득이 특정 지침을 충족해야 하고, 구매하려는 주택은 USDA가 정의한 적격 농촌 지역에 위치해야 함 (<https://eligibility.sc.egov.usda.gov/>).
예) 농촌 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인구 5만 이하 지역(city or town),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인구 2만 이하 지역

□ 사우스 캐롤라이나 예술 공동체(The Art of Community: Rural SC)

-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농촌지역 예술과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우스 캐롤라이나 예술 위원회는 2016년에 Art of Community: Rural SC라는 농촌을 예술, 문화가 번창하고 및 창의적인 장소 만드는 시범사업을 미국 농림축산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Rural Development)의 기금 지원을 받아 시작함(South Carolina Arts Commission, 2020).
 - 이 사업에서는 연방정부, 주 및 지역 지도자의 자문 위원회가 통찰력과 연결을 제공

하고, 지역의 문화 리더 15명이 ‘Mavens’(커뮤니티 챔피언) 역할을 하여 지역 사회 기반 브레인스토밍, 활동 및 지역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지역 팀을 구성하고, 이들은 지역단위 회의를 통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각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산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이해하기 위해,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연습을 함.

- 각 지역 팀은 지역사회의 도전과제를 파악하고 그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과 문화를 사용할 계획을 개발함. 농촌 문화가 활성화된 다른 지역(켄터키, 펜실베이니아, 미시시피, 미네소타 및 콜로라도 등)과 농촌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농촌 문화·예술가 전국회의(Rural Arts and Culture Summit)에 참석. 문화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농촌의 이야기를 영화, 사진, 회의록, 뉴스레터, 창작물, 민속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함. 지역 팀, 프로젝트 활동 및 프로그램 조정에 청년세대를 참여시킴. 청년세대의 참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CREATE: Rural SC and Personal Branding 101)을 진행함.

〈글상자 29〉 농촌 예술 문화 모임(Rural Arts and Culture Summit)

- Rural Arts and Culture Summit은 2년마다 열리는 농촌 문화 예술 분야 실천자 중심의 모임으로 강력하고 건강하고 탄력적인 농촌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있어 예술과 창의성의 역할과 학습, 관계 구축, 축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예술 기반 지역사회 발전의 장을 축하하고 확대하는 모임임.
- 이 모임은 2011년 미네소타주 퍼거스폴스에서 출범한 뒤, 미네소타주 모리스에서 3차례 열린 이후 전국에서 1,300여 명이 모여 농촌을 선도하는 가장 창의적인 개인들 간의 풍부한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

자료: South Carolina Arts Commission(2020).

2.5. 호주

□ 농촌 인적자원 전략(Rural & Remote Human Resource Strategy)

- 호주의 New South Wales주 교육부는 2017년부터 농촌의 교육 개선을 위해 농촌과 원격지역의 인적자원 전략(Rural and Remote Human Resources Strategy)⁷⁰⁾을 추진하고 있음(NSW Department of Education 2020).

⁷⁰⁾ 2021년부터는 Rural and Remote Education Strategy로 이름을 바꿔 진행.

- 이 전략은 농촌 지역 모든 아이들에게 도시 아이들만큼의 양질의 교육을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고품질의 교육과정 제공을 위해 농촌지역 교직원 모집, 유지 및 계획된 전문 학습을 개선해주고, ② 농촌 학생들에게 더 많은 커리큘럼 선택과 학습 기회 제공하고, ③ 유연한 커리큘럼 구현을 지원하는 최첨단 기술 제공해주고, ④ 고등 교육기관, 직업 교육기관 및 지역 산업체와의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함.
- 이 전략의 일환으로 농촌에 양질의 교사 유치를 위해 농촌 및 원격지역 학교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교사교육 단계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농촌 학교에 근무하는 현직 및 임시 교사, 학교 행정가들에게 장학금과 인센티브(기본수당)를 부여함.

○ 특히 농촌 경험 프로그램(Rural Experience Program)을 통해 정규 교사가 지역 시골 환경에서 가르치고 생활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농촌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의 교장은 한 학년도에 최소 1~4학기 동안 임시 배치 기회(전체 또는 공동 자금 지원)를 가질 수 있음.

- 농촌 경험 프로그램은 교사가 농촌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 옵션으로 농촌 학교 근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 교사에게 양질의 전문성 개발 경험도 제공함.

□ 농촌 의료교육(Rural Medical Education)

○ Queensland Rural Medical Education(QRME)으로 알려졌던 호주 농촌 의사 교육 협회(RMEA: Rural Medical Education Australia)는 2002년에 농촌 의사 집단이 Rural Queensland에서 의사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train to retain)'이라는 비전으로 조직을 구성하면서 시작되었음. 초기 교육은 일반 개업의를 대상으로 했지만 의대생과 주니어 의사를 포함하도록 성장했음(Rural Medical Education Australia 2021).

- 2010년 RMEA는 농촌 지역의 변화하는 요구 사항에 정확히 맞춰진 유연하고 대응력이 뛰어난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 조직과 잘 구축된 대규모 대학의 성공적인 협력을 대표하는 그리피스 대학(Griffith University)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농촌 지역사회에 의료 봉사에 초점을 맞춤.

- ‘농촌 의료교육’의 주력 프로그램인 Longlook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의 의대생을 위한 1-2년 임상 배치를 지원함. 이러한 긴 시간 동안의 배치는 도시 기반 의대생을 위한 단기 임상 순환 모델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며, 이들 중 다수는 대도시 이외의 환경에서 경력을 고려하지 않았음. Longlook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 사회에서 2년 동안 훈련을 받은 Longlook 학생들의 농촌 유지율 80% 달성을 통해 농촌 지역 사회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함.
- ‘농촌 의료교육’은 의대생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의 의료 종사자가 졸업하는 호주 유일의 의료 교육 기관이 되었고, 그동안 농촌 일반 개업의를 지난 18년간 성공적으로 배출하였음.

2.6. 일본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 일본은 2014년부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종합전략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2014년 마을·사람·일 창생본부의 설치로 본격적인 지방상생정책을 추진하고, 2015년부터 창생종합전략을 마련하여 시행(임성호 외 2016; 차미숙 2020; 이소영 외 2021)

- 창생종합전략의 4대 정책목표는 (1)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2) 지방으로 새로운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고, (3)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고, (4)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을 만들어 사람들의 편안한 삶이 영유되도록 유도하고 지역 간 연계를 도모하는 것임.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은 ‘고용의 질’ 확보 및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 특히, 청년 세대가 지방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임금+안정된 고용형태+보람 있는 일’이라는 요건을 만족하는 고용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지역경제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점 기업 및 사업의 집중적인 육성 과 기업의 지방이전,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 전통사업의 계승 및 지역생산 활성화 등에 대처하여 안정적인 ‘고용의 질’을 확보 및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일자리 창생) '고용의 질' 확보 및 향상, 청년 세대가 지방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람 창생)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일자리 창생을 도모하면서 청년의 지방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조 형성
- (마을 창생)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함으로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지방생활의 쾌적함을 느끼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을'의 집약·활성화 필요

○ 일본의 지역이주 전략으로 대도시 생산가능 인구를 지방으로 직접 이주시키는 UIJ턴 사업과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이 있고, 과소화되는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사업으로 외국인 인재활용 사업과 여성, 고령자 등의 신규취업자 발굴사업, 미래의 지역이주 인구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농산어촌 체험사업 등이 있음.

○ 대도시 청년의 지역이동정책(UIJ턴 사업): 이 사업은 도쿄권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 특히 과소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하는 사업임. 대도시의 청년이 지역에 창업, 취업, 사업승계를 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인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대도시 인력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기업에 취업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함.

- 지방출신이 대도시에서 공부하거나 취업했다가 다시 출신지역으로 회귀하는 U턴, 도쿄 등 대도시 인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I턴, 지방출신이 대도시에서 공부하거나 취업했다가 출신지역의 인근 도시로 회귀하는 J턴으로 구분하며, UIJ턴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규모의 사람과 일자리 간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도시 생산가능인구와 지역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음.
-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이주비용의 경제적 지원, 대도시청년과 지역기업의 일자리 매칭, 관계잠재인구 확대 그리고 전문인력의 환류 등이 있음. ① 이주비용의 경제적 지원은 대도시 청년이 도쿄권 이외의 소재 지역기업에 취업할 경우 지방창생 추진교부금과 고용관계 조성금을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가 이주 및 주거에 드는 비용을 지원은 물론 기술교육 등을 통한 지역정착에 도움을 주고 채용기관에는 금융관련 지원을 함.

② 대도시청년과 지역기업의 일자리 매칭의 경우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중소기업과 창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국 규모의 매칭을 지원하고 있음. 구인정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신용, 매출, 주력사업 등의 정보를 매칭프로그램에 게재하고 있음. 또한, 장기적인 UIJ턴 증대 및 연결을 위해 대도시 인구나 지방간 교류사업과 대도시 인구에 지역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에 관심이 있는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관계인구’를 확보하고 창출하는 사업비도 지방창생 추진교부금에서 충당하고 있음. ③ 한편, 대도시권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주요 대기업의 경영인재를 지역에 영입하는 ‘프로페셔널 인재유치’ 사업은 지자체가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전문가와 기술인재의 저변을 넓히고 있음. 도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전문직 및 기술직 퇴직근로자를 매칭하는 ‘새로운 현역 교류회’ 사업도 전국적으로 추진됨.

○ 지자체의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지역부흥협력대): 지역부흥대 사업은 지역기업이 아닌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직접 모집공고하고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함. 주민등록과 생활거점을 도시지역에서 과소지역 등으로 이주한 사람을 과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부흥협력대원’으로 위촉하여 3년간 급여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금까지 지원하며, 지역부흥협력대원이 3년 이내 활동을 마친 후에 지역의 정착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창업자금을 지원함.

- 2009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31곳에서 89명을 선발했는데, 근년에는 수백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간 1,000명 이상을 선발하고 있음. 중앙정부가 지역부흥협력대원선발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조건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음. 지역부흥협력대원으로 20대 및 30대가 80%를 차지하며 부흥협력대 활동 기간 종료 후에도 지역에 남은 이들의 비율이 약 60%에 이룸. 지역에 남은 지역부흥협력대원의 47%는 취업, 18%는 농업 종사, 17%는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사업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뉨. ① 미디어를 통한 홍보강화로 청년층뿐만 아니

라 대기업을 정년퇴직한 전문경영인, 전문기술자 등 시니어층이나 국내거주 외국인, 청년 해외협력대 경험자, ‘고향 워킹 홀리데이’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부흥대사업을 확충함. ② 대원의 창업 및 사업승계를 위한 창업금융지원을 시행함. 창업과 사업승계를 위한 대원과 사업자 간 매칭프로그램(UIJ 매칭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임기 종료 후에도 정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창업과 사업을 승계한 대원에게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짐. ③ 지역부흥협력대로 활동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협력활동을 체험하고 지역부흥협력대원으로 매칭을 유도하는 ‘예비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농산어촌 체험프로그램: 미래사회를 위해 관계 인구를 증대하고자 일본 초등교육 과정에 포함된 교육과정으로 “어린이 농산어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대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린이가 과소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체험함으로써 성년이 되어 과소지역에 취업하거나 정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됨.

- 농산어촌 체험사업은 초중학생 각각 30만 명 이상, 고교생 10만 명 이상이 일정기간 농산어촌 지역에 머물며 체험을 통한 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도시지역 아동·학생이 장래 UIJ턴의 기회를 형성하고 있음. 농산어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박 3일 농어촌 체험을 초등교과 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어린이 체험 활동 추진은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글상자 30〉 일본의 집락지원인 / 지역부흥협력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락지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총무성)은 2008년부터 농촌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우리 마을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끔 하는 취지에서 농촌 마을에 도움을 줄 인재를 지원(파견)해주는 ‘집락지원인’ 제도를 도입함. 집락지원인은 ‘마을 점검 활동’과 ‘마을 현황 주민공유 활동’을 함. ‘마을 점검 활동’은 마을 주민 자신이 마을이 처해 있는 현실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자치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집락지원인은 마을주민의 생활서비스 실태, 보건의료서비스 실태, 마을 내 자연환경 보존 실태, 공공시설 관리 실태, 마을 내 유무형 자원 보존 실태를 파악, 정리하는 활동을 함. ‘마을 현황 주민 공유 활동’은 마을 점검결과를 마을 주민,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인지도시키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원활동. 집락지원인에게는 급여와 활동비로 1명당 350만 엔(마을 내 자치회장(이장) 등 다른 업무와 겸임의 경우 1명당 40만 엔)을 국고(특별교부금)으로 지급함. • 지역부흥협력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총무성)의 지역창생전략의 하나로 2009년 도입된 ‘지역부흥협력대’은 도시지역으로부터 지역활력이 쇠퇴할 우려가

큰 과소지역으로 인구이동을 촉진시켜 이들이 새로운 생활주역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지자체와 지역대학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함. 대원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대략 1년 이상 3년 정도 해당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지역 브랜드화나 지역 산품의 개발·판매·프로모션, 도시 주민의 이주·교류의 지원, 농림수산업에의 종사, 주민 생활의 유지를 위한 지원 등의 지역 협력 활동에 종사하고, 이를 통해 대원의 정주·정착을 도모를 유도함. 대원 1인당 400만 엔(보상비 등 200만 엔, 기타 경비 200만 엔)을 상한으로 보상비(일종의 급료)가 지급됨. 2015년부터 대원의 기술, 경험이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 250만 엔까지 지급 가능하게 탄력화 함(3년을 넘는 경우, 특별교부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가능).

자료: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2019), 유학렬(2021).

□ 2지역 거주 시범사업

○ 일본은 일찍이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농촌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지역 거주'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현실적으로 농촌 영구 이주 수요보다, 2지역 거주를 통해 도시의 편리함과 전원생활의 가치를 누리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수요가 더 많다는 것에 착안하여 2지역 거주 관련 정책 추진함(송미령 외 2020).

- 2004년 11월, 국토교통성 국토계획국 총합계획과에서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2지역 거주인구 연구회」 조직하였으며, 2008년 수립된 제1차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에서는 지역으로의 인구 유치·이동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2지역 거주」 시책을 제시함.
- 2014년 제정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에 근거 수립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총합전략」에서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2지역 시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2015년 수립된 제2차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에서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이주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기존의 「2지역 거주」에 더하여 「2지역 생활·취로」를 추가함.
- 이렇듯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일본 국토교통성은 6개 민간사업자와 4개 광역지자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2지역 거주 촉진 협의회」를 설치하고, 4개 지자체별로 2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함.

〈글상자 31〉 일본 가미야마정 사례

- 도쿄에서 약 600km 떨어진 도쿠시마(徳島)현의 가미야마정(神山町)은 해발 1,000m의 산간지역으로 인구 2만 명 이상 살던 곳이었지만 5,300명까지 감소하여 소멸위기 지역으로 몰렸음. 1990년대 이곳 출신 건축가 귀촌인(오오미나미씨)의 노력으로 청년, 예술인 유치를 시작하면서 지역 활성화가 시작되었고, 그린벨리 NPO 활동을 통해 IT업체 유치 활동을 시작하여 2010년대부터는 도쿄의 I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앞다퉀 '위성 사무실(본사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킨 사무실)'을 개설하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었음. 지금까지 16개 회사가 이곳에 터를 잡음.

자료: 중앙선데이(2018); 전북일보(2020).

3. 시사점

- 도시와 농촌의 교류, 연계를 통한 농촌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
 - 서울: 넥스트 로컬, 연결의 가능성, 삶의 경로탐색 프로젝트
 -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전남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 경북 청정 경북 프로젝트,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경북 의성 팸투어
 - 미국 Ag in the Classroom, 일본 지역이주정책의 농산어촌 체험사업
-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귀농·귀촌 관련 사업들을 전문성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매개로 일자리, 주거,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통합·추진함.
 - 인천 강화 청춘마을, 강원도 홍천시 전원도시 특구, 충남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충북 덕산면 청년마을 청년농촌 정착플랫폼,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전북 완주 청년JUMP 프로젝트, 전북 순창군 청년정책, 전남 인구청년정책관, 의성 이웃사촌시범마을
 - 미국 Rural Job and Innovation Accelerator Challenge, 미국 Rural Business-Cooperative Service, 일본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 농촌에 열정이 있고 역량 있는 청년들을 농촌지역 활동가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전북 농촌과소화대응인력 육성사업, 순창 청년활동가 육성
 - EU EMRA, 일본 지역부흥협력대
- 농업 기술 외에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농촌생활관련 기술교육 강조하고 있음.
- 홍성 평민마을학교, 서천 삶기술학교
 - 전북의 농업 외 실용기술교육, 완주 청년마을학교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융화 및 농촌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귀농·귀촌 유입 노력을 하고 있음.
- 충북 1939 행복공동체, 충북 홍성 평민마을학교
 - 강원도 홍천시 갈등관리위원회, 귀농·귀촌 갈등민원 해결팀
- 외국의 경우 도시민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농촌 주거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 2지역 거주 시범사업
 - 영국 Second Home
- 교육, 문화, 의료 등 도시에 비해 취약한 삶의 질 분야의 전문인력의 농촌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함.
- 미국 The Art of Community: Rural SC
 - 호주 Rural & Remote Human Resource Strategy, Rural Medical Education

7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안)

1. 기본 고려 사항

1.1. 변화하는 시대 상황: 향후에도 귀농·귀촌은 지속될 전망, 도시 과밀 및 농촌 과소화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써 귀농·귀촌 정책 확대 추진 필요

- 인구학적으로는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세계 어떤 나라보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생산인구 감소로 조만간 인구오너스를 경험할 전망이다. 경제적으로는 고성장시대를 지나 2015년 이후 저성장시대에 진입하고, 제조업, 금융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으로 농촌보다는 도시지역, 연령별로는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고용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음. 한편 국민들의 일과 삶(여가)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문화 및 저밀도 지역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지면 주요 서방국과 일본에서 나타나는 탈도시화·전원회귀 흐름이 우리사회에서도 사회·문화적으로 나타남.
- 고령화가 심각하여 인구의 자연 감소로 지방소멸의 위협에 처해있는 농촌이지만 주거, 일자리, 여유로운 삶 등 다양한 이유로 도시민의 농촌으로의 유입이 지속되고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 상황은 농업·농촌에는 중요한 기회요인이 되고 있음. 도시민

의 농촌 유치를 통해 농촌의 인구를 유지하고, 부족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

〈표 7-1〉 제1차 계획 수립 당시와 현재의 인구·경제·사회문화 상황 비교

	5년 전 상황 (1차 계획)	현재 상황 (2차 계획)	차이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15년 인구증가율: 0.38% • 2015년 합계출산율: 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20년 인구증가율: 0.12% • 합계출산율 2018년 처음으로 1 이하 • 2020년 사상 첫 인구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으로 인구감소 심화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까지 생산인구 증가 전망 • 2010~14년 경제성장률: 3.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인구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 • 2015~19년 경제성장률: 2.27%(2020년 코로나로 -1.0%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보다 저조한 저경제성장세 지속
사회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주택가격지수('04 기준) 도농차이: 4 • 주당노동시간(2015): 43.7 • 일가정 우선순위(사회조사 2015): 일우선 5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지수(2020) 도농차이: 34 • 주당노동시간(2020): 39.0 • 일가정 우선순위(사회조사 2010): 일우선 42.1% • 비대면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 간 주택가격차이 심화, 소득수준의 상승 및 노동시간 감소, 가정, 여가 중시 관련 사회 풍조 더 확대

1.2.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 귀농 정책의 내실화와 귀촌 정책 강화 필요

-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은 청년 귀농가구의 양적 확보, 귀농가구 중심으로 적정 농가소득 달성, 귀농·귀촌인의 지역주민과 상생협력 등을 핵심 성과 목표로 하여 주요 전략으로 청년층의 농업 창업 중점 지원,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일자리·주거 등 정착 지원 강화, 귀농·귀촌 저변 확대, 융화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등이 추진되었고, 귀농을 중심으로 양적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청년 농업인과 고용인력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국민들의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표준 교안 개발)가 진행되고, 단계별, 연령별, 직능별 맞춤형 교육이 강화되고,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고 있었음. 다만 귀농자를 위한 지속적인 경영·유통 및 농외소득 등의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 귀촌자 대상 교육 및 관련 정책의 보강이 필요하고, 다양한 일자리 정책 및 주거·생활여건 지원 정책을 보강하고, 귀농·귀촌 정책 접근성을 꾸준히 개선될 필요가 있었음.

1.3. 범부처 정책 및 관련 사례의 시사점: 범부처·지자체 등의 유관 지원 정책의 통합적 추진 필요

- 도시민의 농촌 유입과 관련한 일자리, 주거, 공동체 활성화 등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농림축산식품부 외에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귀농·귀촌 정책은 지역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인 만큼 범부처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공동 대응 필요하였음.
- 국내외 귀농·귀촌 관련 사례 조사 결과,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한 농촌 관계인구 확대,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귀농·귀촌 관련 사업들을 전문성있는 중간지원조직을 매개로 일자리, 주거,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통합·추진, 농촌에 열정이 있고 역량 있는 청년들을 농촌지역 활동 강화,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농촌생활관련 기술교육 강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융화 및 농촌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귀농·귀촌 유입, 도시민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농촌 주거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교육, 문화, 의료 등 도시에 비해 취약한 삶의 질 분야의 전문인력의 농촌 유치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였음.

2. 제2차 계획의 비전과 목표

- 정책 비전
 - 귀농을 통해 새로운 농업 인력을 수급 받고, 귀촌을 통해 다양한 재능을 가진 도시민이 유입된다는 의미에서 “**농업이 밝아지는 귀농, 농촌이 젊어지는 귀촌**”으로 설정하였음.
- 정책 목표
 -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정착 지원을 강화를 통해 귀농인의 소득, 귀촌인의 농촌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킴.

- 귀농 분야: 귀농 5년차 평균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까지 향상(2021년 88% 수준 → 2026년 95%)
- 귀촌: 귀촌가구의 농촌 생활 만족도 수준 향상(농촌생활 만족자 비중: 2021년 76.2% → 2026년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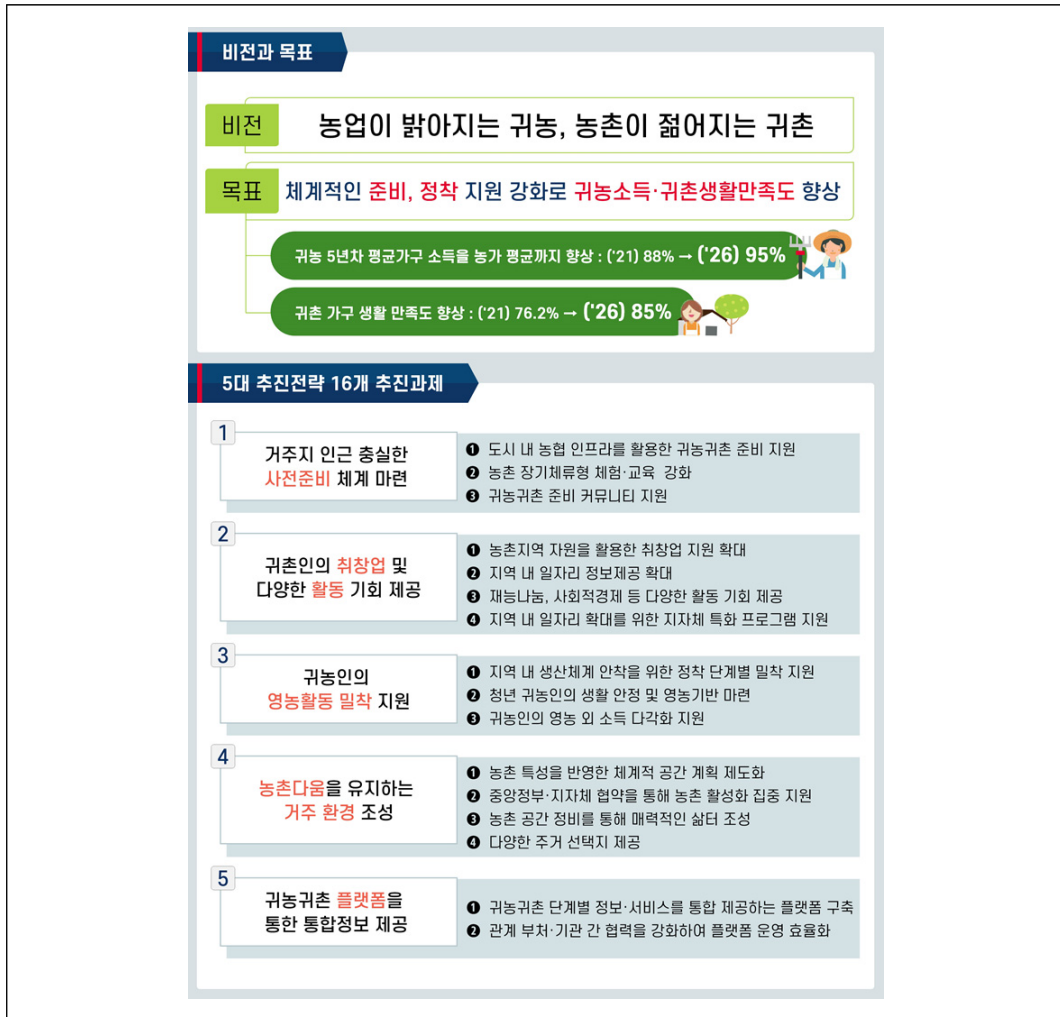
○ 추진 전략

- 제1차 계획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변화된 여건 및 도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2차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5개 추진 전략을 설정함.
- 전략 1: 늘어나는 도시민의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민 편의를 고려하여 귀농·귀촌 수요를 발굴·관리하고, 내실 있게 귀농·귀촌을 준비시킴 →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 귀농·귀촌 준비 체계 마련**
- 전략 2: 귀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귀촌 정책을 강화함 → **귀촌인의 취창업 및 다양한 농촌 활동 기회 제공**
- 전략 3: 귀농에 대해서는 지역 중심 밀착 지원으로 내실화하고, 지속적 보완이 필요한 소득 분야 정책을 적극 추진함 →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
- 전략 4: 귀농·귀촌인들이 정착과정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주거 및 생활 인프라 분야 지원을 강화함 →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도시민 거주 수요에 맞는 농촌 공간 조성**
- 전략 5: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관련 정보 접근성을 개선함 →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정보 제공**

3. 주요 추진 전략별 과제⁷¹⁾

○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비전(농업이 밝아지는 귀농, 농촌이 젊어지는 귀촌),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 추진전략별 추진과제(16개)는 <그림 7-1>과 같음.

<그림 7-1>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비전·목표·전략·과제



71) 이 장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연구 결과 중에 관련 기관 및 부처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도출된 비전, 전략과 추진 과제만을 제시함. 기타 연구 추진과정에서 개발되었지만, 최종 안에서 제외된 추가로 고려할만한 추진 과제는 부록 3 참조.

2.1. 도시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 마련

[추진 필요성]

- 도시민 귀농·귀촌 의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2020)변화를 보면 2000년대 후반 이후 감소세를 벗어나 최근 증가세 전환. 향후 이주 시기 등을 고려해 보면 향후 10년 이내 1.5백만 명의 잠재 수요가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도시민의 농촌 이주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도시민들은 이주 실행을 위한 양질의 정보제공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상호 관계 형성, 사전교육 등의 정책 개선 요구가 높았음.
 - 원활한 준비를 위한 양질의 정보 제공이 중요한데, 수요자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해 귀농귀촌인은 사전 준비에 어려움 호소함. 귀농·귀촌인들이 지적하는 귀농·귀촌 정책의 문제점(농림축산식품부·갤럽 2018~2021)으로 ‘정보 접근성’ 응답 비율(귀농/귀촌)을 보면 (‘18) 22.5%/27.0% → (‘19) 27.3/41.7 → (‘20) 35.5/45.8 → (‘21) 27.5/36.3 등이었음.
 - 특히 농촌지역 연고 없는 경우(도시출신자, 농촌출신 비연고지 이주자)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 위한 상호 관계형성 지원 요구가 높았음. 귀농·귀촌 유형별 관계형성 지원 요구(귀농/귀촌)를 보면 도시 출신 농촌 이주(12.1%/21.9%) > 농촌출신 비연고지 이주(7.2/19.3) > 농촌출신 연고지 이주(4.1/16.9)(농림축산식품부·갤럽 2016~2021)
 - 동시에, 사전교육 이수 등 철저한 준비가 소득증가 등 안정적 정착으로 연결되고 있어 체계적인 준비 지원이 매우 중요함. 사전교육 이수/비이수 귀농귀촌인의 가구 소득변화(현재소득-첫해소득) 비교: (귀농 교육 이수자) 1,315만 원 > (비이수자) 582 / (귀촌교육 이수자) 936 > (비이수자) 367(농림축산식품부·갤럽 2016~2021)
- 증가하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유사한 관심(지역·품목)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밀도 높은 사전 준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과제 1-1] 도시 내 농협 인프라를 활용한 귀농·귀촌 준비 지원

- 도시민의 충실한 귀농·귀촌 사전 준비체계 마련 차원에서 도시지역 농협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시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보다 쉽게 교육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해야 함.
- 도시지역 농협(85곳) 내 자산관리 전문인력 양성('25년까지 170명)
 - 전문인력은 도시 농협을 찾는 지역민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필요한 금융 컨설팅(도시 자산 정리 등) 및 이주 희망지 농지·주거 관련 컨설팅 제공함.
 -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금융·농지·주거 컨설팅 기능은 농협 마이데이터 서비스⁷²⁾ 내 귀농귀촌 특화 서비스를 개설하여 온라인으로도 제공함. 산재된 개인의 데이터(예 적금·카드·보험 등)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통합 관리하며 고객 대상 맞춤형 자산 관리 및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도시민 거주지 인근 농협에서 귀농귀촌 기초 교육 제공함.
 - 농협의 전문성을 살린 특화교육(자산관리, 금융·세제·유통) 제공하고,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인 교육 과정(4h~8h 교육)을 운영함.

[과제 1-2] 농촌 장기체류형 체험·교육 강화

-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고, 특화과정 도입함.
 - 1~6개월간 하나의 마을에 거주, 지역 주민과 교류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경험하며 농촌에서 살 수 있을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함.
 - 2021년 처음 도입하여 현장에 높은 호응*을 얻었던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여마을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
- * 전국 88개 시군 104개 마을에 649가구 참여, 이중 73가구가 농촌지역으로 전입

⁷²⁾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해 금융소비자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모든 금융 기관에 있는 본인의 자산·부채·연금·부동산 등 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특화된 자산관리를 제공할 수 있음.

- 특정한 목표(특정 품목 재배, 창업, 사회적경제 등)를 지닌 참여자들이 실현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테마별 특화마을 도입·운영함.

○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장기 귀농 교육 과정 운영을 확대함(150명 내외).

[과제 1-3] 함께 준비하는 귀농·귀촌을 위한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지원

○ 유사한 관심(지역·품목 등)을 지닌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구성을 지원함.

- 동일한 관심 지역(시·군)을 선택한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회원 대상으로 커뮤니티 시범 구성하여, 성과를 확인한 후 확산 추진

○ 자율적 활동을 장려하되, 지자체 담당자·전문가 매칭을 통해 활동 활성화를 유도함.

- 구성원 간 유대활동, 희망하는 교육·체험 편성, 관심 지역 현장 프로그램 및 지역 주민 교류, 지자체 초청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
-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 운영을 통해 졸업자(귀농귀촌 실행자)와 신규회원 교체, 귀농귀촌 관련 정보·경험·네트워크가 공유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

<그림 7-2>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안)



2.2. 귀촌인의 취창업 및 다양한 농촌 활동 기회 제공

[추진 필요성]

- 1차 기본계획이 귀농을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귀촌 관련한 정책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2차 기본계획에서는 귀촌자를 위한 특화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함.
- 귀촌인들은 주로 직업을 이유로 농촌 이주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 내 일자리 여건이 중요하며, 도시지역 재능을 활용한 직업 외 활동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음.
 - 통계청의 귀농·귀촌 통계에서 귀촌인의 농촌 전입 사유를 보면, 직업이 가장 많았고 (특히 40대 이하에서 1순위), 실제 귀촌이 활성화된 지역은 농업외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었음.

〈표 7-2〉 연령대별 귀촌 사유 1순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1순위	직업	직업	직업	주택	주택	가족	직업
비중(%)	49.7	36.0	35.8	34.4	38.0	35.2	33.6

자료: 통계청(2017~2020). 귀농·귀촌통계조사(누적).

〈표 7-3〉 귀촌 증가 상위 10개 군지역 및 전체 군 지역 특성 비교('16~'20)

구분	상위 10개 군	전체
귀촌 증가율('16~'20)	28.0%	△0.1%
1인당 지역내 총생산(백만 원)(2017)	35.9	33.0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종사자수(명)(2019)	426.9	411.5
평균 연령(세)(2020)	45.3	47.1

* 귀촌 증가율 상위 10개 군 : 무안, 진천, 양양, 옥천, 홍천, 예천, 무주, 화순, 장성, 의성.

자료: 통계청(2016~2020). 귀농·귀촌통계.

- 귀촌인은 도시에 비해 비교적 여유로운 여건을 활용하여 직업 외 분야에서도 본인의 재능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 희망하고 있음*.
 - * 귀촌인의 직업 외 활동 희망 분야: 멘토링·상담(21.2%) > 저소득층 지원 및 사회복지(18.7)(농림축산식품부 2021b)⁷³⁾

* 귀촌인 창업 활동 이유(농림축산식품부·갤럽 2021): 생계를 위해(66.6%) > 귀촌 전 경험 활용(16.5) > 주변 권유(8.1)

- 귀촌인이 농촌에서 일자리, 재능나눔, 사회적경제 등을 통해 귀촌인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위한 지자체의 기반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과제 2-1]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귀촌인들이 농촌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취창업 기회 확대

-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청장년의 취창업 활동 및 창업 공간 조성 지원을 확대함.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⁷⁴⁾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산업, 지역사회 공헌(사회적경제) 분야 취업, 소멸위기지역 내 창업 청년들에게 임금, 직무교육 등을 지원함.
-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농촌의 자연환경, 문화 자산 등을 소재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창업가 대상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마케팅 등을 지원함.
-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창출하려는 마을기업에 귀촌인(귀촌 농산업창업 교육 이수자) 참여 시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함.
-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청년이 중심이 되어 지역 정착 및 활력 제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을 지원함.

[과제 2-2] 귀촌인에게 지역 내 일자리 정보 제공 확대

- (일자리 연계지원 서비스 강화) 농촌지역 내 일자리를 원하는 (예비) 귀촌인 수요에 맞춰

73) 농림축산식품부가 귀촌 희망자 1천명 대상 설문조사('21.12).

74) 이 사업에서는 취업 시 인건비, 직무교육비 등 지원을 지원하고(2년), 창업 시 창업공간 구축, 교육비·임대료를 지원함(2년).

새로 구축되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에서 농촌 지역별 일자리 정보(워크넷 및 민간 플랫폼 연동), 관계부처 일자리 지원 사업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함.

- (현행) 귀농·귀촌 누리집 내 도농인력증개서비스, 지역별 워크넷(고용부) 메인 페이지 링크 → (개선) 플랫폼 회원이 거주지역 또는 관심지역과 관심 직군을 등록할 경우 관련 일자리 정보를 매칭하여 알림서비스(문자 등) 제공

[과제 2-3] 재능 나눔, 사회적 경제 등 농촌에서 가능한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이주 전 지식·경험을 지역민과 나눌 수 있도록 귀촌인 재능나눔 추진 체계를 구축함.
 - 농식품부(비용 지원), 시군별 귀농귀촌지원센터(귀촌인 관리), 지자체 재능나눔 부서(활동 기회 제공), 귀농귀촌협의체(활동 실행) 간 협력체계 구축
 - * 프로세스: ① 귀농귀촌지원센터: 재능DB 구축(귀농귀촌 플랫폼 활용) → ② 귀농·귀촌인협의체: 분야별 소그룹 구성 → ③ 지자체: 활동 전개 → ④ 농식품부: 실적 평가
- 이주 전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지역 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활동 인건비 및 주거비를 지원하는 농촌 사회적경제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사업을 도입함.
 - 사회적경제조직 취창업, 지역공동체 조직화, 서비스 수요 발굴 등 사회적경제 관련 기획·지원·홍보활동 인력의 체류비 지원(월 200만 원)
- 농촌지역에서의 여가생활(교육·문화·복지) 영위 여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을 확대함.

[과제 2-4] 지역 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자체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지자체가 관외에 위치한 기업·단체 등의 위성사무실 유치 등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무공간 조성 등을 지원함.
 -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농식품부, 지자체보조) 추진 시군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단기적으로는 농촌지역 시군이 체험휴양마을 등을 단기 원격업무(위케이션, work+vacation) 공간으로 제공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 조성비 등 지원
- 장기적으로는 농촌지역 시군이 IT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신청하는 경우 사무실 조성(리모델링·IT환경) 비용 등 지원(7년 내 사무실 폐쇄·이전 시 지원액 환수)
- ※ (해외사례: 일본 가미야마마을) 인구감소(2만 명→53백 명)로 소멸 위기에 있던 산간마을 가미야마(神山町)에 '08년부터 IT기업의 본사·위성사무실 16개 개설을 통해 업체 종사자 등 91가구·161명 이주, 지역 활력 회복. 지자체는 기업 유치를 위해 인터넷망 설치, 공유 사무실(Kamiyama Valley Satellite Office Complex), 직원 숙소(Week Kamiyama) 설치 지원

2.3.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

[추진 필요성]

- 1차 기본계획을 통해 귀농 지원 정책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귀농인들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적정 소득 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음.
 - 귀농 5년차에 일반 농가의 9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최근 그 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농림축산식품부·갤럽 2016~2021): 일반 농가소득 대비 귀농인 가구소득 비율 2019년 90.2% → 2021년 72.2%.
 - 귀농 직후 소득 수준이 낮고, 귀농 이전 소득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됨(농림축산식품부·갤럽, 2016~2021): 귀농 전 평균 가구소득 4,043만 원 → 귀농 1년차 평균 가구소득 2,340만 원(귀농 전 소득의 57.8%) → 귀농 5년차 평균 가구소득 3,525만 원(귀농 전 소득의 87.2% 수준)
 - 귀농인은 소득을 농촌 정착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추가 소득을 위해 귀농 가구의 절반이 농외소득 활동을 수행**

* 귀농인 농촌 정착 시 어려움(농림축산식품부·갤럽 2016~2021):

소득(46.3%) > 농업(22.3%) > 지역 인프라 부족(14.7%)

소득(49.4%) > 농사(20.3) > 지역인프라(19.0)

** 귀농 가구의 57.6%가 농업생산활동 외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직장 취업(24.7) > 자영업(19.2%) > 임시직(16.9) 등에 종사함(농림축산식품부·갤럽 2021).

○ 귀농인은 영농활동 과정에서 영농기술, 경험 부족하지만, 농업 생산·유통 과정에서 농협과 같이 구조화되고 전문적인 지역 농업생산 조직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귀농인의 영농활동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농림축산식품부·갤럽 2021): 영농기술/경험 부족(50.3%) > 농지 및 시설 투자 자금 부족(17.7) > 운영비 부족(7.9)

- 귀농인의 지역농협 가입률은 50% 내외로 낮은 상황(농협 2021): 귀농창업자금 수혜자 중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율: ('18) 43.9%, ('19) 51.3, ('20) 49.4

- 귀농인의 영농기술·경험 및 자금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전문적인 지원보다는 지인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있음(농림축산식품부·갤럽 2021): 귀농인의 영농활동 어려움 해소 방법은 친한 선배, 동료 및 지역 주민과 상담(66%), 마을이장에게 상담(15.9), 인터넷 검색 등 활용(5.6), 지역기관(지자체·농협 등) 활용(3.9) 등의 순이었음.

○ 신규 농업인력인 귀농인이 지역 농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밀착 지원하고, 안정적 농업 소득 활동 유지 지원이 필요함.

[과제 3-1] 지역 내 농업생산 현장 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

○ (정착 초기 지원) 농촌지역 농협 내 귀농 정착 지원인 역할을 할 '영농 네비게이터' 지정하고, 정착 초기 귀농인에게 판로·경영·비품구입 등 영농 전반에 대해 1:1 현장 밀착 컨설팅을 통해 영농 안정화를 지원함.

- (1단계) 농협 교육 수료자 및 정책자금 이용자 위주 시행 → (2단계) 귀농귀촌통합 플랫폼 회원으로 확대함.

- 지역농협 미가입 귀농인과 조합원으로 구성된 '예비조합원 커뮤니티' 조직, 상호 교류 및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유도함.

○ (성장 단계 지원) 조합원으로 가입한 귀농인에 대해 하나로마트와 같은 농협 인프라를 활용한 판로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 농협 창업농지원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 '영농 네비게이터' 활동 실적, 귀농인 조합원수 증가실적을 지역농협 평가항목에 신설하여 귀농인 지원 실적이 우수한 농협에 인센티브를 제공함.

- (현행 지역농협 평가항목) 청년 조합원수(만 45세 미만) 증가율 → (확대) 귀농 조합원수 증가율

〈표 7-4〉 귀농인 농업현장 밀착 지원을 위한 농협중앙회·지역농협 역할 강화

귀농인	조합원 가입 전(귀농 초기)	조합원 가입 후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네비게이터 운영 • 예비조합원 커뮤니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가입 인센티브(금융, 경제사업 등) • 우수 지역농협 평가, 인센티브 제공

[과제 3-2] 청년 귀농인의 생활 안정 및 영농 기반 마련 지원

○ (생활안정) 청년 귀농인의 초기 소득 불안에 따른 생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 지급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함.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대상자 중 귀농인 선정 비율: ('20) 69.7% → ('21) 71.8

○ (자금) 청년 귀농인의 농지·시설 확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융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시킴.

- (예)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

- (농지) 농지은행 관리 농지 확대 및 귀농인 대상 농지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 귀농인 농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가격·임차료·거래동향 등의 정보를 귀농인별 관심사항에 맞춰 알림서비스 제공(귀농 귀촌 통합 플랫폼 연계), 주기적 농지정보 페어 개최(시군·농협 등 협력)
 - 청년·신규농이 필요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 거래·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과제 3-3] 귀농인의 영농 외 소득 다각화 지원

- 귀농 전 지식·경험을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귀농인에 대한 융복합산업 경영체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교육·컨설팅 등 단계별 성장을 지원함.
 - 융복합 예비 인증 운영 및 귀농인 본인증 신청 시 가점 부여
- 지역 주민과 귀농인이 함께 농촌 유희 시설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농촌 유희 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함.
- 귀농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로컬 푸드 직매장 출하 농업인 선정 (직매장 지원사업)시 귀농인을 우선하여 선정함.

2.4. 도시민 거주 수요에 맞는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

[추진 필요성]

- 귀농·귀촌인의 농촌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는 생활인프라
 - 귀농·귀촌인 농촌 생활 분야별 만족 비율(농림축산식품부 2016~2021)을 보면 자연 환경, 주거환경, 건강증진, 직업 등 생활 영역에서 만족비율이 높았지만, 소득과 지역 인프라(문화, 의료, 편의) 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지역 생활인프라의

경우 불만족 비율이 더 높았음(귀농 만족 18.9% < 불만족 35.8%, 귀촌 만족 18.4% < 불만족 33.5%).

- 예비 귀농귀촌인의 정착관련 지원 요구가 가장 높은 분야는 주거, 지속적인 도시민 유입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 주거 지원 중요함.
 - 예비 귀촌인 주요 정책 수요(송미령 외 2019): 주거 지원(39.6%) > 농촌 정보(35.2) > 교육·컨설팅(33.3%)
 - 예비 귀농귀촌인의 주거 지원 수요에도 불구하고, 귀농 초기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수준: 귀농귀촌 초기 거주 주택 만족도(5점 만점)(농림축산식품부·갤럽 2021) 귀농 가구 3.66점, 귀촌 가구 3.65점

- 농촌지역 내 적정 수준의 생활 인프라, 주거 여건을 확충하여 농촌 다음을 유지하면서도 도시민에게 매력 있는 농촌 공간 조성이 필요함.

[과제 4-1] 농촌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공간 계획 제도화

- 농촌 공간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할 수 있도록 시·군별 농촌공간의 정비 및 재생지원 제도화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함.
 - 국가와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농촌형 용도지구 지정 등을 통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재생 방안(기관협약, 주민협정 등) 규정, 전문기구·지원기구를 통한 계획 수립·이행·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후 농촌협약에 기반한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기능 재생을 위한 인프라 투자 사업을 보다 효율적·집중적으로 지원함.

〈표 7-5〉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이후 농촌 개발 사업

주요 절차	세부 내용
농촌 공간 기본계획 수립 ↓	시·군별 농촌 공간 관리·이용·보전, 농촌 재생에 관한 중장기 계획(10년 단위) ↓
농촌 공간 시행계획 수립 ↓	시·군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 (추진기반: 농촌협약)	농촌 공간 계획을 토대로 ▲공간정비, ▲일자리·경제기반, ▲주거·정주여건,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패키지화

[과제 4-2] 중앙정부·지자체 협약을 통해 농촌 활성화 집중 지원

- 중앙정부·지자체 상호 협약(농촌협약)을 통해 지자체의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5년 간 최대 300억 원(국비) 규모로 패키지 지원하여 농촌 정주여건 집중 개선함.
 - 농촌협약 : 농촌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지자체 간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연계하여 패키지 지원
 - 일자리·경제 기반(농촌관광활성화 등 4개 사업), 주거·정주여건 개선(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5개 사업), 사회서비스(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 등 17개 사업) 등을 패키지화 함.

[과제 4-3] 농촌 공간 정비를 통해 매력적인 삶터 조성

- 농촌 공간 구획화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함.
 - 농촌공간 구획화: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하여 토지 용도에 맞게 주택·공장·축사 등을 집적화 시키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집적화된 단지를 이전 배치함.
 - 농촌공간정비사업: 유해시설 철거, 철거 공간 활용(사회서비스 시설 구축 등) 및 경관 정비 등
 - 정부는 개소당 140억 원까지 토지 매입비, 보상비, 부지정비비, 건축비 및 경관정비비 등을 지원
- 2021년 5개소(괴산, 영동, 영월, 김해, 상주)의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사업 확대를 추진함.

[과제 4-4] 임대주택, 귀농인의 집 등 다양한 주거 선택지 제공

- ‘농산어촌 주거 플랫폼’ 사업으로 농식품부·국토부·지자체 협력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임대주택과 생활SOC를 결합한 주거단지를 조성함.
 - 2021년 5개소(금산·괴산·제천·영동·강진)를 시작으로 매년 5개소 내외 선정

〈그림 7-3〉 농산어촌 주거 플랫폼 구성(안)



※ (예) 조성 계획(안) : 충북 괴산군(연풍면)

- (주거) 귀농·귀촌, 연풍 초·중학교 전학생 가족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0호 공급
- (생활권정비) 주거단지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행정복합센터 등 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를 위한 생활 SOC 공급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농촌 이주 청년을 타겟으로 문화·여가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 단독 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함.
 - 개소당 30호 내외로 매년 1개소씩 조성을 추진함.
- 정착 초기 임시 거주하며 주거·영농기반을 탐색하는 귀농인의 집 조성을 확대함.
 - 빈집 활용 : (‘21) 370개소 → (‘26) 800(잠정)
 - 유희 숙박시설(체험휴양마을, 팜스테이 등) 활용 : 매년 10여 개소

2.5.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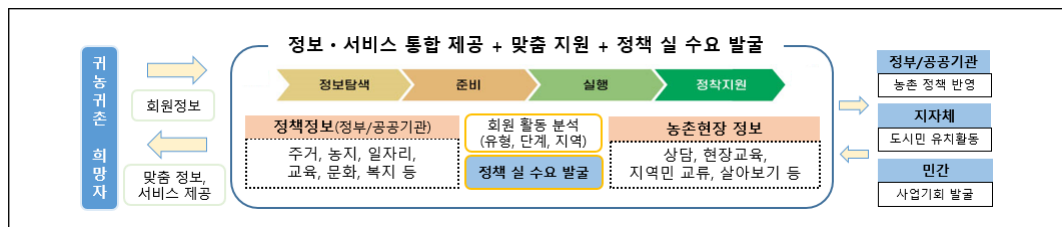
[추진 필요성]

- 귀농인에 비해 귀촌인들의 정부 정책(귀농귀촌종합센터, 지원센터 이용, 정착자금 지원, 시설·기계 임대, 주거 지원, 세제 혜택 등) 수혜율이 대체로 낮았음.
 - 귀농인의 정책 혜택 비율은 중앙 정부 41.6%, 지방 정부 57.9% 인데 비해, 귀촌인은 중앙 정부 20.6%, 지방정부 28.5%였음. 직종별로는 더 편차가 컸는데, 귀농인은 66.6%, 귀촌인 중 농업 종사자는 77.8%, 농관련 산업 종사자는 43.9%가 중앙 또는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았지만, 비농업분야 종사자는 25.6%만이 수혜를 보았음.
 - 귀농·귀촌인들은 귀농·귀촌 정책의 문제점으로 귀농, 귀촌자 모두 정보접근성(귀촌 43.7%, 귀농 31.4%), 각종 귀농·귀촌 정책 지원 절차의 어려움(18.3%, 29.8%),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없다(16.2%, 11.4%)는 점을 들었음. 실제 귀농·귀촌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귀농·귀촌 중간지원조직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귀농·귀촌 종합센터 및 지자체 지원센터 이용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음.
- 분절되어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귀농·귀촌 정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 지원 통로를 일원화해야 함.

[과제 5-1] 귀농·귀촌 단계별 필요 정보·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광범위한 정보·서비스를 관계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역 기반으로 통합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함.

〈그림 7-4〉 귀농귀촌 플랫폼 개념도



〈글상자 32〉 귀농·귀촌 플랫폼 주요 기능

- ① 정보·서비스 통합 제공: 특정 지역의 농지(농지은행), 일자리(워크넷), 복지(복지로), 교육(방과후학교포털·농업교육포털), 주거(농어촌알리미·실거레가공개시시스템·토지e음) 등 정보 제공,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 신청까지 연결(해당 누리집 바로가기 포함)
- ② 회원 정보 분석 및 추천: 회원 기본 정보(연령, 관심지역, 가족, 자산 및 직업 등) 및 활동 정보(교육 이수, 체험 참여, 검색 정보 등)를 종합 분석하여 회원의 귀농귀촌 준비 단계 및 관심 영역 분석, 현재 상태에 적합한 정보 및 이용 가능 서비스 추천
- ③ 연결·공유·개방에 기초한 상호 교류: 회원 상호간, 회원과 회원이 관심 갖는 지자체 간, 회원과 민간 서비스 업체 간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제공

○ 정보·서비스의 수요자(귀농귀촌인)뿐 아니라 공급자(정부, 지자체, 민간)의 활용도 유도하여 정보·서비스 고도화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함.

- 특히, 지자체의 경우 이주 희망자 규모, 특성 분석이 가능하여 타깃 홍보, 이주 수요를 고려한 지역 정책 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표 7-6〉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 시 기대효과

	As Is		To Be
귀농귀촌 희망자	관심 지역인 A군의 농지 가격, 주요 재배품목, 주택 매물 및 가격, 학교 위치 등 해당 정보가 위치한 개별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		관심 지역 A군 클릭 시 해당 군의 농지, 작물, 주택, 학교, 복지와 관련된 현행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 정보 업데이트 시 별도 알림
정부·지자체	B군 이주희망자를 파악할 수 없어 귀농귀촌박람회 등을 통해 전 도시민 대상 홍보, 서비스 제공	⇨	B군 관심 지역 설정 회원들의 평균 연령, 가족, 주요 관심 항목 등을 분석 후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민간	귀농귀촌 희망자 정보 확인 불가, 귀농귀촌인 맞춤형 사업 부족		귀농귀촌인 평균 자산 수준 분석 → 이주 후 도시 자산 관리 서비스 등

○ 2022년 1단계 구축 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시스템 고도화 후 본격 운영함.

〈표 7-7〉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발전 방안

단계	고도화			③ 고도화('25~'26)
	안정화			
	구축	① 구축('22~'23)		
전략	귀농귀촌 국가 정보망 틀 마련		플랫폼 활용 기반 지속 강화	귀농귀촌 핵심 거점화
핵심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수요 대응 통합정보 제공 귀농귀촌 잠재 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착 지원사업·서비스 간 연계 민간개방 서비스 모델 확산
추진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촌 통합 정보모델 구축 지자체 홈페이지 연계·통합 상담 통합 관리체계 구축 관심정보 알림서비스 구축 귀농귀촌 지식 확산 자가진단(준비단계) 툴 개발 국가 포털 BI 개발 및 홍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 이력(준비~정착)관리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실수요 기반 정책 발굴 지원 커뮤니티 시스템(그룹별 활동 이력관리, 정보 공유) 도입·지원 맞춤형 지역정보 고도화 (희망DB현행화, 행정관리시스템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부처(농촌지역정책) 간 연계 패키지 사업·서비스 확충 민간 사업기회 발굴 지원 강화 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확산 커뮤니티 채널 확산 귀농귀촌 통계 브리핑 서비스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1).

[과제 5-2] 관계 부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플랫폼 운영 효율화

○ 관계 부처·기관과 귀농귀촌 플랫폼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서비스 연계 협의, 서비스 개발, 회원 정보 공유 및 정책 수요 분석 등 논의하도록 함.

- 중앙 부처(농식품부, 행안부, 국토부 등)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필요 시 민간 사업자 참여도 허용하여 신규 사업 발굴 기회를 제공함.

○ 농협, 대한상의, 연금공단 등 잠재 귀농·귀촌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귀농귀촌 플랫폼 회원 가입 유도함.

- 예) (농협)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귀농귀촌 특화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연계, (행안부·지자체) 고향사랑기부금 납부자 DB 연계 등
- 농식품부·지자체는 해당 기관 회원 대상 찾아가는 귀농귀촌 교육, 은퇴 계획 설계, 지역특산물 제공(기부금 납부자 등) 등 회원 유입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함.

1. 귀농·귀촌 정책 포럼 결과

1. 제1차 포럼

□ 포럼 개요

- 주제: 귀농·귀촌 메가트렌드와 향후 전망
- 일시: 2021. 6. 2.(수), 15:00~17:00
- 장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3층 회의실(세종)
- 참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김정섭, 최재현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유원상 과장, 김준현 사무관, 신준호 주무관
(귀농귀촌종합센터) 김준영 실장, 임정훈 주임
(전문가) 차미숙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고영우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오정화 사무관(통계개발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요 내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정책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의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포럼을 진행함. 연구책임자인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의 연구 필요성과 목적, 내용 등 연구개요,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귀농·귀촌 관련 메가트렌드 등에 대한 발표
-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지방소멸과 관련된 행안부 연구를 진행 중이며, 관련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지향점임. 연구를 위해 귀농귀촌인을 접촉하고자 하였으나, 매우 어려웠으며, 관련 정보시스템 등이 매우 열악하다고 판단하였음.

- 메가트렌드 분석 방법 중 STACKER, STEEP 등의 경우 분야를 쪼개서 분석하는데, 원내에서 40~50편의 트렌드 분석을 해본 바 있음. 저출산, 고령화의 경우 당연히 메가트렌드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나, 농촌에서는 의성군 등 예시처럼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기도 함. 즉, 메가트렌드 변화와 농촌을 다르게 봐야한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하여 지방에서 인구담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메가트렌드를 인구분야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봤으면 함.
- 최근 2030 세대의 경우 생각이 많이 다르며, 워라벨, 워라인(인테그레이션) 등을 말하고 있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보는 농촌은 말 그대로 '리틀포레스트'임. 5060 세대 인구의 균단위 이주 원인을 '직업'으로 꼽은 바 있는 등 귀농귀촌인들의 귀농 패턴은 지역별로 다름.
- 농촌 빈집 리모델링 활용 등은 탁상공론으로 보일 수 있으나 마땅한 대안이 없어 추진의 필요성은 공감함. 최근 귀농 관련 문제 중 주택 문제는 물량의 문제가 아닌 커뮤니티의 문제임.
- 2차 계획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 대해 하나의 중요 포인트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음. 1가구 2주택 관점에서 지방에 주택을 지을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이러한 수요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착 할 수 있게 할지 등을 고민해야할 것임.
- 현재 농촌을 정의하는 방법은 행정구역으로만 나누고 있음. 프랑스의 경우 농촌에 대한 기준을 바꾼 바 있으며, 인구밀도로 농촌을 정하고 있음. 농촌의 정의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 또한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이와 관련하여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김태완 선임연구위원

- 최근 귀농귀촌인들을 보면, 남성 혼자, 도시 출퇴근 하는 등 특정 유형의 집단이 타집단에 비해 빈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듯 규모나 1인가구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가구의 정착을 위해 유형별로 어떤 것이 필요할지 고려가 되었으면 함.

- 고령화 등은 어떻게 보면 농촌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로도 볼 수 있을 것임. 탈 도시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집중이 매우 강한 상태임. 귀농귀촌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면 함.
- 향후, 메가트랜드 관련하여 연구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것은 기후, 환경 분야로, 이 분야가 귀농귀촌에 긍정, 부정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환경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분석도 필요하다고 판단함. 또한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기 힘든 사람들이 농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임.
- 1인 가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은, 문화, 오락 등이 필요하며, 여성의 경우에도 기존 정책과 다른 유형의 배려나 정책이 필요할 수 있음. 귀농귀촌 인구를 보면 남성 혼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의 경우 아이문제, 문화 등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음. 여성을 고려하고, 자녀(아이)를 고려하는 귀농귀촌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노동 시장에서의 디지털 전환 등 변화가 큰데, 농촌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노동 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귀농귀촌인들의 특성을 함께 봤으면 함. 청년의 귀농인들이 농촌으로 갔을 때 소득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안정적인지 등이 기본계획에서 고려되었으면 함.
- 귀농귀촌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있을지, 판매나 유통에 대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 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커뮤니티 편입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고영우 박사

- 2018년에 청년층의 농어촌 이동 지원정책에 대해 연구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위성도시나 대도시 인근으로의 이주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탈도시화가 진정한 탈도시화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기본적으로 청년의 관심은 '리틀포레스트'인데, 이는 내가 잠깐 살고 싶은 숲이 필요한 것이지, 숲에서 계속 살고 싶은 것은 아님.
- 귀촌인 대부분이 전주 인근, 완주 외곽, 정읍 등 정주생활권 안에서 살려고 하고 있음. 탈도시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유형화가 될 것이라 생각함. 정말 외곽 지역과 중소도시와 기댈 수 있는 지역 등 유형화를 하여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임. 이 부분에서 연령별로 청년들에게 접근해야할 지역과 50대 은퇴 이후 귀농귀촌에게 접근해야할 지역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최근 비대면, 언택트 서비스의 확산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발전에서 이후 지역에서 노동할 수 있는 고용안정화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 2차 계획에서 귀촌에 집중한다고 한 것에는 크게 공감함. 귀농과 귀촌은 특성이 크게 갈리며,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 귀촌보다 귀농에 더욱 큰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음. 귀농지원정책의 경우에도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해야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입장에서는 그 자체에 부담이 될 수 있음. 토지를 구하는 것도 힘든 상황 속에서 귀농인들에게 여러 요소가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함.
- 기존 농촌인들의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생각도 나이에 따라 다른 상황임.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관련하여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즉,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귀촌에 대한 정책이 우선 이루어지고, 이후 귀농에 대한 정책이 이어진다면 좀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함.
- 귀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주 환경임. 이와 덧붙여 이를 지역별, 특성별, 연령대별로 유형화 및 차별화하여 차별화된 정책이 이후 귀농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장님 등 지역 커뮤니티의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 정책적 지원이 3년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3~5년차에 오히려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음. 커뮤니티에 흡수 될 수 있도록 공동체 사회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오정화 사무관

-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고 필요한 통계가 무엇인지 연구를 하고 있음. 대부분의 통계가 행정구역 단위로 나오고 있는데, 격자를 활용하여 인구를 기준으로 도시와 비도시로 나누고, 어떤 통계가 필요한지 연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인 인구만 노인 밀집 지역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음. 폭염에 취약한 인구가 고령자로 주목되고 있으며, 고령자 연령을 65세가 아닌 기대여명이 15년 남은 인구로 분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메가트렌드 분석과 관련하여, 고령화 인구 중 소득, 일자리, 여가교육, 건강, 주거, 교통 등 분석이 들어갔으면 함. 통계 분석할 때 인구에서 가구를 분석해야 함. 정책 단위가 인구가 아닌 가구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고령자의 경우 성별도 매우 중요함. 70대 이상의 1인가구를 보면 여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2030대는 남성이 높고 70대 이상은 여성이 큰 경향이 있음.
- 기후 변화를 고려할 때, 재배가능한 작물 등에 대한 분석도 함께 담겼으면 함.

○ 김정섭 박사

- 군청 공무원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 커뮤니티를 바라보고 의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도시 노동시장 경기와 맞물려서 대도시나 지방도시에서 자영업하다가 밀려서 농촌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먼지역이 아닌 읍지역에서 창업하고 있음. 이런 분들은 대부분 50대인 경우가 있음.
- 30대 중반 이후 기혼 청년과 20대 이후 미혼 청년은 매우 다름. 30대 중반의 경우 많은 것을 희생하고 오는 등 20대에 비해 준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등 세대별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 귀농귀촌인의 커뮤니티 참여를 위한 방법 3가지를 고민해볼 수 있음. 1) 산업단지, 구레 자연드림파크 등 단지조성, 이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와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2) 공익적 활동에 활용, 필요한 공익적 사회적 활동이 많은데, 이러한 일을 귀농귀촌인들이 한다면 일부 효과를 볼 수 있음.

다만, 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한 지역에서 크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 평가를 하기에 어려울 수 있음. 3) 프리랜서,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등 원격 업무 가능 일자리 촉진.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농촌 사회적 입장에서는 2)번 방법이 가장 나은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음. 관련하여 일본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고영우 박사

- 농촌 이주에서의 일자리는 결국 농업 종사 외에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로서의 안정감이나 지원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흐름임. 코로나 관련하여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변화의 양상 등 스타트 단계임.

○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 일부 당에서 대선공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매년 10만 명씩 마을 공무원을 만드는 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 마을 간사, 사무장 등 지역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음.
- 귀농귀촌인이 정책 등 단계별로 컨설팅을 받고 싶는데, 이러한 지원이 없는 상황임. 또한 국토연구원에서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는데, 조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업하여 한다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임.

○ 김정섭 박사

- 면의 경우 사회적협동사업 등을 위해 협동조합을 만드는 등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귀촌한 사람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유원상 과장

- 종합계획을 만드는데 있어서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까가 큰 고민임. 귀농귀촌을 인구 이동의 차원에서 보면 지역소멸, 농촌 삶의 질, 일자리 등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로 볼 수밖에 없음. 관계부처와의 협의

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를 빠르게 진행하였으면 함. 귀농은 비교적 명확하나, 귀촌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 농촌 정의와 관련하여 조치원읍으로 온 것도 귀촌이나 등 모호한 부분이 있음. 정책의 범위에서 지원할 사람, 추진할 사람을 귀촌 인구 전체로 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며, 어떻게 얼마나 좁힐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앞으로 정책 방향이 기존 정책방향과 달라야하는지가 검토가 되어야하는데, 5년, 10년 전과 비교를 했으면 함. 산업 구조의 변화를 메가트렌드의 변화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농업, 농촌에도 영향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커뮤니티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위해 귀농귀촌인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이 바뀌었는지 논의가 되어야 함. 메가트렌드의 내용 중 하나로, 귀농·귀촌인들의 농업 농촌에 대한 시각, 태도가 5년 전, 10년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는 것도 방법일 것임. 과거에는 낭만적으로 봤으나 지금은 현실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음.

○ 김태완 선임연구위원

- 빅카인즈 등 기사의 키워드 변화를 통해 트렌드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임. 농촌 쪽도 재산과 관련하여 기계가 기준으로 잡히는데, 전기 농기계 등CC 등의 기준이 변경되고, 지원 정책이 어떻게 변화 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함.
- 기술변화, 환경변화, 정치행정 체제변화 등이 귀농귀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트렌드 분석에 똑같이 보았으면 함. 특히, 스마트화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김정섭 박사

-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커뮤니티 지원의 논리가 될 수 있을 것임. 기존 후계농과 귀농인들 간의 갈등 등 커뮤니티 통합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
- 올해는 가능한 타 부처와의 협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함.

2. 제2차 포럼

□ 포럼 개요

- 주제: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지 특성
- 일시: 2021. 6. 30.(수), 15:00~17:00
- 장소: KREI 농업관측세종사무소(오송)
- 참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김용렬, 김정섭, 최재현
(농림축산식품부) 유원상 과장, 김준현 사무관, 정성문 사무관
(귀농귀촌종합센터) 김준영 실장, 임정훈 주임
(전문가) 김휘승 부장(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안연정 전센터장(청년허브),
전익수 교수(충북대학교), 김기홍 박사(충남연구원), 홍기식 계장(홍천군농촌사
회과)

□ 주요 내용

- 연구책임자인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의 연구 필요성과 목적, 내용 등 연구개요,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귀농·귀촌 관련 메가트렌드, 귀농귀촌 유형과 정착 실태 등에 대한 발표 이후 관련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의 논의가 진행됨.
- 안연정 전센터장
 - 현장을 주로 보다보니까 흐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됨.
 - 지난 3년 동안 서울지역의 상황을 보았음. 최근 청년들이 도시에서의 삶만 추구하지 않고 지역과의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서 시작된 것이 지역과 청년의 매칭이었음. 흥성과 맺는 것이 첫 시도였고, 2명씩 로테이션으로 매칭하는 것을 흥성에서 제안해주셔서 진행이 되었고, 지역사회와 청년의 반응이 좋았음.

- 올해 1년 동안에는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마을 사업을 보고 있음. 140개가 넘는 신청이 있었고, 현장을 보았을 때 연구와의 매칭이 있었음. 과산의 경우 농업으로의 귀촌 이후 귀농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였으며, 벌써 16명의 청년들이 2달간 과산에서 문화생활, 농업 등 경험 프로젝트를 시작한 바 있음.
- 20~40대를 묶어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청년 귀농귀촌 정책의 경우 39세를 기준으로 본 바 있음. 귀농귀촌 정책에서 청년을 39세로 보아야만 하는가 고민이 되며 좀 더 범위를 넓히는 시도가 있으면 어떨지 고민이 됨.
- 실제 12개 현장에서 관계인구의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지역사회 안에서의 준비(행정포함), 실제 시행 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스펙트럼을 좀더 넓게 보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함.
- 행안부나 문화부 사업 등은 목표가 명확한데, 부처간의 연결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 간의 연계 필요성이 매우 높지만 정보의 교류 등이 현장에서 단절이 더욱 크게 느껴짐. 함께 묶어서 액션플랜을 진행했으면 함.
- 지난 3년간 목표, 서산, 문경을 진행했고 올해는 12개를 과감하게 진행한 바 있음.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김휘승 부장

- 귀농귀촌 정책이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일어났던 부정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음. 농식품부가 귀농귀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말을 많이 들음. 이주해서 농촌살이를 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정책적요소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음.
- 농업인들에 대한 훈련 등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 인프라 등 귀촌인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줘야 할 텐데 워낙 큰 영역의 이야기임. 주거, 일자리 등이 많이 의견이 나오는데, 주거의 경우 빈집은 매우 많지만 살 수 있는 곳은 없는 등 아무리 주택자금 등을 지원해줘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간접적 지원체계를 보면, 전북의 경우 시군지원센터 등 협의회가 있는데, 대부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농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며, 정책자금을 이용하여 창농을 하고

자 하는 사람들임. 거꾸로, 귀촌자들이 왜 교육을 받지 않는지를 보면, 1) 매력이 없으며, 2) 귀촌자들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착단계에서의 어려움임.

- 귀촌자들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 재능 등을 지역에서 재보수 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전혀 없는 상황임. 귀촌인들이 100명 오면,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3~4명 정도임. 이렇다보니 지역의 지원체계 안에서 귀촌인을 위한 지역 정보, 일자리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음. 이러한 정보 등이 생산조차 되지 않고 있음. 도가 아닌 시군 단위에서는 인력부족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임. 귀촌인들에게 어떤 정보, 어떤 상담,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
- 한편, 지역에서의 젊은 인력(50대 등)의 활동 영역이 거의 없는 상황임. 귀농귀촌인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는 많지만, 현재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인력에 대한 서비스는 거의 없고 열정으로만 버텨야하는 상황임.

○ 흥기식 계장

- 흥천의 경우 자연환경이 좋아서 오시거나 은퇴 후 자녀들과의 관계를 위해 인근 흥천, 양평 등으로 이주하는 추세임. 과거에는 농지 등을 구입해서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임대를 해서 오시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음. 이러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임.
- 귀촌 쪽으로는 지역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임. 창업자금을 보면, 30~40% 농외소득으로 잡히는데, 창업자금을 받으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없는 규정 등에 대한 완화를 고려해 보아야 함.
- 흥천읍에 거주하는 젊은 귀촌인의 경우 교육문제(초등학교 하나) 등으로 인해 해결하기 힘든 부분 등이 있음. 한번 귀농귀촌인은 영원한 귀농귀촌인이 되어버리는데, 지역주민vs귀농귀촌인으로 양분화 되어 지역 내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 김기흥 박사

- 귀촌과 관련한 교육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귀촌의 정의가 바뀌면서 귀촌자가 너무

다양해짐. 아산의 읍면 아파트로 이사하면 귀촌자가 되어버림. 동지역살다가 읍면으로 이주하니까 갑자기 아산, 천안 지역이 마치 귀촌지역이 되어버렸으며, 과연 귀촌 정책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어려울 수 있음.

-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이 안 중요하나 생각해보면, 귀촌의 정의가 모호하지만 그러한에도 방향을 보여주면 지자체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지자체 안에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이 계획 사업에서 비전 등을 제시해주어야 할 것임.
- 2차 계획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범위를 정해야 할 것임. 농업과 관련된 귀촌인이 많은데, 청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귀농귀촌 여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책은 어떻게 제안해줄 수 있을지, 1인 가구 특히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인가 등 맞춤형 세부 정책 방향(사업이 아닌)이 나오면 어떨까 생각함.
- 청년 귀촌인의 경우 일자리가 너무 중요한데, 지역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 등 지역 내 일자리와의 연계 등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함.

○ 전익수 교수

-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왜 짜는가?에 대한 목표가 명확했으면 함. 계획의 명확한 방향과 실태가 연결되었으면 함.
- 귀촌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왜 강화되냐? 여태까지 안했는데 왜? 등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할 것임. 귀농귀촌은 각각 농업과 농촌과 관련되는데, 종합계획에 어떤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어야 함.
- 농촌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든 농식품부에서 관여를 해야 함. 귀촌자를 너무 압축해서 범주화 하지 않고, 오히려 전체를 다 살려야 힘이 실릴 수 있고 전략적으로 오히려 넓혀야 할 것임. 귀촌자들은 웬만한 정보는 모두 인터넷으로 얻는 등 종합지원센터에서 굳이 상담을 하지 않았을 것임. 즉, 귀촌정책을 왜 하나인데, 귀촌자 중에 농업으로 전환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석한 바 있음.
- 귀촌정책을 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자료(조사) 등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됨. 기존에 정책들이 매우 많은데, 이런 각 사업과의 연계를 종합계획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연결고리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함.

- 1차 종합계획을 평가할 때 실패한 부분을 촘촘히 챙겨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2차 종합계획이 진행되었으면 함.
- 4분위별로 나눠 봤는데, 귀농자의 분포를 보니 매우 왜곡 되어 있음. 저소득층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소득이 큰 사람은 굉장히 큼. 이러한 상황의 경우 분석에서 뒤떨릴 수 있음. 향후 조사할 때 농업소득에 대한 대표성을 떨 수 있도록, 모집단의 특성을 떨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김정섭 박사

- 귀농귀촌 실태조사 표본은 추출 방식이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다시 한번 개편은 있을 것임. 표본 추출방법만 2천만 원이 들어간 바 있고, 주로 귀농귀촌 지역 할당, 등면밀하게 한 바 있음.
- 우리나라 농가들이 특성이 이미 정규분포가 아니라 양극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음. 귀농귀촌 법상 귀촌은 다른 게 아니라 동에서 읍/면으로 이주한 것을 보는 수밖에 없음. 정의자체를 바꾸는 것은 대안이 없고, 큰 의미가 없을 것임. 다만 안양시 대방면, 남양주시 화도읍 등 내부적으로 그런 곳은 사실상 농촌지역으로 보지 않는 등 빼서 분석하는 등이 되어야 함. 아산이나 화성을 통째로 빼지 않고 읍/면을 일부 제외하고 보아야 할 것임.
- 1차 계획에서 청년이나 일자리에 집중해서 제안을 한 바 있음. 청년과 여성에 집중한 바 있는데, 실제 시행될 때는 거의 다 잘린 바 있음. 현재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함. 꼭 필요한 것은 주거와 일자리라 판단함. 지역개발과에서 꽤 오랫동안 해온 사업이 있었는데, 주거 쪽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의논해서 정책을 고민해야하며,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 공공임대 등 고민이 필요할 것임. 농식품부 내에서 부서 간에 긴히 논의하여야 함.
-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의 경우 귀촌인 개인에 대한 일자리 알선이 아니라 농촌 단위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러한 일자리가 지역에 필요해야 할 것이며, 귀농귀촌 타이틀을 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창업교육 시킨 후 창업하라고 하고 있는데, 면지역에서 창업해 버리면 망하란 얘기와 같음. 창업이 안 되면 취업을 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상황임. 면지역에 필요한 일들이 매우 많음. 집 고치기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정을 쏟아서 해결해야할 주민조직을 만들고 이러한 조직이 활동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을 하면 이것이 일자리의 제공으로 이어질 것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행안부 정책의 경우 소규모 면단위에서는 매우 힘들 것임.
- 관계인구와 관련하여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발전시켜야 할 텐데, 2018년 홍천에 갔던 이혜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건축학을 전공한 바 있음. 2주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멘토 및 주민조직과의 관계가 이어졌고, 이주 희망이 이어진 바 있음. 개인건축 설계 사무소를 등록하고, 어르신 빈집 수리, 버스정류장 개선 등에 이 친구를 참여시켰음. 어느 날 갑자기 귀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인구를 만들고 서서히 간을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임. 지역 사회의 조직이 개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
- 귀농귀촌센터에서도 일본 안테나숍의 사례(구직 정보, 일자리 정보) 등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 청년들 대상으로 꾸준히 관계 맺고,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속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역사회 주민 조직과 연계된 일자리 및 취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싸게 접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사업 등을 귀촌 정책의 중요 사업으로 검토해야할 것임.

○ 전익수 교수

- 귀촌인의 정책성 정당성을 부여해야할 텐데, 농업으로의 전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으로 보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것임.

○ 김용렬 박사

- 최근 큰 정책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탄소중립시대의 농업, 농촌 변화가 있을 것이며, 또 하나는 디지털전환에 따른 변화가 있음. 여기에 귀농귀촌인들의 역할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일에 대한 수요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수요처를 만들어 내야할 것임.

- 다양한 서비스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발굴하고, 지구적 전환시대의 귀농귀촌은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를 보면 국가 및 지방 역할을 고민하다보면 앞의 트렌드와 연결하여 미래 일자리를 매칭하여 여러 중요한 함의를 뽑을 수 있을 것임.

○ 안연정 전센터장

- 농식품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할지 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임. 청년들이 왜 살고자 하는가 등이 나오는데, 로컬 크리에이터 등 기후위기 시대와 전환이 필수인 상황에서 어떤 전환, 어떤 대안, 어떤 비전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먼저 짜고 타 부처와의 연계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식품산업 안에서 발효를 어떻게 볼 것인가만 봐도, 소비 욕구가 높아졌을 때 이러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 안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등 어디에 어떻게 연결되면 좋을까 보였으면 함.
- 단기라도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정보제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 일본의 안테나숍처럼 정보만 제공되더라도 다양한 일자리 공급과 수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지금 젊은 세대의 농촌에 대한 생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많은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정성문 사무관

- 청년보금자리 주택을 추진하고 있고, 청년마을, 공동체 등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농식품부와 연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책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임. 살아가기 정책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역 내의 인맥 생성이 목적임.

○ 유원상 과장

- 농식품부에서 그동안, 현재 귀촌 정책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왜 귀촌정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만들어가야 할 것임. 귀촌 정책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할 지 더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며, 좀 더 명확히 해

야 할 것임. 중간에 귀촌 정책 대상으로 누구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포럼이 있었으면 함. 설문조사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번 더 봤으면 함.

- 귀농귀촌 통계자료를 보면서도 헛갈리는 것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청년 귀촌이 40~50% 가까이 되는데, 도시지역을 제외해도 같은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똑같은지 등 데이터를 필터링 후 통계를 봐야할 것임.

3. 3차 포럼

□ 포럼 개요

- 주제: 귀농귀촌 정책 성과와 과제
- 일시: 2021. 7. 26.(월), 15:00~16:40
- 장소: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전북 완주)
- 참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김정섭, 최재현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 유원상 과장, 김준현 사무관, 정성문 사무관
(귀농귀촌종합센터) 조경익 센터장, 김준영 실장
(완주군) 김성명 부군수, 이현주 귀농귀촌센터 팀장, 최현 귀농팀장
(전북도청) 오형식 농촌활력과장, 윤미례 귀농귀촌팀장,
(전문가) (전북대) 송정기 교수, (귀농운동본부) 금창영 대표, (농촌진흥청) 최상호 센터장, (전북연구원) 조원지 박사, (전북귀농귀촌센터) 김휘승 부장

□ 주요 내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박사의 귀농귀촌 정책의 성과와 과제 발제, 완주군 귀농귀촌센터 이현주 팀장의 '완주군 귀농귀촌 성과와 과제'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발제 이후 관련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의 논의가 진행됨.

○ 전북대 송정기 교수

- 그동안 귀농 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는 추진되었다고 판단됨. 2차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1차가 청년층을 타깃으로 두고, 정착지원 등에 타깃을 두었다면, 2차에서는 어디에 타깃을 둘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음. 코로나 19 등 상황이 많이 변하였기 때문에 목표도 바뀌어야 함. 기후변화, 재난 등 농업농촌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귀농귀촌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함.
- 여전히 중요한 것은 1차 때도 그렇지만 영농후계자의 층원 등 농촌사회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도 중요할 것임. 1차에는 청년층이나 영농후계 세대에 관심을 가졌다면 2차 때도 유효할 것인가, 고령화 추세에 맞추는 도시 은퇴자 및 근교 이동 농업 종사자 등의 네트워크 유지 등의 타깃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농업기술의 변화, 환경변화에 따른 농법 변화 등 귀농인들에 대한 정보 전달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금창영 대표

- 귀농귀촌과 관련되어 농식품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최근 귀농귀촌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으며 농식품부의 정책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원정책 등이 귀농귀촌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함.
- 전국귀농운동본부가 25년째 운영 중인데, 사회적거리두기를 자연과 밀착하자는 모토로 이동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음.
- 통계와 관련하여, 많은 수치들이 귀촌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음. 1) 초기 귀농 청년들은 소극적이고, 초기에는 자존감이나 관계를 맺는 메커니즘 등 고민들이 없었다고 판단함. 정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100시간이 중요한 지표가 됨. 2) 귀농과 관련된 교육들이 매뉴얼이 나오고, 강사 매뉴얼이 나오는 등이 있는데, 수요가 더욱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 정책(100시간)과 묶여있다 보니 다른 새로운 교육 시도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진 경향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교육정책이 있어야 함. 3) 1차에서 농가소득이 매우 중요했는데, 시설의 경우 우리나라 농업환경이 열악한데,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이 나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임.

- 청창농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승계농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청창농자와 승계농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책적 고민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승계농들이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함.

○ 최상호 센터장

- 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지역별로 대상별로 어떤 프로그램과 연결되었을 때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등 차별성을 가지는 지역의 내용들이 2차 계획에서는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임. 국가적인 계획으로 지원할 것인지, 완주군처럼 지역에 맡길 것인지 판단이 필요함.
- 귀농 귀촌에 대한 인식개선도 선행되어야 할 것임. 관심이냐 의지도 많이 고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법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이 귀농인이며, 용어에 대한 괴리도 넘어야 함.
- 순창은 20, 30대 비율이 매우 높는데, 숫자상으로만 존재하는 청년들이며, 지역에서의 활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다만, 농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귀농인으로 잡히지 않음.
- 원주민과의 연결을 위한 직선적인 제도가 아닌 완충지대를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조원지 박사

- 2차에서는 귀농귀촌의 교육 방향이 바뀌었으면 함. 기존에는 귀농귀촌을 농업인으로 봤다면, 향후에는 농촌사회에서의 생활인으로서 접근하면 어떨까 함. 농업 외의 일상 생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키웠으면 함.
- 전북에서는 농촌생활종합학교(가칭)를 설립하고자 함. 농업이 아니라 농촌에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슈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1) 한달 살기와 같은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가드닝, 텃밭 등 생활 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로 인하여 기존 주민과의 융화를 할 수 있는 방법, 2) 지역을 캠퍼스화해서 개인, 기관, 센터 등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임.

○ 김휘승 부장

- 지역의 귀농귀촌인들, 고민 중인 예비 귀농인들과의 만남 결과를 공유하겠음.?
- 정책이 시골에서 살기로 한 사람들이 목표로 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민을 하는데, 정책적 유인효과가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먼저 고민하게 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너한테 뭘 줄 수 있어가 아니라, 시골살이를 선택했을 때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어야 함. 강제이주정책을 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 땅, 집, 조세혜택 등을 줘야 이주가 가능함. 다만, 왜 가는지에 대해 5~10년 정도 고민을 해줘야 정착이 가능할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유입적 관점, 농촌활력적 관점 어느 곳에서 볼지를 보면, 지금은 인구유입적 관점으로 보이며, 관련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인구유입적 관점에서 보면 무언가를 줘야 올 수 있음. 다만, 농촌활력적 관점에서 보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음. 귀농귀촌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착 하되, 정책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 생활 SOC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패키지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음. 기초생활권 단위로 패키지가 묶여야 할 것임.
- 전북에서는 교육귀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음. 젊은 부모는 교육의 인프라를 따질 수밖에 없음. 이러한 상황과 귀농귀촌 정책이 연계야 할 것임.
- 일자리의 경우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줄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함. 농외소득의 기회가 더 있어야 할 것임.
- (주거) 일시적인 주거 정책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정적인 정착 관련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임.
- (융화 상생) 직접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 단언함. 교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매개자를 통해서 만나고 즐길 수 있는 자리만 많이 만들어주면 알아서 해결될 일이며 갈등이라는 말은 너무 쉽게 쓰이고 있음.

○ 김성명 부군수

- 귀농귀촌이 자의에 의해서 하게 되면 성공률이 높아질 것임 .자의적 귀농귀촌을 위해 초등, 중등, 고등 교육에서 소양과목 정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

것으로 생각함. 귀농귀촌이 연령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행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임.

○ 박영범 차관

- 95년경 귀농운동본부를 처음 만들었는데, 많은 부분에서 토론자들의 의견에 공감함. 귀촌을 고민해 보았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임. 지금의 귀촌은 인생 전체를 걸고 이민보다 더 어려운 것처럼 판단되는데, 정책은 너무 농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생각함.
- 현재 귀농 정책은 많지만, 귀촌 정책 및 관련 고민이 매우 적은 것으로 생각함. 너무 지나치게 귀농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하나는 농이고 하나는 촌인데, 항상 귀농만 강조하다보니 일자리 등도 귀농으로만 이야기 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경우 아름다운 보기 좋은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강함.
-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에 따라 농촌생활을 5~10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임.
-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탄소중립, 농촌에서의 에너지전환을 이야기하면 매우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음. 좀 더 거시적으로 접근했으면 함.
- 이번 주된 내용은 귀농귀촌 정책을 농업 노동력 확보로 보는 관점을 극복하는 것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과거 10년에 비해 인구이동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어떤 거시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등 검토가 필요함.
- 읍면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부분을 밀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새로운 에너지로 전화시키는 것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볼 것인가가 필요할 것임.
-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역차별이라는 이야기 등이 나오는 등 귀농귀촌 정책들에 대한 섭섭함도 분명히 있음. 귀농귀촌 정책이 기존의 농업, 농촌 정책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 숙소 등 사회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데, 외국 노동자들의 인권, 등 다양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편한 외국노동자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움. 귀촌인들의 계절 노동 등도 농업노동력과 관련하여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임. 이번 계획에서는 농업에서 도시로 나가는 현상과 반대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것에 대해 도시 지자체는 어떻게 보는지도 보아야 할 것임.
- 농촌 지자체만 먹거리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도 먹거리 계획을 짜게 하는 큰 그림을 그린 바 있음. 도시 지자체가 귀농귀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되어야 할 것임. 농촌 지자체와 도시 지자체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도농 순환의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수도권 등 도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농촌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이것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임.
- 귀농이든 귀촌이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 계획 즉, 도시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함. 농식품부에서 농촌 공간 계획을 기존 국토계획법과 다르게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함.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 농촌정책 전반과 농촌국 이외의 정책들을 공간계획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위치시킬 지도 고민하고 있음. 유통정책, 축산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지역단위 산업이나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묶어나가고 있음. 관련해서 귀농귀촌 정책도 농업노동력 관점만이 아니라 공간을 채우는 사람 정책으로 진행되었으면 함.
- 인구 TF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정책으로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음. 개인책임으로 움직이고 있는 귀농귀촌을 도시에서부터 농촌지자체까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내년 말까지 완성하고자 함. 1년에 1~2천 가구가 특정 시도로 가는 것이 확정되고, 해당 지자체가 준비하도록 할 것임.
- 전 부처가 인구대책과 지방소멸 차원에서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함. 이번 귀농귀촌 종합계획이 좀 더 세심하고, 내가 귀농귀촌할 때 무엇이 필요할지를 중심으로 고민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임.

3. 4차 포럼

□ 포럼 개요

- 주제: 범 부처 귀농·귀촌 관련 정책 및 국내외 우수사례
- 일시: 2021. 8. 23.(월), 15:00~17:00
- 장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4층 중회의실
- 참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최재현
(농림축산식품부) 김준현 사무관, 정성문 사무관
(귀농귀촌종합센터) 조정익 센터장, 김준영 실장, 임정훈 주임
(전문가) (국토연구원) 차미숙 박사, (토지주택연구원) 이미홍 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주영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박사,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

□ 주요 내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박사의 “범 부처 귀농·귀촌 관련 정책 및 국내외 우수사례와 시사점” 발표 이후 관련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의 논의가 진행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박사
 - 귀농귀촌 정책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봐도 될 정도로 규모가 큰 수준임. 비수도권의 수도권 유입인구가 지난 5년간 매우 크게 증가한 바 있음. 사유로 교육, 주거, 일자리 등이었음. 귀농·귀촌 정책 수립 시 청년정책 차원으로 봐야할 것임.
 - 앞으로 조사 시 귀농의사와 귀촌의사를 나누어서 물어보아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정책과 관련하여 제1차 귀농귀촌 종합계획에 대한 분석, 귀농에서의 귀촌으로의 변화는 의미가 있으나,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올해 1월에 시행계획을 만들었고, 농진청

에서도 4월에 시행계획을 공표한 바 있는데, 농식품부가 낸 과제 중에 귀농귀촌 과제가 있음. 이러한 부분들이 분석에서 핵심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음.

- 청년 일자리 정책의 경우 적어도 8개 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임.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사업 취업 관련 3대 사업(구직활동 지원금 등)에 일몰사업이 많으며, 계획안이 바뀌어 나올 것임. 타 부처는 귀농귀촌에 사실 관심이 없음. 각 부처가 놓치고 있는 사업들을 파악해야할 것임. 개별 사업들 관련하여 행안부 사업, 국민 취업 조정 지원제도 등 개별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함.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 중 몇%가 귀농귀촌 사업인지, 수혜자가 몇 명인지 등 파악이 필요하며, 3년간의 추세를 보면 될 것 같음. 내년엔 유형이 3가지가 바뀌는데 이러한 조사가 없으면 제안이 병병할 것으로 생각함. 각 부처의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자료를 받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근거를 만들어 뒤야만 타 부처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임. 최소 10개 대표 사업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제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주영 박사

- 문화부 관련하여 제시해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농촌은 문화적으로 혜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인 관점에서의 어려운 부분을 정리하면 어떨까 생각함.
- 문화이모작의 경우 일자리로 보여지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를 별도로 정리했으면 함. 문화이모작 사업의 경우 지금도 진행하는 사업이며, 관련 내용의 업데이트가 필요함. 지역 문화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참고했으면 함.
- 문화 격차해소 쪽에서 생활문화 등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음.
- 관광 두레 사업은 일자리가 맞긴 한데, 62페이지의 공사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어서 수정이 필요함.
- 원주민과의 갈등이 어려운 부분으로 많은 사례로 나오고 있는데, 공동체 활성화 쪽의 정책도 잘 보아야할 것임.
- 농림부에서 관련해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빠진 것 같음. 농촌축제 지원사업 같은 경

우도 귀촌자들과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영월)가 많기 때문에 농림부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넣을 수 있을 것임. 농림부에서 하는 문화교육지원사업도 문화 격차해소 쪽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창업 일자리 쪽에서는 산림청에도 '일자리발전소' 사업에서 그룹매니저, 경영체 등 사업들도 있을 것임.
- 정책 쪽으로 보면 은퇴하신 분들의 자격증이나 자격제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때문에 넣었으면 함. 치유농업과 관련하여 치유농업사 제도라거나 산림청 나무의사 등 고학력자의 컨설턴트 등도 고려할 요인일 것임.

○ 토지주택연구원 이미홍 박사

- 국토부에서는 균형발전, 저성장지역, 성장촉진 지역 기간시설 지원 등으로 농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임. 문화나 생활 SOC가 없어서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해도 계속 빠져서 알아보니, 살고 싶은데 살 집이 없다는 의견과 사업성이 없어서 집을 짓지 않는 현상을 발견함. 이러한 문제를 위해 나온 정책이 농산어촌 주거 플랫폼임.
- LH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귀농귀촌에 대한 감이 없음.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귀농귀촌과는 다를 수 있음. 귀농귀촌 계획에 넣기에는 어색함.
- 2019년도에 귀농귀촌 주택사업을 하자는 의견으로 보성과 상주에서 진행되고 있음. 다만, 귀농 귀촌 임대주택 사업은 중지됨. 호당 2억 원 정도 짓고 1억 원 정도 손해를 볼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업비가 너무 들어갔고, 시범사업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귀농귀촌 리츠도 마찬가지임. 사업성이 없어서 아무도 안한다는 거임. 귀농귀촌 리츠는 수도권 수익건과 농촌의 비수익건을 묶어서 하는 것임. 하동-동탄 등 사례가 있는데, 현재 리츠가 기능축소에 걸려서 시범사업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농촌 유토피아 관련해서 사업을 한 바 있는데, 국토부의 농산어촌 주거 플랫폼(8월 2일자 보도자료)을 정책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음. 생활 SOC에 30~40억 규모로 지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다양한 주체의 주거 플랫폼이 들어오는 사업이 보고서에 들어갔으면 함. 유형은 3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1) 함양과 같이 학교 살리기 모델, 2) 농

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거, 3) 상주 스마트팜 혁신지구가 있는데 주택이 28호밖에 없음. 귀촌은 다양하게 들어옴. 청양 모델, 의성 모델 등 다양하게 대표적인 주거플랫폼 예시는 나오고 있음. 특히 귀농귀촌 및 청년에 관심이 있다면, 상주 청양 의성은 공모가 되었으니 이를 참고하고 자료를 전달해주실 예정임. 2단계는 농촌협약 되신 곳에 LH가 주거를 공급하는 것임. 강진 금산 충북제천 등 요청이 많은 상황임.

- 귀촌이 가장 관심 있는데, 주택 측면에서 귀촌이 많고 귀농이 적은 10개 지역의 경우 택지가 많이 공급되는 곳이며, 이 수요는 인근 도시에서 주택을 공급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사례로 보임. 주택을 단순히 원하는 귀촌의 수요를 귀농귀촌 수요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수요는 주택계획으로 갈릴 것이냐 등 고민이 필요함. 귀촌이 많은 10개 지역은 주택 수요일 확률이 매우 큼.
- 사실 국토부는 귀농귀촌 정책에는 거의 관심이 없음. 균형위에서 관심이 많음.

○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

- 너무 많은 사업이 개별적으로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계성이 없음. 종합적으로 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매우 미흡이라 생각함. 2차 기본계획의 기본 정책 철학, 이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고민이 필요할 것임.
- 첫 번째, 지난 5년간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임. 다만 각각 사업의 하나하나를 다 평가할 순 없을 것임. 귀촌의향 이유를 보면, 대부분 휴식관련 이유임. 귀농귀촌 정책이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는 정책인지 고민이 필요함.
- 전남과 경북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경북과 같은 방향(체험해보고 결정하는)으로 갔으면 함. 영국의 사례나 미국의 정책을 보면 하향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향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정부가 넣어주는 방향임. 우리나라는 너무 중앙정부가 의도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
- 창업과 관련하여 한국의 창업 정책은 청년 창업이 핵심이었음. 결국 창업을 통해 일자리 정책이었는데, 청년에게 과다하게 창업을 하게 해서 일자리를 만든 바 있음. 전체 일자리를 누가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임. 청년 정책은 정치적으로 보여주려는 정책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키거나 도와주는 방향이 되어야 함. 6차 산업 정책의 경우 농민을 위한 정책이 되다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
- 두 번째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간접적 지원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양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묶어서 정책들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질적인 내실화가 되어야 할 것임.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차 계획에서는 청년을 너무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연구소발, 기업발 창업이 되어야한다고 판단하며 청년발 창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함.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농촌에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여기에 청년이 조인트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농촌 농민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관점으로 창업 정책이 가야한다고 생각함. 농업 분야에서도 특정 연령층, 농민주도 이런 것이 아니라 창업 생태계가 구성되고 창업을 한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정책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국토연구원 차미숙 박사

- 최근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으며, 청년들을 많이 보았음. 현장에서 느낀 것들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말하겠음.
- 생 초보인 청년한테 3억을 빌려주는 등 정부 지원 기준 등이 있는데, 자율성을 너무 막고 있으며, 융자 등으로 인한 청년 창업농의 파멸이 유도되고 있음. 너무 청년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함. 너무 청년위주로 하다 보니, 지역 청년과 중장년층이 정책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음. 40~50대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적 효과가 더 클 거라 생각하며, 지역에 머물 확률이 높음. 청년에서 전 세대로 확대되는 2차 계획이 되면 함.
- 외지 청년과 지역 청년의 갈등도 있음. 문경 달빛탐사대 원들을 만나 보았는데, 지역 청년과의 네트워크도 중요한데, 정책이 갈등 구조로 가고 있음.

- 주거와 관련하여, 살 곳이 없거나 살 곳으로 간다면 커뮤니티로의 강제 편입도 있음. 빈집 얘기도 많이 하는데 불법이 많은 등 정작 가서 뭐라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있음. 또 흥성을 가보니 여성 귀농자 쉼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음. 농림부가 지역에 지어놓은 시설이 꽤 많은데, 이러한 시설들을 빨리 체크해서 쉼어하우스로 변환하는데서포트하면 큰 돈 없이 지역 자원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임.
- 괜찮은 일자리가 있으면 하는데, 어느 정도는 있음. 다만,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접근이 안되는 상황임. 결국 차가 없으니까 이동이 불가함. 프랑스 농촌 어젠다 200개 중 '이동성'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교습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음. 천원 택시나 행복 택시는 매우 한정적임. 청년의 경우 이동성이 높는데 차량이 없으면 일자리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과 비슷한 좋은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큰 월급이 필요한 것이 아님.
- 주거와 관련하여 왜 농림부에서는 세컨드 하우스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하는지 모르겠음. 지금 농막으로 편법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괜찮게 살 수 있게 세컨하우스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오히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행안부에서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세컨하우스를 연동하여 밀고 나가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음. 세컨하우스가 큰 흐름이라 생각하며 농림부가 이를 받아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함.
- 일자리 관련해서 규제완화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함. 후계농은 50세로 규제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55세 혹은 60세로 늘려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음. 영농 분야에만 승계가 승인되고 있는데, 지역 정육점 등 비영농 분야에서의 승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농림부 규제들이 인구 증가 추세에 생겼던 규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양현봉 박사

- 가장 큰 문제는 의료 문제임. 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줄 수 있을 것인가 등 종합적인 대책이 되어야 할 것임. 눈앞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향점을 잡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임.

○ 정성문 사무관

- 지역에 있는 문제의 경우 농촌 정책국에서 주거 관련 문제를 해오고 있었음. 즉, 농식품부 내에서도 연계가 제대로 되지 못한 바 있음. 귀촌에 대한 농식품부 내의 연계 및 타 부처와의 연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귀촌에 대한 정책이 정책 고객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정책이 있는지 작업을 하고 있음.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기존 틀을 바꾼바 있음. 이는 귀촌 정책의 일환임. 살아보기 사업이 주거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향후 확장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확장하고자 함.

○ 차미숙 박사

- 전남이 잘하고 있는데, 성과를 봐야할 것이고, 중간조직이 들어와서 어레인지 하고 있음. 문경의 경우 리플레이스 등이 들어와서 하고 있음. 지역의 자체적인 조직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트레이닝 되지 않고 있는 면도 있지만, 지금은 보조금 따먹기 형식이 아닌지 걱정이 되고 있음.

○ 정성문 사무관

-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19년 이후년 3년차이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전국으로 확산한 것임. 내년에는 더 키울 생각이며, 지자체 보조사업임.

○ 차미숙 박사

- 행안부 및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농림부의 특성화 측면에서 좋지 않을 수 있음. 서울시 사례 등도 함께 검토해보시고 지나치게 물량 위주로 가지 않았으면 함.

○ 김준현 사무관

-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귀농에 대한 정책은 농식품부가 키를 쥐고 있지만, 귀촌의 경우 귀촌으로 유형화된 정책은 없었음. 귀촌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정책화하여 담고자 함. 실제로 귀촌에서 발생하는 수요가 무엇인지, 정책들이 어떻게 귀촌과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 다양한 분야들이 귀촌과 엮여있는데, 귀촌정책이 정주여건 정책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핵심 정책이 어떤 것이 될지 고민을 하고 있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만드는 정책이 아닌 실제로 귀촌에 기여할 수 있는 크리티컬한 정책이 무엇 일지, 어떤 정책들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음.

- 주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유토피아가 됐던, 플랫폼이 됐던, 국토 부나 LH가 농식품부와 협조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했으면 함. 귀촌계획에서 타 부처 사업을 어떻게 활용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초안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갈 예정임.
- 일자리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 vs 일할자리만 제공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 시점이 와 있다고 생각함.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결정이 되면 향후에 또 문의 드리겠음.
- 청년 농업인 육성 업무를 맡고 있는데, 청년이 농업으로 유입되게 하는 기조가 깔려 있음. 이 부분에서 청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며 자문을 구하고자 함.
- 문화라고 하면 영화/전시 등을 문화라고 생각을 함. 다만, 농어촌 문화는 지역 문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등이 많이 논의 되었는데, 기초적인 문화 접근성(작은 영화관) 등 도시에서 당연히 누리는 문화 서비스 접근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임.
- 지역 소멸과 관련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등 접근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함.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일반적인 요소로 작용함.

○ 김기현 박사

- 수도권 유입이 늘어난 것 대부분 경기도임.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을 왔고, 집값 때문에 이러한 곳으로 귀촌하게 된 것 뿐임. 농업농촌 종합대책이 아니라 귀농귀촌 종합 대책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및 분석이 필요할 것임. 즉, 타깃팅이 필요할 것임.

○ 조경익 센터장

- 현실적으로 40~50대가 의미 있는 집단이긴 하지만 청년을 버릴 순 없기 때문에 참여 어려움. 투트랙으로 가면서 양쪽의 역할을 가져가야할 것임.

부록 2: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 경험과 정책 욕구⁷⁵⁾

1. 귀농·귀촌과 젠더 이슈

- 귀농·귀촌하는 여성들은 있으나, 그들이 누구이고 왜 농촌으로 이주했고, 농촌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귀농·귀촌 통계는 성별 분리 통계를 생산하지 않으며, 정책은 성 중립을 표방하여 ‘귀농·귀촌인’과 ‘청년’의 범주에서 여성과 남성을 동일한 존재로 간주한다. ‘여성’이 별도로 다루어지는 경우는 출산과 양육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귀농·귀촌 여성에 대해 알고 싶어도 알 길이 없다.
- 김정섭(2012: 10-11)은 농촌으로의 이주라는 개인사에 정책이 개입하는 것의 정당성은 귀농·귀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또는 부작용)을 줄이고 더 나아가 귀농·귀촌의 사회적 편익을 키우는 것에 있으므로, 비용과 편익의 예상이 정책의 추진 방향 결정에서 선결 조건이라고 하였다.
- 가구를 단위로 하는 귀농·귀촌 정책과 통계는 여성의 경험과 느낌, 인식과 요구를 남성 가구주가 대변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여기에서 여성은 남성가구주의 선택과 결정을 따르는, 자율성이 부재한 존재다. 그러니 여성의 귀농·귀촌은 농촌 지역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여성’ 정책이 필요할 리 없다. 과연 그러한가?
- 귀농·귀촌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농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되어 있다(김정섭 2014: 81-82; 진명숙 2014: 90-92). 가족 혹은 부부의 동반 이주는 귀농·귀촌의 지속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채상현 2013:50; 최원실 외 2020: 87; 홍성효 외 2012: 75) 여성 배우자의 반대는 귀농·귀촌의 장애요인이며(김철규 외 2011: 143; 김은석·하지영 2016; 김

75) 이순미 부연구위원 작성.

원동 2015), 귀농·귀촌 여성들이 “이주 후 정체성을 농촌에도, 도시에도 두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정착되지 못하는(진명숙·박성정 2012; 293)” 점 등은 여성의 적응과 정착이 귀농·귀촌가구의 성공적 정착과 깊이 연관된 중요 문제임을 일깨워준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귀농·귀촌 경험과 농촌살이는 그것이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더라도 남성과 다르며, 농촌 지역사회에 성별 특수한 비용과 편익을 발생시킨다.

- 이 글은 귀농·귀촌의 성별 특수한 비용과 편익의 예상을 위해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귀농·귀촌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정착 경험, 정책 욕구 등을 분석한다.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귀농·귀촌 여성을 분석한 것은 농업인재개발원에서 2011년에 귀농·귀촌 교육 수료생 1,084명을 대상으로 한 ‘영농정착 실태조사’를 이용한 박성정 외(2012)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여성 표본은 17.7%에 불과하다. 여성과 같이 주변화된 집단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할 때 설문조사의 평균적 결과 값보다 심층 인터뷰 등의 질적 조사에 기반한 해석적 접근이 더 적절하다(샌드라 하딩 2009)⁷⁶⁾. 여성의 경험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설문 문항과 범주가 여성 경험을 측정하기에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지 입증하기 어렵고, 성별 역할 기대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여성의 특별한 관심사는 조사 편의 등을 이유로 잘 포함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적 조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귀농·귀촌실태의 성별 차이 혹은 여성의 이해와 요구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질적 연구 결과는 타당성을 계속 의심받기 때문에 의제 형성에 실패하기 쉽다.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가 질적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지지해 줄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 활용한 ‘귀농귀촌 실태조사’는 모든 문항이 가구의 경험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성별 차이 분석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의 차이를 살펴보아 제한적 수준에서 성별 차이와 여성 특수성을 가늠하도록 한다.

⁷⁶⁾ 남성의 경험과 인식이 중심인 사회에서 여성 삶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친숙했던 것을 낯설게 하는데, 이 ‘낯설음’이야말로 모든 과학적 탐구의 시작이자 과학적 근거와 자원이다. 낯선 것에 대한 탐구는 대상으로부터 증거들을 찾지 않으면 안 되므로 ‘더 객관적’이다. 즉 좁게 제한된 과학자 사회의 신념과 가정, 특정 현상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는 근거 없는 가정, 조사되지 않고 지나가는 증거들에 기반한 지식생산 방식이야말로 ‘약한 객관성’을 담보할 뿐이다(샌드라 하딩 2009).

□ 귀농·귀촌과 젠더에 관한 선행 논의

- 귀농·귀촌 여성에 대한 연구는 우선, 수량적으로 매우 적고 대부분 질적 조사에 기반해 있다. 이는 비주류인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기, 그리고 정착이 어느 순간에 완료되는 기간 한정적 과업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과정적 현상이기에 해석적이고 생애사적인 접근이 타당하다는 방법론적 적절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련한 통계가 없는 탓도 있다. 질적 조사 결과의 일반화 문제는 연구의 양이 많을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여성’의 경험으로 패턴화하고 특징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귀농·귀촌 여성에 관한 연구는 연구성과가 축적될 만큼 많지 않다는 데 있다.

- 내용적으로는 여성의 적응 실태를 가시화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 그러한 어려움이 어떤 매커니즘으로 발생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의 심층적 연구로 확대되고 있지는 않다. 이 역시 연구의 양이 턱없이 적은 것과 연관된다. 본 연구를 위해 검토한, 2000년 이후 발표된 귀농·귀촌 여성을 주제로 하는 연구물은 학위논문, 학술논문, 정책연구보고서를 망라하여 총 10편⁷⁷⁾인데, 이 중 6편이 2012년~2014년 사이에 발표되었고 나머지는 2005년, 2020년에 발표되었다. 연구물이 적은데다 간헐적으로 연구물이 생산되니,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한 ‘실태 드러내기’ 연구가 우선시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 귀농·귀촌 여성이 말하는 진입과 정착 경험은 귀농·귀촌인 전체의 정착 경험과 사뭇 차이가 있다. 김정섭의 선행연구 정리에 따르면(2012: 18)⁷⁸⁾, 탐색 시 귀농 관련 정보 획득 어려움, 이주 후 정착단계에서의 초기 생계유지, 소득원 확보 문제, 영농자금과 시설 및 농지 확보 어려움, 농사와 경영기술 습득 어려움, 자녀교육,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77) 이경애(2005), 정다래(2009), 최은주(2012), 진명숙·박성정(2012), 박성정 외(2012), 성지혜(2013), 박신규 외(2013), 진양명숙(2014), 이순미·위라겸(2020), 진명숙(2020).

78) 2012년 이후 연구물을 포함하지 못하지만, 정착 실태를 드러내는 연구들이 귀농귀촌 관련 국가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전후까지에 대체로 집중되어 있으므로(마상진·남기천 2015: 91) 충분한 포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많은 연구물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어려움이다. 자녀교육과 주민관계를 제외하면 모두 소득 및 농업 경제활동 상의 어려움이다. 그 외 귀농 탐색과 준비 단계에서의 각종 정보 부족이나 실습·교육 기회 부족이 연구물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시되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남성인 것을 고려하면, 이 어려움들은 귀농·귀촌 가구의 남성가구주들이 체감한 어려움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 이에 반해 여성들의 정착 경험에서 이주 탐색이나 준비 기간 경험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이는 귀농·귀촌이 여성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고, 주로 남성 중심의 귀농·귀촌이 이루어진 탓이 크다. 여성들의 정착 경험은 자녀 교육, 주민과의 관계가 중심을 이루고, 부족하고 불편한 생활 여건과 환경 이야기도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농사일과 농사 외 일자리, 마을과 지역사회 활동은 독립적 주제로 등장하기보다 주로 주민과의 관계와 맞물려 이야기가 전개된 것도 특징적이다.
-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의 귀농·귀촌 경로와 동기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 각각에 따라 정체성 인식, 이주 후 적응 등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귀농·귀촌이 여성의 자발적 선택이긴 하지만 자신의 농촌에서의 이상 실현을 '농민인 남성과의 결혼'과 동일시한 경우다. 90년대에 농민운동, 농촌지역운동 지향을 가진 대졸 여성이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토착민 농민운동가와 결혼하여 정착한 경우가 그러하다. 이들에게 농민운동을 하는 젊은 농사꾼들은 진보적이고 지적이며 실천지향적인 농민으로서 상당히 매력적인 결혼 상대였고, 그런 남성과의 결합 자체가 삶의 현장성, 가치지향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이경아 2005: 208-209). 그러나 결혼 후 정착 과정은 귀농을 통한 이상 실현을 '허락받지 못해' '그냥 농촌 아낙으로 파묻히기' 십상인 것이었다. 진보적이라 믿었던 남편의 봉건적 민낯을 계속 확인하게 되고, 부녀회장을 맡자 밥상을 엮은 시아버지, 걸핏하면 며느리를 찾아 집 밖을 나갈 수 없게 하는 시어머니, 가사와 농업노동이 순차적으로 병행되거나 더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량과 강도가 제공의 제공을 하듯 기학적으로 가중되는 현실 등 "농촌에서 뭔가를 하려고 농촌에 뛰어들었으나 그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 기회 확보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일부는 "자연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해지게 만드는 농사일"의 의미를 체화하며 여성농민으로 존재 이전을 했지만 다수

는 “농부와 농부의 아내노릇”에서 거리를 두고 농사 외 일을 통해 자기 삶의 고유 영역을 확보하면서 정착을 지속하였다(이경아 2005: 210-214).

○ 둘째,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남편의 제안과 권유를 따라 귀농·귀촌한 경우다. 이 경우, 여성들은 설득을 당하는 위치에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의했다기보다 ‘거부하지 않음’의 수준에서 귀농·귀촌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마지못해, 할 수 없이’(이경아 2005: 209), ‘억울한 귀농, 강제적 동의, 갑작스런 통보’(성지혜 2013: 119, 122) 등의 언설이 귀농귀촌에 대한 여성들의 부정적 인식과 거부감을 예시한다. 귀농·귀촌에 대한 여성들의 거부감은 남편 연고지로 ‘귀향’하는 경우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며(성지혜 2013: 123-128), 부부가 합의하여 함께 준비하고 무연고지로 귀농한 경우(성지혜 2013: 128-129), 남편이 먼저 내려가 터를 잡으면서 기간을 두고 설득이 이루어진 경우(진명숙·박성정 2012: 283) 등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남편 주도-여성의 소극적 동의로 이루어진 귀농·귀촌에서, 여성들은 스스로를 “농촌에 이주한 도시 여성”이라 인식하며 “이주 후 정체성을 농촌에도, 도시에도 두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정착되지 못하며”(진명숙·박성정 2012: 284, 293), 가족은 귀농하였으나 여성은 귀농하지 않은(성지혜 2013) 정체성의 표류를 경험하게 된다.

○ 세 번째는 자녀 교육, 가족의 건강, 더 나은 삶의 질 등 가족의 삶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다. 물론, 이 경우도 여성이 주도하거나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에 비해 여성들이 귀농·귀촌에 가치를 부여하고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특히 “신맹모농촌지교(新盟母農村之校)”(진양명숙 2014: 83)라 명명할만큼 자녀는 이주의 강력한 동기이자 귀농·귀촌 지속의 동력이다(진명숙·박성정 2012: 285-287, 292).

○ 이 세 유형의 귀농·귀촌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주민과의 관계 어려움을 가장 많이, 가장 강하게 언급한다. 남편의 강압에 못 이겨 귀농·귀촌을 한 여성들조차 이미 농촌살이를 결행한 이상 욕망을 절제하고 가난을 감수하려는 마음의 태세를 갖고 있으므로(이경아 2005: 211) 빈곤과 생활의 불편함은, 굳이 ‘어려움’을 말하라면 언설 중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결정적인 어려움까지는 아니다. “대문’없는 농촌 생활, 소문과 간섭, ‘여자들이 마을 일에 너무 설쳐대면 뒤에서 욕한다’, 마을로 확장된 ‘고부관계’” 등의 표현들은(박성정 외 2012: 86-94) 개인주의적 행태, 농촌 지역사회 문화 이해 부족이라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더해 여성에게는 가부장적 통제가 더해져 관계의 어려움이 증폭됨을 보여준다.

○ 이러한 적응 어려움에 대해 여성 다수는 농사일 외 직업을 갖거나 공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착의 동력을 만든다. 농업 외 사회·경제적 활동은 경제적 수단일뿐 아니라 남편의 귀농에 대한 저항이자 가부장적 가족과 마을을 벗어나는 회피 전략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마을과 지역일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고 자신이 추구했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문화, 복지, 교육, 지역공동체 활성화, 가공·유통, 농촌관광 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일들은 농업생산의 외연을 확장하고 농촌 지역주민의 필요를 충족하여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이다(김이선 외 2021). 귀농·귀촌이 가져올 농촌 사회의 편익이란 개개인의 자금, 인적 역량의 투입에서 기대될 수 있기보다 이들의 보유 자원이 주민들과의 협력적 활동에서 발휘되어 사회적 학습력, 사회적 혁신역량이 형성되는 것이라 할 때(김정섭 2012: 15) 귀농·귀촌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그것이 비록 힘든 농사일, 가부장적 가족과 마을에 대한 회피 전략이더라도 농촌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한다.

○ 그러나, 여성들이 주로 남편, 자녀, 가족 때문에 이주를 하고 정착을 지속한다는 점, 학부모라는 위치성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사회 활동을 확대해 가는 점, 교육·돌봄·복지 등 ‘여성적 역할’을 공공화하는 방식으로 사회·경제적 활동 영역을 확보해가는 점 등 여성성과 모성에 기반한 전략으로 ‘자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진명숙 2014) 진정 여성해방 기획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단순하지 않다.

○ 마을·지역공동체와 여성의 참여에 대한 일군의 연구들은 돌봄 등 여성적 역할에 특화된 방식으로 여성들의 활동이 이루어질 때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권한의 실현은 여전히 요

원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김이선 2021). 여성이 주부, 어머니, 여성성으로 공동체의 주체가 되는 것은 마을과 지역사회가 ‘가족의 확장’으로 상상되는 것이어서 전통적인 성역할과 가부장제의 재생산을 결과하며(전희경 2014), 여성의 경험과 기여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채 공동체의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된다면, 가족 내 가부장성이 지역사회에 확장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된다(백영경 2017).

○ 반면, 지역 내 여성의 돌봄 참여가 여성 주체의 힘과 역량을 강화하는 대안적 실천을 확장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장수정 2012a; 2012b; 진명숙 2020). 여성의 참여와 가치를 돌봄과 살림에서 주로 찾게 되는 것은 마을공동체 운동이 친밀한 이웃 관계 형성과 다양한 돌봄 실천에서 의미를 찾기 때문이며(나종석 2013), 돌봄이 여성에게 전담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들의 개인적 관심사나 욕구에서 출발하는 아래로부터의 공동체 형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된다(김영정 2018; 조옥 2013; 최희영·이희정 2014). 여성들의 돌봄·친밀 공동체는 돌봄을 공동체 전체의 의제로 삼는 등 공과 사, 공식과 비공식, 여성과 남성의 역할 경계를 모호하게 하거나 이 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김영선 2013), 공적 영역에서 배제된 여성들이 친밀 관계를 기반으로 저항의 힘을 획득하며 외부로 향해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의 장으로 기능한다(사이토 준이치 2009: 107-112).

○ 돌봄과 살림이라는 여성 개인의 필요와 욕구, 경험에서 출발한 자발적 마을공동체에서 여성들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활동’을 하는 주체의 위치를 갖는다. 여성들은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주도적이고 절대적으로 참여하며(최희영·이희정, 2014), 의사결정의 효율성보다는 참여자들의 즐거움과 이야기 나누기를 통한 심의 민주주의를 구현한다(김의영·한주희, 2005). 그 결과 사적 이슈로 간주되었던 돌봄과 살림을 공동체의 가치와 이슈로 확장시켜 개인의 욕구와 대치되지 않는 공공성을 성찰하는 가치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이경아 2005; 김영정 2018; 진명숙 2020). 아울러 이 과정을 일종의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을 포함한 활동으로 전환하여(김영정 2018; 진명숙 2020) 자본주의적 이윤추구와 사적 소유 대신 ‘상호돌봄 가치’를 중시하며 관계와 돌봄의 윤리를 경제활동으로 소환한다(이현재 2017: 95-99).

- 여성들의 귀농·귀촌 동기와 경로의 네 번째 유형은 농업·농촌이 가진 경제적·생태적·사회적 가치를 선호한 여성들의 주도적 혹은 자발적 귀농·귀촌이다. 가족 단위 귀농·귀촌에서도 여성들의 주도성이 드물게 나타나지만(여성 연고지 귀농)(성지혜 2013: 118-119), 대부분 ‘청년창업농’ 혹은 ‘승계농’ 정책 범주에서 포착되는 40세 미만의 청년 여성들에서 귀농·귀촌이 적극적인 생애기획으로 선택되고 실행된다(이순미·위라겸 2020).
- 이들은 농업생산자면서 경영자이기 때문에 농업 생산과 소득, 정보 접근, 농사와 경영기술, 부모·마을·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다층적 차원에 걸쳐 정착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시골×젊은×여성’이라는 다중적 차별의 교차는 자원과 관계에의 접근이 또래 청년 남성보다 더 어렵고, 나이든 기혼 여성보다 더 강력한 낙인과 성적 통제로 나타난다. 예컨대, “농사 안 짓고 인터넷만 깨작대는, 매스컴용으로 좋은 ‘아가씨’, 사업을 주면 여자들은 결혼해서 판 데 가버린다” 등 1차 생산 중심의 ‘진정한 농사꾼’을 정의하는 지배적 경향이 청년 여성들의 ‘농업인’임을 부정하고 생산자 조직 네트워크에 잘 끼워주지 않는 배제로 이어진다. 또한 공공 영역에서조차 낡은 ‘출가외인’ 통념으로 여성을 정책 지원에서 배제하는 시도가 비일비재하다(이순미·위라겸 2020: 104, 107).
- 여기에 더해, 공적·사적 자리를 막론하고 총각을 강제로 소개하는 결혼 강권, “남자 꼬시고 다니는 애” 소문, ‘돈 천만 원이면 구할 수 있는 산단 아가씨, 베트남 처녀’라는 여성(신부) 매매 권유 풍조의 일상화, 지역 내 만연한 성희롱과 성추행 등 여성 비하와 성적 대상화 문제는 젊은 귀농·귀촌 여성의 자율성과 가치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심각한 장벽들이다. 청년 여성들은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중장년 여성농업인에 대한 불신감이 큰데, 이는 주민 관계나 여성 연대를 어렵게 한다. 그 외,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농촌 주거환경, 부족한 의료 및 보육 인프라, 승계자라 하지만 아들 상속 습속으로 농지와 경영체 상속이 비확정적이며 용돈과 월급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부모와 경제적으로 미분리되어 있는 등도 정착의 어려움으로 제시되었다(이순미·위라겸 2020: 80-114).
- 앞에서 제시된 기혼 여성들이 체감하는 주민과의 갈등이란 “애정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겁내지 말기” 등의 심리적 방어기제로 대응할만한 “소소한 것”, “정서적 장벽”으로 진단

되지만(진명숙·박성정 2012: 291), 청년 여성농업인들이 경험하는 ‘갈등적 관계’는 자원과 기회에서의 실질적 배제라는 권력적 결과를 수반한다. 가장이자 경제적 주체인 남성에게는 일자리와 소득 중심의 정책으로도 충분할 수 있으나, 여성은 그것만큼 인권, 안전, 복지 정책의 동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농기반 없이 귀농한 청년 여성농업인 들조차 생산 및 소득활동 어려움과 여성에 대한 저평가, 일상적 성희롱과 성적 대상화, 안전하지 못한 주거환경, 일가정 양립 부담 등이 같은 정도로 문제적이라 하였다(이순미·위라겸 2020).

○ 귀농·귀촌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선행연구들은 여성이 겪는 성별 특수한 정착의 어려움이 고려된 별도의 여성 정책과 성 인지적 귀농귀촌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성 인지적 귀농귀촌 정책은 귀농귀촌 성별 분리 통계 및 귀농·귀촌 여성 실태 통계 생산, 정책에 대한 성 인지적 평가 및 개선, 여성 지원과 성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여성 귀농학교 개설, 현재 추진하는 귀농·귀촌 시책에서 여성 할당제 시행, 등의 과제들이 제안되었다. 여성 지원 정책으로는 여성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 강화, 여성 대상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여성일자리 발굴 및 취업 연계, 농촌 창업 지원,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가족 교육 및 프로그램, 귀농귀촌여성 네트워크 지원, 보건문화 서비스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박성정 외 2012; 박신규 2013).

○ 청년층 귀농귀촌 여성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는 여성 안심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여성·아동 거점 의료기관 지정·운영, 농촌 청년여성 심리·정서 지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 확대 및 여성폭력 대응 인프라 확충, 여성 선후배 멘토링제 및 현장 교육체계 확립, 여성 커뮤니티 공간 조성, 어린이돌봄 농장 시범사업, 소규모 가공·판매시설 지원 확대, 가족경영 컨설팅 및 부모-자녀 가족경영협약 사업 촉진 등이 제안되었다(이순미·위라겸 2020).

□ 여성 귀농·귀촌 규모

○ 정부의 귀농·귀촌인 통계는 ‘귀농인 + 귀농인의 동반가구원 = 귀농가구원’, 그리고 ‘귀촌가구주 + 귀촌 동반가구원 = 귀촌인’으로 범주를 구분하고 있다.⁷⁹⁾ 이러한 구분에 따

르면, 귀촌은 가구주와 동반가구원 모두를 귀촌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귀농은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 당사자와 가족원이 분리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용어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이 귀농인이거나 귀촌인인 경우 ‘여성 귀농·귀촌인’을 사용하고, 동반 가구원을 포함하여 여성 전체를 칭할 때는 ‘귀농·귀촌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 「귀농어·귀촌인통계」에 따르면, 여성 귀농인과 귀촌인은 2020년 기준 227,722명, 전체 귀농·귀촌인의 46.5%이고, 동반가구원까지를 합한 귀농·귀촌 여성은 230,640명으로 전체 귀농·귀촌가구원의 46.6%를 차지한다.
- 여성 귀농인 수는 통계 작성 시작(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 4,260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소폭 감소와 증가를 보이며 2020년에 4,074명(32.4%)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귀촌가구주는 2019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134,832명(39.1%)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귀농인과 귀촌가구주 수의 변화는 전체 귀농인 및 귀촌가구주 증감세와 유사하며, 연도별 여성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다.
- 귀농인과 귀촌가구주 중 여성 비율은 30% 대로 낮은 데 비해, 동반가구원 중 여성 비율은 2020년 기준, 귀농 59.8%, 귀촌 67.3%로 높다. 여성들은 귀농보다는 귀촌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 독자적으로 귀농·귀촌하기보다 남성 귀농·귀촌인의 배우자 혹은 자녀 위치로 농촌 사회에 진입하는 경우가 더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별 성별 비율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난다.

79) 상세 내용은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정보보고서」(2021)를 참조.

〈부록 표 1〉 귀농 인구 성별 현황(2013~2020)

단위: 명, %

구분	귀농인 수			귀농가구원 수			동반가구원 수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2020	12,570	4,074	32.4	17,447	6,992	40.1	4,877	2,918	59.8
2019	11,504	3,613	31.4	16,181	6,494	40.1	4,677	2,881	61.6
2018	12,055	3,790	31.4	17,856	7,393	41.4	5,801	3,603	62.1
2017	12,763	4,254	33.3	19,630	8,471	43.2	6,867	4,217	61.4
2016	13,019	4,260	32.7	20,559	8,776	42.7	7,540	4,516	59.9
2015	12,114	3,783	31.2	19,860	8,561	43.1	7,746	4,778	61.7
2014	10,904	3,363	30.8	17,976	7,716	42.9	7,072	4,353	61.6
2013	10,312	3,073	29.8	17,318	7,448	43.0	7,006	4,375	62.4

자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각년도.

〈부록 표 2〉 귀촌 인구 성별 현황(2013~2020)

단위: 명, %

구분	귀촌인 수			귀촌가구주 수			동반가구원 수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2020	477,122	223,648	46.9	345,205	134,832	39.1	131,917	88,816	67.3
2019	444,464	207,818	46.8	317,660	122,870	38.7	126,804	84,948	67.0
2018	472,474	223,779	47.4	328,343	126,640	38.6	144,131	97,139	67.4
2017	497,187	236,404	47.5	334,129	125,743	37.6	163,058	110,661	67.9
2016	475,489	227,075	47.8	322,508	122,564	38.0	152,981	104,511	68.3
2015	466,778	221,744	47.5	317,409	119,413	37.6	149,369	102,331	68.5
2014	439,535	214,807	48.9	299,357	117,276	39.2	140,178	97,531	69.6
2013	405,452	197,341	48.7	280,838	109,581	39.0	124,614	87,760	70.4

자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각년도.

○ 전체 귀농·귀촌인의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귀농인은 최근으로 오면서 50대와 60대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동반가구원은 30대 이하가 절반 수준으로 가장 많다. 귀촌가구주는 30대 이하가, 귀촌가구의 동반가구원은 20대 이하가 40% 이상으로 가장 높다. 귀농·귀촌 여성의 연령별 분포도 전체 경향과 유사하다. 즉 남녀 모두 귀농인은 중노년층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30대 이하 젊은 연령층은 귀농인의 동반가구원 혹은 귀촌인으로 농촌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귀농인과 귀촌가구주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비율이 30% 대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동반가구원의 경우 귀

농은 40대 이상, 귀촌은 30대 이상에서 7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들은 여성의 농촌 사회 진입이 가족단위 이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배적임을 짐작하게 한다.

〈부록 표 3〉 귀농·귀촌인의 연령별 성별 비율

단위: %

구분	연령별 구성비								연령별 여성 비율				
	전체				여성								
	2013	2015	2017	2020	2013	2015	2017	2020	2013	2015	2017	2020	
귀농인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9.8	31.2	33.3	32.4
	0~39세	11.4	9.6	10.5	10.9	8.4	7.8	8.0	9.1	22.1	25.3	25.4	27.0
	40~49세	22.8	20.0	17.8	14.2	23.3	21.1	18.8	14.2	30.5	32.9	35.2	32.2
	50~59세	39.5	40.2	38.8	35.0	44.7	45.4	44.2	41.5	33.7	35.2	38.0	38.4
	60~69세	21.2	24.4	27.1	32.5	17.3	19.5	22.9	27.6	24.4	25.0	28.1	27.5
	70세 이상	5.1	5.7	5.7	7.3	6.2	6.1	6.1	7.7	36.1	33.5	35.4	33.8
동반 가구원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2.4	61.7	61.4	59.8
	0~39세	52.2	50.9	50.2	47.8	40.8	39.7	41.1	37.2	48.8	48.2	50.2	46.6
	40~49세	11.8	10.6	9.8	8.6	14.9	13.0	12.2	9.8	78.5	75.8	76.0	68.0
	50~59세	22.1	21.9	21.1	20.5	28.0	27.7	26.2	26.3	79.3	78.0	76.3	76.6
	60~69세	9.3	11.5	13.7	17.2	10.7	13.2	14.5	19.3	71.8	70.5	64.8	66.9
	70세 이상	4.5	5.2	5.2	5.9	5.5	6.4	6.1	7.5	76.8	76.7	72.4	76.0
귀촌 가구주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9.0	37.6	37.6	39.1
	0~29세	17.4	18.5	18.0	20.7	19.8	19.5	20.0	22.3	44.5	39.6	41.6	42.0
	30~39세	28.9	26.2	25.9	22.6	24.8	23.2	22.7	20.5	33.5	33.3	33.0	35.4
	40~49세	20.6	19.9	19.3	17.7	17.5	18.0	17.3	15.5	33.2	34.1	33.7	34.3
	50~59세	18.0	18.8	18.8	18.4	17.7	18.8	18.6	18.0	38.4	37.6	37.3	38.2
	60~69세	8.9	10.2	11.3	13.1	9.5	10.2	11.2	12.8	41.2	37.7	37.2	38.1
	70세 이상	6.3	6.4	6.7	7.4	10.8	10.4	10.3	10.9	66.6	60.6	58.0	57.5
귀촌 동반 가구원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0.4	68.5	67.9	67.3
	0~29세	43.6	43.6	44.2	40.9	33.4	32.9	33.6	31.3	54.0	51.8	51.6	51.4
	30~39세	23.7	21.7	21.1	19.1	27.0	24.7	24.2	21.1	80.0	77.8	77.8	74.4
	40~49세	12.4	12.1	12.0	13.1	14.8	14.3	14.1	15.1	83.8	81.2	79.9	77.7
	50~59세	11.1	11.7	11.4	12.5	13.9	14.8	14.5	15.4	88.2	86.8	86.0	82.8
	60~69세	5.5	6.5	6.9	9.1	6.6	8.1	8.4	10.9	85.2	84.6	83.2	81.2
	70세 이상	3.7	4.4	4.4	5.3	4.3	5.2	5.2	6.2	81.8	81.0	80.5	78.8

자료: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각 년도.

- 일각에서는 가족 단위 농업·농촌 이주가 “귀농한 가족, 귀농하지 않은 여성(성지혜 2013)” 현상을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지적하는데, 이는 여성들에게 농촌 사회 ‘정착’이란 완료되기 어려운 과업임을 지시한다. 첫째, 여성들이 귀농인이기를 거부하거나(성지혜 2013), 되고 싶어도 되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귀농인 정체성과 오랫동안 다중적인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고(진명숙·박성정 2012), 둘째, 가족을 단위로 개인을 호명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가족 중심성 구조 하에서 독립적 요구를 가진 여성들은 전통과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이탈자이자 이방인으로 규정되기 쉽기 때문이다.

- 여성을 가족과 동일시하여 개인의 이해와 요구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통계 작성에서도 확인된다. 가족 단위로 귀농한 여성의 경우 ‘귀농인의 동반가구원’이라는 애매한 위치에 놓여 귀농인, 귀촌인 어디에도 귀속되지 못하고 귀농·귀촌 관련 정책에서 독자적인 정책대상이 되기 어렵다. 정책이 개인이 아닌 가구를 단위로 설계되고, 귀농인과 귀촌인 통계에 기반하여 정책 수요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직전 거주지역, 이동유형, 취업 여부, 재배작물 및 재배면적, 전입 사유 등은 성별 분리 통계가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이해와 요구 예측이 어렵다. 농업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성별 역할 기대와 규범이 있고, 교육·분거·맞벌이·겸업 등 가족 발전을 위한 가구 전략에서 성별·세대에 따라 역할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가족 구성원 간에, 성별 간에 농촌 생활 기대와 욕구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정착에 필요한 자원 지원은 이러한 차이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 현황과 정책 수요 분석

□ 자료 특성 및 분석의 제한점

- 이 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깎리의 「귀농·귀촌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였다. 「귀농·귀촌 실태조사」는 지역, 귀농·귀촌 시기, 연령을 층화변수로 하여 표집을 했기 때문에 성별 대표성을 갖추지 않았고, 무엇보다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가구의 경험을 조사했기 때문에 성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 예컨대, 정책 수혜나 지역사회 참여 경험과 관련 만족도를 묻는 문항도 “귀댁”의 경험을 물었기 때문에 여성 자신은 경험이 없어도 남편이 받은 정책이나 참여 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할 수 있고 만족도 역시 남편의 경험을 반영하여 응답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조사 결과를 성별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가구 조사 결과를 개인 조사로 간주하는 방법론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가구주와 배우자를 함께 조사했기 때문에 가구코드가 작성되었다면 동일가구에 한해서 성별에 따른 현황 인지나 정책욕구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가구코드를 별도로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 따라서 이 글은 여성 개인의 연령, 학력, 이주 전 직업을 제외하고,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본인 가구의 경험과 현황, 애로점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목적을 제한한다. 가구주는 가족의 선택과 실천에 상당한 결정권을 가지며 가족을 대표하여 교육이나 정책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별 경험 및 욕구 차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분석 결과는 귀농·귀촌을 둘러싼 성별 경험의 차이나 욕구의 차이로 해석될 수 없으며, 가구의 정착 현황과 정책에 대해 여성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분석 내용은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의 귀농귀촌 준비 경험, 가계 재정 및 가구 경제활동, 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및 농촌생활 만족도, 귀농·귀촌 정책 수혜 경험 및 욕구로 구성하였다.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귀농·귀촌 시기별 종단적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외 내용은 횡단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횡단분석은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2020년 실태조사는 여성 귀농인 사례수가 적어 종단적 경향성을 벗어나는 이상치가 관찰되는 등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사례수가 가장 많은 2019년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 마지막으로, 분석 제약에 대한 아쉬움에 덧붙여, 「귀농·귀촌 실태조사」가 관련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서의 위상을 충족하려면 조사 대상 및 내용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싶다. 통계청 승인 통계 중에서 표집을 가구 단위로 한다고 해서 개인 조사

를 하지 않는 조사는 없다. 현행 「귀농·귀촌 실태조사」는 '남성 가장'이 가구원 모두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한다는 전근대적 인식에 기반해 있는 것으로 비판될 수 있다. 귀농·귀촌가구의 정착은 남성 가장의 사회·경제적 성공에만 달려있지 않으며, 부인이나 자녀의 부적응, 불안정성이 언제든 가족의 역이주를 만들 가능성도 크다. 가구 단위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여, 성별 대표성을 갖추도록 표집을 개선하고, 가구주가 응답하는 가구조사와 응답자 개인의 경험과 인식, 욕구를 묻는 개인조사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이 시급하다.

□ 귀농·귀촌 여성의 기본 특성

1) 가구 특성

- 어떤 여성들이 귀농·귀촌을 하는지, 이러한 여성들의 특징이 종단적으로 변화가 있는지를 추측하기 위해 가구특성과 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귀농·귀촌 시기별로 살펴 보았다. 분석자료는 「귀농·귀촌 실태조사」 2018년~2020년 3개년 자료이고,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 귀농·귀촌 실태조사는 조사 1년 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도시(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이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매년 조사에서 4개년 시점이 중복 표집된다. 따라서 각 조사년도에 지난 조사의 응답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실태조사 자료에서 중복 시기는 하나의 자료에서만 선택하였다. 3개년 조사자료 중 2019년 조사의 여성 사례수가 귀농 677명, 귀촌 1,089명(2018년 귀농 388명, 귀촌 514명, 2020년 귀농 425명, 귀촌 1,039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2019년 실태조사에서 2014년~2018년에 귀농·귀촌한 응답자를 분석하였고, 2018년 실태조사에서 2013년에 귀농·귀촌한 응답자를, 2020년 실태조사에서 2019년에 귀농·귀촌한 응답자를 선별하였다.
- 귀농·귀촌 시기별로 여성 응답자들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매우 예외적인 수치를 보이는 2019년 귀농 가구를 제외하고, 귀농, 귀촌 가구 모두 여성 응답자가 가구주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에 귀농한 여성 응답자의 37.5%, 2019년에 귀

촌한 여성 응답자의 41.3%가 가구주이며, 이는 2013년에 비해 각각 17.5%p, 30.0%p 증가한 수치다. 조사 대상이 가구주와 배우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보다 여성 가구주가 과다 표집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최근에 이주하는 여성들은 가구를 대표하여 혹은 혼자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록 표 4〉 귀농·귀촌 시기별 여성의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명, %

귀농·귀촌시기	귀농 가구			귀촌 가구		
	사례수	가구주 비율	배우자 비율	사례수	가구주 비율	배우자 비율
2013	70	20.0	80.0	124	11.3	88.7
2014	123	23.6	76.4	239	28.9	71.1
2015	142	25.4	74.6	219	27.4	72.6
2016	142	26.1	73.9	191	26.2	73.8
2017	135	37.8	62.2	232	29.7	70.3
2018	136	37.5	62.5	208	32.2	67.8
2019	68	2.9	97.1	189	41.3	58.7

○ 귀농, 귀촌 모두 여성 가구주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약간 적다. 그러나 1인가구 비율은 남성가구주 가구가 월등히 높다. 1인가구 중 남성 비율은 귀농 79.9%, 귀촌은 59.5%다. 통계청의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귀농·귀촌 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은 약 2/3 정도이고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는 귀농, 귀촌 모두 74%를 넘었다⁸⁰⁾. 단신 이주가 귀농·귀촌의 지배적 형태이고 1인가구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라는 사실은 여성의 귀농·귀촌이 남성보다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80) 귀농·귀촌가구 중 1인가구 비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귀농가구	58.7	60.2	60.0	64.3	65.2	68.9	72.4	74.1
귀촌가구	70.9	69.9	70.3	70.0	69.5	71.9	74.1	74.7

출처: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각 년도.

주: 1인가구의 성별 비율은 공표되지 않음.

○ 이주 당시 1인가구가 그 후에 다인가족이 되는 경우는 대략 1/5 정도로 적은 편이다. 이는 귀농·귀촌 1인가구가 이주 초기의 일시적 형태가 아니라 장기적인 가족형태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 결합 시기는 대체로 1년 이내가 많으나 귀촌 여성 가구주 가구는 2년 이후로 가장 길다.

〈부록 표 5〉 가구주 성별에 따른 평균 가구원 수 및 1인가구 비율

단위: 명, %

		평균 가구원 수			1인가구					
		사례수	이주 당시	현재	이주 당시	이주 이후 가족 결합				
						6개월 이내	6개월-1년	1년-2년	2년 이후	가족 미이주
귀농	여성	204	1.65	1.60	20.1	3.8	1.9	0.0	0.0	94.3
	남성	1,397	2.11	2.15	79.9	6.1	6.4	4.0	3.4	80.1
귀촌	여성	314	1.61	1.65	40.5	2.9	5.9	5.9	10.3	75.0
	남성	992	2.25	2.34	59.5	2.3	6.8	3.0	2.3	85.7

주 1) '현재'의 시점은 조사 실시년도인 2019년을 의미함.

○ 2019년 조사결과에서 1인가구로 이주한 이유를 보면, 여성은 귀농·귀촌 모두 '가족의 직장' 때문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는데 귀촌 가구는 그 비율이 무려 78.7%에 이른다. 반면, 남성은 '자녀 교육'과 '가족의 직장'이 1, 2위로 고루 높고, '가족의 이주 반대' 비율도 여성에 비해 높다. 즉, 여성은 남편의 직장 때문에, 남성은 맞벌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혼자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성역할 분업을 통한 가족 발전전략이 단신 이주의 가장 큰 이유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귀농의 경우는 남녀 모두 준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혼자 이주한 비율도 높은 편이다.

〈부록 표 6〉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단독이주 이유

단위: 명, %

		사례수	준비시간 필요	자녀 교육	가족의 직장	가족의 이주 반대	자산 처분 어려움	정착자금 부족
여성 가구주	귀농	55	20.0	16.4	49.1	9.1	5.5	-
	귀촌	61	4.9	1.6	78.7	4.9	8.2	1.6
남성 가구주	귀농	320	21.9	33.4	24.4	16.6	3.4	0.3
	귀촌	123	14.6	21.1	48.0	13.0	3.3	-

○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여성 응답자 중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남성이 여성보다 단신 이주 비율이 월등히 더 높으며, 안정적인 가계 경제를 위한 가족원의 도시 직장 유지 및 자녀 교육 문제가 단신 이주의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귀농·귀촌 가구 내 1인가구 비율이 높다는 점은 정책의 초점이 '시골에서 혼자(농사짓고) 산다는 것'의 어려움에 보다 집중할 필요를 지시한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정보 획득, 인적 네트워크, 심리·정서적 안정 등에서 취약할 수 있고, 여성 1인가구는 일상생활이나 주거 등에서의 안전 문제가 중요 이슈가 된다. 또한 여성의 이주가 남성보다 가족 단위 이주 경향이 더 크므로 여성에 대한 정책 투자가 인구학적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는 귀농·귀촌 정책이 성 중립적 정책을 표방하기보다 여성이 겪는 어려움에 특화된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것의 필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귀농·귀촌 정책이 다양한 가족형태별 필요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구 특성에 대한 현황 파악이 지금보다는 더 상세히 이루어져야 한다. 주로 어떤 가족형태로 이주를 하는지, 즉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인지,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인지,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인지, 부모 경영체로 합가한 승계농인지, 단신 이주한 1인가구인지, 미혼의 1인가구인지, 이러한 가족형태가 가구주의 성별이나 혼인상태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귀농·귀촌 가구의 필요를 파악하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라 할 수 있다. 「귀농·귀촌인 통계」가 가구 특성 및 1인 가구 비율 등에서 성별 분리 통계를 생산하고, 「귀농·귀촌 실태조사」는 표집의 성별 대표성을 기본으로, 가구 구성에 대한 상세 정보 및 가구원 정보 파악(연령, 성별, 혼인상태 등) 문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귀농·귀촌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귀농한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50대 중반으로, 2014년까지는 56.2세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하여 최근 2년간 53세로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거의 절반에 가깝게 많고 60대 이상이 20%대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30대 이하 여성 비율은 11% 수준으로 낮다. 귀촌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40대 중반으로 귀농 여성들보다 평균 10여년이 젊다. 귀촌 시기별 연령 증감은 일정하지 않고 차이도 매우 적다. 모든 시기에 30대 이하 여성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높고 그 외 연령대가 최근 3년간 15.0%~20.2%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부록 표 7〉 귀농·귀촌 시기별 여성의 연령

단위: 명, %

귀농 귀촌 시기	귀농 가구						귀촌 가구					
	사례수	평균 연령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평균 연령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2013	70	53.0	5.7	27.1	45.7	21.4	124	43.3	46.0	28.2	16.9	8.9
2014	122	56.2	6.6	18.0	47.5	27.9	239	44.0	48.5	20.5	18.8	12.1
2015	142	54.0	7.7	23.9	43.7	24.6	219	45.7	41.6	20.5	22.8	15.1
2016	142	53.6	12.7	19.7	40.8	26.8	192	45.7	41.7	18.8	24.5	15.1
2017	134	53.9	9.7	19.4	42.5	28.4	233	44.5	45.5	19.3	20.2	15.0
2018	135	53.0	11.8	19.3	45.2	23.7	209	45.8	45.5	15.8	18.7	20.1
2019	68	53.3	11.8	19.1	47.1	22.1	189	44.7	45.0	18.5	19.0	17.5

○ 귀농 여성의 학력 수준은 표집이 이례적인 2019년을 제외하고, 고졸이 50% 이상, 대졸이 30% 내외, 중졸 이하가 10% 후반대이고, 귀촌 여성은 고졸과 대졸이 모두 40% 중반대로 비슷하고 중졸 이하는 10% 내외로 낮다. 귀촌 여성의 고학력자 비율이 귀농 여성보다 10%p 이상 높다. 2015년 인구총조사의 읍면 지역 거주 20세 이상 여성의 학력 수준이 중졸 이하 45.8%, 고졸 27.9%, 대졸 24.5%인 것과 비교하면 귀농·귀촌 여성의 학력 수준은 상당히 높다. 이주 시기별로는 귀농·귀촌 모두 연도별 증감이 일정하지 않아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부록 표 8〉 귀농·귀촌 시기별 여성의 학력

단위: 명, %

귀농 귀촌 시기	귀농 가구					귀촌 가구				
	사례수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사례수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2014	122	17.2	60.7	18.0	4.1	239	5.4	49.0	45.6	-
2015	142	14.8	58.5	26.1	0.7	218	8.7	42.7	48.6	-
2016	142	13.4	53.5	31.0	2.1	186	7.5	45.7	45.2	1.6
2017	134	17.9	46.3	32.8	3.0	231	11.7	37.7	49.8	0.9
2018	135	19.3	52.6	27.4	0.7	206	11.2	44.2	43.7	1.0
2019	69	11.6	56.5	30.4	1.4	190	11.1	40.5	46.8	1.6

주) 2018년 조사에서 가구원의 학력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에 귀농·귀촌을 한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 여성들은 이주 전에 귀농·귀촌 모두 70% 내외가 직업 활동을 하였다. 한국 여성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자가 지난 20여 년간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 귀농 여성의 이주 전 직업은 2018년 귀농자를 기준으로 서비스·판매직 45.9%, 주부 30.4%로 이 두 직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무직이 7.4%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연도별 변화는 불규칙하지만 최근 2, 3년간 변화로는 주부와 사무직이 약간 감소하고 서비스·판매직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귀촌 여성의 경우 2019년 귀촌 자를 기준으로 서비스·판매직 33.9%, 주부 30.7%, 사무직 20.6%로 귀농 여성에 비해 주부와 사무직의 비율이 높다. 연도별 변화의 경향성은 뚜렷하지 않다.

〈부록 표 9〉 귀농·귀촌 시기별 여성의 이주 전 직업

단위: 명, %

귀농·귀촌 시기	사례수	관리,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어업 숙련직	기능 및 기계 종사직	단순노무직	주부	
귀농	2013	69	1.4	17.4	42.0	-	2.9	1.4	31.9
	2014	124	5.6	8.1	33.9	-	4.8	5.6	41.1
	2015	144	6.3	7.6	38.2	2.1	2.8	2.8	38.2
	2016	144	3.5	11.1	36.8	0.7	4.9	3.5	38.9
	2017	133	6.0	15.0	36.1	0.8	1.5	5.3	31.6
	2018	135	4.4	7.4	45.9	0.7	4.4	4.4	30.4
	2019	68	2.9	7.4	47.1	-	1.5	-	41.2
귀촌	2013	124	4.8	25.0	27.4	-	1.6	2.4	33.9
	2014	238	2.9	19.7	35.3	-	1.7	0.8	37.4
	2015	219	6.8	17.8	33.8	-	1.4	4.1	33.3
	2016	191	3.1	16.2	38.2	-	3.1	2.6	31.9
	2017	233	3.4	19.7	39.9	0.4	2.1	2.6	27.0
	2018	209	2.4	17.7	34.0	0.5	3.3	4.8	31.6
	2019	189	5.8	20.6	33.9	-	2.1	3.7	30.7

○ 요약하면, 귀농은 50대와 60대 여성 중심, 귀촌은 30대 이하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두 집단 모두 고졸자와 대졸자가 대부분이며, 70% 정도는 이주 전에 직업을 가졌던 여성들이고 직업 분야는 서비스·판매직, 사무직이 많다. 이주 시기별로 연령, 학력, 직업 분포의 차이는 적고, 변화를 말할만한 정도는 아니어서 최근 10여 년간, 원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의 젊은, 직업적 전문역량이 있는 여성들이 농촌 지역사회로 이주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가족의 귀농·귀촌 준비 경험

1) 귀농·귀촌 결심과 지역 선정

○ 귀농 가구의 경우 남녀 가구주 모두 농업·농촌의 환경적 매력에 귀농의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여성 가구주의 귀농 이유는 가족·친지와 살기 위해(38.7%), 도시 생활 회의(33.7%), 가족의 건강(34.0%), 농업의 발전 가능성(33.6%), 비싼 도시생활비·주거비(21.6%)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가구주의 귀농 이유는 농업의 발전 가능성(49.6%), 도시 생활 회의(40.0%), 가족·친지와 살기 위해(29.7%), 가업 승계(21.0%)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의 산업적·환경적 매력과 도시로부터의 탈출이 귀농의 주된 이유인 것은 공통적이지만 여성은 가족적 이유로 인한 귀농 결심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남성은 농업에 종사하려는 목적에서 귀농을 결심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더 높은 차이가 있다.

○ 귀촌 이유는 성별 차이가 크지 않은데 귀농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농업·농촌의 환경적 매력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비싼 도시 생활비·주거비, 도시 생활 회의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높아, 귀촌이 귀농보다 도시 생활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의미 부여를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으로 인한 귀농·귀촌 비율은 극히 낮는데, 선행연구에서 '신맹모삼천지교'라 할만큼 자녀 교육이 중요 동기였던 것은 연구참여자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 여성들이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부록 표 10〉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귀농·귀촌 이유(1+2+3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농업·농촌 매력 동인			가족적 이유				도시로부터의 탈출			
		농업 발전 가능성	자연환경·정서적 여유	농산업 종사	가업 승계	본인, 가족 건강	가족 친지와 살려고	자녀 교육	비싼 도시 생활비·주거비	도시 생활 회의	실직·사업 실패	
귀농	여성 가구주	203	33.6	74.1		15.3	34.0	38.7	2.4	21.6	33.7	3.6
	남성 가구주	1,390	49.6	65.2		21.0	19.8	29.7	1.8	17.1	40.0	13.6
귀촌	여성 가구주	314		116.8	10.0	10.3	17.7	17.5	2.8	64.5	26.4	7.3
	남성 가구주	984		118.1	10.8	17.2	17.3	22.3	5.0	55.1	24.3	9.2

주) 백분율은 다중응답수를 사례수로 나누어 계산함.

- 귀농 가구의 경우, 남녀 모두 현재의 거주지가 연고지여서 선택했다는 응답이 95% 내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거지 확보 용이가 여성 27.6%, 남성 22.7%, 교육·생활여건 양호가 여성 21.3%, 남성 18.0%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귀농귀촌지 선택에서 경제적 요인, 주택 및 토지가격, 대도시 접근성 및 교통, 주거정보, 교육 여건 등이 주요하며(이원석 외 2021; 우성호·이성근 2015), 이 중 대도시 접근성이 가장 결정적(우성호·이성근 2015)이라는 분석과 달리, 압도적으로 연고지 우선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귀농을 결심한 이유가 농업 종사 외 여러 이유가 있음에도 지역 선택에서는 연고지 여부가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귀농 이유와 지역 선택 기준이 반드시 상응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 실태조사에서는 연고지가 여성 자신의 연고지인지 남편의 연고지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남성 중심성 때문에 남편의 연고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에 더해 ‘거대한 시집’에의 적응이라는 어려움이 가중된다(성지혜 2013). 여성은 귀농 이유의 실현보다 남편의 연고지에서의 적응이 더 중요 사항이 될 수 있어서 귀농 후 삶의 만족이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 무엇보다 여성농업인, 농촌 사람으로의 존재 이전이 자기주도적이기보다 남편의 생애 선택과 기획, 자원에 구속되어 있어서(이경아 2005) 귀농 여성의 ‘농업인되기’는 완료되기 어려운 과업이기 쉽다(진명숙·박성정 2012; 박성정 외 2012).
- 귀촌 가구의 지역 선택 이유는 한, 두 가지로 집약되지 않고 연고지, 주거지 확보, 교육·생활 여건, 생활비·지가, 자연환경 등 다양한 여건들이 고르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는 연고지보다 주거지 확보의 용이성을 지역 선택에서 더 고려하는 반면, 남성은 연고지로의 귀촌이 가장 큰 이유인 차이가 있다.

〈부록 표 11〉 가구주 성별에 따른 귀농·귀촌지 선택 이유(1+2순위)

단위: 명, %

		사례수	연고지	교육생활 여건 양호	생활비, 지가 저렴	주거지 확보 용이	귀농·귀촌 정책	농업여건 양호	자연환경 우수	귀농 귀촌인 다수
귀농	여성	201	94.5	21.3	17.5	27.6	4.7	7.4	16.0	2.0
	남성	1,389	96.7	18.0	13.3	22.7	6.1	15.5	14.8	2.6
귀촌	여성	314	41.9	30.7	41.0	47.0	6.1		21.8	3.1
	남성	987	53.5	33.2	30.8	41.2	8.6		20.7	4.7

주) 백분율은 다중응답수를 사례수로 나누어 계산함.

2) 귀농·귀촌 정보 획득과 교육

○ 귀농, 귀촌 가구주들의 72.2%~86.9%는 귀농·귀촌 정보를 가족·지인에게서 얻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귀촌 여성가구주들의 가족·지인 의존이 다른 집단보다 높다. 그 다음으로 귀농 여성가구주들은 대중매체 44.1%, 정부 등 관련 기관 27.0%, 귀농귀촌 교육 22.2% 순으로 정보를 얻고, 남성가구주들은 대중매체 35.1%, 정부 등 관련 기관 32.9%, 귀농귀촌 교육 30.3% 순으로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귀촌 여성가구주들의 정보 획득 경로는 대중매체 62.8%, 정부 등 관련 기관 18.3% 순이고 남성가구주들의 정보 획득 경로는 대중매체 53.7%, 정부 등 관련 기관 23.2%, 귀농귀촌 교육 15.5% 순으로 나타났다.

○ 귀농, 귀촌 모두 사적 연결망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공공 기관 혹은 교육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 비율은 귀농 남성가구주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고, 여성가구주들과 귀촌 남성가구주는 대중매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박람회 등의 정보 제공 기능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귀농귀촌 정보의 유용성이 신뢰성보다는 접근성에 있고, 사적 연결망이나 대중매체 등 접근성이 높은 경로에의 의존은 여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록 표 12>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귀농·귀촌 정보 획득 경로(1+2순위)

단위: 명, %

		사례수	정부 등 관련기관	가족 또는 지인	대중매체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 관련 서적	귀농귀촌 박람회
귀농	여성가구주	196	27.0	75.1	44.1	22.2	3.6	3.8
	남성가구주	1,381	32.9	72.2	35.1	30.3	4.9	2.3
귀촌	여성가구주	313	18.3	86.9	62.8	7.1	2.3	1.7
	남성가구주	983	23.2	78.3	53.7	15.5	8.0	1.7

주) 백분율은 다중응답수를 사례수로 나누어 계산함.

○ 가족의 귀농·귀촌 교육 이수 비율은 가구주의 성별 차이보다 귀농과 귀촌 가구 간의 차이가 월등히 크다. 귀농 여성가구주의 44.8%, 남성가구주의 61.0%가 가족이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귀촌 가구는 여성가구주 가구 12.4%, 남성가구주 가구 25.2%만이 귀촌 교육을 이수하였다. 귀농, 귀촌 각각에서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교육 이

수 비율이 남성보다 낮다. 귀농 교육의 경우 오프라인 교육 이수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높는데 비해 온라인 교육과 인터넷 이수 비율은 낮으며, 성별 차이는 거의 없다.

○ 가족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이유로 가구주들은 교육에 대해 몰랐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고, 여성가구주들의 응답률이 남성보다 귀농은 24.2%p, 귀촌은 12.5%p 높다. 교육 정보 부족 다음으로 남성가구주들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제시한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적합 과정이 부재하다거나 내용이 도움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모든 집단에서 낮아, 교육 정보 부족이 교육 참여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며, 이는 여성들에게 더 문제적임을 알 수 있다.

〈부록 표 13〉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귀농·귀촌교육 경험

단위: 명, %

		귀농		귀촌		
		여성가구주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남성가구주	
교육 이수	사례수	203	1,397	315	991	
	이수 비율	전체	44.8	61.0	12.4	25.2
		온라인 교육	19.1	21.7		
		오프라인 교육	42.2	58.1		
		인터넷	12.3	15.0		
교육 미이수 이유	사례수	108	527	268	724	
	교육에 대해 몰랐음	64.8	40.6	60.8	48.3	
	시간 부족	13.9	27.5	16.0	24.7	
	적합 과정 부재	7.4	14.2	10.4	12.4	
	내용이 도움되지 않음	13.9	17.3	12.7	14.0	
	교육비용	-	0.4	-	0.6	

주 1) 귀농 가구의 교육이수 비율 전체는 한 가지라도 교육을 이수한 가구의 비율임.

2) 귀촌 가구의 교육 현황은 교육 유형별로 조사하지 않고 단일문항으로 조사함.

○ 귀농 가구주들은 남녀 모두 교육콘텐츠 개발, 현장실습 연계 강화, 수준별 강좌개설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요구하였고, 귀촌 가구주들의 교육 개선 요구는 교육콘텐츠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모든 집단에서 교육의 질적 제고와 관련한 개선 요구가 높다. 그 외에, 응답률 자체는 높지 않으나, 귀농 여성은 지리적 접근성 확대를, 귀농 남성은 강사의 전문성 증대를, 귀촌 여성은 교육비용 지원을, 귀촌 남성은 현장실습 연계 강화를 상대적으로 더 요청하였다. 여성들은 교육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남성보다 높고, 남성들은 교육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여성들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부록 표 14〉 가구주 성별에 따른 귀농·귀촌 교육 개선 사항

단위: 명, %

		사례수	교육 콘텐츠 개발	수준별 강좌개설	강사 전문성 증대	교육비용 지원	현장실습 연계 강화	교육 시간대 다양화	지리적 접근성 확대	온라인 교육 확대
귀농	여성	196	27.6	15.8	4.6	5.1	24.5	6.6	13.3	2.6
	남성	1,353	29.5	16.9	10.7	5.1	20.8	8.0	7.3	1.6
귀촌	여성	307	48.9	18.9	1.6	12.1	5.2	3.3	4.6	5.5
	남성	977	40.5	16.0	4.9	5.8	12.8	7.9	7.1	5.0

3) 본격적 귀농·귀촌 준비

○ 귀농·귀촌의 평균 준비 기간은 귀농 여성가구주 가구가 2.32년으로 가장 길고, 귀농 남성가구주 가구 2.19년, 귀촌 남성가구주 가구 1.52년, 귀촌 여성가구주 가구 1.05년 걸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준비 내용으로는 귀농과 귀촌 가구주 모두 주거 및 농지 탐색과 정착 지역 탐색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금 조달, 귀농교육·체험(귀농), 일자리 마련(귀촌)이 20%대에서 유사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다. 자녀 교육환경(귀촌) 관련 준비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중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 가구주 가구가 적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부록 표 15〉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귀농·귀촌 준비 기간 및 준비 내용(1+2순위)

단위: 명, %

		사례수	평균 준비 기간(년)	준비 내용(1+2순위)					
				정착지역 탐색	주거·농지 탐색	자금 조달	귀농 교육·체험	자녀교육 환경	생계유지 수단(일자리)
귀농	여성	200	2.32	59.8	70.7	24.0	29.6		
	남성	1,350	2.19	58.8	72.9	22.7	34.7		
귀촌	여성	314	1.05	64.2	83.7	21.4		2.8	24.6
	남성	987	1.52	62.5	75.5	29.3		7.1	20.2

주) 백분율은 다중응답수를 사례수로 나누어 계산함.

○ 귀농·귀촌 가구의 평균 정착자금은⁸¹⁾ 귀농 남성가구주 가구가 1억 8,421만 1천 원으로 가장 많고, 귀농 여성가구주 가구 1억 7,333만 원, 귀촌 남성가구주 가구 1억 5,278만 1천 원으로, 이 세 집단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정착자금을 사용하였으나, 귀촌 여성가구주 가구의 정착자금은 9,275만 7천 원으로 가장 적다.

○ 정착자금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귀농 가구는 5억 미만까지 구간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가구주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귀촌 남성가구주 가구도 귀농 가구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귀촌 여성가구주 가구는 44.3%가 5천만 원 미만에 속해 있어 정착자금이 가장 적게 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16〉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정착자금 액수

단위: 명, 만 원, %

		사례수	평균 정착자금	5천만 미만	5천만 ~ 1억 미만	1억 ~ 2억 미만	2억 ~ 3억 미만	3억 ~ 5억 미만	5억 이상
귀농	여성	202	17,333	22.0	16.6	22.9	17.1	16.1	5.4
	남성	1,391	18,421.1	20.7	13.1	25.6	16.8	16.9	7.0
귀촌	여성	313	9,275.7	44.3	19.4	21.0	7.3	7.0	1.0
	남성	979	15,278.1	22.9	16.4	23.4	21.0	13.6	2.7

○ 앞에서 귀농·귀촌 준비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응답률이 20% 대로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저축, 자산 등이 주요 자금 조달처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귀농과 귀촌 모두 가족의 저축액과 자산 처분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는데, 귀촌 여성가구주들은 저축, 귀촌 남성가구주들은 자산 처분 응답률이 타 집단보다 높다. 그 외, 귀농 남성가구주들은 퇴직금으로 자산을 마련한 경우가 비교적 높고, 귀촌 여성가구주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상당한 정도의 자산 보유가 귀농·귀촌의 전제 조건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자산 보유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 귀농·귀촌을 선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정부 지원금 응답률은 매우 낮는데, 이것이 수혜 여부와 연관되는지 아

81) 응답값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평균이 과도하게 왼쪽으로 쏠린 편포가 확인되었다. 결과를 왜곡할만한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해 Z-score로 변환 후 ±3을 벗어난 값들을 제거하고 분석하였다. 제거된 값들은 귀농은 15억 이상, 귀촌은 6억 2천만 원 이상이다.

니면 지원금 액수가 적어 정착자금으로서 의미가 없음을 나타내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귀농 가구가 영농 및 주거 기반 확보에 정착자금을 주로 사용한 데 비해, 귀촌 가구는 주택과 생활비에 주로 사용하였고 응답률의 성별 차이는 적다.

〈부록 표 17〉 가구주 성별에 따른 정착자금 조달방법 및 사용처(1+2순위)

단위: 명, 만 원, %

	사례수	정착자금 조달방법							정착자금 사용처(1+2순위)				
		퇴직금	가족의 저축	자산 처분	상속, 가족 도움	금융권 대출	정부 지원금	농지, 토지 구입	주택 마련	생활비	영농 시설, 가족 사육 등	창업비	
귀농	여성	203	3.9	49.3	27.6	10.3	6.9	2.0	65.6	61.6	32.6	31.4	
	남성	1,385	13.9	42.1	27.9	4.8	7.4	3.9	56.7	57.9	32.4	46.0	
귀촌	여성	315	4.1	52.4	19.7	15.9	6.0	1.9	6.4	86.2	84.9	2.6	9.3
	남성	990	9.4	38.6	33.0	10.1	7.9	1.0	16.1	83.4	71.5	7.9	10.5

주) 다중응답의 백분율은 응답수를 사례수로 나누어 계산함.

○ 가족의 귀농·귀촌 준비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집단에서 평균 3.3점 이상으로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귀농 여성가구주가 다른 집단에 비해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귀농, 귀촌 모두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주보다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높다.

〈부록 표 18〉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귀농·귀촌 준비과정 만족도

단위: 명, 점, %

	귀농 가구					귀촌 가구				
	사례수	평균*	불만족	보통	만족	사례수	평균*	불만족	보통	만족
여성	205	3.30	10.2	50.7	39.0	314	3.34	3.2	59.6	37.3
남성주	1,395	3.40	5.4	49.8	44.8	989	3.43	2.9	52.4	44.7

주 1) 평균 점수는 5점에 가까울수록 만족함.

2) *는 평균의 차이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

□ 가계 경제 및 가구 경제활동

1) 가구소득 및 생활비

○ 귀농 여성가구주의 평균가구소득은 2,418만 원, 남성가구주의 평균가구소득은 3,472만 원으로 1천만 원 가량 차이가 나며, 귀촌 여성가구주의 평균가구소득은 3,119만 원, 남

성가구주는 3,604만 원으로 500여만 원 차이가 난다. 남성가구주 가구는 귀농과 귀촌 간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여성가구주 가구는 귀농보다 귀촌 가구의 소득이 높다. 그러나 가구 규모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산술평균만으로는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부록 표 19>는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보정한 ‘가구균등화소득(=가구소득/√가구원수)’을 비교한 결과다.

- 귀농 가구는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가구균등화소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귀촌 가구는 가구균등화소득뿐만 아니라 농업소득, 비농업소득의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다. 귀농 여성가구주의 가구균등화 소득은 다른 집단의 78.2%~78.9% 수준으로 낮고, 농업소득은 귀농 남성가구주의 54.7%에 불과하다. 비농업소득의 성별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귀농 여성가구주의 낮은 가구소득은 낮은 농업소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귀농 가구는 여성가구주 27.5%, 남성가구주 32.6%만이 귀농 전에 비해 가구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귀촌 가구는 이보다 약간 더 높은 42.4%, 36.5%가 소득이 증가하였다. 가구균등화 소득 및 귀농 이후 소득 증가 비율을 종합했을 때 집단 간 차이는 성별보다 여성 내부의 귀농, 귀촌 간 차이가 크다.

<부록 표 19>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구균등화 소득 및 귀농 전 대비 소득증가 가구 비율

단위: 명, 만 원, %

	귀농 가구					귀촌 가구				
	사례수	가구 균등화 소득***	가구 균등화 농업소득 ***	가구 균등화 비농업 소득	귀농 전 대비 소득 증가 가구 비율	사례수	가구 균등화 소득	가구 균등화 농업소득	가구 균등화 비농업 소득	귀농 전 대비 소득 증가 가구 비율
여성가구주	204	1,938.6	783.4	1,155.2	27.5	316	2,457.1	396.4	2,060.7	42.4
남성가구주	1,392	2,475.6	1,431.6	1,043.3	32.6	990	2,477.7	381.5	2,096.2	36.5

주) *** 는 평균의 차이가 0.001 수준에서 유의함.

- 귀농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여성가구주 가구 183만 원, 남성가구주 가구 198만 원으로 성별 차이가 거의 없고, 귀촌 가구의 경우는 여성가구주 가구 161만 원, 남성가구주 가구 203만 원으로 40여만 원 차이가 난다. 귀촌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남성가구주 들과 유사한데, 생활비는 가장 적다.

○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균등화 생활비로 집단 간 비교를 한 결과, 귀농, 귀촌 모두 귀농 전 생활비는 가구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만 귀농 이후 생활비는 성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집단 모두 90% 내외의 가구가 이주 후 생활비가 감소하였다. 이주 후 소득 증가 가구 비율이 최소 27.5%(귀농 여성) 이상인데, 생활비가 증가한 가구는 13.6%(귀촌 남성) 이하여서 귀농·귀촌 가구의 가계경제 변화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귀농 여성가구주 가구는 소득은 가장 적고 생활비는 가장 많아서 4집단 중 가계경제가 가장 좋지 못한 편이다.

〈부록 표 20〉 가구주 성별에 따른 월평균 가구균등화생활비

단위: 명, 만 원, %

	귀농 가구				귀촌 가구			
	사례수	귀농 전*	귀농 후	귀농 전 대비 생활비 감소 가구비율	사례수	귀농 전*	귀농 후	귀농 전 대비 생활비 감소 가구비율
여성가구주	202	162.8	148.6	91.1	314	144.0	131.1	92.4
남성가구주	1,394	174.0	140.8	91.9	990	157.1	136.7	86.4

주) *는 평균의 차이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

○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생활비의 주된 사용처로 식비와 주거광열비 비율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귀농 가구는 교통·통신비와 보건 의료비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귀촌 가구는 문화여가비 사용 비율이 높다. 귀농 여성가구주의 보건의료비 사용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고, 귀촌 여성가구주는 문화여가비 사용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다. 문화여가비 및 교육비 사용 비율은 귀농 여성가구주 가구가 가장 낮아서 다른 집단에 비해 생활비 사용처가 기본생활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부록 표 21〉 가구주 성별 생활비 주 사용처(1+2순위)

단위: 명, 만 원, %

	귀농 가구							귀촌 가구						
	사례수	식비	주거 광열	보건 의료	문화 여가	교육비	교통 통신	사례수	식비	주거 광열	보건 의료	문화 여가	교육비	교통 통신
여성가구주	204	63.1	59.9	21.2	9.9	7.8	33.9	314	72.9	50.3	15.2	29.7	11.6	18.6
남성가구주	1,397	62.7	50.9	19.2	13.9	14.7	35.0	991	75.2	53.6	12.9	18.6	16.3	21.4

주) 백분율은 다중응답수를 사례수로 나누어 계산함.

- 모든 집단에서 소득액이 높을수록 소득만족도는 높아진다. 생활비 규모는 남성가구에 한해서만 소득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귀농·귀촌 전후의 소득 증가는 귀촌 가구에 한해서 소득만족도와 연관성이 있다. 이 결과는, 귀농·귀촌 여성 다수가 절약, 불편하기 살기를 농촌살이의 덕목으로 일찌감치 수용한다는 선행연구 주장을 지지해준다.

〈부록 표 22〉 가구주 성별에 따른 소득, 생활비와 가구소득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연령 통제)

		사례수	가구균등화 소득	귀농·귀촌 전후 소득 증감액	가구균등화 생활비
가구소득 만족도	귀농 여성	200	.241***	.065	.056
	귀농 남성	1,390	.294***	.046	.086**
	귀촌 여성	311	.344***	.223***	.112
	귀촌 남성	987	.335***	.228***	.199***

주 1) *** p<0.001, ** p<0.01, * p<0.05.

2) 가구소득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 ~ 매우 만족 5로 측정.

2) 영농활동

- 여성가구의 첫 영농형태는 농지 구입을 통한 자영 비율이 62.8%로 가장 높고, 승계 혹은 부모와의 공동영농이 29.0%, 농지 임차가 24.4%인데 비해, 남성가구는 이 세 유형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다. 토지나 경영체의 아들 상속 습속 때문에 딸이 영농 승계나 공동경영을 하는 것이 어렵고, 영농 능력에 대한 신뢰 획득이나 인적 네트워크가 남성보다 취약한 여성이 농지를 임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영농 규모 확대를 감당할만한 영농 역량이나 사회적 연결망이 남성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임차를 꺼려할 수 있다. 귀농 여성가구가들이 농지를 보유한 자영농으로 출발하는 비율이 높은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록 표 23〉 귀농가구의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첫 영농형태(1+2순위)

단위: 명, %

	사례수	승계· 부모공동	농지구입	농지임차	실습·보조 자로 취업	다른 이와 동업	일용 농업노동	텃밭
여성가구주	202	29.0	62.8	24.4	1.8	1.3	4.7	12.6
남성가구주	1,394	39.4	49.8	32.4	2.9	2.4	3.2	12.9

주) 백분율은 다중응답수를 사례수로 나누어 계산함.

○ 여성가구주들이 농지를 구입하여 영농을 시작하는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농지 규모는 남성보다 현저히 적다. 여성가구주의 농지 전체 평균은 4,805.9㎡로 남성가구주의 평균 농지 면적(10,498.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작 면적도 여성이 남성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여성은 밭을 제외하고 임차보다 자작 면적이 약간 더 넓은 데 반해, 남성은 과수원을 제외하고 임차 면적이 자작의 2배 가깝게 넓다. 시설 면적 역시 여성가구주의 면적이 남성보다 적는데, 자작 면적은 비슷하지만 임차 시설 면적이 남성가구주가 월등히 넓다. 축산의 경우는 여성가구주 사례가 너무 적어 규모를 비교하기 어렵다.

〈부록 표 24〉 귀농가구의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농지, 가축, 시설 면적

단위: 명, ㎡

		여성가구주				남성가구주			
		사례수	전체평균	자작	임차	사례수	전체평균	자작	임차
농지	전체	191	4,805.9	4,415.2	3,926.4	1,244	10,498.9	7,865.6	11,129.2
	논	54	3,915.6	4,112.9	2,997.1	465	10,172.8	7,135.3	12,469.2
	밭	137	3,559.7	3,196.5	3,751.7	807	5,030.8	3,673.7	7,012.8
	과수원	36	4,664.8	4,279.8	4,121.3	314	9,989.8	9,295.3	8,125.8
	초지/임야	7	7,372.0	10,088.6	2,214.7	69	16,574.9	15,058.9	23,054.5
시설	전체	52	972.2	1,002.5	829.5	446	1,248.3	1,036.6	1,360.3
	생산(재배)	38	1,193.6	1,392.6	829.5	341	1,521.5	1,332.9	1,529.8
	가공	-	-	-	-	11	266.2	296.5	113.9
	저장	13	214.6	214.6	-	123	219.7	182.8	353.2
	기타	3	810.3	810.3	-	12	664.1	462.1	2,644.6

자료: 김이선(2021).

○ 여성가구주는 영농 기술·경험 부족 62.0%, 자금 부족 52.5%, 건강·체력 부족 31.4%로 영농활동 수행이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남성가구주는 자금 부족 67.7%, 영농 기술·경험 부족 55.3%를 영농활동 수행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남녀 모두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역량 강화와 영농 기반·운영 자금 확보를 필요로 하는 점은 공통되나 여성에게는 노동 부담 경감이 중요 문제가 되는 차이가 있다.

〈부록 표 25〉 귀농가구의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영농활동 수행 어려움(1+2순위)

단위: 명, %

	사례수	자금 부족	영농기술·경험 부족	건강·체력 부족	지역 농가와 갈등	가족과의 갈등	판로 부족	천재 지변	높은 가격 변동성	농업시설 부족
여성	203	52.5	62.0	31.4	3.9	0.9	18.9	6.1	10.5	6.3
남성	1,389	67.7	55.3	18.1	2.0	1.9	19.5	7.9	13.5	4.6

주) 백분율은 다중응답수를 사례수로 나누어 계산함.

○ 귀농인들의 90% 가까이는 영농활동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주로 선배, 동료, 마을주민과 상담을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마을이장 상담, 지역 기관 활용은 20% 내외로 비교적 낮고 전문 컨설턴트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영농 관련 도움이 낱씨, 작목, 토질 등 매우 현장 중심적 경험과 지식에 기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영농 교육과 컨설팅도 현장 중심적인 체계와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록 표 26〉 귀농가구의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영농활동 어려움 해결방법(1+2순위)

단위: 명, %

	사례수	선배·동료 상담	지역주민 상담	마을이장 상담	인터넷 검색 등	지역기관 활용	전문컨설턴트 활용	한 것 없음
여성가구주	203	43.7	52.5	22.3	17.2	19.9	3.4	10.3
남성가구주	1,389	51.3	52.9	20.6	15.6	21.5	1.7	10.6

주) 백분율은 다중응답수를 사례수로 나누어 계산함.

○ 여성가구주의 농산물 판로는 소비자 직거래가 5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역농협 23.5%, 농산물 공판장 12.8% 순이다. 남성가구주의 농산물 판로도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성보다 소비자 직거래 비율이 낮고 지역농협과 공판장 비율이 약간 높은 차이가 있다. 여성가구주가 남성보다 마케팅과 홍보에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록 표 27〉 귀농가구의 가구주 성별에 따른 주요 판로

단위: 명, %

	사례수	지역농협	영농법인/영농조합	대형마트 수의매매	포전매매	소비자 직거래	로컬푸드 매장	농산물 공판장
여성가구주	179	23.5	3.4	0.6	2.2	54.2	3.4	12.8
남성가구주	1,271	29.8	6.2	1.0	2.3	38.8	2.1	19.7

○ 귀촌 가구 중 79.8%가 귀촌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데 그 비율이 여성가구주 가구는 88.9%로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12%p나 높다. 이들 중 향후 농업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는 3.9%, 남성가구주 가구는 14.9%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영농 종사 및 영농 전환 의향이 여성가구주 가구보다 월등히 높다.

〈부록 표 28〉 귀촌 가구의 가구주 성별에 따른 농업종사 경험 및 향후 농업종사 의향

단위: 명, %

	사례수	종사한 적 있으나 현재는 종사 안 함	현재 종사하고 있음	한 번도 종사한 적 없음	향후 농업 종사 의향 있음
여성가구주	315	1.9	9.2	88.9	3.9
남성가구주	991	2.0	21.1	76.9	14.9

2) 가족원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 귀농 가구원들이 농업 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 비율은 여성가구주 가구가 53.4%로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7.8%p 높다.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참여 분야는 임시직 취업, 정규직 취업, 농산물 직거래, 자영업 순으로 높고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 다만 남성가구주 가구원들이 비농업 분야의 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14.6%로 여성가구주 가구보다 8.7%p 높은 차이가 있다. 귀촌 가구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 비율은 여성가구주 가구가 84.1%, 남성가구주 가구가 90.2%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정규직 취업과 자영업 비율이 높고, 남성가구주 가구는 정규직 취업, 농업, 자영업 비율이 높다.

〈부록 표 29〉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 및 분야

단위: %

	성별	경활 참여 비율	경제활동 분야									
			농업	가공	직거래	농촌 관광	농업 임금 노동	자영업	정규직 취업	임시직 취업	비농업 일용직	사업외 소득
귀농	여성	53.4		5.0	21.0	2.5	9.5	19.0	21.8	26.8	5.9	11.5
	남성	45.6		3.0	22.7	1.5	11.6	17.2	23.6	23.9	14.6	9.0
귀촌	여성	84.1	11.0	0.6	6.1	2.5	1.9	21.6	46.8	12.9	2.6	
	남성	90.2	22.8	1.1	3.4	1.3	3.3	22.2	43.2	9.3	4.6	

○ 귀농 가구원들이 농업 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소득 증대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성가구주가 남성에 비해 소득 증대 때문이라는 응답율이 약간 더 높다. 남성 가구주의 경우 재능·경력 활용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여성보다 약간 더 높다.

〈부록 표 30〉 귀농 가구의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농업 외 경제활동 참여 이유

단위: 명, %

	사례수	소득 증대	농사일이 힘들어서	재능·경력 활용	사회생활 충족	주변 권유
여성가구주	104	86.5	1.0	8.7	2.9	1.0
남성가구주	626	81.8	2.4	10.9	2.6	2.4

○ 가족의 경제활동 수행 어려움으로 귀농 가구주들은 일 기회·정보 부족, 능력 부족, 시간 부족, 자본금 부족을 주로 꼽았고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응답율의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귀촌 가구주들의 인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가구주들은 능력 부족, 교통 등 인프라 부족, 일 기회·정보 부족, 인맥 부족 순으로 응답율이 높고, 남성가구주들은 일 기회·정보 부족, 능력 부족, 인프라 부족 순으로 어려움을 꼽았다. 여성가구주들이 인맥 부족을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남성보다 높다.

〈부록 표 31〉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경제활동 수행 어려움

단위: 명, %

		사례수	능력 부족	시간 부족	일기화·정보 부족	인맥 부족	자본금 부족	인프라 부족	시장 협소
귀농	여성	94	27.7	21.3	24.5	9.6	16.0	1.1	0.0
	남성	564	23.0	27.3	25.4	5.0	15.6	2.7	0.0
귀촌	여성	292	25.0	7.5	16.4	15.4	8.6	18.5	8.6
	남성	933	19.7	14.1	20.8	7.9	10.1	18.5	8.8

□ 지역사회 참여 및 귀농·귀촌 생활 만족도

1) 지역사회 참여

○ 지역사회 참여의 모든 유형에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참여 비율이 남성보다 낮고, 귀촌 가구가 귀농 가구보다 참여 비율이 낮다. 귀농 여성가구주 가구의 대부분은 마을회의·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농업인단체 참여 비율도 42.9%로 높은 편이나 일반 사회단체와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 비율은 각각 35.3%, 32.2%로 낮다. 반면 귀농 남성가구주 가구는 모든 유형의 참여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월등히 높다. 귀촌 여성가구주 가구가 전체 중에서 참여 비율이 가장 낮는데, 특히 지역의 농업인단체와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

비율이 22.0%, 27.4%로 현저하게 낮다. 마을회의·행사 참여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는 높지만 이 역시 44.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귀촌 남성가구는 마을회의·행사에 69.0%가 참여하지만 그 외 모임/단체 참여 비율은 30% 대로 낮은 편이다.

- 귀농 가구주들은 모든 유형의 모임/단체에서 참여 주도성이 높으나, 농업인단체에 참여하는 귀농 여성가구주들의 주도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귀촌 가구주들은 전반적으로 참여 주도성이 낮은 편인데 특히 여성들은 참여는 하더라도 주도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견을 개진한다는 비율은 남성가구가 가구와 유사하게 높은 편이다.
- 요약하면, 귀농 남성가구가 가장 활발하게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귀농 여성가구는 마을과 농업인단체, 귀촌 남성가구는 마을 활동 중심으로 참여를 하며, 귀촌 여성가구는 참여율이 가장 낮다. 귀농 가구주들은 참여율도 높고 참여 정도도 매우 적극적이지만 귀촌 가구주들은 참여하더라도 의견을 개진하지 않거나 가끔 참여하는 등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록 표 32〉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단위: 명, %

		귀농 가구						귀촌 가구					
		사례수	참여 비율	참여 정도				사례수	참여 비율	참여 정도			
				주도 참여	의견 개진	의견 미개진	가끔 참여			주도 참여	의견 개진	의견 미개진	가끔 참여
마을 행사	여성	204	80.4	86.0	3.7	4.9	5.5	314	44.3	15.1	18.0	36.0	30.9
	남성	1,398	89.6	89.5	4.1	2.8	3.6	992	69.0	24.3	21.6	25.4	28.7
농민 단체	여성	203	42.9	58.1	11.6	15.1	15.1	314	22.0	7.2	29.0	27.5	36.2
	남성	1,396	65.0	71.5	9.7	10.9	7.9	991	34.8	21.4	25.5	24.3	28.7
일반 단체	여성	204	35.3	75.4	9.2	7.7	7.7	315	30.5	11.5	22.9	37.5	28.1
	남성	1,397	52.0	75.6	9.4	7.0	8.1	992	38.8	14.0	27.8	27.8	30.4
귀농 귀촌 모임	여성	205	32.2	70.3	10.9	6.3	12.5	314	27.4	7.0	30.2	24.4	38.4
	남성	1,397	47.3	76.5	9.1	7.7	6.7	991	33.9	11.9	29.8	32.1	26.2

- 가구주들이 인식하는 가구원들의 지역사회 참여 이유는 모든 집단에서 친목 도모가 가장 높다. 특히 마을회의·행사는 대부분이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차이를 보이는 경

우는 농업인단체 참여 목적에 대한 여성가구주들의 응답과 귀촌 여성가구주들의 귀농 귀촌인모임 참여 목적이다. 농업인단체에 참여하는 귀농 여성가구주들은 경제적 도움 획득과 주변의 권유 때문에 참여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귀촌 여성가구주들은 자아실현 목적이 높게 나타났다. 귀촌 여성가구주들은 귀농귀촌인모임에도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귀촌 여성가구주들이 경제적 도움 획득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일반사회단체다.

〈부록 표 33〉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이유

단위: 명, %

		귀농 가구						귀촌 가구					
		사례수	친목 도모	자아 실현	경제적 도움 획득	주변 권유	봉사에 관심	사례수	친목 도모	자아 실현	경제적 도움 획득	주변 권유	봉사에 관심
마을 행사	여성	164	86.0	3.7	4.9	5.5	0.0	140	75.0	6.4	10.0	7.1	1.4
	남성	1,250	88.2	4.0	2.8	3.5	1.4	683	83.9	6.6	5.3	2.6	1.6
농민 단체	여성	88	56.8	11.4	14.8	14.8	2.3	68	66.2	16.2	7.4	10.3	0.0
	남성	906	71.0	9.6	10.8	7.8	0.8	346	62.4	13.9	13.9	9.0	0.9
일반 단체	여성	71	69.0	8.5	7.0	7.0	8.5	95	66.3	7.4	16.8	7.4	2.1
	남성	724	73.6	9.1	6.8	7.9	2.6	384	65.6	13.5	7.3	11.5	2.1
귀농 귀촌 모임	여성	65	69.2	10.8	6.2	12.3	1.5	86	61.6	23.3	7.0	7.0	1.2
	남성	656	75.3	9.0	7.6	6.6	1.5	337	66.8	13.1	10.1	8.9	1.2

○ 여성가구주들이 남성보다 가족의 지역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4집단 모두 정보나 권유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은 비율이 높다. 여기에 더해 귀농 여성가구주들은 시간 부족, 건강·체력 부족 응답 비율이 높고, 귀촌 여성가구주들은 관심단체가 없다와 건강·체력 부족 응답 비율이 높은 편이다. 시간 부족은 남성가구주들의 응답 비율도 높은 편이다.

〈부록 표 34〉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수행에서의 어려움

단위: 명, %

		사례수	정보·권유 부족	시간 부족	건강·체력 부족	지역민 탓세	교통수단 부족	관심단체 없음	어려움 없음
		귀농	여성	204	18.6	16.2	15.7	5.9	8.3
	남성	1,385	17.0	15.5	8.6	6.7	2.7	6.1	43.3
귀촌	여성	311	17.7	10.0	14.1	3.9	6.8	21.2	26.4
	남성	988	19.5	13.7	5.7	5.0	9.5	10.7	35.9

○ 자신의 가족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분야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귀농 남성가구주가 47.9%로 가장 높고, 귀촌 여성가구주가 30.6%로 가장 낮다. 여성가구주들이 남성가구주보다 가족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10%p 이상 낮다. 기여 분야로 남성 가구주들은 공통적으로 기능·기술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귀촌 남성가구주는 컴퓨터·인터넷을 그 다음으로 꼽았다. 귀농 여성가구주는 상담·교육, 기능·기술을, 귀촌 여성가구주는 컴퓨터·인터넷, 문화·예술·체육을 많이 꼽았다. 그 외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분야로 의료·보건·복지에 귀농 여성가구주, 문화·예술·체육에 귀촌 남성가구주, 상품 기획·마케팅에 귀농, 귀촌 여성가구주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부록 표 35〉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지역사회 기여 분야

단위: 명, %

	사례수	있음	기여 분야						
			의료·보건·복지	기능·기술	문화·예술·체육	상품 기획·마케팅	컴퓨터·인터넷	상담·교육	
귀농	여성	203	34.0	17.4	20.3	11.6	18.8	7.2	24.6
	남성	1,387	47.9	8.0	37.2	10.1	12.8	17.2	14.8
귀촌	여성	314	30.6	10.4	9.4	25.0	17.7	28.1	9.4
	남성	989	41.9	12.6	26.8	17.6	8.9	22.2	11.8

2) 지역주민과의 관계

○ 귀농, 귀촌 가구주들은 남녀 모두 가족과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양호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귀농 가구주들의 70% 이상은 주민과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귀촌 가구주들은 여성 36.9%, 남성 57.1%가 좋다고 응답하여 귀농에 비해 주민과의 관계 인식이 낮다. 관계 인식의 평균값에서 귀농 가구주간의 성별 차이는 없으나 귀촌은 성별 차이가 있어서, 4집단 중 귀촌 여성가구주들의 주민과의 관계 인식이 가장 낮다.

〈부록 표 36〉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지역주민과의 관계 인식

단위: 명, 점, %

	귀농 가구					귀촌 가구				
	사례수	평균	나쁨	보통	좋음	사례수	평균***	나쁨	보통	좋음
여성가구주	204	3.94	3.4	23.0	73.5	314	3.42	3.8	59.2	36.9
남성가구주	1,397	3.98	1.1	22.4	76.5	992	3.65	1.3	41.6	57.1

주 1) 평균은 5점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좋음.

2) *** p<0.001.

○ 귀농, 귀촌 가구주들은 지역주민이 귀농귀촌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였는데, 귀농 가구주들의 점수가 귀촌 가구주들보다 높다. 지역주민이 귀농귀촌인에게 우호적인 정도, 소통하는 정도, 도움을 주는 정도 각각에 대해 귀농 가구주들은 남녀 모두 높게 평가하였고 성별 차이는 없으나 귀촌 가구주들의 점수는 귀농보다 모두 낮고 여성가구주의 점수는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다. 특히 지역주민의 소통, 경제적 도움 정도는 보통 수준의 3점에 머물러 있어, 귀촌 여성가구주들은 지역주민이 비교적 귀농귀촌인에게 우호적인 편이나 실제로 소통이나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는 그 정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 한편, 지역주민이 귀농귀촌에게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거나 간섭하는 정도는 모든 집단이 낮다고 평가했는데, 귀농 여성가구주들의 점수가 가장 낮고 귀농 남성가구주 점수가 가장 높다. 이는 여성보다 남성이 지역주민의 기대나 간섭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농 가구주들과 귀촌 남성가구주는 마을에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나 귀촌 여성가구주들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4집단 중 귀촌 여성가구주들의 지역사회 동화가 가장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37〉 가구주 성별에 따른 지역주민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태도 인식

단위: 명, %

	귀농 가구주		귀촌 가구주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지역주민이 귀농귀촌인에게 우호적임	3.43	3.47	3.13***	3.35***
지역주민이 귀농귀촌인과 소통함	3.42	3.46	3.07***	3.27***
지역주민이 귀농귀촌인에게 도움을 줌	3.38	3.39	3.06*	3.18*
지역주민이 귀농귀촌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기대함	2.63*	2.81*	2.63	2.68
지역주민이 귀농귀촌인에게 간섭함	2.62*	2.84*	2.68	2.70
마을공동체에 대한 소속감/동질감	3.15	3.24	2.93***	3.11***

주 1) 5점에 가까울수록 높게 인식함.

2) *** p<0.001, ** p<0.01, * p<0.05.

○ 귀농귀촌 가구주들이 인식하는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지역주민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태도들 및 귀농귀촌 가구주들의 마을공동체 소속감과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상관성이 있다. 〈부록 표 38〉은 연령을 통제, 즉 연령이 같다고 가정되도록 통계적 보정을 한 상태

에서 주민과의 관계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민과의 관계 인식은 지역주민이 귀농귀촌인에게 우호적인 정도와 가장 상관성이 높다. 즉, 귀농귀촌 가구주들이 느끼는 주민 관계 인식은, 지역주민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이라 느낄수록 좋아진다.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이 귀농귀촌인과 소통하는 정도, 도움주는 정도가 높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귀농귀촌 가구주들이 마을공동체에 소속감/동질감을 느낄수록 주민과의 관계 인식은 좋아지는데 그 상관성은 우호성보다는 낮다. 일부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데, 귀농, 귀촌 모두 남성가구주들에게서 지역주민이 귀농귀촌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주민과의 관계 인식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지역주민의 간섭 정도에 대한 인식은 주민과의 관계 인식과 상관성이 없다.

- 정리하면, 귀농귀촌 가구주들이 느끼는 주민과의 관계 인식은 한쪽의 태도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며, 그 중에서도 지역주민이 얼마나 우호적 태도를 갖는가가 가장 큰 상관성이 있다.

〈부록 표 38〉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과 지역주민과의 관계인식들 간의 상관관계(연령 통제)

	사례수	지역주민이 귀농귀촌인에게 우호적	지역주민이 귀농귀촌인과 소통 정도	지역주민이 귀농귀촌인에게 도움주는 정도	지역주민이 귀농귀촌인에게 경제적 도움 기대	지역주민이 귀농귀촌인에게 간섭	마을공동체 소속감/동질감
귀농여성	201	.421***	.380***	.407***	.115	-.133	.423***
귀농남성	1,394	.422***	.387***	.351***	.087**	-.038	.340***
귀촌여성	311	.417***	.395***	.394***	.090	.063	.301***
귀촌남성	989	.443***	.398***	.374***	.104**	.034	.376***

주) *** p<0.001, ** p<0.01.

3) 가족의 귀농·귀촌 생활 만족도와 계속 거주 의향

-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정도는 귀농보다 귀촌 가구주들에서 더 높다. 그러나 생활 영역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귀농 가구주들은 가구소득에 대해 불만족하며, 지역인프라는 귀농, 귀촌 가구주 모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불만족하는 정도는 귀농 여성가구주들이 가장 높다. 자연 환경은 모든 영역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지역 인프라는 가장 불만족하는 영역으로 나

타났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귀촌 가구주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데, 여성가구주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다.

〈부록 표 39〉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귀농·귀촌 생활 만족도

단위: 점

	귀농 가구						귀촌 가구					
	전반적 만족	가구 소득*	자연 환경	주거 환경	건강 증진	지역 인프라	전반적 만족	가구 소득	자연 환경	주거 환경*	건강 증진	지역 인프라
여성가구주	3.48	2.65	4.03	3.54	3.62	2.55	3.61	3.03	3.95	3.81	3.61	2.69
남성가구주	3.53	2.78	4.00	3.60	3.68	2.64	3.65	3.13	4.01	3.71	3.66	2.72

주 1) 매우 불만족 1 ~ 매우 만족 5로 측정. 5점에 가까울수록 만족함.

2) *는 평균 차이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

○ 전반적 생활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 간의 연령을 통제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 인식은 귀농 여성가구주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의 생활만족도와 매우 약한 상관성이 있고, 나머지 생활영역 만족도는 모든 집단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 중 지역 인프라 만족도가 가장 상관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관계수가 0.4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는 남성가구주에게서 나타나는데, 귀농 남성가구주는 가구소득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귀촌 남성가구주는 주거환경과 건강증진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여성가구주들의 귀농귀촌 생활만족도는 주민과의 관계인식과 거의 상관성이 없고, 귀농 여성가구주는 가구소득 만족도와, 귀촌 여성가구주는 자연환경 만족도와 상관성이 높은 편이다.

〈부록 표 40〉 귀농·귀촌 생활만족과 영역별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연령통제)

	사례수	지역주민관계	가구소득	자연환경	주거환경	건강증진	지역인프라
귀농여성	201	.115	.385**	.320**	.309**	.376**	.272**
귀농남성	1,393	.169**	.431**	.327**	.407**	.323**	.280**
귀촌여성	311	.140*	.349**	.391**	.335**	.265**	.328**
귀촌남성	989	.129**	.385**	.365**	.451**	.406**	.226**

주) ** p<0.01, * p<0.05.

○ 귀농귀촌 가구주의 대부분은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소수가 이주 의향을 갖고 있는데, 이 경우 다른 농촌 지역으로의 이주보다 도시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었다.

〈부록 표 41〉 가족의 계속 거주 의향에 대한 여성들의 연령별 인식

단위: 명, %

	귀농 가구					귀촌 가구			
	사례수	계속 거주	타 농촌 이주 농사	타 농촌 이주 비농사	도시 이주	사례수	계속 거주	타 농촌 이주	도시 이주
여성	204	94.6	0.5	0.5	4.4	314	86.0	0.3	13.7
남성	1,350	96.6	1.1	0.4	1.9	991	91.7	1.3	7.0

○ 이주 희망 사례수가 적은 귀농 여성가구주를 제외하고, 도시로의 이주 희망 이유를 살펴보면, 귀농 남성가구주는 소득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고, 귀촌 여성가구주는 생활환경 불편과 심리적 어려움, 귀촌 남성가구주는 자녀교육과 생활환경 불편 때문에 이주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았다.

○ 농업·농촌의 소득, 교육 및 생활여건의 불리함은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귀촌 여성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그동안 별다른 관심과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영역이다. 앞에서 살펴본 주민과의 관계 인식이나 생활 만족도를 종합해봤을 때 귀촌 여성들의 심리적 부적응은 물질적 요인이나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같은 직접적 문제로만 설명될 수 없다. 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의 실체와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과 그에 맞는 세심한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표 42〉 가구주 성별 도시 이주 의향 이유

단위: 명, %

		사례수	소득 부족	영농 실패	농업노동 부적응	주민 간 갈등	생활환경 불편	자녀 교육	심리적 어려움	가족원의 불만
귀농	여성	9	44.4	11.1	11.1	-	22.2	-	-	11.1
	남성	23	39.1	8.7	-	-	17.4	26.1	-	8.7
귀촌	여성	43	2.3		2.3	2.3	51.2	9.3	32.6	-
	남성	68	11.8		-	1.5	35.3	41.2	7.4	2.9

□ 정책 수혜 경험과 정책 욕구

1) 정책 수혜 경험

○ 중앙정부 정책과 지자체 정책을 합하여 귀농·귀촌 정책을 한 가지라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귀농 여성가구주 62.6%, 귀농 남성가구주 74.7%, 귀촌 여성가구주 25.9%, 귀촌 남성가구주 42.4%다. 귀촌 가구의 정책 수혜율은 귀농 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낮고, 여성가구주 가구의 정책수혜율은 남성가구주보다 월등히 낮다. 모든 집단에서 중앙보다 지자체 정책 수혜율이 높는데, 귀촌 여성가구주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정책 유형별로는 정보제공이 11.8%(중앙 정보제공-귀촌 여성)~54.3%(지자체 정보제공-귀농 남성)로 다른 정책에 비해 수혜율이 높은 편이다. 귀농 가구주들은 자금 지원, 시설 등 구입비 지원, 세제 지원 수혜율이 귀촌 가구주보다 높는데, 중앙정책 수혜율은 성별 차이가 거의 없으나 지자체의 자금 지원 및 구입비 지원 수혜율에서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귀촌 가구주들은 정보제공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 대해 남녀 모두 수혜율이 10% 미만으로 낮다.

○ 정책의 도움 정도에 대해 귀농귀촌 가구주들은 모든 정책별로 3.5점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중앙의 자금지원, 청창농 영농정착지원, 세제 지원, 지자체의 생활관련 지원 평가점수가 4점 내외로 높다. 귀농 여성가구주는 청창농 영농정착지원, 세제지원에 대해 귀농 남성가구주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고 지자체의 정착자금 지원은 남성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다. 귀촌 여성가구주 역시 지자체의 정착자금 지원의 도움도 점수가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귀촌 여성가구주의 중앙정책 도움도 점수는 남성보다 약간 더 높으나 지자체 정책 도움도 점수는 일관되게 남성보다 낮고 4집단 중에서 가장 낮다. 귀농 여성가구주도 지자체 정책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점수가 낮은 편이다.

〈부록 표 43〉 가구주 성별 귀농·귀촌 정책 수혜 여부 및 도움도

단위: %, 점

		정책 수혜 비율				정책 도움 정도			
		귀농		귀촌		귀농		귀촌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중양	귀농귀촌종합센터 정보제공	29.4	30.0	11.8	19.5	3.86	3.71	3.85	3.76
	자금지원	12.7	15.0	3.2	6.6	4.16	3.93	4.19	3.91
	청창농 영농정책지원	2.0	3.2	2.5	1.9	5.00***	4.31***	4.09	3.91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2.0	2.1	1.3	1.7	3.71	3.90	3.41	3.89
	세제 지원	26.0	29.4	6.4	8.7	3.89**	3.62**	4.02	3.87
지자체	정보제공	37.3	54.3	18.1	33.2	3.86	3.76	3.62	3.72
	정착자금 지원	17.2	20.2	2.5	7.7	3.49*	3.80*	3.13*	3.81*
	영농시설 등 구입비 지원	13.2	26.6	2.5	7.2	3.87	3.93	3.76	3.93
	생활 관련 지원	1.5	4.2	1.3	5.4	4.00	4.01	3.78	3.92
	관계형성 지원	5.9	6.5	1.9	6.0	3.68	3.63	3.55	3.66

주 1) 도움 정도는 전혀 도움 안됨 1 ~ 매우 도움됨 5로 측정. 5점에 가까울수록 도움이 됨.

2) *** p<0.001, ** p<0.01, * p<0.05.

○ 용자금과 보조금 수혜 비율은 귀농 가구주가 15.3% ~ 36.0%인데 반해, 귀촌 가구주는 5.3% ~ 9.4%로 차이가 크다. 귀촌 가구주는 수혜율 자체가 매우 낮아서 성별 차이도 거의 없지만, 귀농 가구주간에는 여성의 수혜율이 남성보다 8%p 이상 낮은 차이가 있다. 귀촌 여성가구주를 제외하고 평균 용자액은 1억 3천만~1억 6천만 원 사이이고 귀농 여성가구주의 용자액이 가장 많다. 보조금은 귀촌 여성가구주가 수혜율은 낮으나 평균 금액은 2천만 원 이상으로 가장 많고, 귀농 여성가구주가 1천만 원 정도로 가장 적다.

〈부록 표 44〉 가구주 성별 정책자금 수혜 비율 및 액수

단위: 명, %, 만 원

	사례수	귀농 가구주				귀촌 가구주				
		용자 수혜	자금 보조 수혜	용자액 평균	보조금 평균	사례수	용자 수혜	자금 보조 수혜	용자액 평균	보조금 평균
여성	203	15.3	27.2	15,351.7	1,079.0	286	5.3	5.3	9,328.3	2,048.5
남성	1,399	23.9	36.0	14,858.7	1,803.3	880	9.4	8.7	13,524.7	1,158.2

○ 귀농 가구주들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55% 이상이 농지·시설자금 지원이라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택자금 지원, 농지·일자리·주택 정보제공, 귀농·귀촌 홍보 및 교육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 외 정책에 대해서는 10% 이하로 응답율이 낮고 성별 간 차이도

거의 없다. 즉, 성별에 상관없이 귀농 가구주들의 정책 요구는 자금 지원이 중심이라 할 수 있다.

○ 반면, 귀촌 가구주들의 정책 요구는 특정 정책에 몰려있지 않고 다양하다. 각종 자금 지원과 정보 지원도 필요로 하지만 귀농 가구주들에 비해 생활 관련 지원, 관계형성 지원 관련 정책 요구가 높은 편이다. 응답값의 성별 차이는 크지 않지만, 여성들은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요구하는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가구주들은 자금 지원, 세제지원을 요구하는 응답율이 좀 더 높다.

〈부록 표 45〉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장 필요한 귀농·귀촌 정책(1+2순위)

단위: 명, %

		사례수	귀농 귀촌 홍보	농지·시설자금 지원	주택 자금 지원	귀농 귀촌 교육	인턴십	체류형 귀농 귀촌 지원	관계 형성 지원	생활 관련 지원	농지, 일자리, 주택 정보	상담, 컨설팅	세제 지원
귀농 가구	여성	204	18.3	55.7	36.3	18.6	7.5	1.7	4.3	7.2	30.1	11.9	3.6
	남성	1,391	18.1	60.3	40.0	13.6	7.3	8.4	5.9	7.4	22.7	9.0	3.8
귀촌 가구	여성	314	38.1	27.0		15.9	7.9	8.8	12.5	23.3	43.6	11.6	9.7
	남성	990	26.0	35.4		16.7	7.8	11.3	12.5	28.6	34.7	14.2	11.4

○ 확충이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귀농과 귀촌가구 간 차이보다 가구주의 성별 차이가 크다. 전반적으로 문화시설, 보건의료시설, 상업시설 요구도가 높은 것은 공통적이거나 여성들은 문화시설과 도서관 요구도가 남성에 비해 높고, 남성들은 초중고 교육기관 요구도가 여성보다 높다.

〈부록 표 46〉 가구주 성별에 따른 확충이 필요한 공공시설(1+2순위)

단위: 명, %

		사례수	국공립 어린이집	초중고 교육기관	보건의료 시설	사회복지 시설	문화 시설	도서관	마트 등 상업시설	체육시설, 경기장	공원
귀농 가구	여성	125	1.8	3.7	41.8	26.8	55.8	10.5	32.0	17.6	5.4
	남성	903	7.5	14.1	45.9	28.5	43.1	6.1	30.6	16.8	3.3
귀촌 가구	여성	312	6.6	10.9	32.3	23.6	62.4	15.1	23.0	12.6	7.7
	남성	982	9.4	12.5	38.5	32.1	48.0	9.7	24.9	16.0	5.7

- 확대가 필요한 공공서비스로 귀농, 귀촌 가구주 모두 문화체육 서비스, 일자리 지원, 교통 서비스를 응답한 비율이 높고, 양육 및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돌봄 관련 서비스와 교육, 상담·민원서비스 응답율은 낮은 편이다. 응답율 자체가 높지는 않으나, 임신·출산·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해 귀농 여성가구주의 응답율이 다른 집단보다 현저하게 낮고, 상담·민원 서비스는 귀농 남성가구주 응답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차이가 있다.

〈부록 표 47〉 가구주 성별에 따른 확대가 필요한 공공서비스(1+2순위)

단위: 명, %

		사례수	임신, 출산, 양육지원	노인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일자리 지원	문화체육 서비스	교통 서비스	교육 서비스	상담, 민원 서비스
귀농	여성	127	3.4	22.7	15.4	45.9	54.0	32.9	13.8	8.6
	남성	911	11.4	22.6	10.7	37.5	53.5	29.0	17.6	12.2
귀촌	여성	313	15.3	14.9	10.9	36.2	53.7	43.4	14.5	8.0
	남성	982	15.0	17.5	8.6	35.1	55.4	43.1	17.9	5.0

3. 요약 및 시사점

- 귀농·귀촌 여성의 중요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있지도 않은 듯하다. 귀농·귀촌 여성 관련 통계는 생산된 바가 없고, 정책은 ‘귀농·귀촌인’과 ‘청년’의 범주에서 여성과 남성을 동일한 존재로 간주한다. 귀농·귀촌 여성의 경험과 욕구를 ‘남성 가정’이 대변할 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된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도 많지 않다. 2000년대 이후 발표된 연구물은 10여 편 남짓이 전부이다. 그러니, 귀농·귀촌 여성에 대해 알려진 것들이 별로 없다. 따라서 귀농·귀촌 정책에서 여성에 주목할 필요가 무엇인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는 모호하게 남은 채로 여성 정책의 필요성이 당위적 수준에서 주장되고 있는 형국이다.

- 이에 이 연구는 ‘귀농·귀촌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귀농·귀촌 가구주 성별에 따른 정착 경험과 정책 욕구의 차이를 분석하여, 여성의 귀농·귀촌 경험과 정책 욕구가 무엇인지, 여성의 이주와 농촌살이가 농촌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가늠하고자 하

였다. 개인의 경험이 아닌 가구의 경험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귀농·귀촌 여성에 대한 분석은 아니라는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 선행연구들에서는, 여성의 귀농·귀촌이 가족의 삶에 대한 총체적 고려와 함께 생태적 가치 실현, 농업의 발전, 보살핌과 돌봄 가치가 중심이 되는 비자본주의적 경제 실현 등 다양한 동기에서 이루어지지만, 농사일과 농촌살이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주체적 삶을 살아가기 어려우며, 농촌과 도시 어디에서 정착되지 않은 경계적 정체성을 갖는다고 설명된다. 여성들이 직면하는 정착의 어려움은 남성들보다 더 취약한 사회적 연결망과 접근성, 가사와 농사일, 직업노동의 기하적 가중,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통제가 더해진 농촌 주민과의 관계 어려움으로 대표되었다. 귀농·귀촌 여성들의 경계적 정체성은 '농부와 농부의 아내'로 머물거나 '농촌 아낙으로 파묻히기'보다 지역 내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자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힘든 농사일과 가부장적 가족·마을에 대한 회피 전략이기도 하지만 가공·유통, 농촌관광 등 농업생산의 외연을 확장하고, 교육·문화·복지·돌봄 등 농촌 지역주민의 필요를 충족하여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본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여성 응답자 중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귀농 '13년 20.0% → '18년 37.5%, 귀촌 '13년 11.3% → '19년 41.3%). 또한 남성의 단신 이주는 귀농 79.9%, 귀촌 59.5%로 각각 여성의 8배, 1.5배 높다. 여성들이 가구를 대표하여 혹은 혼자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여성의 이주가 남성보다 가족 단위 이주 경향이 크므로 여성에 대한 정책 투자가 인구학적·정책적 실효성이라는 도구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귀농·귀촌 정책이 성 중립 정책을 표방하기보다 여성이 겪는 어려움에 특화된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것의 필요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 둘째, 귀농은 50대와 60대 여성 중심, 귀촌은 30대 이하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두 집단 모두 고졸자와 대졸자가 대부분이며, 70% 정도는 이주 전에 직업을 가졌

던 여성들이고 직업 분야는 서비스·판매직, 사무직이 많다. 최근 10여 년간, 원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의 젊은, 직업적 전문역량이 있는 여성들이 농촌 지역사회로 이주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셋째, 농업·농촌의 산업적·환경적 매력과 도시로부터의 탈출이 귀농·귀촌의 주된 이유인 것은 모두 공통적이지만 여성가구주 가구는 가족적 이유로 인한 귀농 결심 비율이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높고, 남성가구주 가구는 농업에 종사하려는 목적에서 귀농을 결심하는 비율이 여성가구주 가구보다 더 높은 차이가 있다. 이렇듯 귀농·귀촌 동기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선택할 때는 귀농 가구의 95% 정도, 귀촌 가구는 절반 정도가 연고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고지는 여성에게 양가적 효과를 주는데 대부분이 남편의 연고지인 경우가 많아 생활 및 영농 기반 등에서는 이점이 있으나 가부장적 통제와 역할 부담의 가중은 여성의 귀농·귀촌 동기 실현을 어렵게 하고 정착의 장애요소가 된다. 여성의 부적응은 가족의 귀농·귀촌 지속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부부 둘 중 어느 한 쪽의 연고지로 귀농한 경우보다 둘 다 무연고지로 귀농한 여성의 귀농생활 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성지혜 2013), 연고지가 주는 경제적 이점보다 구속과 통제에 따른 정서적 비용이 더 큰 것이다. 그렇다고 무연고 귀농귀촌을 권장하기에는, 생활과 영농 기반 확보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문화적 이유로 부모의 기반을 승계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귀농·귀촌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반대로 승계를 이상적인 것으로 권장하기에도 여성에게 부과되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의 가중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농업농촌의 매력을 산업과 환경적 측면에서 강화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 정책이 이제는 성평등 사회문화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가족 승계가 '규범'처럼 작동하긴 하지만 가족 외 승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상상력을 적극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

- 넷째, 여성가구주 가구의 귀농·귀촌교육 이수율이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현저하게 낮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귀농귀촌을 남편이 주도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준비에 소극적이라고

설명되었으나, 가구주로서 여성이 귀농·귀촌을 주도하는 경우에도 남성보다 준비 정도가 약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조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 볼 만한 상당성이 있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정보 획득 경로나 교육 미이수 이유에서 접근성이 중요 요소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여성의 사전 준비 부족의 외적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

- 다섯째, 귀촌 여성가구주 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6천여만 원 이상 적은 정착 자금으로 농촌살이를 시작하지만,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균등화 소득’에서는 귀농 여성가구주 가구가 가장 적다. 귀농 여성가구주 가구는 소득은 가장 적고 생활비는 가장 많아서 4집단 중 가계경제가 가장 좋지 못하며 가구소득 만족도도 4집단 중 가장 낮다. 또한 귀농 여성가구주 가구는 농지 구입으로 영농을 시작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1.5배 높고 임차 재배면적이 자작면적보다 적다. 남성가구주 가구들이 임차를 통해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구조인 것과 반대다. 귀농 여성가구주 가구의 영농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것이 이런 배경에서 기인한 탓이 크다 할 수 있다.
- 여섯째, 농업 외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해서 귀농과 귀촌가구 간의 차이는 두드러지나 가구주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개인의 경험을 조사하지 않고 가구원 전체의 경험을 응답하게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차이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농업 부문 종사 비율이 남성가구주보다 약간 더 높다는 것과 귀촌 여성가구주들이 인맥 부족을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
- 일곱째, 귀농 남성가구주 가구가 가장 활발하게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귀농 여성가구주 가구는 마을과 농업인단체, 귀촌 남성가구주 가구는 마을 활동 중심으로 참여를 하며, 귀촌 여성가구주 가구는 마을, 지역사회 참여율 모두 가장 낮다. 여성가구주들은 남성에 비해 시간 부족과 건강·체력 부족이 지역사회 참여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귀촌 여성가구주 가구들의 경우 ‘관심 단체가 없다’가 지역사회 참여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점이다(김이선 2021). 기성에 조직된 모임이나 단체 중심의 지역사회 참여가 귀촌 여성가구주에게는 그리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치와 목적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형성된 여성 모임, 소규모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비공식 활동까지 포함해서 지역사회 참여 실태가 파악될 수 있어야 귀농·귀촌 여성들로 인한 농촌 사회변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성가구주 가구들은 자신의 가족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상담·교육, 컴퓨터·인터넷, 문화·예술·체육, 의료·보건·복지 분야를 남성보다 더 많이 꼽았는데, 이들의 전문성과 관심사를 지역사회로 확장할 수 있는 여성 커뮤니티 형성을 정책이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덟째, 귀촌 여성가구주 가구의 주민과의 관계 인식과 지역사회 소속감/동질감이 가장 낮아, 이들의 농촌 지역사회 통합이 가장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들은 지역주민이 비교적 귀농귀촌인에게 우호적인 편이나 실제로 소통이나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는 그 정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하며, 주민의 기대나 간섭에 대해 남성보다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귀촌 여성가구주 가구에게 심리적 어려움은 도시로의 이주의 향을 촉발하는 중요 이유 중 하나다.
- 아홉째, 여성가구주 가구의 정책수혜율은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월등히 낮고, 특히 자금 지원 종류의 정책수혜율에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 모든 집단에서 정보 제공류의 정책수혜율이 가장 높는데, 역설적이게도 사전 교육이나 지역사회 참여 등에서의 어려움, 정책 개선사항 등에서 정보 부족 언급이 많다. 이것이 정보의 양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공되는 정보가 유용하지 않은 것인지, 정보 유통에서 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것인지 등 정책수혜자 입장에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귀농 가구는 남녀 공히 농지·시설자금, 주택 자금 등 자금 지원이 중심이고, 귀촌가구주들은 생활관련 지원, 관계형성 지원 정책 욕구가 귀농가구보다 높는데 여성들은 정보 제공 및 홍보 요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더불어 깊이 새겨봐야 할 대목은 남녀 모두 지자체 정책의 도움도를 중앙정책보다 낮게 평가한 점이다. 자금 지원류의 정책 외 농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관계 형성, 문화 조성, 경제활동 등은 지역성이 반영된 정책이므로 지자체 귀농·귀촌 정책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 열 번째, 확충이 필요한 공공시설로 문화시설, 보건의료시설, 상업시설 요구도가 높은 것은 공통적이거나 여성들은 문화시설과 도서관 요구도가 남성에 비해 높다. 확대가 필요한 공공서비스로는 문화체육 서비스, 일자리 지원, 교통 서비스 응답율이 모든 집단에서 높는데, 귀농 여성가구주 가구는 일자리 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요구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차이가 있다.
- 포괄적으로 정리하면, 여성 귀농인은 소득과 영농 등 경제적 영역에서의 어려움, 여성 귀촌인은 주민 관계 및 심리적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 강조되었던 가족 내 갈등, 자녀 보육·양육 문제, 주민관계의 어려움, 그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등은 본 분석 결과에서는 잘 포착되지 않았다. 이는 개인이 아닌 가구 경험을 조사한 자료의 한계 때문이다. 또한, 여성 표본수가 적어 가족주기나 연령, 귀농·귀촌 유형과 동기 등 여성간의 차이도 고려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귀농·귀촌 정착이 남성들보다 어떻게 어려운지에 대한 단초는 얻을 수 있었으므로 여성의 성별 특수한 경험이 고려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은 확인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귀농·귀촌 여성 정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여성의 정착 어려움이 무엇이고 그들의 정착 노력이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서두에서 제시했듯이 가구 단위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여, 「귀농어·귀촌인 통계」와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성 인지적 통계조사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부록 3: 기타 고려할 만한 추진 과제

- 이 연구 추진과정에서 개발되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기관 및 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향후 귀농·귀촌 정책 추진에 있어 추가로 고려할 만한 과제를 제시함.

□ 청소년, 대학생의 농촌 교육·체험 활성화

- 초·중·고 청소년 시절부터 농업·농촌에 대한 교육과 경험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킴.
 - 외국에서는 청소년 단계부터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장기적 농업·농촌 정책 지지자 확보 차원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어린이 농산어촌 체험프로그램, 미국은 교실에서의 농업(Ag in the Classroom) 등을 실시함 청소년 시기의 농업·농촌 관련 교육·체험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이미 학생 4H, 식생활교육, 학교텃밭, 농어촌인성학교, 농촌교육농장 등을 통해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들이 다양한 기관에 의해 연계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방향성 없이 추진되는 한계가 있음.
 - 청소년 대상으로 교양교육 차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각종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함으로써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자를 확보하고, 나아가 잠재적 농업인, 농촌 주민 확보까지 기대할 수 있음. 청소년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4H 등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교양적 차원의 농업·농촌 관련 교육 지원을 통합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음.

<글상자 33>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농촌 분야 교양교육 관련 주요 활동

- 4-H: 4H(知德勞體)을 생활화함으로써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성장토록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교육 운동. 1945년 농촌청소년구락부로 시작. 한국4-H본부(korea4-h.or.kr)
- 식생활교육: 식생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한 교육
- 학교텃밭: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 진행. 특 광역시 초등학교의 10% 정도 180여 개소에서 배움텃밭, 학교농장, 학교정원, 교육농장, 생태텃밭, 스쿨가든, 학교학습원, 스쿨팜(school farm), 산림텃밭 등 다양하게 조성
- 농어촌 인성학교: 농식품부와교육부가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인성학교'를 공동 지정·관리하기로 업무협약(MOU) 체결. 청소년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정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과 마을 권역에서 관련 활동 진행. 전국 119개 마을과 권역이 지정 운영 중
- 농촌교육농장: 농촌진흥청에서 초, 중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가를 조성, 단순 1회성 체험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농장 운영. 사)한국교육농장협회에서 150개소 운영 중
- 이밖에 농촌유학, 학교숲운동 등이 있음.

자료: 마상진(2019), 미래세대와 함께 나누는 미래 농업교육(발표자료).

- (예비) 대학생들에게는 농촌 봉사 및 체험을 제공하는 **농촌 Gap Year 프로그램 개발·운영**하여 이들의 단기 농촌 체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교육부, 각 대학(특히 도시지역에 위치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각 대학의 입학예정자(입학유예) 및 재학생(특별휴학 적용)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갭이어를 위한 활동을 권장하고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함. 학생이 농촌과 관련하여 자기 학습계획 및 발전계획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토록 하며, 농촌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나 단체와 연계 지원하고, 체류비 일부 및 거주지를 지원함.

예) 경북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청양읍 리빙랩 프로젝트
일본 동경대 Gap year Initiative 'FLY Program'

<글상자 34> 일본 동경대 Gap year Initiative 'FLY Program'

- 일본 동경대학의 갭이어 프로그램은 대학 이외 장소에서 자원봉사 활동이나 취업체험 활동, 국제교류 활동 등을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성장시키는 자기교육' 지향함. 특별휴학 형태로 신청하고, 프로그램 참여시 졸업 지연 허용. 최대 50만 엔의 활동지원금 지급(해외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 가능). 대상은 입학허가를 받은 학부생으로 이들에게는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원 봉사 및 복지 증진 도모, 인턴 경험을 제공함.

자료: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2020).

□ 비대면 귀농·귀촌 교육 확대

- 코로나19와 같은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대비하고, 점차 하락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귀농·귀촌 교육을 확대함.
 - 귀농·귀촌 교육 분야도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여성·직장인·수도권 외 귀농·귀촌 희망자 등 교육 소외 집단의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함(2020년 시범운영된 귀농·귀촌 아카데미에서 비대면교육 만족도(94.2점)는 대면교육(90.1점)에 비해 높음).
 - 고용노동부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대응 노력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와 연계하여 스마트 훈련을 강화하고 있음.

〈글상자 35〉 고용노동부 비대면교육(스마트훈련) 제공강화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집체와 비대면 방식이 결합된 스마트훈련(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중 비대면 방식 훈련을 10~50%(최소 20시간 이상) 편성한 훈련과정) 공급에 중점을 둔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0년 하반기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 12,450개를 선정·공급하기로 했다.
- 기존 구직자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집체방식 훈련을 원칙으로 하지만, 비대면 방식 훈련 확산을 위해 훈련과정 중 약 8%를 스마트훈련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스마트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 19 재확산에 대비한 온-오프라인 혼합 스마트훈련 949개 과정을 약 20,000명(정원기준)에게 제공한다. 각 훈련기관은 공공 온라인 스마트 훈련 플랫폼인 스텝(STEP)*의 온라인 강의실을 통해서 공공, 자체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한 온라인-집합훈련-현장실습 등의 연계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스텝(STEP)은 300여 개 훈련기관에게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ASP) 방식의 온라인 강의실을 제공
-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과정 625개를 선정, 약 13,000명(정원기준)에게 제공한다. 온-오프 혼합 스마트훈련 과정을 만들기 위하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스마트훈련 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온라인 훈련 경험에 있는 전문가(폴리텍 교수 등 참여)들이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스텝(STEP) 등의 온라인 콘텐츠 연계, 자체 콘텐츠 개발, 온라인 강의실 활용 등에 대한 맞춤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자료: 고용노동부(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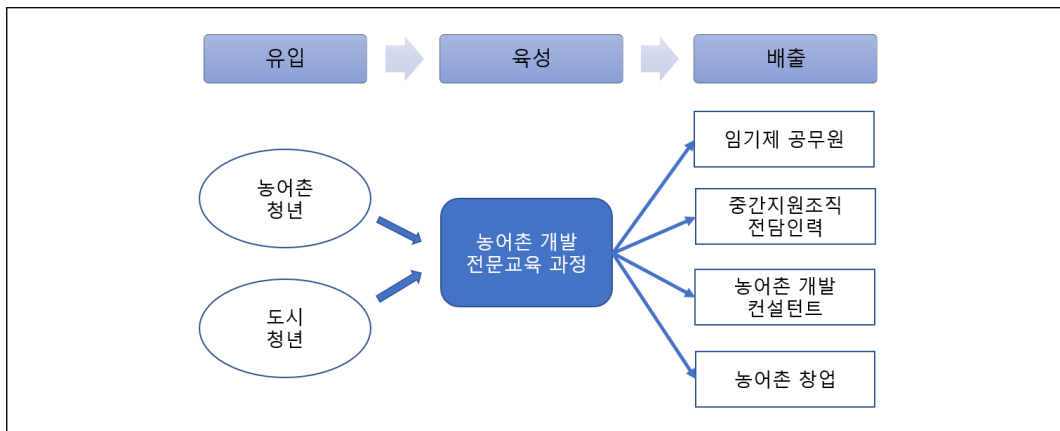
□ 귀촌 교육 체계화(중양-광역-기초 단위)

○ 귀촌 교육 강화 및 체계화 차원에서 중앙단위 농촌 활동가 육성과정, 광역단위 귀촌인 리더과정, 기초 단위 귀촌인대학 운영을 제안함.

- 체계화된 귀촌 교육을 위해 기초단위로는 농업인대학(2019년 기준 전국에 146개소 운영 중)과 연계한 **귀촌인 대학**을 운영함. 이를 통해 6차 산업분야 창업을 포함한 농산어촌 창업, 사회적경제분야 창업, 비농업분야 소상공 창업·승계 등을 지원함(이론·현장체험 중심의 6개월~1년의 장기 교육과정). 광역단위로는 농업마이스터(9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영 중) 대학 체계와 연계하여 **귀촌인 리더과정**을 도입함(귀촌인 리더과정의 경우 귀촌 3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장기 과정(2년 4학기)으로 운영). 중앙단위에서는 청년 대상으로 **농촌 활동가 육성과정**을 운영함. 현재 지역별로 귀농·귀촌 및 농촌 마을 개발 관련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있으나 상근자의 발굴과 양성, 재교육 시스템 미비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관련 업무 수행의 전문성 매우 미흡함. EU의 EMRA와 같은 전문 학위과정을 대학과 연계하여 중앙 단위에 만들어 농촌 마을의 활성화 관련된 분야(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전담인력, 농촌개발 컨설턴트 등)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역량을 분석하여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문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예) 순창 청년활동가 육성, EU EMRA

〈부록 그림 1〉 농어촌 활동가 및 전문인력 유입·육성·배출 체계(안)



자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2020).

□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관련 취·창업 활성화 지원

○ 귀농·귀촌인들이 농업 분야 외에 도시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농촌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취·창업을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특히 귀농·귀촌인들의 농촌 유입이 농촌의 활성화, 특히 농촌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들 분야에 취창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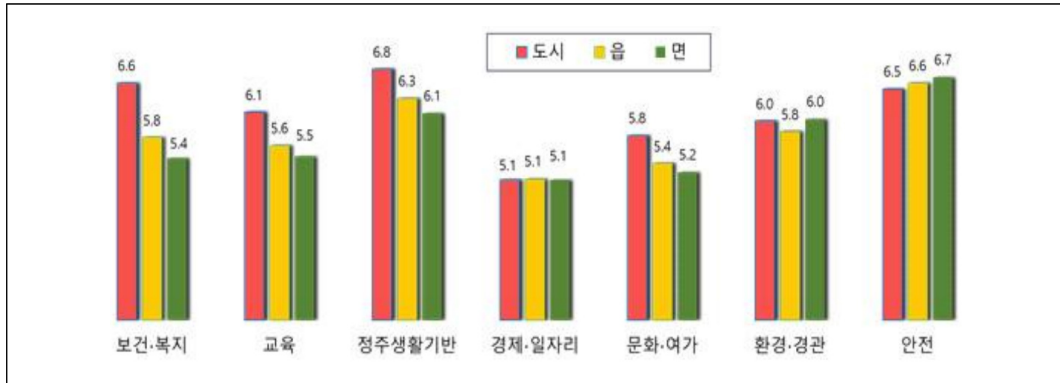
-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가장 요구가 높지만 열악한 분야가 교육, 의료, 문화 분야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그림 7-4>. 이들 분야는 관련 전문 인력이 농촌에 근무하기를 꺼리기 때문임. 현재 농어촌 희망재단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사업⁸²⁾을 확대 운영하여 **교육, 의료, 문화 분야** 전공 대학생 및 도시에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관련 소양 및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대, 사범대, 의대, 예술 관련 대학(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전국국립대사범대학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예술대학교수협의회 등)과 협회·단체(충남교육연구소, 전북지역교육연구소, 지역문화진흥원, 보건의료통합봉사회,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등)와의 연계를 통해 농업·농촌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들 분야 사람들이 귀농·귀촌 시 인센티브와 더불어 관련 사업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예) 문화관광부 지역문화인력, 호주 Rural & Remote Human Resource Strategy,

Rural Medical Education 참조

⁸²⁾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업 지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수행 중. 농촌 면단위 이내 주민 공동체(15명 이상)에 운영비(개소당 5~20백만 원)를 지원함.

〈부록 그림 2〉 도시 농촌 주민의 삶의질 부문별 만족도



주: 각 항목 11점 척도(0~10점)로 측정.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정주 만족도 조사 보고서」(2019년); 성주인(2020)에서 재인용.

〈글상자 36〉 의료 분야 농촌 활동 단체

- 보건의료통합봉사회: 보건의료통합봉사회(IHCO, Integrated Health and Care Organization)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 등 다양한 보건의료계 전공분야의 대학생,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의료사각지대에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등록 비영리단체(NPO)임(2016년 창립). 국가재난지원사업, 재가방문 보건의료 지원사업, 보건의료 교육사업, 보건의료 캠페인, 행복건강부스 운영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는 지역보건과 관련된 학술단체로, 학계와 보건기관 등 현장의 전문 인력이 공동으로 연구 및 보건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5년 설립되어 활동 중임. 학회에서는 농촌의학 및 지역보건에 관한 학술대회, 학술강연회, 학회지 및 학술지 발간 외에 농촌의학 및 지역보건 관련 기관 및 기구와의 상호협조 활동을 하고 있음.

자료: 보건의료통합봉사회(2020).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http://www.comhealth.or.kr>>.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및 자활센터, 마을기업 등 **농촌 사회적 경제 분야 취창업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함. 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한 ‘시장 실패’와 세수 감소로 인해 행정이 주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국가 실패’ 현상이 농촌에서 나타나고, 농촌지역 인구구조의 변화로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수요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됨. 이에 따라 매년 500여 개 이상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농촌에서 만들어 짐(사회적 기업(2020) 2,777개 중 농촌 소재 기업은 708개, 협동조합(2020) 19,472개 중 농촌 소재 조합은 4,804개소). 이들 사회적 경제 조직은 농촌의 지역주민, 사회취약 계층, 농가, 농업활동 보호 및 지원, 전통·문화·예술 보전과 확산 등의 분야의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에 귀농·귀촌인들의 이 분야 취·창업을 강화해야 함.

- 농촌의 소상공 경영체(식당, 카페, 제과점 등)는 농촌 경제에서 일자리 뿐 아니라 삶의 질에 필요한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농촌의 삶의 질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비농업분야 소상공인 경영 승계**를 지원하고, 승계자가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귀촌 창업자와 연계시킴. 기존 소유자 및 인수자(승계자)에게 사업체 승계계획을 제시하고 연결해 주고, 농촌 사업체의 폐업과 경제적 손실을 막고, 인수자는 적은 비용으로 사업체를 인수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적응을 하게 함과 더불어 그 지역 사회 유지에 도움을 줌.

예) 영국 Rural Business Succession Solitator

□ 귀촌 정착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의 지속적 농촌 정착을 위해 현행 취·창업 자금 지원을 보강해야 함.

-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귀농자금, 후계농자금 등) 지원 조건 개선(상환부담 완화) 및 농지·정착지원금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함. 또한 지역자산을 활용한 **귀촌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중기부 등과 협업을 추진해야 함. 한 예로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수료자가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중기부) 사업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사업화 자금 및 멘토링, 브랜딩 등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행안부, '22. 2.6만 명 규모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시군으로의 청년 이주, 취·창업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농업분야는 청년 후계 인력 확보를 위해 1980년대부터 농업인 후계자 사업(현재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15만여 명(2019년 말 기준 149,134명)을 선정하여 지원. 당초 이 사업은 농촌 마을(법정리)당 1명의 청년을 유입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임. 우리나라 농업이 심각한 고령화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이 지난 40년간 추진되면서, 농업 분야에 청년 인력의 유지에 기여한 바가 큼. 2018년부터 신규로 추진된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이 사업의 틀 아래에서 40세 이하 신규 유입 청년들을 위한 영농 초반 기초생활비 보조와 관련하여 보완된 정책임. 농촌 분야에도 도시 청년의 신규 유입 및 기존 농촌 청년의 이탈 방지를 위해 **'농촌 후계자 육성사업'**

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영농 이외에 농촌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 취·창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관련 농촌 취창업 교육과 더불어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와 같이 정착 초기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⁸³⁾(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별도로 과소화가 심각한 농촌에 특화하여 운영하는 방안 고려). 농촌 후계인력 중의 일부는 전문 교육과정(농촌활동가 과정) 이수를 통해 농촌 활동가로 육성해야 함.

예) 전북 농촌과소화대응인력 육성사업, 일본 지역부흥협력대, 집락지원인

□ 귀농·귀촌 특구 지정

○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선별, 관련 정책의 우선 선정 및 도시민 유치를 위한 파격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예) 홍천 전원도시 특구

- 전국 농촌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귀농·귀촌 정책 추진도 필요하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귀농·귀촌 추진이 필요. 이 연구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전국 1,413개 읍면(이중 주민이 살고 있는 읍면은 1,405개)이 지리적 위치, 산업 특성에 따라 귀농·귀촌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음. 균발법에서는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균특법 제2조 제6호)을 인구, 소득,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가·지자체의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음.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된 지역은 공모 과정을 거쳐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 농촌 후계자 육성 사업 등 일자리 관련 사업 및 주거 지원 사업 배치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함.

⁸³⁾ 농촌 후계자 농촌 마을별로 3명 정도 유입시킨다는 장기적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10만 명 이상(2019년 말 기준 농촌 마을 37,537개)의 청년들이 사업을 통해 농촌 정착이 기대됨.

〈부록 표 48〉 군발법에서의 성장축진지역(70개 시군)

구분	시·군
강원(8)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 정선군
충북(5)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남(6)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공주시
전북(10)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전남(16)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경북(16)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 안동시
경남(9)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

자료: 국토교통부(2019).

- 귀농·귀촌 특구의 도시민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영국의 Second Home, 일본의 2지역 거주 시범사업처럼, **도시민 다지역 거주**도 지원하는 것도 검토 필요. 현실적으로 농촌 영구 이주 수요보다, 두개 지역 거주를 통해 도시의 편리함과 전원생활의 가치를 누리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수요가 더 많음. 교통이 발달하고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도시에서 문화 욕구를 채우고, 로컬에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기에 귀농·귀촌 특구 거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도시·농촌 두 지역 거주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거주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예) 영국 Second House, 일본 2지역 거주 시범사업

〈글상자 37〉 일본의 2지역 거주 시범사업

- 2004년 11월, 국토교통성 국토계획국 종합계획과에서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2지역 거주인구 연구회」 조직하였으며, 2008년 수립된 제1차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에서는 지역으로의 인구 유치·이동 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2지역 거주」 시책을 제시함. 2014년 만들어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에 근거 수립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에서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2지역 시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2015년 수립된 제2차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에서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이주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기존의 「2지역 거주」에 더하여 「2지역 생활·취로」를 추가함.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일본 국토교통성은 6개 민간사업자와 4개 광역지자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2지역 거주 촉진 협의회」를 설치하고, 4개 지자체별로 2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함.

자료: 송미령 외(2020).

□ 성인지적 귀농·귀촌 정책 추진

- 이 연구 부록 2에 별도로 정리된 여성의 귀농·귀촌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귀농·귀촌 가구 중에 여성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가구 단위 이주 비중이 높아 정책 투자대비 인구학적·정책적 실효성이 높음. 기존 농촌 여성들에 비해 고학력이고 서비스·판매직, 사무직 등의 도시에서의 직업 활동 경험이 많아 이들의 전문성이 농촌 활성화에 활용될 여지도 많았는데, 여성의 귀농·귀촌 교육 및 정책 접근성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고, 제반 사회·경제 활동에 장애도 많았음. 여성의 부적응은 가구의 귀농·귀촌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귀농·귀촌 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성인지적 귀농·귀촌 통계 및 조사 추진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여성 귀농·귀촌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현행 귀농·귀촌 통계 및 실태조사는 개인 경험이 아닌 가구 경험 위주로 작성되어(남성 위주) 가장이 가구원 모두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귀농·귀촌가구의 정착은 남성 가장의 사회·경제적 성공에만 달려있지 않으며, 부인이나 자녀의 부적응, 불안정성이 언제든 가족의 역이주를 만들 가능성도 큼. 귀농·귀촌 정책이 다양한 가족형태별 필요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구 특성에 대한 현황 파악이 지금보다는 더 상세히 이루어져야 함. 주로 어떤 가족형태로 이주를 하는지, 즉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인지,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인지, 자녀없이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인지, 부모 경영체로 합가한 승계농인지, 단신 이주한 1인가구인지, 미혼의 1인가구인지, 이러한 가족형태가 가구주의 성별이나 혼인상태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귀농·귀촌 가구의 필요를 파악하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라 할 수 있음. 「귀농·귀촌인 통계」가 가구 특성 및 1인 가구 비율 등에서 성별 분리 통계를 생산하고, 「귀농·귀촌 실태조사」는 표집의 성별 대표성을 기본으로, 가구 구성에 대한 상세 정보 및 가구원 정보 파악(연령, 성별, 혼인상태 등) 문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의 귀농·귀촌은 가구 단위 귀농·귀촌 지속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농업 생산 보다는 농산물의 가공·유통, 농촌관광 등 농업생산의 외연의 확장, 교육·문화·

복지·돌봄 등 농촌 지역주민의 필요를 충족하여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가 크다는 측면에서 지금 보다는 더 여성 친화적으로 설계 추진 될 필요가 있음.

- 성 인지적 귀농·귀촌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예를 들면, 여성들은 현지에 이주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고 말함. 이는 현재 제공되는 정보들에서 여성이 필요로 하는 생활 정보, 일자리 및 교육 정보, 사업 지원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 여성들의 필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귀농·귀촌 관련 기구 및 중간지원조직 내 **여성 전담인력을 별도 배치**하여 귀농·귀촌 여성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관련 교육 실시,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성공 사례 발굴과 확산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글상자 38〉 귀농·귀촌 여성 전담인력의 역할

- 지역의 귀농·귀촌 여성 필요 정보 파악 및 관련 정보 수집·관리·제공
-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내 여성 대상 정보 강화
- 귀농·귀촌여성 맞춤형 교육 실시 및 민간단체 교육사업 지원
- 귀농·귀촌 여성 자조모임 및 지역 여성과의 교류 지원

- 귀농·귀촌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여성의 지역사회 통합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현재는 이러한 일자리 연계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21년 9개소) 지정 확대 및 기능 강화, ‘농촌형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운영을 여성가족부와 농식품부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귀농·귀촌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연계 서비스를 여성 취·창업 지원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임.

〈글상자 39〉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농촌 지역 여성 일자리 정보 제공 기능 강화
- 귀농·귀촌 여성 재능뱅크 구축 및 취창업 교육
- 농촌형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발굴 및 취업 연계
- 마을개발사업에 여성 채용 확대

-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 어려움 중 지역 사회 관계 및 심리적 부적응이 큰 부분을 차지하며, 지역 내 여성 모임이 그러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농촌여성 커뮤니티 활동 지원이 필요함. 농촌여성 커뮤니티 활동에서 공간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여성 활동 공간을 최소 면 단위 이하에 마련할 수 있도록 공간 관리 및 운영계획을 가진 단체/소모임을 선정, 리모델링 비용과 운영비,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문헌

- 강대구. 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 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59-98.
- 강대구·김경남·김민수·이웅·변규식. 2006.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농림부.
- 강재원. 2019.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제고. 중소기업연구원.
- 경상북도. 2020.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소개자료.
- 고용노동부. 2020.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사업 참여 신청 게시(보도자료 7. 31.).
- 고용노동부. 2020. 하반기,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훈련 활성화(보도자료 7. 16).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 2020. 지역발전투자협약 통해 지역에 맞춤형 생활SOC 공급(보도자료 2. 13.).
- 구자인. 2019. “농촌마을, 르네상스는 올까.” 2019 농업농촌의 길.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2020.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 모음집.
- 국토교통부. 2019. 70개 시·군, 성장촉진지역 지정 예정.
- 국토교통부. 2021.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보도자료 8. 2).
- 기획재정부. 2020.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길은선·송영진·신위뢰. 2019. 고용 없는 성장의 특성 및 산업별 분석. 산업연구원.
- 김경덕·홍준표·임지은. 2012. 『귀농·귀촌 사회적 편익 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경진·김준기·서홍석. 2021. “농업·농촌경제 동향 2021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 동향』.
- 김기현·차세영·이승호·김문길·박미선. 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기홍. 2016.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추진방향』. 충남연구원.
- 김두환·마상진. 2015. 『일본의 농업 6차 산업화 전문인력 관련 정책 및 사례 조사: 교토부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두환·성주인·김영단. 2014. 일본의 농촌 주거정책 및 마을 활성화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1-95.
- 김백수·이정화. 2013.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에 대한 생태체계적 분석. 농촌사회 23(2): 7-48.
- 김승현·이제영·김만진·김단비. 2018.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생태계 변화 전망 -여객·운송분야 모빌리티서비스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 김영선. 2013. “마을인문학과 여성주의.” 사회와 철학 26: 33-56.
- 김영정. 2018. “마을공동체와 여성 : 공공성과 젠더화된 돌봄의 딜레마.” 기억과 전망 38: 13-62.
- 김용렬·엄진영·정도채·김유나. 2020.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2021-20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원동. 2015.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향수 너머의 현실과 활성화 방안 탐색.” 농촌사회 25(2): 93-144.

- 김유배. 2006. 노동경제학. 박영사.
- 김은석·하지영. 2016.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선택 동기와 준비경험 : 대졸 남성 퇴직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6(2): 419-442.
- 김이선·김영택·장희영·박신규·이순미. 2021. 농업·농촌의 변화와 성 인지적 정책 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곤·나승권·장종문·이성희·노수연. 2016.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정섭. 2012. “귀농·귀촌 정책의 현황과 과제.” 『귀농·귀촌 정책 추진 실태와 발전 방향: 세미나 자료집』 (5-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 2014.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과 합의.” 농촌지도와 개발, 21(3): 53-89.
- 김정섭·마상진·김종인·오정훈. 2016. 귀농·귀촌 종합대책 수립방향 연구.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성주인·마상진. 2012.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 『KREI 농정포커스 제13호』.
- 김정섭·신소희·구분경. 2018. 청년의 지방 이주 지원 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 청년허브·서울특별시.
- 김정섭·김경덕·임지은. 2015.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엄진영·유찬희. 2016. “일자리 없는 농촌, 할 일 많은 농촌 - 농촌 지역의 고용 실태와 정책 방향.” 《농업전망 2016 - 급변하는 농업·농촌, 내일을 기획한다》, 353-376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김정희·박해청·금경연. 2016.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등 창출방안 연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사)환경농업연구원.
- 김정호·마상진. 2005. 『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주영·우성희·김현미·장대철·김선영·김다솜. 2016 완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완주군청·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 김철규·이해진·김기홍·박민수. 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방안 연구』. 농림수산물식품부.
- 김한중. 2016. 『도농간 인구이동 현황과 시사점』. 농촌지역 인구문제 세미나 자료집. 전북연구원.
- 김형용. 1998. 귀농자의 실상과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경제학회, 14(1): 205-223.
- 나종석. 2013. “마을공동체에 대한 철학적 성찰.” 사회와 철학, 26: 1-32.
- 남창우·조덕상. 2021.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 KDI 경제현안분석.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021. 「2021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모집 공고문.
- 농림축산식품부. 201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17~'21).
- 농림축산식품부. 2017. 제2차(2018~2022)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2019.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2020a. 신규 취농자 조사(비공개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b. 정부 지원사업 수혜 농업경영체의 고용변화 조사(비공개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c. 2021년 농업경영컨설팅(일반) 지원사업 시행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2021. '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1,800명 선발(보도자료 4. 2.).
- 농림축산식품부. 2021.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안내).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1. 귀농귀촌가이드북.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5. 2015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19.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0. 청년세대 농산어촌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농촌진흥청. 2016. “주말농장 참여 후 농업·농촌 이해도 높아졌어요.” 보도자료(4. 12.).
- 농촌진흥청. 2020. 농어업인들의 대한 복지실태조사.
- 농협. 2021. 조직현황(내부자료).
- 마상진. 2014. 미국의 농업교육 변화 동향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 2017. OECD선진국들의 농촌지역 일자리 전략. 세계농업 208호.
- 마상진. 2019. 농업인력의 New Waves, 르네상스는 올까? 농업농촌의 길 2019 행사 발표자료.
- 마상진. 2019. 미래세대와 함께 나누는 미래 농업교육(발표자료).
- 마상진·김병률·안석·정문수·하혜지. 2020. 충북형 농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남기천. 2015.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 유형별 관련 요인 탐색.” 농촌사회, 25(1): 89-124.
- 마상진·박대식·안석·황정임·남기천. 2018.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종합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박대식. 2019. “귀농·귀촌의 역사적 고찰과 시사점.” 농촌사회 29(2): 7-32.
- 마상진·박시현. 2021. 2020 농림어업 고용동향 분석. KREI 현안분석.
- 마상진·안석·김유나. 2020.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엄진영·김태후·박진우. 2019. 농업분야 고용동향 분석 및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정은미·김경인. 2017.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허주녕·김경인. 2016. 농산업분야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김종인·김경덕. 2015.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6차 산업화 전문인력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주민주도형 관광사업 운영 공동체 「관광두레」 조성사업 기본계획(안).
-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 민성희·정은교·조성철·차은혜·오호영. 2019. 성장축진지역 재지정 및 낙후지역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 박공주. 2005. 실버농업인의 농촌정착과정 실태. 농촌자원과 생활, 2005년 여름호, 21-35.
- 박대식·마상진·최윤지·남승희. 2014. 외국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문호·오내원·임지은. 201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추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정·이선주·진명숙·장희영. 2012. 『귀농·귀촌여성의 농촌 정착 및 사회참여 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시현·최용욱. 2014. 『귀농·귀촌 요인과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신규·조경욱·조아영. 2013. 『귀농·귀촌 여성의 전북지역 정착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박영일. 1998.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연구-귀농사례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진경·김선기. 2017.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백영경. 2017. “커먼즈와 복지.” 환경사회학연구 ECO, 21(1): 111-143.
- 보건의료통합봉사회. 2020. 보건의료통합봉사회 단체소개 자료집.
- 삼선재단. 2017. 청년×지역×정책: 청년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돕는 정책 사례집.
- 삼선재단·녹색사회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문화연대·전국귀농운동본부·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희망제작소. 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삼선재단.
- 삼성증권. 2020. 유통업의 미래, 라스트 마일(Last Mile) 배송 서비스.
- 샌드라 하딩(Sandra Hading). 2009.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여성들의 삶에서 생각하기』. 조주현 역. 나남.
- 서규선·변재면. 2000.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1): 137-153.
- 서울시. 2021. 도시-농촌 상생공동체 구축사업(보도자료 2. 23).
- 성주인. 2020. 농촌 재생: 거주, 여가, 신산업 기반 조성. GS&J 농업농촌의 길 2020.
- 성주인·박시현·김용렬·윤병석·남기천. 2012.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임진영·박유진·정규형. 2014. 농촌의 성장기 인구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주인·채종현. 2012.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 KREI 농정포커스 제2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지혜. 2013. “귀농한 가족, 귀농하지 않은 여성: 청도군 귀농 가족의 적응 과정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농촌사회, 23(2): 92-138.
- 송미령 외. 2019.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외. 2020.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조성 시범계획 수립과 정책 실천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성주인·김광선·구자춘·정도채. 2021. 100세 시대,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모델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김정섭. 2008. 지자체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평가·모니터링 및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모형 정립. 농림수산식품부.
- 신경미. 2018. 일본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 및 우수사례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신윤철·김동섭·배성의·윤준상. 1998. 귀농자의 귀농동기 및 배경 특성 분석. 산업개발연구, 6집. 59-70.
- 신현구·김안국·이용수. 2014.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 양진홍·이차희·배인성. 2021. 수도권 인구조분산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지역-순환거주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양현봉·한창용·김진수. 2018. 창업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산업연구원.
- 엄창욱·노광욱·박상우. 2018.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 - 대구지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6(3): 259-283.
- 엄창환·강보배·신동훈·정현미. 2018. 청년인구 이동 문제 진단을 청년 현실에 기초한 지역 격차 분석 연구. 서울시 청년허브.
- 우성호·이성근. 2015. “귀농·귀촌자의 지역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7(3): 75-94.
- 우성희·송하진. 2019. 지역교류형 청년일자리 사업모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현황 연구. 듣는 연구소·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유학열. 2011.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실태 및 유형별 특징. 충남논단, 2011년 봄호, 18-25.
- 유학열. 2021. 인구감소시대에 대항한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재생전략. 충남리포트 377(2021. 3. 10.).
- 윤순덕·강경하·박공주·이정화. 2005. 도시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5(3): 139-153.
- 이경아. 2005. “귀농 여성이 개척하는 새로운 자유의 영역: 충남 홍동 지역 귀농 여성들의 삶에 대한 보고서.” 여성과 환경: 203-217.
- 이미홍·최상희·배진원·권영환·한현동·정승태. 2020. 농촌 맞춤형 지역재생 사업모델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 이민수·박덕병. 2012. “도시민의 귀촌행태 유형화와 시사점.” 『농촌지도와 개발』 19(4): 1137-1170.
- 이상림·이지혜·Bernhard Köppen·임소정·성백선. 2018.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20.
- 이상용. 1999. 귀농인 의식실태 및 안정적 정착 방안. 연구와 지도, 40(6): 35-41.
- 이상원. 201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언론정보연구, 54(4): 35-66.
- 이상호. 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한국고용정보원.
- 이소영·김도형. 2021. 작지만 강한 연결: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순미·위라겸. 2020. 『농어촌의 미래 여성농어업인 인력육성 방안』. 전남여성가족재단·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 이원석·장상현·최주원·신용태. 2021. “귀농귀촌 의사결정요인에 대한 AHP 분석 연구: 이주지역 선택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 10(3): 81-92.
- 이정관. 1998. 귀농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된 특성분석.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환. 2015. 한국농업 70년(1): 노동시장의 충격과 대응: 노령화에서 탈노령화로. 시선집중 GSNJ 제202호.
- 이찬영·이흥후. 2016.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경제연구, 34(4): 143-169.
- 이현재. 2017. “페미니즘과 도시공동체 경제: 살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117: 89-110.

- 이희창·박희봉·정우일. 2004.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147-169.
- 임설아·정성호. 2017. 귀농귀촌인의 사회자본이 농촌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학, 18(1): 79-99.
- 임성호·최용준. 2016. 일본의 지방창생 사례와 경북지역 적용방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임혜영. 1999. 귀농자의 적응과 복지에 관한 연구-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민기·이준우·허재욱·김혜민·채상현·김기현·송기선. 2014.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실태와 관련 정책 발전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농정연구센터.
- 장수정. 2012a.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지역 돌봄 공동체 사례 연구: 마포 두레생협 돌봄두레 ‘어깨동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2): 1-31.
- 장수정. 2012b. “과천지역 공동체에 관한 연구: 돌봄공동체 가능성과 여성주의적 함의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2(2): 31-68.
- 전라북도. 2017. 「전라북도 농촌과소화대응인력」선발공고(2.21.)
- 전희경. 2014. “마을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질문하다.” 페미니즘 연구, 14(1): 75-112.
- 정다래. 2009. 비혼 귀농여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대희·김지운. 2017. “최근 취업자 증감에 대한 분석 및 향후전망.” KDI경제전망(2017 하반기).
- 정도채·심재현. 2017. 늘어나는 곳과 줄어드는 곳, 농촌인구와 농촌개발과제. 농업전망 2017.
- 정정석·신현열·하두중·곽규봉·최승락. 1998. U-턴(귀) 농가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농경·농기계 논문집, 40(2): 16-25.
- 정지용·김성수·이채식·고운미·김정욱·강정욱. 2000.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농림부 연구용역보고서.
- 조동석. 1998. 지역 귀농인들의 영농실태와 그 개선대책 연구-칠곡군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록환. 1998. 귀농자의 생활실태 분석. 도시와 빈곤, 34: 42-47.
- 조성걸·엄성준·황성기·리재웅. 2021. 농촌체험이 농촌인식의 변화와 이주정착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농공학회 논문집, 63(1): 49-60.
- 조영삼. 2020. 디지털 전환의 중소기업 수용성 제고방안. 산업경제이슈 제99호.
- 조옥. 2013. 『지역화폐와 여성주의: 한밭레츠의 경험에서 길을 찾다』. 푸른사상.
- 조원지·배균기·이병훈. 2021. 전북 귀농귀촌생활교육플랫폼 운영방안. 전북연구원.
- 중소벤처기업부. 2021a. 「2021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협업프로젝트 모집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2021b. 지역특구 지정현황.
- 진명숙. 2020. “친밀과 돌봄의 정치경제학: 충남 홍동 지역 여성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53(2): 51-115
- 진명숙·박성정. 2012. “귀농귀촌 여성의 농촌생활 경험 분석: 진안 사례.” 여성연구, 83: 275-297.
- 진양명숙. 2014. “젠더 관점에서 본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 과정과 그 특성.” 농촌경제, 37(3): 79-100.

- 친양명숙. 2015. 귀농귀촌 정책 담론에 나타난 농촌성 표상과정, 농촌사회, 25(1): 7-40.
- 차미숙. 2020. 인구감소 시대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현방향: 일본의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2020~2024). 국토이슈리포트 제22호.
- 채상현. 2013. “귀농정착 현황 및 귀농정착 성공요인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43-60.
- 채상현. 2016. “귀농귀촌 박람회 방식 바꾸자.” <<https://brunch.co.kr/@sigol/105>>.
- 채종현·박주영·김정섭. 2007. “농촌 지역의 인구 변화와 3차산업 분포.” 농촌경제, 30(1): 109-127.
- 최상현. 2021. 3. 14. “서울 집 구입 부담지수 12년만에 최고...중산층 ‘내 집 마련’ 꿈 더 멀어져.” 조선비즈.
- 최석현·이병호·박정훈. 2016. 수도권 인구이동 요인과 고용구조 변화. 경기연구원.
- 최원실·허태호·이상현. 2020. “역 귀농·귀촌 의향과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경제 43(3): 65-90.
- 최은주. 2012. “비혼여성 농촌이주와 자기충족의 윤리.” 여성이론, 26: 46-62.
- 최희영·이희정. 2014.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9(6): 159-175.
- 통계청. 2012. “2011년 국내인구이동 통계: 최근 1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보도자료.
- 통계청. 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 통계청. 2020.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 통계청. 2021. 2020년 12월 고용동향.
-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21.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정보보고서」.
- 한국고용정보원. 2020.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순유입 인구 2배 이상 증가(보도자료 7. 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농업법인 고용실태 조사(비공개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
- 행정안전부. 201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보도자료 8. 21.).
- 행정안전부. 2020. 청년공동체 사업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기 불어넣는다(보도자료 7.17.).
- 행정안전부. 2021. 2021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주민자치 분야 매뉴얼.
- 행정안전부. 2021. 2021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 지역살리기에 앞장선다(보도자료 1. 5.).
- 행정안전부. 2021. 인구감소지역 청장년인구 유입과 활력 기대(보도자료 5. 11.).
- 행정안전부. 2021. 지역에 필요한 공간을 주민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반가운 변화가 시작된다 - 행안부, 2021년 지역자산화지원사업 예비대상지 28곳 선정(보도자료 4. 30.).
- 행정안전부. 2021. 청년마을 전국 12곳에 선정, 창업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보도자료 4. 18.).
- 허문구·송하울. 2017. 인구고령화를 극복하는 지역들, 성장 원천은 무엇인가? 산업경제이슈 18호.
- 홍성효·송정기·김종수. 2012. “귀농귀촌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사회, 22(2): 49-82.
- 石川菜央. 2018. ライフスタイル移住の観点から見た日本の田園回帰. Bulletin of the Hiroshima University Museum 10: 1~11.
- 日本 国土交通省. 2021. 関係人口の実態把握.
- 日本 農林水産省. 2014. 農業の第三者継承を考える.

- 日本 農林水産省. 2015a. 農林水産統計.
- 日本 農林水産省. 2015b.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の基本要綱.
- 日本 農林水産省. 2017. 農業を始めたい皆さんを応援します.
- 日本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0. 農山村への移住・定住の促進に向けた取組に関する研究.
- 日本 総務省. 2017. 2017年度地域おこし協力隊の定住状況等に係る調査結果.
- 日本 総務省. 2015. 2015年度地域おこし協力隊の定住状況等に係る調査結果.
- 日本 総務省. 2018. 田園回帰に関する調査研究 報告書(概要版).
- 齋藤純一. 2009. 『민주적 공공성』. 윤대석 외 옮김. 이음.
- 田口太郎. 2018. 地域おこし協力隊の成果と課題、今後の方向性, トレンド, 山林文化 2018. 3.
- 中央農業総合研究センター. 2008. 後継者不在の家族経営における第三者への事業継承に当たってのポイント.
- 日本 京都府農業総合支援センター. 2013. 京都府農業総合支援センターの要覧(京都アグリ21).
- Acar, M. 2003. Agricultural Unskilled Labor Mobility: Does It Matter?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18(1), March 2003; 164-187.
- Arnon, S., & Shamai, S. 2010. Community life as a motive for migration from the urban center to the rural periphery in Israel.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8(6): 706-728.
- Benson, M. 2009. A Desire for Difference: British Lifestyle Migration to Southwest France. O'Reilly, K. and Benson, M. eds. 2009. *Lifestyle Migration: Expectations, Aspirations and Experiences*, Routledge, New York, 121-135.
- Benson, M. 2011. *The British in Rural France: Lifestyle Migration and the Ongoing Quest for a Better Way of Lif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nchester.
- Benson, M. and O'Reilly, K. 2009. Migration and the search for a better way of life: a critical exploration of lifestyle migration, *The Sociological Review*, 57-4, 609-625.
- Berry, B.J.L. 1976. The counterurbanization process: urban America since 1970. *Urban Affairs Annual Review*, 11: 17-30.
- Bosworth, G. 2009(April). Commercial Counterurbanization and the Rural Economy. In *European Regional Studies Association Conference*, Leuven, Belgium.
- Bryant, A. 1998. Hysteresis and the Shortage of Agricultural Labor. Paper Presented at 1998 AAEA Annual Meeting, Salt Lake City, UT.
- Chipeniuk, R. 2006. Some tools for planning for amenity migration in remote rural settlements: lessons from participatory action.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3(2): 222-238.
- Cloke, P., Milbourne, P., Widdowfield, R., 2003. The complex mobilities of homeless people in rural England. *Geoforum*, 34: 21-35.
- Crawford, T. 1973. Beliefs About Birth Control: A Consistency Theory Analysis**,

- Representative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4:53-65.
- Dahms, F.A., McComb, J. 1999. Counterurbanization, Interaction and Functional Change in a Rural Amenity Area: a Canadian Example. *Journal of Rural Studies*, 15(2): 129-146.
- Deller, S. C., Tsai, TH, Marcouiller D. W., & English, D. B. K. 2001. The Role of Amenities and Quality of Life In Rural Economic Growth.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3(2): 352-365.
- European Union. 2016. Farm Structure Survey 2016.
- Feinerman, E., Finkelshtain, I., Tchetchik, A. & Delgo, M. 2011. Impact of Counter-Urbanization on Size, Population Mix, Andwelfare of an Agricultural Reg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93(4): 1032-1047.
- Fitchen, J. 1995. Spatial redistribution of poverty through migration of poor people to depressed rural communities. *Rural Sociology*, 60: 181-201.
- Fountain, J. and Hall, M. 2002. The Impact of Lifestyle Migration on Rural Communities: A Case Study of Akaroa, New Zealand. Hall, M. and Williams, A. eds. : *Tourism and Migration: New Relationships betwe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153-168.
- Fuguitt, G. V. 1985. The Nonmetropolitan Population Turn-around. *Annual Reviews of Sociology*, 11: 259-280.
- Glartzios, M. 2013. 'Leaving Athens': Narratives of counterurbanisation in times of crisis. *Journal of Rural Studies*, 32: 158-167.
- Grek, G. 2009.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Blackwell Publishing Ltd, West Sussex.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5. *Multivariate Date Analysis* (6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 Hall.
- Halfacree K and Boyle P. 1998. Migration, rurality and the Post-productivist countryside. In P. Boyle & K. Halfacree (Eds.), *Migration into Rural Areas: Theories and Issues* (pp. 1-20). Chichester, UK: Wiley.
- Halfacree, K. 2008. To Revitalise Counterurbanisaton Research? Recognising an International and Fuller Picture. *Population, Space and Place*, 14: 479-495.
- Halliday, J., Commbes, M. 1995. In Search of Counterurbanisation: Some Evidence from Dev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tterns of Migration and Motivation. *Journal of Rural Studies*, 11(4): 433-446.
- Hoey, B. 2005. From Pi to Pie: Moral Narratives of Noneconomic Migration and Starting Over in the Postindustrial Midwest.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34-5, 586-624.
- Hoey, B. 2009. Pursuing the Good Life: American Narratives of Travel and Search for

- Refuge. Benson, K and O'Reilly, K. eds. : *Lifestyle Migration and the Ongoing Quest for a Better Way of Lif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nchester, 31-50.
- Hoey, B. 2014. *Opting for Elsewhere: Lifestyle Migration in the American Middle Class*. Vanderbilt Univ Press, Tennessee.
- Hoggart, K. 1997. Rural Migration and Counter-urbanization in the European Periphery: The Case of Andalusia. *European Society for Rural Sociology*, 37(1): 134-153.
- Holmes T. H.,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 Research*, 11(2): 213-8.
- Hosszú, S. 2009. *Counterurbanization: A literature study*. Danish Institute of R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IFUL).
- Janoschka, M and Haas, H. 2017. *Contested Spatialities, Lifestyle Migration and Residential Tourism*, Routledge, New York.
- Kain, J.F. 1968. "Housing segregation, negro employment, and metropolitan decentraliz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75-197.
- King, R. 2012. *Theories and Typologies of Migration: An Overview and a Primer*. MALMÖ UNIVERSITY.
- Klien, S. 2015. Young urban migrants in the Japanese countryside between self-realisation and slow life? The quest for subjective well-being and post-materialism. Assmann, S. eds. 2016. *Sustainability in Contemporary Rural Japa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xon, 95-107.
- Lee E. S. 196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1): 47-57.
- Long, L. H., & Hansen, K. A. 1979. Reasons for interstate migration: jobs retirement climate and other influences.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Special studies*, (81): 23.
- Maslow, A. H.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Row.
- McGranahan, D. A. 2007. Landscape influence on recent rural migration in the U.S. *Landscape & Urban Planning*, 85: 228-240.
- McHugh, K and Mings, R. 1996. The Circle of Migration: Attachment to Place in Aging.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6-3, 530-550.
- McIntyre, N. 2009. Rethinking Amenity Migration: Integration Mobility, Lifestyle and Social-Ecological Systems. *Die Erde*, 140, 229-250.
- Milbourne, P. 2007. Re-populating rural studies: Migrations, movements and mobilities. *Journal of Rural Studies*, 23: 381-386.
- Mitchell, C. 2004. Making sense of counterurbanization. *Journal of Rural Studies*, 20, 15-34.
- Moseley, M. J., & Owen, S. 2008. The future of services in rural England: The drivers of

- change and a scenario for 2015. *Progress in Planning*, 69(3): 93-130.
- Nagatomo, J. 2014. *Migration As Transnational Leisure: The Japanese Lifestyle Migrants in Australia*. Brill Academic Publishers, Leiden.
- Niedomysl, T. 2011. How Migration Motives Change over Migration Distance: Evidence on Variation across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Groups, *Regional Studies*, 45(6): 843-855.
- Nivalainen, S. 2003. Who Move to Rural Areas? Micro Evidence from Finland. Paper to be presented in ERSA 2003, Jyväskylä, Finland.
- NSW Department of Education. 2020. *Rural and Remote Education Strategy(2021-2024)*.
- OECD. 2017. *Digital Economy Outlook 2017*.
- OECD. 2018. 2018 OECD 한국경제보고서.
- OECD. 2019. *Rural 3.0: People-Centered Rural Policy*. OECD Highlight.
- Ono, M. 2009. Japanese Lifestyle Migration/Tourism in Southeast Asia, *Japanese Review of Cultural Anthropology*, 10: 43-52.
- O'Reilly, K. and Benson, M. 2009. *Lifestyle Migration : Escaping to the Good Life?*, O'Reilly, K and Benson, M. eds. : *Lifestyle Migration: Expectations, Aspirations and Experiences*, Routledge, New York, 1-30.
- Passaris C. 1989. "Immigration and the Evolution of Economic Theory." *International Migration* 27: 525-42.
- Ravenstein E. G. 1885. "The Laws of Migration." *Journal of the Statistical Society of London*, 48(2): 167-235.
- Reichlova, N. 2005. *Can the Theory of Motivation Explain Migration Decisions?*. Working paper UK FSV-IES.
- Rodriguez, V. 2010. Tourism as a recruiting post for retirement migration. *Tourism Geographies*, 3-1, 52-63.
- Roseman. C. C. 1981. *Population Redistribution in the Midwest*, NCRC, Iowa State Univ.
- Rural Medical Education Australia. 2021. *About Rural Med Ed*.
- Sato, Machiko, 2001. *Farewell to Nippon*. Trans Pacific Press, Melbourne.
- Sheller, M. and Urry, J. (2006): *The new mobilities paradigm*,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2, 207-226.
- Shucksmith, M. 2018. Re-imagining the rural: From rural idyll to Good Countryside, *Journal of Rural Studies*, 59, 163-172.
- Sjaastad, L. 1962. The Costs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 80-93.
- Snepenger, D., Johnson, J. and Rasker, R. 1995. Travel Stimulated Entrepreneurial Migra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34-1, 40-44.
- South Carolina Arts Commisison. 2020. *The Art of Communication Rural SC*.

- Spencer, D. 1997. Counterurbanisation and rural depopulation revisited: landowners, planners and the rural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Rural Studies*, 13(1): 75-92.
- Stimon, R. and Minnery, J. 1998. Why people move to the 'Sunbelt': A case study of long-distance migration to the Gold Coast, Australia. *Urban Studies*, 35-2, 193-214.
- Stockdale, A., Findlay, A., & Short, D. 2000. The Repopulation of Rural Scotland: Opportunity and Threat. *Journal of Rural Studies*, 16(2): 243-257.
- Swaffield, S. and Fairweather, J. 1998. In Search of Arcadia: The Persistence of the Ural Idyll in New Zealand Rural Subdivis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41-1, 111-127.
- Tickamy, A., 2006. Rural poverty. In: Cloke, P., Marsden, T., Mooney, P. (Eds.), *Handbook of Rural Studies*. Sage, London.
- Truly, T. 2002. International retirement migration and tourism along the Lake Chapala Riviera: developing a matrix of retirement migration behavior. *Tourism Geographies*, 4-3, 261-281.
- UK Defra. 2020. Rural population and migration.
- UK Ministry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20. English Housing Survey 2018-19: Second Home.
- USDA ERS. 2018.
- USDA. 2007, 2012, 2017. Census of Agriculture.
- USDA. 2012. The Rural Jobs and Innovation Accelerator Challenge.
- Van den Berg, L. Drewett, R. & Klaassen, L. H. 1982. *Urban Europe. A Study of Growth and Decline*. Oxford: Pergamon Press.
- Van Ommeren, J., P. Rietveld, and P. Nijkamp. 2000. "Job mobility, residential mobility and commuting: A theoretical analysis using search theory."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34(2): 213-23.
- Walmsley, D.J., Epps, W.R. and Duncan, C.J. 1998. Migration to the New South Wales North Coast 1986-1991: Lifestyle Motivated Counterurbanisation. *Geoforum*, 29, 105-118.
- Williams, A. and Hall, M. 2000. Tourism and migration: new relationships betwe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Tourism Geographies*, 2-1, 5-27.
- Wiseman, R. and Roseman, C. 1979. A Typology of Elderly Migration Based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Economic Geography*, 55-4, 324-337.
- Wohlfart, I. 2017. *Intergenerational Consequences of Lifestyle Migration: German-speaking Immigrants in New Zealand*. Springer, New York.

〈통계·조사〉

농림축산식품부·갤럽. 2016, 2018, 2019, 2020, 2021. 귀농·귀촌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갤럽. 2021b. 귀농·귀촌실태(추가조사)(비공개 내부자료).

농협. 2021. 귀농창업자금 수혜자 실태(비공개 내부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 귀촌 희망자 설문조사(비공개 내부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고령인구비율.

통계청. 귀농·귀촌통계.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생명표.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출생사망통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택금융연구원. 주택구입부담지수.

한국은행. 국민계정.

日本 総務省「国勢調査」,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日本の地域別将来推計人口(平成25年3月推計)」を基に農林水産省で推計.

FAOSTAT. Rural Population

OECD. Family Database.

〈신문 기사〉

강원도민일보. 2020. 10. 21.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중기부 장관상’.

경상매일신문. 2019. 9. 8. 의성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지역 활성화 롤모델 되다.

농민신문. 2021. 1. 29. 농식품 안정성·편의성·비대면 시대 성큼.

베타뉴스. 2021. 8. 1. 국토부. 인구소멸 위기 낙후지역 대응 나선다. 지역수요·투자선도 등 지역개발 공모사업 총 12개 선정.

서울특별시 뉴스. 2020. 1. 30. 경북으로 간 서울청년의 일자리 경험기 ‘청정경북 프로젝트.’

오마이뉴스. 2021. 1. 22. 자립하려는 도시 청년들, 이 마을로 오세요.

중앙일보. 2018. 12. 25. 해병대 소령 출신 농업인, 낙안면장으로 뽑았다 왜.

중앙선데이. 2018. 11. 24. 일본 산골 마을에 IT 기업들 우르르, 왜.

전북일보. 2020. 6. 21. 일본의 작은 마을 가미야마로부터 배우자.

충청북도인터넷신문. 2018. 7. 25. 충북, 청년이 만들어 가는 “1939 행복공동체” 사업 추진.

한국농률협회컨설팅. 2020. 1. 31. “‘인구 보너스’ 시대 가고 ‘인구 오너스’ 시대의 도래, 기업의 준비는?” 한국농률협회컨설팅 블로그 기사.

USA Today. 2020. 5. 1. The DNA of work has changed: Many Americans want to keep working from home after the COVID-19 crisis passes.

〈인터넷 사이트〉

경상북도. 〈<http://www.gb.go.kr/>〉. 접속일: 2021. 5. 3.

귀농귀촌종합센터. 〈<https://www.returnfarm.com:444>〉. 접속일: 2021. 6. 5.

농어촌인성학교. 〈<http://www.ruralschool.co.kr>〉. 접속일: 2021. 3.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List.do>〉. 접속일: 2021. 3. 8.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http://idea.sbiz.or.kr/mbl/local_policy〉. 접속일: 2021. 6. 6.

스마일 재능뱅크. 〈<https://www.smilebank.kr>〉. 접속일: 2021. 11. 2.

완주군. 〈<http://www.wanju.go.kr/>〉. 접속일: 2019. 10. 2.

웰촌. 〈<http://www.welchon.com>〉. 접속일: 2021. 11. 2.

지역문화진흥원. 〈<http://www.rcda.or.kr>〉. 접속일: 2021. 8. 8.

한국4-H본부. 〈<http://korea4-h.or.kr>〉. 접속일: 2021. 3. 8.

한국교육농장협회. 〈<http://happyfarm.or.kr>〉. 접속일: 2021. 3. 8.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http://www.comhealth.or.kr>〉. 접속일: 2021. 5. 3.

행정안전부 우리결에 반가운 변화. 〈<https://happychange.kr>〉. 접속일: 2021. 4. 5.

甲斐かおり. 2019. 開始から10年。地域おこし協力隊の成果とは? 地域力に差が出始めている. 〈<https://news.yahoo.co.jp/byline/kaikaori/20190619-00130666>〉. 접속일: 2020. 6. 5.

木下 齊. 「地域おこし協力隊」が抱える根本的矛盾. 2018. 〈<https://diamond.jp/articles/-/188885>〉. 접속일: 2020. 6. 5.

American Farm Bureau Foundation for agriculture. 〈<https://www.agfoundation.org/pillars>〉. 접속일: 2021. 5. 3.

Gualtieri, D. 2018. The Wealth of Nations. 〈<http://www.tikalon.com/blog/blog.php?article=2018/GDP>〉. 접속일: 2021. 5. 4.

Harris Poll. 〈<https://theharrispoll.com/coronavirus-may-prompt-migration-out-of-american-cities>〉. 접속일: 2021. 5. 4.

Permaculture Association. 〈<https://www.permaculture.org.uk>〉. 접속일: 2021. 5. 4.

Poter Dodson Solicitors & Advisors. 〈<https://www.porterdodson.co.uk/rural-succession-planning-solicitors>〉. 접속일: 2021. 10. 4.

USDA. 〈<https://www.rd.usda.gov/about-rd/agencies/rural-business-cooperative-service>〉. 접속일: 2021. 10. 4.

USDA. 〈<https://www.rd.usda.gov/programs-services/single-family-housing-programs>〉. 접속일: 2021. 10. 4.

USDA. 〈<https://eligibility.sc.egov.usda.gov/>〉. 접속일: 2021. 10. 4.

〈법령〉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촌 정비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림기본법 및 시행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